발 간 등 록 번 호
12-1071000-000095-01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5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백서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White Paper

2017~202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5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백서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White Paper

2017~202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발간사

일하는 대통령의 시간과 정책기획위원회 5년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인수위도 없이 긴박하게 출발해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의 긴장을 늦추지 않은 오로지 '일하는 정부, 일하는 대통령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해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 100대 과제를 포괄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 백서는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함께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가능한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한 일을 역사적 자료로 남기기 위한 것이지만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입니다. 지난 5년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 보면 정책과제의 생산 관리와 정책 네트워크 관리, 정책소통 관리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과제의 생산 관리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과 조정,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 국정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 정책 연구 등을 포괄합니다. 둘째, 정책 네트워크 관리는 청와대, 총리실, 정부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당 등과의 협업 및 교류를 필두로 하여, 학계,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포함합니다. 특히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9개 주요 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의 의장위원회로서 대통령 위원회의 소통과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정책소통 관리는 정부부처간의 소통과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이나 정책쟁점이나 정책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일을 포괄합니다. 연구용역이나 주요 정책TF 운용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학술회의, 토론회, 언론 기고, 자체 온라인 방송채널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발간사

정책기획위원회의 1기는 정부 출범 시 만든 '100대 국정과제의 관리'에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정책과제의 관리에 중점을 둔 셈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2기는 위기적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콘텐츠 생산과 집권 후반부의 성과관리라는 측면에서 과제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문명사적 위기는 정책기획위원회 2기의 정책 환경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새롭게 부가되는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와 조정 보완하는 작업,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체제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 코로나 이후 거대 전환의 사회변동에 대한 전망, 한국판 뉴딜의 보완과 국정자문단의 운영 등을 새로운 과제로 진행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대부분 활동들은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지속가능사회', '분권발전' 그리고 '평화번영'이라는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된 일들도 각 분과별 소관 정책분야에 따른 분담 하에 이루어졌고, 각 분과별로도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 TF 운용 등을 통한 자문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헌법 개정 자문안 마련과 조세, 예산 등 재정분야 개혁과제 마련이라는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8년 1월과 2월에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요구되었던 역할을 무난하게 마치고 활동을 종료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정책과제인 신남방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도 2018년 7월에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 두 특별위원회 모두 정책의 밑그림을 튼튼히 하고 세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위기와 경제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국가 혁신전략들을 지원하는 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를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이 백서 제5장에 담긴 '6대 국정운영 성과'를 정리하는 일과 '3대 위기 극복', '5대 강국론', '100대 입법성과',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지표' 등의 국정성과 담론화 사업이 바로 이러한 작업의 하나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성과관리를 단순히 정부의 치적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정성과를 국민의 성과로 간주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소통의 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회의 총력을 기울여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백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에서 끝을 22권의 방대한 분량에 담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국정백서를 준비하는 분주한 시점에 정책기획위원회 백서의 발간을 맡아 꼼꼼하게 정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래정책연구단장으로 마지막까지 중심적 역할을 맡아 주신 추장민 박사,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윤태범 교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백서 발간을 총괄한 박종현 기획운영국장과 실무총괄을 담당해 열정적이고 세심하게 백서를 마무리해준 박현근 과장께 특별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든든하게 이끌어주신 6개 분과위원장님과 각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의 활동을 결실로 만들고 그 결실을 빛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정부부처의 파견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파견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사무처 직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래의 소속으로 복귀한 직원들을 포함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30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조 대 엽**

2017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위촉식 수여 ('17.10.10.)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17.12.15.)

2018





개헌준비 관련 기자간담회 ('18.2.7.)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8.2.17.)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청와대 영빈관) ('18.2.22.)





국민헌법 자문안 기자간담회 ('18.3.13.)



제1차 국정과제협의회 ('18.3.30.)





정책기획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MOU) 체결 ('18.4.6.)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18.4.9.)









Inclusive Korea 2018 국제 컨퍼런스 ('18.5.24.~2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 ('18.8.28.)





문재인정부 최초 사회분야 전략회의 ('18.9.6.)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전체회의 ('18.9.6.)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 ('18.9.14.)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 간담회 ('18.11.21.)









정책기획위원회 민주연구원,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심포지엄 ('18.12.18.)

2019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중국 상해, '19.4.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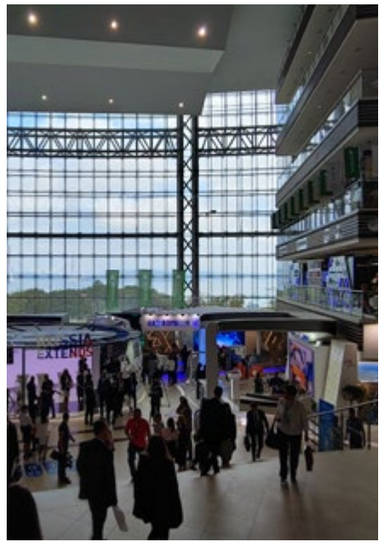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19.5.7.)











제5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9.9.4.~6)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컨퍼런스 ('19.11.4.)





청년정책 새로운 좌표 설정 토론회 ('19.11.18.)







Inclusive Korea 2019 국제 컨퍼런스 ('19.11.20.~21.)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취임 ('19.12.20)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 위원장 초청 만찬 ('19.12.27.)

2020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위촉장 수여 ('20.1.30.)



한국노총 간담회 ('20.3.25.)



민주노총 간담회 ('20.3.26.)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20.4.2.)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20.4.22.)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20.4.23.)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 한국과 G2 세미나 ('20.5.1.)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20.5.7.)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20.7.9.~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 (’20.6.2.)



천주교 방문 (’20.6.4.)



원불교 방문 (’20.6.12.)





조계종 방문 (’20.6.24.)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세미나 ('20.7.23.)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역·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 ('20.10.14.)



K-뉴딜 성공 전략 토론회(전남 광주 MBC TV, '20.11.10.)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광주전남 대토론 ('20.11.10~11)









중앙일보 공동개최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컨퍼런스
('20.11.2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전세종충남 대토론 ('20.11.25.~26.)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 ('20.11.27.)









제7차 전체회의 &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 ('20.12.4.)





2020 랜선 종무식 ('20.12.30.)

2021





한국판 뉴딜
전북 도지사 방문 ('21.2.26.)









한국판 뉴딜
제1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21.3.3.)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 대학총장 간담회 ('21.4.7.)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 전국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21.4.8.)



한국판 뉴딜
경북 도지사 방문 ('21.4.9.)



한국판 뉴딜
강원 도지사 방문 ('21.4.20.)









한국판 뉴딜
제2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21.4.22.)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21.4.26.)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21.5.6.)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 ('21.5.20.)



한국판 뉴딜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21.6.3.)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강원 대토론 ('21.6.22.)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강원 대토론 공공기관장 간담회 ('21.6.23.)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 ('21.7.6.)







한국판 뉴딜
제4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21.9.15.)





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21.10.26.)



한국판뉴딜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 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21.11.9.)



한국판뉴딜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 대학총장 간담회 ('21.11.9.)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부산울산경남 대토론 ('21.11.10.)











정책기획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21.11.17.~18.)

2022





한국무역협회 방문 ('22.1.13.)









제34차 국정과제협의회 ('22.1.28.)









대통령 기록전시관 방문 ('22.4.7.)











제10차 전체회의 개최 ('22.4.14.)







한국판뉴딜 정책 추진현장 방문 ('22.4.14.)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출판기념회 ('22.4.14.)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5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백서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White Paper

2017~2022

목 차

발간사 6

사진으로 본 위원회 활동 10

제1장 위원회 개요

제1절 위원회 연혁 및 출범 70

제2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7

2장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절 정책 과제의 생산·관리 100

제2절 정책 네트워크 강화 152

제3절 정책 소통 및 홍보 203

3장 분과위원회

제1절 국민주권분과 298

제2절 국민성장분과 317

제3절 포용사회분과 335

제4절 지속가능사회분과 352

제5절 분권발전분과 382

제6절 평화번영분과 399

4장 특별위원회

제1절 재정개혁특별위원회 420

제2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440

제3절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478

제4절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552

5장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의 정리 및 담론화 사업

1절 6대 국정운영 성과 정리 632

2절 국정성과 담론화 사업 671

6장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회 활동

1절 언론보도 724

2절 뉴미디어 운영 742

부록

1. 정책기획위원회 주요 행사 타임라인 768
2.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72
3.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776
4. 정책기획위원 현황 784
5. 특별위원·자문위원 현황 795
6. 위원회 사무처 직원 현황 803
7. 국민소통 시리즈 810
8. 언론 및 뉴미디어 보도 현황 812

1 위원회 개요

제1절 | 위원회 연혁 및 출범 **70**

1. 역대 정부 위원회 연혁 70
2.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74

제2절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7**

1. 위원회 구성 77
2.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 80
3.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94

제1절

위원회 연혁 및 출범

1. 역대 정부 위원회 연혁

역대 정부별로 국정과제, 국정현안 및 국가 중장기 전략 등을 연구·관리·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고, 이때까지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1989년 6월 1일 대통령령으로 「21세기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장기 국가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서는 장기 국가발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통일·외교·경제·복지·과학기술·사회·문화 등 분야별 장기전망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기타 장기 국가발전목표와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전문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었다. 각 분과위원회에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었다. 전문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였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였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21세기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21세기에 대비한 장기 국가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21세기를 미리 준비하고,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3년 7월 21일에 「21세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장기 국가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외에 그와 관련된 중기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도 자문하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하였고,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다. 셋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1994년 5월 31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후 국가 중요현안에 관한 자문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명칭도 이에 맞게 고치기 위해 1995년 6월 16일 「21세기위원회 규정」을 「정책기획위원회 규정」으로 개정하여 21세기위원회의 명칭을 정책기획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명칭 변경, 위원회의 기능에 국가 중요현안에 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였고, 위원회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별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에 비상임전문위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다만, 1999년 8월 19일 동 규정 개정을 통하여 국정전략 및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1999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임 김대중 정부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정책기획위원회를 유지하였고, 취임 초인 2003년 5월 1일 「정책기획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국가 중장기 발전목표의 설정과 중요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수를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늘리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는 등 운영상 일부를 개선·보완하였다. 이후 2004년 2월 9일 규정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의 종합·관리 및 조정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등 국가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내실화하고,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의 국정과제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및 해당 위촉 위원 및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중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였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기획위원회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심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를 지원하고, 4개 분과 및 국가경쟁력회의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제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2월 29일 「정책기획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미래기획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미래사회 전망 및 이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안전, 인구, 환경, 교육, 문화, 에너지, 식량, 수자원, 건강, 정보통신과 미디어, 우주개발 등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략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래기획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실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미래생활과 관련된 국가비전 및 전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자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두고 추진단장은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이 겸임하였다. 위원회의 운영 또는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다른 정부위원회로 분산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다시 부활하였다. 이는 바로 뒤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겠다.

〈위원회가 걸어온 길〉



2.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배경이 된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이자 정치의 실질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국민주권시대'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무너진 도덕적, 사회경제적 정의를 확고히 정립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맡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당면과제는 첫째로 법적·도덕적 정의를 바로 세워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justice) 실현이었다. 둘째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실현하고 국민의 의지가 정치를 이끄는 국정운영으로 전환, 협치와 합의의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하는 일부 특권층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경제, 불안과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 구축과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위에 100대 국정과제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기획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재출범하였다. 2017년 9월 5일 대통령령으로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조 및 3조)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과제의 조정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정책기획위원회의 구성 (4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정과제 추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 등 (제9조 및 제10조)	국정과제의 추진성과 보고 및 관리·점검 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를 지원하고,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협의회를 두도록 함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11조)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에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두도록 함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제12조)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 (제13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사무기구의 설치 (제14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도록 함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17.12.15.)〉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영상 축사,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제2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였다.

- ㅇ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ㅇ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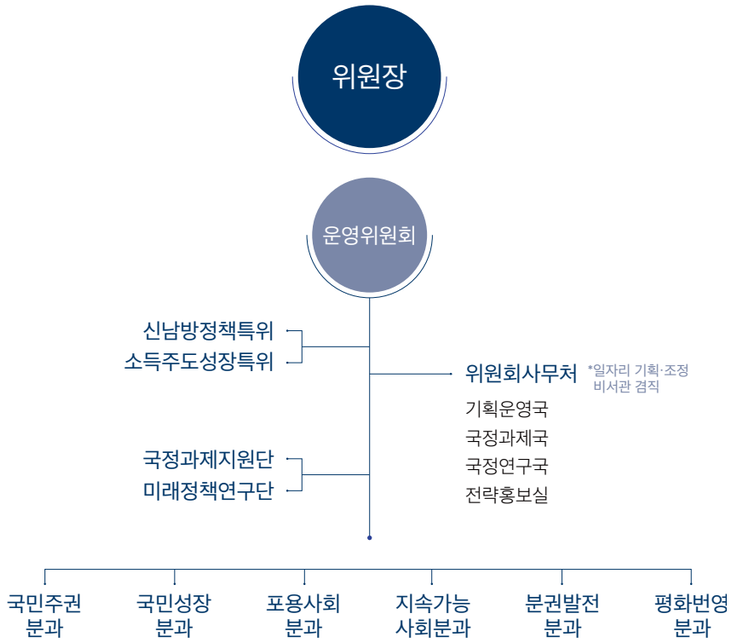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과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연구 검토하기 위

하여 '특별위원'을 위촉, 운영하였다. 자문위원과 특별위원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 구성도〉



위원회의 회의(전체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장은 정책기획위원장이 겸직하였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었다(분과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 또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이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두고, 단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 위원장 만찬('19.12.27.)

2.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

가.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2017년 9월 5일에 제정·시행된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69호) 제8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회의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년 12월 15일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2021년까지 총 9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체회의는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연간 업무계획 및 분과별 현안 논의 등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도 논의하였다.

정부출범 5년차인 2021년에 개최된 제8차 및 제9차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국정성과와 미래 정책비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사전에 6개 분과별로 분과토론을 진행하여 정부 4년간의 성과와 보완할 점, 향후 새롭게 추진할 주요 정책 아젠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분과별로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제9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문재인 정부, 국민과 함께 극복한 3대 위기', '문재인 정부, 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100대 입법', '문재인 정부,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지표' 등 4개의 주제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국정과제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부의 국정성과와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 비전을 논의하는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회의 개최 실적〉

차수	날짜	안건
1	'17.12.15.(금)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안)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방안
2	'18.2.22.(목)	○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국민개헌자문특위 운영계획 ○ 재정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안)
3	'18.9.14.(금)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정책기획위원회 1년차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4	'19.1.18.(금)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2019년 정책기획위원회 업무계획
5	'19.8.30.(금)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분과별 성과 및 위원회 발전방안
6	'20.2.25.(화) (※ 서면회의)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7	'20.12.4.(금)	○ 분과별 현안보고 ○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분할 추진 ○ 위원회 정책TF 운영 효율화 방안
8	'21.6.30.(수)	○ 분과별 현안보고 ○ 정부 4년 국정성과와 대한민국 미래 정책 비전
9	'21.11.17.(수)	○ 분과별 현안보고 ○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
10	'22.4.15(금)	○ 분과별 운영성과 보고

〈2021년 6월 30일 제8차 전체회의〉







〈2021년 11월 17일 제9차 전체회의〉







나.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 조정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기구의 장인 일자리 기획 조정비서관, 미래정책연구단장, 국정과제지원단장 및 사무처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18년 1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2021년 11월 19일까지 총 60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분과 구성 및 운영 방안, 분과별 주요 업무 추진내용 및 현안 공유, 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각종 정책 활동과 간담회, 토론회 등의 진행방향, 정책연구용역 진행, 홍보 등 위원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업무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협력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차수	날짜	안건
1	’18.1.10.(수)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안)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신규 위촉위원 분과 배치(안) 등 ○ 위원들의 他 분과 참여 관련 등 ○ 국정과제 관리와 정책기획위원회 역할 ○ 재정개혁특위 운영 및 구성 방안
2	’18.1.17.(수)	○ ’18. 정부업무보고 참석 계획 ○ 신규 위촉위원 분과 배치(안) ○ 위원활동 지원계획(안) ○ 재정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
3	’18.1.31.(수)	○ 재정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안) ○ 제2차 전체회의 및 토론회 준비계획 ○ 매일경제 인터뷰 계획(안) ○ 분과별 간담회 개최 관련 ○ ’18. 연구용역 추진계획 ○ 국정현안 TF 운영방안 ○ ’18. 정책세미나 개최계획(안)
4	’18.2.7.(수)	○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국민주권 분과위원회 제안 ○ 제2차 전체회의 및 토론회 준비상황 ○ 디지털타임즈 언론 인터뷰 관련 ○ ’18. 연구용역 추진계획 ○ 정책세미나(제1차) 개최계획(안)
5	’18.2.21.(수)	○ 오찬간담회 개최계획 ○ 제2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 『국제 컨퍼런스』 개최 준비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국정현안 TF 운영방향 검토
6	’18.2.28.(수)	○ 지방선거 출마예정 위원 해촉 안내 ○ 국정과제 조정·보완 관련 건의사항 ○ 정책세미나(2차) 개최 추진
7	’18.3.16.(금)	○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준비 ○ ’18. 상반기 연구용역 추진
8	’18.4.6.(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세종국가전략포럼』 공동 개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상호협력 MOU 체결 ○ 분과별 ’18년도 1분기 검토보고서 제출 결과 ○ 현안·출판대응팀 신설 ○ 출연연 박사급 인력 보충 ○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 추천 명단 ○ 국정과제 조정·보완 관련 건의사항 ○ 위원회 종합홍보 추진계획
9	’18.4.20.(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19. 예산편성 추진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관련 위원회 자체홍보 추진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지원 관련 ○ 정책연구용역 추진 ○ 제2차 포용사회정책포럼 개최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10	’18.5.4.(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Inclusive Korea 2018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자체 기고안 ○ 정책 토크 프로그램(정말통) 진행 상황 ○ 외부 공동행사 관련 업무처리 절차 ○ 향후 2개월 간 주요 행사 일정 ○ 포용사회정책포럼 제2차 개최 결과 ○ 주요 홍보일정
11	’18.5.18.(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Inclusive Korea 2018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정치학회-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공동개최 ○ 정책기획위원회 「7월 정책세미나」 주제선정 ○ 정책연구용역 추진 ○ 위원회 홍보 추진현황 ○ 향후 2개월 간 주요 행사 일정 ○ 「포용사회정책포럼」 제3차 개최 결과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12	’18.6.1.(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Inclusive Korea 2018 개최 결과 ○ 정책기획위원회 6월 정책세미나 개최 ○ 공무원 대상 시책교육 지원 ○ ’18. 상반기 연구용역 추진 ○ 위원회 홍보 추진 ○ 향후 2개월 간 주요 행사 일정 ○ 「포용사회정책포럼」 제4차 개최 결과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13	’18.6.15.(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자문위원 위촉 추진 ○ 위원회 홍보 추진 ○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간담회 추진 ○ ’18. 정책연구용역 추진 ○ 제2차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 향후 2개월 간 주요 행사 일정 ○ 「포용사회정책포럼」 제6차 개최 계획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차수	날짜	안건
14	’18.7.6.(금)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위원회 홍보 추진 ○ 정책연구용역 추진 ○ 정책기획위원회 7월 정책세미나 개최 ○ 정책기획위원회 기획단 워크숍 개최 ○ 아시아 평화국가 비전 모색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 금융TF 보고서 ○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간담회 개최 ○ 「포용사회정책포럼」 제7차 개최결과 ○ 제15차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15	’18.7.27.(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지침(안) ○ 소득주도성장특위 운영지침 개정(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위원회와 산하 특위 간 연계 강화 방안 ○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준비 ○ ’18. 하반기 연구용역 과제 선정 ○ 금융TF 보고서(2차) ○ 위원회 홍보 추진 ○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검토 ○ 향후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16	’18.8.10.(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17	’18.8.24.(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운영지침 개정(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준비 ○ 정기간행물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언론 기고(계속)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전략(연구용역제안서) ○ 여성·남성혐오, 미투운동 등 2030세대 의견조사 추진
18	’18.9.7.(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준비 ○ 정기간행물 창간준비호 발행 ○ 위원회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언론 기고 ○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 관련 현안 보고 ○ 분과TF 운영방향
19	’18.9.21.(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제8차 국정과제위원회 기획단장협의회 준비 ○ 정기간행물 창간 준비호 발행 준비 ○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언론 기고 ○ 국정과제 조정·보완 건의 후속조치 계획
20	’18.10.5.(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제8차 국정과제위원회 기획단장협의회 후속조치 추진 ○ 정기간행물 창간 준비호 발행 준비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언론 기고 ○ 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관련 쟁점 보고 ○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지역 토론회 개최
21	’18.10.19.(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국정과제협의회 준비 ○ 정기간행물 창간호 발행 준비 ○ 정책 공모전 및 심포지엄 추진 ○ 언론 보도 및 기고 ○ 연구용역(포털뉴스 댓글 여론왜곡 개선방안) 추진 검토
22	’18.11.2.(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분과별 일자리 TF 추진현황 ○ 「국가미래비전 2040」 수립 추진 방향(안) ○ 국정과제협의회 준비 ○ 정기간행물 창간호 발행 준비 ○ 정책 공모전 및 심포지엄 추진 ○ 위원회 홍보 추진

차수	날짜	안건
23	’18.11.16.(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지역 토론회 개최 ○ 정기간행물 창간호 발행 추진 ○ 정책 공모전 및 심포지엄 추진 ○ 위원회 홍보 추진
24	’18.12.7.(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국정과제 조정·보완 관련 건의사항 ○ 제3차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지역 토론회(강원) 개최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 준비 ○ 정책 공모전 및 심포지엄 추진 ○ 위원회 홍보 추진
25	’18.12.21.(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계획(안)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 계획(안) ○ 언론기고 등 홍보 ○ 제2차 「미래비전포럼」 준비회의 ○ 농정개혁TF 활동 보고
26	’19.1.4.(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2030 젠더의식 T/F 운영 현황 ○ 국정과제 조정·보완 건의 관련 BH 검토 결과 ○ 2018년 분과위원회별 운영실적 ○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워크숍 준비 ○ 2019년 국정과제 조정·보완 추진 ○ 국정과제협의회 준비
27	’19.2.8.(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포용국가 관련 국정과제 조정·보완 관련 건의사항 ○ 일반 국정과제 조정·보완 관련 건의사항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 서울청사 이전 추진 ○ “열린정책” 창간호 발간 및 제2호 발간 준비 ○ 언론기고 등 홍보 ○ 2019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 “포용국가와 청년 정책” 기획토론회(안)
28	’19.2.22.(금)	○ 재정개혁특위 추진 현황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국정과제 평가 추진 계획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평가 외부 전문가 간담회 개최(안)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 제5차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 ‘열린정책’ 통권 제2호 발간 준비 ○ 언론기고 등 홍보
29	’19.3.8.(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관련 사업계획(안) ○ ‘열린정책’ 통권 제2호 발간 준비 ○ 언론기고 등 홍보 ○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30	’19.3.22.(금) (※서면회의)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제6차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 ‘열린정책’ 통권 제2호 발간 ○ 언론기고 등 홍보 ○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정책기획위원회 중국(상해) 방문 ○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31	’19.4.19.(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제7차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열린정책’ 통권 제2호 발간 ○ 언론기고 등 홍보 ○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실 서울청사 본관 이전 추진
32	’19.5.10.(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문재인 정부 2년 성과 및 향후 3년 과제’ 보고 추진 ○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실 서울청사 본관 이사 추진 ○ 중국 국무원 참사실의 정책기획위 방문 계획 ○ ‘열린정책’ 발간 ○ 언론기고 등 홍보

차수	날짜	안건
33	’19.6.14.(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국정과제 조정 보완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추가 위촉 ○ ‘열린정책’ 제3호 발간 ○ 언론기고 등 홍보
34	’19.7.12.(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하반기 국정과제 조정 보완 추진 ○ ‘열린정책’ 제3호 발간 ○ 정책연구용역 개선방안 마련 ○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활용 추진 ○ 회의록 생산·관리 개선 추진 ○ 언론기고 등 홍보 ○ 2019년 하반기 정책기획위원회 워크숍 추진
35	’19.8.9.(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하반기 국정과제 조정 보완 ○ 정책기획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추진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정책세미나 개최 ○ ‘열린정책’ 발간 ○ 2019년 하반기 연구용역 과제 수요조사 ○ Inclusive Korea 2019 ○ 언론기고 등 홍보
36	’19.9.20.(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하반기 국정과제 조정·보완 ○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신규 위촉 추진 ○ ‘열린정책’ 발간 ○ Inclusive Korea 2019 ○ 언론기고 등 홍보
37	’19.10.11.(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국정과제 조정·보완 관련 건의 ○ ‘열린정책’ 발간 ○ Inclusive Korea 2019 ○ 언론기고 등 홍보
38	’19.11.8.(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 ’19. 하반기 국정과제 설문조사 용역 추진 ○ 청년정책 정책세미나 ○ ‘열린정책’ (제4호) 발간 ○ Inclusive Korea 2019 ○ 언론기고 등 홍보
39	’19.11.29.(금)	○ 소득주도성장특위 추진 현황 ○ 신남방정책특위 추진 현황 ○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세종국가전략포럼」 공동개최 ○ ’19. 하반기 국정과제 설문조사 용역 실시 ○ ‘국가 미래비전 2045’ 세미나
40	’20.3.26.(목)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 정책기획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41	’20.4.17.(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2기 운영방향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 [사무처] 정부3주년 정책기획위 행사 계획안
42	’20.5.22.(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평화번영 전략 TF 구성·운영 계획 ○ [사무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거대전환과 정책과제 TF 구성·운영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43	’20.6.26.(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TF 구성·운영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 [기타] ‘분과위원장 회의’ 운영 계획
44	’20.7.17.(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플랫폼 TF 구성·운영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 노동미래 TF 구성·운영 계획
45	’20.8.21.(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TF 구성·운영 계획 -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TF 구성·운영 계획 - 헌법 제10조 시대 전략구상 TF 구성·운영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 [사무처] 운영위원회 내부 운영 지침안

차수	날짜	안건
46	’20.9.18.(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국정과제 조정·보완 발전 제안 - 미 대선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 TF 제안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47	’20.10.16.(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연계추진 방안 TF 구성·운영안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 구성·운영안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48	’20.12.4.(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서면)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서면) ○ [사무처] 농어촌 뉴딜 T/F 운영계획 ○ [사무처] (분과위 분할 관련)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사무처] 위원회 T/F 및 행사 운영 지침 개정안
49	’20.12.18.(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50	’21.1.22.(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분과위] 2021년도 주요 국정이슈안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 [사무처]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분과명 변경)
51	’21.2.19.(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정책연구 결과 활용 검토회의(가칭) 운영방안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52	’21.3.19.(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53	’21.4.16.(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성과 컨퍼런스 추진방안(안)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54	’21.5.14.(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사회적 대화 기본법 TF 구성·운영 계획 ○ [사무처] 수사권 다원화 및 수사기관의 전문화방안 TF 운영계획 ○ [사무처] 정책기획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개최 계획(안)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55	’21.6.18.(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56	’21.7.16.(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57	’21.8.20.(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등
58	’21.9.17.(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세부 추진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59	’21.10.22.(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세부 추진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60	’21.11.19.(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 [사무처]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개최
61	’21.12.17.(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62	’22.1.21.(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 [사무처] 국정백서 집필 점검회의 계획(안)
63	’22.2.18.(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64	’22.3.18.(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65	’22.4.22.(금)	○ [특위] 업무추진 현황 ○ [분과위] 분과별 업무실적 및 계획 ○ [사무처] 업무추진 현황

3.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가.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에 100대 국정과제를 전문분야별로 유형화하여 분과위원회를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세 차례에 걸쳐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화가 있었다.

〈분과위원회 연혁〉

구분	분과수	분과명	비고
'17.12.19.	5개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	
'18.9.14.	6개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 지속가능	지속가능분과 신설
'20.2.27.	4개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평화번영	ㅇ 분권발전분과를 국민주권분과에 통합 ㅇ 지속가능분과를 포용사회분과에 통합
'20.12.14.	6개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지속가능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	ㅇ 국민주권분과에서 분권발전분과 분리, 신설 ㅇ 포용사회분과에서 지속가능사회분과 분리, 신설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을 두고 있으며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이 분과위원 중에서 임명한다(운영세칙 제7조 제2항). 다만, 분과부위원장 직위는 출범 초기에는 없다가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미리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기구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 국정과제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행한다. 운영세칙 제9조에서는 각 분과별 관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소분과 및 분과 운영소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분과위원회는 특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에 소분과를 둘 수 있고 소분과의 장(소분과장)은 소관 분과위원장이 소관 분과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운영소위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이 겸임하되,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과 소관 분과위원회의 소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소분과 및 분과 운영소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 경우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별('21.3. 기준) 관장 사항〉

분과명	관장 사항
국민주권분과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5.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국민성장분과	1.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6.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포용사회분과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사회분과	1. 노동존중, 성평등을 실현하는 차별없는 공정사회 2.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안전, 환경 등) 3. 자유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4.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분과명	관장 사항
분권발전분과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4.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평화번영분과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나. 특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역대 정부별 연혁을 살펴봤을 때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사례로서,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의 특징적 부분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2017년 9월 15일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시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고, 2018년 2월 20일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다(제12조 제3항).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에서부터 제15조에 특별위원회의 종류와 특별위원의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관업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이 정하게 하여 해당 특별위원회별로 각 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개혁특위와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당초의 기능 및 목적을 달성하여 활동이 종료되었고, 신남방특위와 소득주도성장특위는 현재도 활동 중에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1월 31일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해 조세, 예산 등 재정과 관련된 국정과제 주요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018년 2월 7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연구검토를 위하여 설치되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6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해 신남방정책 관련 주요현안 검토 및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관련 국정과제 주요현안 연구 및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각 특별위원회의 출범배경 및 활동현황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현황〉

구분	비고	제정 시기	기능
재정개혁 특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8.1.31.	조세, 예산 등 재정 관련 국정과제 주요현안 연구검토
국민헌법 자문특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8.2.7.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연구· 검토
신남방 정책특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8.7.6.	신남방정책 관련 주요현안 검토 및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소득주도 성장특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8.7.6.	소득주도성장 관련 국정과제 주요현안 연구 및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절 | 정책 과제의 생산·관리 100

1. 국정과제 점검·관리 및 조정·보완 100
2.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113
3. 정책·현안 보고서 자문·건의 127
4. 정책연구용역 추진 138

제2절 | 정책 네트워크 강화 152

1. 국정과제협의회 운영 152
2. 정책세미나 개최 169
3. 국정현안 TF 구성·운영 179
4.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192

제3절 | 정책 소통 및 홍보 203

1.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203
2. 국제컨퍼런스 Inclusive Korea 개최 216
3. 정기간행물 '열린정책' 발간 234
4.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 249
5.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263
6. 아하TV 운영 275

제1절

정책 과제의 생산·관리

1. 국정과제 점검·관리 및 조정·보완

가. 100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선정과정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신속하게 정립하기 위해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201개 공약을 기초로 선정하였다. 내용이 근접된 공약은 하나의 과제로 통합하고, 독립정책들을 포괄한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한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국민정책건의 중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공약 외에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도 국정과제에 추가하였다. 종합된 국정과제(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행가능성, 과제 간 정합성 등이 검증됐고, 2017년 8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

2) 국정과제 체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 아래 실천과제를 두었다.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확정 당시에는 실천과제가 487개였으나, 이후 수차례의 조정 보완을 거치면서 실천과제의 수가 528개로 늘어났다.

〈국정과제 체계도 :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 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524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2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51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9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6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6개 실천과제)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ㅇ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ㅇ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안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과기정통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복지부·기재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안부·국조실)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나. 국정과제 관리

1) 국정과제 추진체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체계는 '청와대-국무조정실-각 부처' 3각축 간

의 유기적 협조체제에 기반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청와대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조정 보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중 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 분야별 국가정책 및 현안과제를 기획함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지속가능, 분권발전, 평화번영 등 6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기획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를 총괄하며, 청와대 정책실의 책임 운영 하에 국무조정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정과제 조정 보완 등 각종 국정과제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다.

위원회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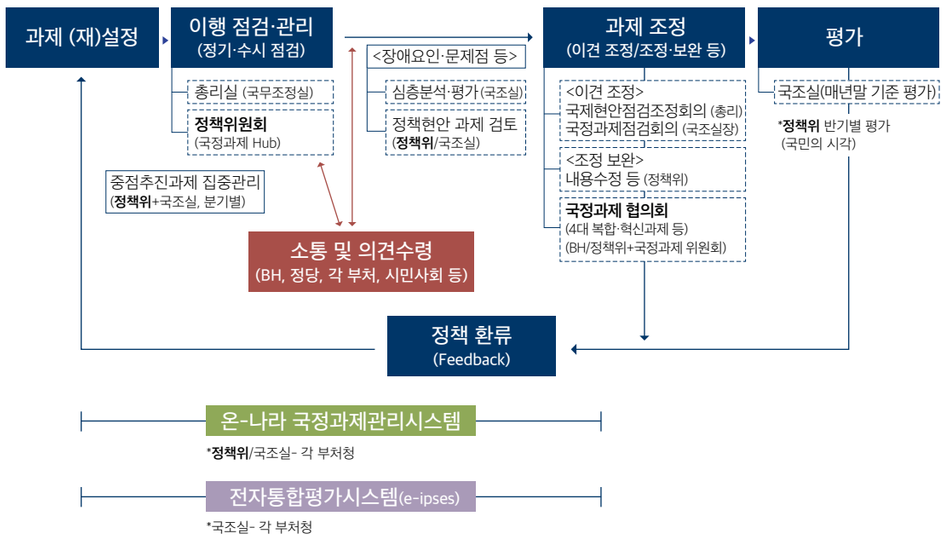


2) 국정과제 조정·보완

최초 확정된 국정과제는 5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는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도 대통령 특별연설, 광복절 경축사,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된 주요 어젠다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 보완 해 나갔다.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총 9회 국정과제 조정 보완을 실시했는데, 이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확정 이후 국정과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과제 신설, 내용 보완 및 변경,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과제의 통폐합 등을 진행한 것이다. 당초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최초 확정된 국정과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현재 100대 국정과제 528개 실천과제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를 통해 국정과제 조정·보완 필요사항 발굴 및 1차 검토를 거쳐 정책기획위원회의 전문가집단 소통 등 의견수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조정보완내용을 정리 후 대통령실에 건의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국정과제 관리-조정·보완-평가환류 체계〉



2018년 3월부터 부처 연두 업무보고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첫 국정과제 조정보완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정과제 확정 이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조정보완 대상과 규모는 가능한 최소화하였다. 100대 국정과제 내용의 축소 후퇴, 또는 단순히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표 수정은 지양하였고,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에만 국한하여 조정보완을 허용하였다.

각 부처가 제출한 조정 보완 수요에 대해 국조실-정책기획위원회-청와대가 조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8년 8월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실천과제 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행 근절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는 등 실천과제의 세부 내용을 22건 변경하였으며, 업무대응체계 개편상황 등을 반영하여 2개 실천과제의 주관부처를 변경하였다.

2018년 9월에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내용 중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기존 실천과제 내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과 용산 생태자연공원 조성 추진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2018년 12월에도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일부 과제의 추진일정 또는 세부내용을 조정하였다. 2018년 동안 총 3회의 국정과제 조정 보완을 실시하였으나,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의 틀은 계속 유지되었다.

〈2018년 실천과제 조정·보완 주요사례〉

조정 보완 내용	관련 실천과제
○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 혁파 관련 내용 추가	2-1 범국가적 부패 방지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확보
○ '용산 생태자연공원' 조성 추진 관련 내용 추가	59-1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 관련 내용 추가	98-1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 구축

2019년 총 3회의 국정과제 조정 보완을 거쳐 실천과제의 수는 496개로 증가하였으며, 100대 국정과제의 큰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2019년 3월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의 내용 또는 추진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이를 반영하였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대책발표 내용, 그 외 남북관계 개선 상황 등 변화한 정책 여건도 반영하였다. 9월에는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보완하였다. 4개의 실천과제를 신설하여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외 신남방정책 추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등 나머지 후속조치 내용들은 기존 실천과제 내용을 보완하여 반영하였다. 2019년 하반기에도 각 부처가 제출한 조정 보완 수요에 대해 국무조정실, 정책기획위원회,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검토결과를 확정하였다. 그 결과 적극행정 활성화, 수소 시범도시 조성,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관련 실천과제 3개를 신설하였고, 규제 입증책임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 실천과제의 세부 내용을 24건 보완 변경하였다.

〈2019년 국정과제 조정·보완 주요사례〉

구분	실천과제	보완내용
과제 신설	(43-6)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78-5)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27-5)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34-7)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가속화 (35-7)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 응원, 실패 존중 (38-5)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추가 보완	2-1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관련 내용 추가
	5-1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광화문 대통령시대 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 삭제

구분	실천과제	보완내용
추가 보완	2-[1]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관련 내용 추가
	5-[1]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광화문 대통령시대 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 삭제
	13-[4] 경찰개혁	경찰대 개혁 관련 내용 추가
	41-[1] 추가 고용제도 신설 등을 통한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청년 지원대책 관련 과제 목표 상향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내용 추가
	30-[1] 민생안정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 관련 내용 추가
	45-[2]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지정·신설 관련 내용 추가

2020년에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정과제의 내용 및 우선순위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 요인이 발생한 해였다. 이에 맞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및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아젠다와, 포스트코로나 대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수립한 각종 정부 대책들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2020년 5월부터 9월에 걸친 대규모 조정 보완 작업 결과 기존의 100대 국정과제 496개 실천과제에서 100대 국정과제 524개 실천과제로 변화하였다. 조정 보완 결과는 2020년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신설된 실천과제는 총 30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시스템 가동, 소비진작대책 추진, 감염병 연구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 금융 고용안정 대책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그린 뉴딜 추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통상 무역질서 대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내용의 과제들과 그간 발표된 범정부 대책 관련 내용들도 실천과제를 신설하여 반영하였다. 국정과제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내용 중 기존 국정과제 내 관련된 실천과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실천과제를 보완하여 반영하였다. 그 외 정책여건으로 인해 추진일정 방식 등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실천과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다. 그 결과 총 151건의 실천과제 세부 내용이 보완 변경되었다.

〈2020년 국정과제 조정·보완 주요사례〉

구분	실천과제	보완내용
과제 신설	19-[5]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대책 마련·지원 20-[1] 경제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시스템 가동 29-[7] 코로나19 대응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34-[9] K-방역 국제표준화 37-[8]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 37-[9]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38-[6] 코로나19 산업 위기 극복 45-[8]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및 방역 성과 종합 58-[1]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및 계절관리제 추진 75-[7]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소비진작 99-[5] 포스트코로나시대 국제협력 주도 100-[6] 코로나19로 인한 통상·무역질서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	
추가 보완	34-[3]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내용 추가
	21-[3]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내용 추가
	78-[3] 혁신도시·새만금 등을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관련 내용 추가
	11-[2]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보존 강화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관련 내용 추가
	13-[4] 경찰개혁(민주·민생·인권 기능 강화)	국가수사본부 설치 내용 추가
	64-[5]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내용 추가
	64-[4]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 조정

2020년 9월 큰 폭의 국정과제 조정 보완 이후, 국정과제 체계는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2021년 3월, 대통령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3·1절 기념사와 부처 연두업무보고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8번째 조정 보완을 실시하였다. 조정 보완 결과 실천과제 4개가 신설되었고, 8건의 실천과제 세부 내용이 보완 변경되었다. 2021년 신년사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뉴딜 발전전략 수립 관련 실천과제를 신설하였으며, 북악산 시민 개방 혁신조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국정과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정책들과 관련된 실천과제들도 추가하였다. 그 외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아동학대 대응체계 선진화, 뉴딜펀드 조성 등 신년사 후속조치 관련 내용들은 기존 실천과제 내 단위과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였다.

8월에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과제를 관련 실천과제에 반영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모델 확산,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 등 총 4건의 실천과제 내용이 조정 보완되었다.

〈2021년 국정과제 조정·보완 주요사례〉

구분	실천과제	보완내용
과제 신설	78-[7] 지역균형 뉴딜 추진 5-[5] 북악산(명승 백악산) 시민 개방 8-[6]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조달 46-[5] 투기근절 및 부동산부패 척결	
추가 보완	45-[7] 감염병 연구 강화 및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확보 및 전국민 무료 접종 관련 내용 추가
	48-[5]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선진화 관련 내용 추가
	20-[1] 경제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시스템 가동	뉴딜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 관련 내용 추가
	69-[4] 4차산업혁명 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한류콘텐츠 디지털화 내용 추가
	27-[6]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통해 상생 문화 확산	코로나 피해·수혜 기업간 상생 지원 관련 내용 추가
	48-[5]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입양제도 개선 관련 내용 추가

2022년은 임기 마지막 해로, 별도의 조정 보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정 보완을 통해 내용을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의 100대 국정과제 528개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과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2.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거대전환의 사회변동('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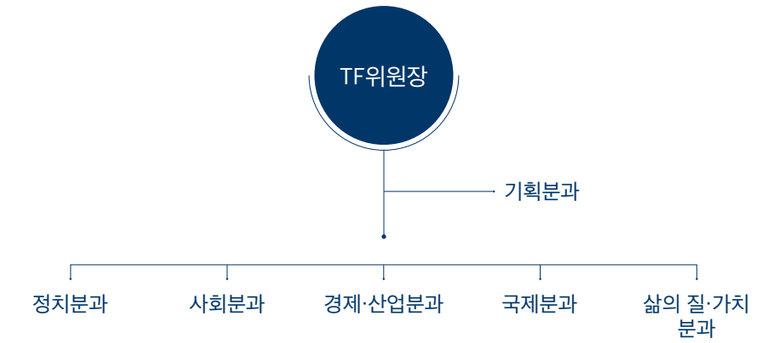
1) 개요

정책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거대전환의 사회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전과는 달리 미래 사회변동의 전망이 불확실함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총 19명으로 구성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거대전환의 사회변동TF'(이하 '거대전환TF')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거대전환TF는 위원장과 기획분과, 정치분과, 사회분과, 경제·산업분과, 국제분과, 삶의 질·가치분과 등 6개 분과로 구성되었고 총 19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었다.

거대전환TF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거대전환의 성격과 방향, 거대전환의 6대 위기와 특징, 거대전환의 주요쟁점 등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거대전환을 위한 10대 비전과 목표 등을 담아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거대전환의 사회변동' 보고서(이하 '거대전환 TF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거대전환의 사회변동 TF구성도〉



〈거대전환TF위원 명단〉

번호	분과	성명	소속 및 주요경력
1	위원장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TF위원장), 서울대 국립대학원장, 역사비평 주간
2	정치분과/기획분과	김선혁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국행정학회 이사
3		신진욱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중앙대 사회학과, 한국사회정책학회 이사
4		장덕진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한국사회학회 운영위원
5	사회분과	김진우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
6		김 윤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코로나대응 감영병TF위원
7		전병유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한신대 경제학과,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현)
8		윤홍식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9	경제·산업분과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소득주도특별위원회 소득재분배분야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
10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11		서봉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2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분과 부위원장, 계명대 사회학과,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현)
13	국제분과	이혜정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14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5		이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16	일상·가치관분과	김경희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중앙대 사회학과, 한국여성학회장
17		김민희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18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 인문대학장
19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 거대전환의 정의와 범위

거대전환TF 보고서에서는 포스트코로나(Post-COVID Pandemic) 시대를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며 기존의 질서에서 대전환이 진행되는 전체 시기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계적 1차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의 시기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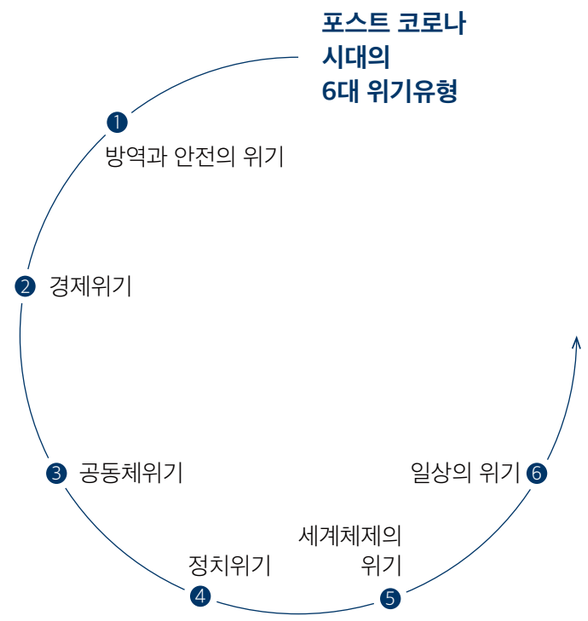
또한 전환의 범위를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서 위기와 변화가 나타나며 집단과 조직·사회경제적 구조·가치와 규범의 질서·일국을 넘어서는 지구적 수준의 변동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동은 인류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정의하였다.

3) 거대전환의 6대 위기와 특징

가) 6대 위기

거대전환TF 보고서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① 방역과 안전의 위기, ② 경제 위기, ③ 공동체 위기, ④ 정치의 위기, ⑤ 세계체제의 위기, ⑥ 일상의 위기 등 6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 분석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거대전환의 6대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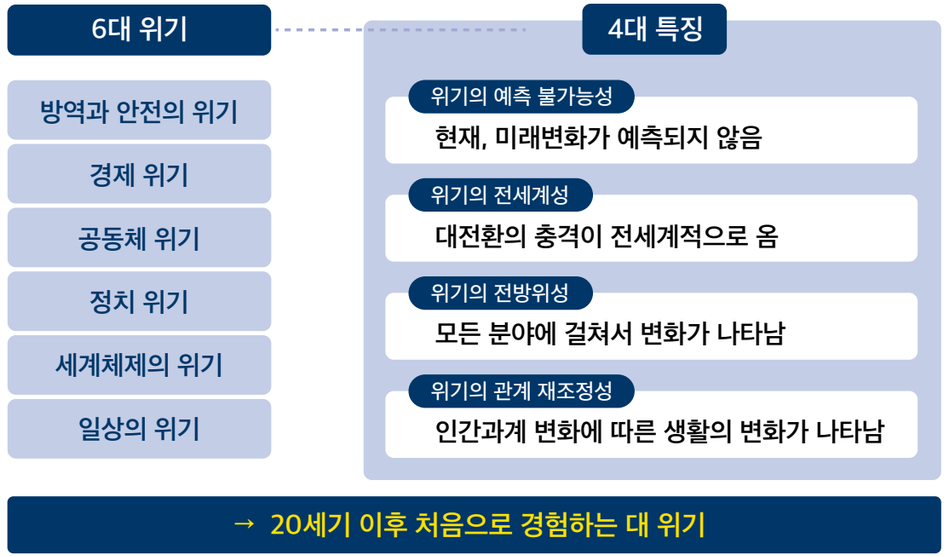
〈거대전환의 6대 위기〉

구분	내용
1. 방역과 안전의 위기	○ 코로나19재확산 : 방역으로 잡을 수 있을까? ○ 제2의 팬더믹 발생가능성 : 제3, 제4 팬더믹이 오지 않을까? ○ 사회적 거리두기 :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까? ○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 방역, 안전이 우선인가? 경제가 우선인가?
2. 경제 위기	○ 3중(수요, 공급, 금융) 위기 : 세 개의 위기 동시에 발생 ○ 글로벌 밸류 체인(GVC : Global Value Chain) 위기 : 국가간 분업체계 붕괴 ○ 이동의 위기 : 노동력의 국제이동 제한, 생산거점 이동 ○ 산업의 위기 : 공유(share) 산업의 위기, 관광업의 위기
3. 공동체 위기	○ 소득·위험의 양극화 : 중산층의 몰락, 취약계층의 생존문제 부각 ○ 돌봄의 위기 : 육아·돌봄 분담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심화 ○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이 증폭 :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계층마다 다른 이해관계, 세대마다 다른 이해관계
4. 정치의 위기	○ 정당, 정치인에 대한 신뢰하락 : 정당, 정치인에 대한 불신, 진보정당의 어려움, 코로나19확산이 모든 정치적 이슈를 흡수 ○ 정부의 위기 :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협조의 어려움 부각, 재정정책에서 정부와 경제전문가 사이의 갈등, 강한정부를 원하는 국민vs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비판, 국가 재정 동원역량의 어려움
5. 세계체제의 위기	○ 국제체제 위기 : 미중 무역전쟁, 국가간 분쟁 콘트롤타워의 부재, 바이든 행정부 출범 ○ 국제기구 거버넌스의 위기 : 국제기구(WHO, UN 등)의 기능 미약 ○ 글로벌 양극화 발생 : 북반국의 선도능력 한계 노출, 남반구의 경제적 상황 악화
6. 일상의 위기	○ 코로나 블루 : 인간관계 단절 및 일상에 닥친 우울감과 무기력, 사회적 관계 맺기의 박탈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코로나19 세대 불안, 좋은 일자리가 있을까? ○ 집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 : 모든 사람에게 집이 행복, 안정을 주는 곳인가? ○ 돌봄의 위기 : 언제까지 집에서 육아, 돌봄, 교육을 해야 할까?

나) 6대 위기의 4대 특징

6대 위기의 특징은 ① 위기의 예측 불가능성(현재·미래 변화가 예측되지 않음), ② 위기의 전세계성(대전환의 충격이 전세계적으로 옴), ③ 위기의 전방위성(모든 분야에 걸쳐서 변화가 나타남), ④ 위기의 관계 재조정성(인간관계 변화에 따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남) 등 4개로 구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가 '20세기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위기' 라고 분석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6대 위기와 4대 특징〉



3)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거대전환의 주요 쟁점

거대전환TF 보고서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거대전환을 ① 국가와 시민사회, ②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③ 복지국가의 재구성, ④ 고용과 노동의 안정, ⑤ 비대면 사회와 산업재편, 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미래, ⑦ 보건의료 체계의 혁신, ⑧ 미중갈등과 대공위 시대(interregnum), ⑨ GVC(Global Value Chain)의 불안정과 자국중심주의, ⑩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⑪ 가족과 돌봄공동체, ⑫ 새로운 교육체계, ⑬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연대 등 13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거대전환의 주요쟁점〉

구분	주요 쟁점
1. 국가와 시민사회	○ 국가주도형 모델과 국가-사회협업형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2.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 어떤 방식으로 강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효율적인 협업을 이루어 낼 것인가?
3. 복지국가의 재구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과제에 조응하는 복지국가의 현대적 재구조화가 가능할까?

구분	주요 쟁점
4. 고용과 노동의 안정	ㅇ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5. 비대면 사회와 산업재편	ㅇ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ㅇ 비대면에 집중하다가 대면으로 회복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ㅇ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6.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미래	ㅇ 부실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릴 것인가?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ㅇ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 보건의료 체계의 혁신	ㅇ 예측되지 않는 팬더믹을 위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지출해야 하는가?
8. 미중갈등과 대공위 시대 (interregnum)	ㅇ 미중갈등은 제2의 냉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공위시대로 갈 것인가? ㅇ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세계선도는 가능할까?
9. GVC의 불안정과 자국중심주의	ㅇ 기존의 GVC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ㅇ 리쇼어링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가? ㅇ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GVC를 재건할 것인가?
10.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ㅇ K-방역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에 기반한 한국적 모델을 세계시민사회에서 보편화 할 수 있을까? ㅇ 글로벌 거버넌스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할 것인가? ㅇ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를 복구할 것인가?
11. 가족과 돌봄공동체	ㅇ 불안정한 가족과 주거지로 인한 개인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ㅇ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ㅇ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2. 새로운 교육체계	ㅇ 현재의 교육재정, 빈부격차의 상태에서 비대면 교육의 도입이 위기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13.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연대	ㅇ 변화되는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ㅇ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 신체를 사용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4) 10대 비전

거대전환TF 보고서에서는 거대전환의 비전을 ① 강한 민주주의와 유능한 정부, ② 신뢰의 정치와 생활정당 시대, ③ 소득기반 복지 시스템, ④ 포스트코로나 생명주의 안심의료, ⑤ 산업구조 전환과 좋은 일자리 시대, ⑥ GVC의 재구성과 지역무역시대, ⑦ 4K를 통한 세계질서 선도, ⑧ 다양한 가족·공동체돌봄의 시대, ⑨ 디지털 교육기반과 생애교육시스템, ⑩ 다름을 소통하는 사회 등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각 비전별 법, 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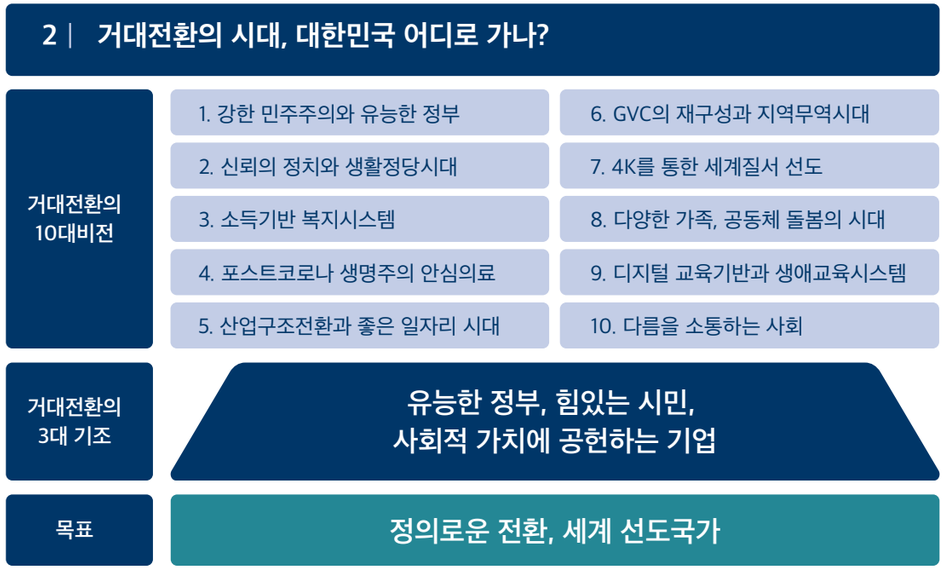
〈거대전환의 10대 비전 및 내용〉

10대 비전	내용(법, 제도 개선 과제)
1. 강한 민주주의와 유능한 정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차별금지법,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협약 법제화
2. 신뢰의 정치와 생활정당 시대	정당관계법, 선거법 개정
3. 소득기반 복지 시스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시행, 소득기반 복지제도로 전환,보편적 복지로 대전환 기반 마련
4. 포스트 코로나 생명주의 안심의료	주치의제 기반 비대면 진료강화(감염병, 만성질환), 지역 거점 공공병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혁, 지역돌봄 재가 서비스 강화, 케어팜 제도 도입
5. 산업구조 전환과 좋은 일자리 시대	비대면 산업 진흥/HCI 분야의 개발/문화콘텐츠산업 진흥/선도적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제조업 혁신 새로운 분야로 전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생애주기 교육→고등교육체제의 개편
6. GVC 재구성과 지역무역시대	그룹(G7, G20) 방식 재편에 적극 동참, EU·ASEAN 등 지역 연합과의 관계 강화, GVC의 정상화를 위해 주변 열강과의 관계 정상화, 제2의 한일 뉴파트너십 선언
7. 4K를 통한 세계질서 선도	4K브랜드를 통한 대외관계 선도, 세계선도 대한민국(세계선도 안전, 세계선도 경제, 세계선도 시민)
8. 다양한 가족·공동체 돌봄의 시대	국가위기 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구축,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에 따른 가족제도 및 정책 개선, 돌봄근로자 교육강화 및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9. 디지털 교육기반과 생애교육시스템	원격 중심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수자 전문성 확대 및 법령 개정, 교육투자(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재정투자), 학제 개편 및 학력인정 유연화, 생애주기 교육체계 구축 → 고등교육기관 개혁
10. 다름을 소통하는 사회	새로운 가치관·어려운 선택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실질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담론과 소통을 보장해 주는 민주 사회·정치 체계 지원 유지

5) 미래의 도전과 선택

거대전환TF 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비전에 따라 미래를 기회와 위기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거대전환의 기조로 ① 유능한 정부, ② 힘있는 시민, ③ 사회적 가치에 공헌하는 기업 등 3대 기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10대 비전, 3대 기조에 따라 거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의 국정 목표를 '정의로운 전환, 세계 선도국가'로 설정하였다.

〈거대전환의 10대 비전, 3대 기조, 목표〉



나.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광복 100년의 미래비전 2050)('21.1.)

1) 개요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미래의 경제·사회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특히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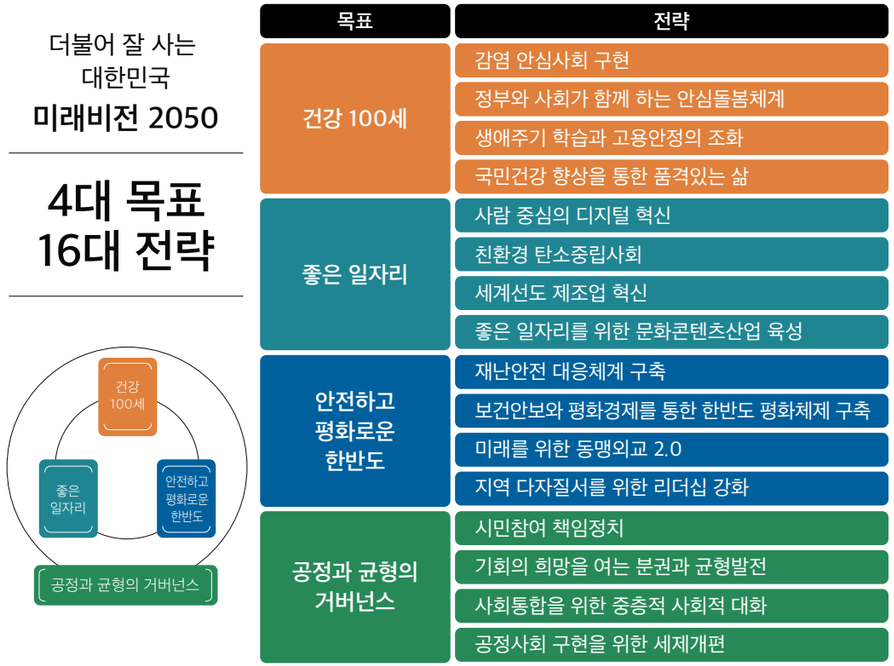
이에 정책기획위원회는 2021년 1월 '광복 100년의 미래비전 2050-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발표하였다(이하 '미래비전 2050'). 동 비전에서는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건강 100세, 좋은 일자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정과 균형의 거버넌스 등 4대 목표와 16대 전략을 제시하였다.[1)]

1) 이에 앞서 정책기획위원회는 2019년 12월 광복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이하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였는데,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사회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을 반영하여 '미래비전 2045'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미래비전 2050'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미래비전 2050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미래비전 2050'은 일제 식민지배·분단·전쟁·2019년 건국 100주년·2045년 광복 100주년·2050 탄소중립사회 등 현재와 미래에 걸친 각종 위기와 도전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2050년에 희망의 나라로 가야한다는 국민적 공감에 부응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국가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비전은 문재인 정부 5년만이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그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것으로 장기적인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정부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미래비전 2020의 4대 목표와 16대 전략〉



2) 4대 목표 16대 전략

가) 제1목표 : 건강 100세

① 감염 안심사회 구현

미래비전 2050에서는 감염 안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코로나 재확산 대비 신종감염병 방역·진료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 조직 내 전문인력 강화, 감염병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단기 유급병가 제도 도입,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병원 확충, 전국민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등 6개 단기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

병 대응역량 기반 구축, 만성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상병수당 신규 도입, 취약지역 병원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 균형발전, 백신 자주권 확보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②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하는 안심돌봄체계

미래비전 2050에서는 안심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문재인 케어 진행, 팬데믹 시 긴급돌봄을 위한 국가관리체계 확립,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조직 지원, 케어팜 조합설립 및 도시형/농촌형 케어팜의 새로운 모델개발 등 3개의 단기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문재인 케어 완료, 지자체 중심 사례관리의 공공화, 지자체 책임 돌봄체계 확대, 케어팜 테스트베드 확대 등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③ 생애주기 학습과 고용안전의 조화

생애주기 학습과 고용안정의 조화를 위해 미래비전 2050에서는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훈련계좌제 정착 및 학습생활카드 도입, 사회적 기여의 폭넓은 인정, 소득 중심의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 등의 5개 단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인구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체계 재편, 학습생활카드 제도의 정착, 노동의 미래 전략위원회 설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이행, 부양의무제 실질적 폐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확대 등 6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④ 국민건강 향상을 통한 품격있는 삶

미래비전 2050에서는 국민건강 향상을 통한 품격있는 삶 실현을 위해 단기 전략으로 건강향상을 위한 바이오산업 지원 및 활성화, 문화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여가활동 확대, 건강보장체계 혁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식생활 홍보 및 정책 마련 등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보건의료 기술 촉진 및 적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건강한 중고령층이 잘 놀 수 있는 사회 구현, 요양병원제도의 분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화 등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나) 제2목표 : 좋은 일자리

① 사람 중심의 디지털 혁신(디지털 뉴딜)

사람중심의 디지털 혁신의 단기전략은 데이터 구축·개방·활용(데이터댐)을 통한 디지털 뉴딜 추진, AI비대면 핵심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태블릿·노트북 제조 중소상공인 협동조합 조직, 바이오 산업·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및 디지털 의료 확대, 디지털 지능형 정부 구현,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융합(스마트팜 시범지역 선정) 등 6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은 1·2·3차 전산업으로 AI·5G 융합 확산, 디지털 지능 산업 밸리 구축, AI 인재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HA(Human Interaction)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 발굴, K-방역 수출 및 K 바이오 헬스 산업기지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저부 사이의 디지털 시스템 통합을 통한 원활한 국정운영체계 마련, 스마트팜의 전국적 확대 등 8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② 친환경 탄소중립사회

친환경 탄소중립사회의 단기전략은 재생에너지 기술 확보를 통한 에너지 체계 전환, 생활밀착형 뉴딜, 수소 대량 공급 및 활용 확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강건한 통합물관리 실현, 스마트팜 관련 정책 일원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전략 수립 등 6개를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토대 마련, 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친환경 그린 수소 에너지 체계로 발전, 해외 공급 및 유통망 구축 및 선도 기업 육성, 기후변화에 강건한 통합물관리 실현, 스마트팜 표준화 모델 개발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③ 세계선도 제조업 혁신

세계선도 제조업 혁신은 단기전략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주력산업 구조혁신,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장주기 산업의 전략적 육성, 초전도 마그네틱 기술 및 추진 동력 확보, 초전도 기반 제조업 선도 및 혁신 등 4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4차산업혁명,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육성 관련 법 제·개정 및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기술개발(국립 고자기장 연구소), 산업응용(제조혁신 플랫폼 사업)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④ 좋은 일자리를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를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콘텐트 강국을 위한 혁신적 사회환경 조성, '놂'의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등 3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콘텐츠 창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우수 콘텐츠 제작 및 출판 R&D지원,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한 세계화의 호혜적 소통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기반 구축, 기존 콘텐츠 산업의 신기술 융합전략, 문화산업의 기초로서 출판산업 역량 강화, 연령에 관계없이 문화 창작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 일터 마련 등 3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 제3목표 :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①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은 단기 전략으로 미래 위험 예측 조기 경보 역량 강화, 전 재해접근법 확대 적용, 공정경제3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사회재난에 대한 실행대책 마련, 북한에서의 재해발생에 대한 공동대응 계획 마련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파편적 거버넌스를 통합적 거버넌스로 전면 개편, 기후재난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구축, 공정경제3법·노동3법·중대재해법 전 사업장 적용, 안전 관련 법률 재정비, 한반도 재난 대응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② 보건안보와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보건안보와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서는 단기전략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 인력 충원방안 마련, K-방역 체계화 및 표준화를 통한 남북 방역 협력, 경제현안 중심의 남북실무회의 추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주변국과의 공감대 합의, 남북 종전선언, 9.19 군사합의서 실질적 이행을 위한 대화 창구 마련 등 6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대체복무제도 마련, 평화협정 기반 구축 동아시아 철도, 고속도로 연결을 통한 운송 및 관광산업 르네상스, 남북 하나의 시장 기반 구축, 동아시아 평화·번영 공동체 기반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남북 거버넌스 체제 기반 구축,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직접 연결 등 7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③ 미래를 위한 동맹외교 2.0

미래를 위한 동맹외교 2.0에서는 K-방역 체계화 및 표준화를 통한 정상외교, 한미관계의 재정립, 제2차 한일 뉴파트너십 선언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기반 마련, 신남방정책과 신실크로드 협력방안 마련/중국 지방정부와의 관계 강화, RCEP 체결 및 일대일로(一帶一路)·인도태평양 정책과의 공동협력방안 마련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선도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전략 기반의 동맹관계 구축, 한미간·한중간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정 마련 및 선도과학기술을 통한 협력,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새로운 국방정책 확립,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한미일 간 협력기구 마련, 일대일로·인도태평양정책, 신남방 정책의 협력을 위한 한중일 파일럿 기구 마련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④ 지역 다자질서를 위한 리더십 강화

지역 다자질서를 위한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신남방 정책 관련 주요 현안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추진, 신북방 정책 관련 주요현안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호혜방안 연구,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확대 및 CPTT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전략적 추진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신남방정책의 지역적 범위 확대·중장기 지역협력 전략 수립, 동북아 중심 협력에서 북방국가 전체로 협력 기반 확대, 관광·문화·환경·보건의교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활성화, 러 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정책과 사업 연계, 해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라) 제4목표 : 공정과 균형의 거버넌스

① 시민참여 책임정치

시민참여 책임정치에서는 단기전략으로 정책정당을 위한 정당관계법 및 선거법 개정, 시민권교육 프로그램 제도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 3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민주시민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반조성, 관용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② 기회와 희망을 여는 분권과 균형발전

기회와 희망을 여는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는 단기전략으로 재정분권 및 재정조정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입법화, 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상설 지방분권·균형발전 특위 구성, 광역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 등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지방분권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 설치, 광역화 작업 마무리,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조정 마무리 등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③ 사회통합을 위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사회통합을 위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전략에서는 단기 전략으로 차이와 다름의 인정과 신뢰 구축, 사회적 대화와 숙의(熟議) 민주주의 정착, 지역별·업종별 중층적 대화시스템 마련, 갈등 감수성이 높은 예견적 거버넌스 정부 등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정당 개혁을 통한 협치의 제도화, 사회적 대화

의 활성화와 숙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좋은 일자리 창출·1인 가족 안정화·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안정적 돌봄제도를 통한 세대간·계층간 소통강화, 갈등관리 기반 강화 등 4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④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제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제개편 전략에서는 균형과 공정을 위한 조세체계의 구축방향으로 고소득층 소득세·부동산 보유세 확충 및 소비세 등 간접세 확대로 사회보험 기여금을 확대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소비세 등 간접세 확대, 주택 보유세/취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3. 정책·현안 보고서 자문·건의

가. 추진 개요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남북 등 국정운영의 주요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토론에 기초한 '정책·현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7년부터 정책기획위원회는 TF,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과제 등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과 공감대 확산, 추진전략 등을 모색하는 총 98건의 정책·현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정책현안 보고서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건수	1	36	34	13	8	6	98

나. 2017~2018년

정부 출범 초기에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한 다수의 정책자문 수요가 있어 대통령실 및 관련기관의 요청과 위원회 자체 발굴한 이슈에 대해 다수의 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해 자문 및 건의하였다.

〈2017~2018년 정책현안 보고서 목록〉

구분	보고서명
'17.(1)	문재인 정부 2017년 성과와 과제
'18.(36)	남북관계, 2030 세대와의 소통 방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발전 방안
	2018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대응
	신남방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구분	보고서명
’18.(36)	북한 10년, 경제·사회 10대 변화
	미투(Me·Too) 운동 관련 정책제안
	폐기물 관리 정책 개선방안
	외교다변화의 의미와 추진전략
	중소기업분야 SW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생활·자연방사선(라돈 침대 사태) 관리정책 개선방안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확대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경제활성화 방안
	자치와 분권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화평법, 화관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부패행위 조사권 실질화 방안
	관광산업(인바운드) 활성화 정책분석 및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계적 보완조치 건의
	평양. 뉴욕 정상회담 추진전략
	평화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2030 여성과 새로운 정책추진방안
	2018 광복절 계기 남북관계 메시지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전략화
	혁신기술 중소기업 성장지원 방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서
	가짜뉴스 관련 제언
	범정부적 사법개혁 추진기구 구성 제안
	한반도 신경제구상 : 평가와 제언

구분	보고서명
’18.(3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안)
	부동산 정책현안 TF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방안(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TF)
	평화번영의 맵 TF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TF
	반부패 TF(현행 반부패 정책의 진단과 대안)
	민주시민교육 TF

1) 현행 반부패 정책의 진단과 대안

2018년 12월부터 국민주권 분과(권력기관 개혁 소분과)에서는 당시 반부패 개혁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반부패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반부패 TF를 운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국가기관·공공기관 부패문제, 비제도적·문화적 개선 문제 등을 파악 후 반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체계 점검, 권력형 부패와 생활형 부패의 개념과 패러다임 재정립, 바람직한 반부패 정책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2018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대응

동 보고서는 김용현 남북관계통일소분과장이 대표 집필하고, 고유환 평화번영분과 위원장 외 평화번영분과 위원 전원 참여하였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동 회담의 의의를 평가하고, 회담의 핵심의제에 관해 제언하였다. 우선, 2018 남북정상회담이, 그 직후 개최되는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 구도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평화번영 정책의 실현 과정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3)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전략화

‘4차산업혁명’에 관해 핵심범용기술과 응용기술로 나누어서, 과제들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와 산업현장의 현재 역량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공급자의 육성 정책에 관한 전략적, 단계적 접근 방

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기술 발전에 관한 논의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관해 국제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다. 2019년

국정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른 2019년에는 포용국가 전략을 가다듬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정책 성과를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2019년 정책현안 보고서 목록〉

구분	보고서명
'19.(34)	'19. 북한 신년사 평가 및 향후 전략
	남북경협 추진 관련 대북제재 해제전략
	'19.3·1절 계기 남북·대외관계 메시지 제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적자금 운용 및 관리 개선방안
	포용국가의 지역 중심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개편방안
	미세먼지 긴급 대책 제안
	민주시민교육(학교) 활성화 방안
	정부 2년 성과평가 및 향후 3년 주요과제 : 평화번영분야
	중장년 대상 전직(轉職)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안 제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대기자 명부 도입의 방향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 전망과 정책방향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적폐청산, 권력기관개혁 종합보고
'19.(34)	문재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과제
	미투(Me·too) 이후 법·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건강 형평성
	포용적 복지국가의 사회적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현황 및 향후 과제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현황 및 향후과제
	관광분야 일자리 활성화 방안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대응전략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 과제 제안(지속가능분야)
	한중 물환경산업 협력 전략 및 추진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조직 개선방안
	자동차 산업 육성 TF
	정책소통 TF
	미디어 교육 활성화 TF
	국가 거버넌스 혁신 TF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대응전략 TF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TF
	노동정책 TF
	관광분야 일자리 TF
	한중 물·환경 기술협력 TF

1) 포용국가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개편방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적 책임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욕구 기반의 인프라 확충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하기 위해 시·군·구단위의 서비스 기획·조정을 위한 총괄조직 신설, 서비스이용권 보장을 위한 공공연계 시스템 구현, 지방분권형 재정지원, 거점 사례관리기관 및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성과 관리,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며, 2019

년 3월 청와대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대응전략

글로벌 경제질서의 지각변동과 국가 간 갈등의 장기화 추세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맞춘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산업정보역량 강화(intelligence), 기술패권주의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한 공급망 강화 및 첨단 제조업 발전(advanced manufacturing), 시장 및 기술 소싱 다변화를 위한 무역·통상 정책(diversification)을 세 축으로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적폐청산, 권력기관개혁 종합 보고

2019년 12월 국민주권 분과(권력기관 개혁 소분과)에서는 그간 기관별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별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정도에 차이가 나고, 제도 개선 권고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에 통일적 기준을 세워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권력기관 개혁은 종합적인 플랜의 재구성, 컨트롤타워 설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제화가 가능한 부분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 안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4) 미세먼지 긴급 대책 제안 : 위기를 기회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소비행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앞으로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원인 물질을 줄여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가 합의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 행정력 강화 및 체감할 수 있는 긴급 대책 마련, 대중국 및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관련 책임자 언론 대응 및 위기소통 능력 강화라는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라. 2020~2022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정책기획위원회는 새로운 위원 구성과 함께 제2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1기에는 '100대 국정과제'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에는 집권 후반부의 핵심과제들 위주로 자문하였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후반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맞아 정책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위원회는 코로나 발생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가되는 국정과제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체계 혁신, 한국판 뉴딜 보완 등의 과제를 진행하였다.

〈2020~2022년 정책현안 보고서 목록〉

구분	보고서명
'20.(13)	한국형 뉴딜 정책 보완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기획·운영(안)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플랫폼 구축 방안
	지역주도형 고용창출 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재구성 TF
	포용적 뉴딜 TF
	미디어 발전 TF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 플랫폼 TF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TF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TF
	미국 대선이후 외교 정책방향 TF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
'21.(8)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방안 TF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방안 TF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TF
	수사권 다원화 TF

구분	보고서명
’21.(8)	문화·미디어 분야 정책이슈 점검과 과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22.(6)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일자리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과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주요쟁점 및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외교혁신
	공공보건의료 정책 강화방안
	지역돌봄체계 구축
	국가전략으로서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1) 한국형 뉴딜정책 보완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에 맞는 포용성을 제시하기 위한 ‘포용뉴딜’ 추진을 검토하였으며, 상병수당제도, 청년고용보장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한국형 뉴딜의 돌봄서비스 강화, 녹색일자리로의 연착륙, 유니버셜 오너로의 공적연기금 개혁 등을 제안, 2020년 7월에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2)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우리나라의 공간적·지리적 불균형,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초광역권 전략에 기반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20년 10월 진종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를 구성하였고,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존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해외의 광역권 사례 검토(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경제광역권을 위한 산업전략 등을 점검·논의하고, 초광역권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였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현행 소상공인 정책의 한계와 유통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고 도소매 유통 물류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유통물류센터 확충을 통한 공산품 도매유통비용 절감,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신선식품 도매유통비용 절감, 민관합동

플랫폼을 통한 신선식품과 식재료 유통비용 절감, 공공플랫폼을 통한 경쟁 활성화와 소상공인 플랫폼 비용 절감, 지방의 소상공인 정책참여 기능 강화 및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방안 등을 보고 하였다.

4) 비정규직 정규직화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청년세대 중심의 공정성 이슈 및 무기계약직화의 한계 등의 쟁점이 대두되었고,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면서, 정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세대 공정성 인식의 다층적인 면을 살피고 포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비정규직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정책제언서를 작성 보고 하였다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일자리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과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일자리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새로운 성장-분배 체제 구축, 제조업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주도하는 투-트랙(복선형) 산업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기반 고용창출 산업정책,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는 노동정책, 사회연대적 산업전략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 복지 등이 제시되었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고용창출형 산업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업종전환, 실업자 지원정책, 대체산업육성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의 주력(성장)산업과 일자리가 내생적으로 연계되는 고용창출형 산업전략 구축 필요하고, 평등과 공정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직업노동시장체제의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사용자 책임성 강화, 포괄적 이해대변과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체제로 변화가 필요하며, 한국 복지체제의 재구성 전략은 현재 성장체제가 양산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과 보편적 복지체제로 재구조화를 통해 성장체제 자체를 고도화하는 ‘사회연대 산업고도화전략’ 필요하다.

6)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체계화된 국가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환경, 제도, 지원 등을 담아낼 법제도의 정비,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총괄 기관으로 가칭 한국미디어

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언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정부·기업·시민의 협력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이용자 기반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 개발과 같은 세부 실행 과제의 추진이 필요함을 보고 하였다.

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외교혁신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과제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주적 해법 제시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등 주요 이해 당사국 상황이 급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의 발생으로 인해 예상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한계를 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환경을 포함한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한편, 한국의 위상은 중견국을 넘어 선도국가 또는 신흥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한국외교의 방향성 설정과 글로벌 대응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외교의 틀과 방향의 정립과 외교 조직적 쇄신이 주요 문제의식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토한 정책제언은 한국의 신외교가 이념적, 당파적, 이익적 갈등을 넘어서는 시대적 대전환 사고에 기반하여 국내외 기대 모두 충족하는 외교가 되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8)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 방안

지금까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및 진료체계 개편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는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확충방안, 공공보건의료 재원조달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및 진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9) 지역돌봄체계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돌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고, 이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므로 이를 위하여 영유아·초등학생·장애인·환자·노인에 대한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로써 돌봄 서비스의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커뮤니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사회의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구상하였다. 또한 인구집단별로 영유아·초등학생·간호간병·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현황과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을 작성하였다.

10) 국가 전략으로서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서열화 해소, 교육양극화 극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체제 개혁방안이 필요하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교육대전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되었다. 대학 서열 해소,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 불평등 해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불평등 해소, 청년세대를 위한 교육복지와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와 창조권력으로서의 대전환 역할 강화를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다. "서울대 10개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식과 함께, 지역거점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을 서울대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방안,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 교육혁명과 대학체제 개편방안, 지역거점 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대 상생 발전방안 등이 작성되었다.

4. 정책연구용역 추진

가. 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촛불혁명으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총괄 허브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한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은 다른 어느 위원회의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본질적 기능이라 하겠다.

정책연구는 국정과제와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 중요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심층적 조사·연구를 통해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집단 등을 연결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담론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은 주로 대학 산학협력단, 학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에서 연구되었으며, 코로나 대응방안 또는 남북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기초 환경조사 등 일부 특정분야 과제의 경우는 대학병원, 관련 협동조합 등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정책연구용역의 일반적 추진절차는 '정책기획위원회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의 내부 규정에 따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기적(보통 년초) 또는 필요시에 BH를 포함한 정부부처, 위원회 자체 등으로부터 수요제기된 과제에 대하여 각 제안과제의 적합성·중요도·활용목적의 명확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추진하게 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 간(2017~2021년) 총 9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출범 초·중기에는(2017~2019년)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과 실천과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전략방안 마련 등 주로 새 정부의 미래비전 수립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2018년도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의 연장선에서 4월 남북회담과 6월 북미회담이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후반기에는(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대응과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정방향 및 한국판 뉴딜을 통한 미래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위원회는 다양한 현안·중장기 정책이슈 대응을 위해 수시로 국정현안 TF를 조직·운영하고 필요시 자체 또는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 중요문제에 대한 담론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이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주제는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운영하였다. 이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이 단편적인 활자에 제한된 정적인 보고서결과물의 생산이 아닌,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시시각각 현안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구체적 정책수립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힘의 원천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용역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 포함) 예산으로 추진한 모든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인 'PRISM (www.prism.go.kr)'에 등록·게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민들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이용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PRISM)〉



프리즘시스템 홈페이지(www.prism.go.kr) 참고

나. 연도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1) 2017년도

2017년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로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희망찬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용역이 추진되었다.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과거 정부와 주요 선진국의 비전 비교·분석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별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 (사)한국사회학회를 통해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사례분석을 통한 향후 미래비전 수립 방향'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산업화와 경제 기적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와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 집중됨으로써 양극화 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는 사람중심경제를 내걸고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제기된 국민의 다양한 개혁요구과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 용역을 추진하였고, '새로운 정치질서와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방안'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이 무렵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정립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과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해외동포를 포함한 전국적·범국민적 기념행사를 기획하고자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정부의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추진위원회'가 조직되고, 2019년도에는 중국 상해를 필두로 27개국에서 감동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으며, 이 연구 과정에서 기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3일은, 2006년 10월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지정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4월 11일이 정식 수립된 것이 맞다는 학술회의 결과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로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게 되었다.

〈2017년도 추진 정책연구용역〉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17-1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사례분석을 통한 향후 미래비전 수립 방향	(사)한국사회학회
'17-2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 방향	(사)민족문제연구소
'17-3	문재인 정부 성장전략과 실천과제	한국사회경제학회
'17-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사)한국행정학회
'17-5	사례분석을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방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7-6	새로운 정치질서와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방안	(사)한국국제정치학회
'17-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_촛불시민혁명의 관점에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17-8	생활안전 위협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환경건강연구소
'17-9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17-10	생활비 부담경감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7-11	국정과제의 국민체감형 관리방안	현리서치앤컨설팅

2) 2018년도

2018년도에는 문재인 정부 2년 차로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23건의 다양한 과제의 연구가 기획되었다.

2018년 9월 대통령은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후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과 협업하여 혁신적인 포용국가와 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합친 ‘국가 미래비전 2040’ 수립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한 ‘2040 미래와 정부혁신(수행 : 한국행정연구원)’과 ‘2040 한국의 안보국방-전망과 대책을 중심으로(수행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등 각 분야별 총 10건의 연구가 전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당초 2040년까지의 비전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로 확대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라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공표하게 되었다.

2018년도에는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분위기를 발전시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 즈음에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라는 큰 틀에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20대 국정전략 연장선에서 동북아의 복잡한 변화를 연구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외교 안보의 중요 현안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 국가전략으로서의 평화번영국가 구상과 실천방안(수행 : 한반도평화포럼)’ 연구가 기획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미래비전 2040 계획으로, 단기적 현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와 대응방안(수행 : 동아대 산학협력단)’ 의 용역이 연구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 방식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추진 전략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 무렵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여성인권 문제, 성평등 문제 등이 사회이슈가 되고 남성-여성간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조사가 실시 되었다. 그동안의 단순한 인식·지지도 조사와는 달리 혜화역 시위·탈코르셋 운동 참가자, 워마드·일베 이용자 등 조사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면 또는 면접으로 이들을 심층 조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20대와 30대의 사회시각을 미루어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청년세대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2018년도 추진 정책연구용역〉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18-1	하반기 주요 정책아젠다 설문조사	㈜케이에스오아이
’18-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 연구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18-3	저소득층(소득1분위)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18-4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와 대응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18-5	지방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사)한국행정학회
’18-6	여성·남성 혐오, 미투운동 등 2030세대 의견 조사 용역	㈜한국리서치
’18-7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적 대화 전략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8-8	소득주도성장 인식 관련 조사 연구	사립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18-9	OECD 및 EU 일자리 전략 연구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18-10	2018년 주요 아젠다 대국민 만족도 설문조사 계약	㈜한국리서치
’18-11	2018년 핵심 정책과제 평가 및 2019년 중점과제 발굴 전문가 설문조사 계약	㈜케이스탯리서치
’18-12	2040 미래와 정부혁신(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8-13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18-14	포용사회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연구(1) - 복지, 의료, 고용·노동, 성평등	한림대학교
’18-15	포용사회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연구(2) - 보육, 교육, 미래세대와 다양성 증진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18-16	포용적 분권국가의 구축과 미래비전 연구	(사)한국지방자치학회
’18-17	포용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 연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18-18	남북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환경 조사 연구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18-19	중장기 국가전략으로서의 평화번영국가 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사)한반도 평화포럼
’18-20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방안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18-21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중장기 비전과 전략 연구	(재)통일연구원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18-22	2040 한국의 안보국방(전망과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	(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18-23	포용국가로의 이론적 프레임 연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3) 2019년도

2019년도는 총 28건의 가장 많은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18년도에 이어서 분야별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었고, 과학분야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과학기술기반 미래경제사회 변화 전망’,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사회연구소에서 ‘문화예술분야 2040 중장기비전과 핵심의제’ 등이 연구되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가 계속되었다.

또 하나 이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로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6건의 국민 인식조사가 이루어졌는데, ① 포용국가 인식 및 과제 대국민 조사, ② 상반기 국정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일반국민 전문가 설문조사, ③ 최저임금 인식조사, ④ 미래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⑤ ’19년 하반기 국정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⑥ 불공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시사점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인식조사 활동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그 첫 번째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대한 국민주권의 실현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받들고 존중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는 위원회로서는 당연한 연구로, 국정 운영자와 국민의 중간에서 중요한 소통의 창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의 디지털화로 공유경제·플랫폼경제 등 새로운 경제 영역이 구축·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종합적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공유 플랫폼 경제시대의 실태분석 및 종합적 해결방안 연구(수행 : 충남대 산학협력단)’, ‘온라인 경제발전에 대한 영세자영업의 대응 방안(수행 :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산업계 주도 정책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 연구’ 등이 이와 관련되어 연구된 용역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그로 인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실증 분석하여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에 의미있는 또 하나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부처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단기사업 위주의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수행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실행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청년정책은 단순히 20·30대 인구를 대상으로 시혜적으로 정책을 던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닌, 대화와 소통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상호 소통을 하며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조 필요성 등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밖에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도입된 국민청원제도가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이용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 제도 운영 방안을 찾는 연구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본격적 실행을 앞두고 준비과정의 경과를 점검하고 현재 정책의 개선방안과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역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수행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2019년도 추진 정책연구용역〉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19-1	과학기술기반 미래경제사회 변화 전망	한국과학기술원
’19-2	지구 미래환경 변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전략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3	저소득층 소득지원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순천향대학교
’19-4	포용국가 인식 및 과제 대국민 조사	㈜KSOI
’19-5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과제	한양대(이삼식)
’19-6	한국사회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포용국가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9-7	상반기 국정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일반국민 전문가 설문조사	㈜KSOI
’19-8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9-9	문화예술분야 2040 중장기비전과 핵심의제	문화사회연구소
’19-10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19-11	최저임금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19-12	온라인(연결) 경제 발전에 대한 영세자영업의 대응 방안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9-13	총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가재정 지출수요 발굴	한국재정학회
’19-14	산업계 주도 정책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 연구용역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9-15	공유 플랫폼 경제시대의 실태분석 및 종합적 해결방안 연구용역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9-16	독일의 4.0과 한국 혁신성장 전략 간 비교 연구	(사)경제사회포럼
’19-17	공론화위원회 발전방안 연구 : 시민참여형 숙의과정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9-18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인식과 평가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9-19	중고령자 노동시장 이탈과 정책방안 연구용역	한국노동경제학회
’19-20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주도성장 전략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19-21	자영업 생태계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협업 과제 및 추진방향	(재)중소기업연구원
’19-22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정학회
’19-23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아세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연구용역	산업연구원
’19-24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對 아세안 공공외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19-25	2019년 하반기 국정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일반국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KSOI
’19-26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9-27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28	불공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시사점 연구	(주) 한국리서치

4) 2020년도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인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범지구적 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20년에 위원회에서는 모두 20건의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는데 그중에 10건이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전염병으로서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의 연구로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의료자원, 인력의 문제점, 타국의 대응전략 등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유럽의 COVID19 유행 상황과 대응 연구’, ‘수리모델링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분석’, ‘K-방역의 사회적 가치 도출과 사회문화적 성공요인 분석’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여러 사회 모습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이다. 예컨대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현재 플랫폼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정부 운영과 기능수행 방식에 대한 기능 재구조화·재정립에 관한 연구, 코로나19라는 재난 국면에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결과를 토대로 유권자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과 그로 인한 정치적 태도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그 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멈춰선 경제에 신 동력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 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도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된 청년층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형 청년고용보장제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청년고용보장제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한 것으로 「청년기본법」과 연계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해법을 제시하였다.

〈2020년도 추진 정책연구용역〉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20-1	복지분야 현금급여의 경제·사회적 효과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	2020년 국정과제 성과평가를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용역	(주)현대리서치컨설팅
’20-3	유럽의 COIVD19 유행 상황과 대응 연구용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4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역할 및 과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20-5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방안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아이티법연구원
’20-6	유권자와 정당의 연계성(Linkage) 강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 제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운영 시스템 개혁 과제	한국행정학회
’20-8	COVID-19 상황에서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 및 정치·사회 심리 변인이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회
’20-9	수리모델링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분석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4차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기반 정책결정모델 구축 방안	한국정치학회
’20-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정치 참여 발전 방안	한국정당학회
’20-13	K-방역의 사회적 가치 도출, 사회·문화적 성공요인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사회학회
’20-14	한국형 청년고용보장제(Youth Guarantee) 추진방안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국정방향에 관한 연구 : ‘세계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 마련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헌법 제10조 시대 개막을 위한 전략구상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한반도 新통일론 연구	세교연구소
’20-19	불안정 고용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 산학협력단
’20-20	코로나19 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 한국형 디지털 뉴딜 발전에 대한 시사점	한국국제정치학회

5) 2021년도

2021년에는 총 11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지난 2017~2020년 동안의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새로이 부각되거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정책,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점을 두고 개별 현안 연구 등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엄격한 방역 실시로 대면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노동시장의 제도정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자 하였으며, 최근 산업 전반에 불고 있는 ESG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ESG 확산 배경과 사회경제적 효과 그리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 선진사례를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전통적 고용관계와는 다른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가 급증하였고 이들의 노동 특수성인 ‘고용 초단기성, 비전속성’으로 인하여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제안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디지털 사회보장제’를 연구하여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 여건에 맞는 사회보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는 희소하여 향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예상된다.

이 시기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 국민의 공분이 극에 달하였는데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주택 및 부동산가격 형성의 이론적 접근을 단순한 수요분석이 아닌 주택 수요자의 소유권 형식 분포와 토지가격 등을 고려한 자산분석 모형에 근거하여 ① 부동산 정책 수립 관점과 시행 틀 혁신방안, ② 주택시장 안정화 및 공급정책, ③ 토지정책 등 3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년도 추진 정책연구용역〉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21-1	2021년 주요 아젠다 및 핵심 정책과제 인식조사	㈜현대리서치컨설팅
’21-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디지털 사회보장(DSS)' 적용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1-3	스마트 그린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시의 기후 및 환경문제 해결방안	(사)한국행정학회
’21-4	ESG 투자 확대와 노동정책 과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1-5	한국형 뉴딜 구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연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1-6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효성 제고 이론 및 실증 분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1-7	미중 경쟁시대 한반도 평화전략 구상	(사)한반도평화포럼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21-8	위기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안	(사)한국사회과학회
’21-9	사회적 경제 전달 및 지원체계 성과향상 방안	(사)한국생산성학회
’21-10	ESG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사회적 가치 연계 방안	㈜임팩트스퀘어
’21-11	코로나19의 한국 사회구조 및 생활세계 영향과 대응방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6) 2022년도

2022년도는 5월 신정부 출범에 따라 연구과제의 선정부터 완료까지 불과 2~3개월이라는 물리적 제한이 있었다. 말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후의 신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만한 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포용적 혁신성장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사회경제 정책, 2)금융재정 정책, 3)산업혁신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난 30여년간 잠들어 있다가 코로나19를 통해 확산된 ‘아프면 쉴 권리’에 따라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방안마련’ 이라는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과 ‘아픈’ 노동자의 회복과 복귀를 중심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주요 4당의 후보들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에 합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새정부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토론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기점으로 촉발될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금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국내·외의 여러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 개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과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집단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커뮤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이나 병원에서 돌봄을 받던 사람들을 가정이나 지역의 이용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조성과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를 통한 복합적 서비스 지원방식에 대하여도 연구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다소 생소하지만 최고 수준의 자살률, 약물 오남용, 알콜 등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여러 사안들과 관련된 절망사(絶望史)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국의 절망사’ 연구도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등 여러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22년도 추진 정책연구용역〉

연번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22-1	임대아파트 거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2-2	정신장애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서비스 연계 체계 연구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2-3	연금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2-4	노인빈곤과 인구고령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	(사)한국사회과학회
’22-5	한국의 절망사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 산학협력단
’22-6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 마련 연구	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22-7	한국형 상병수당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방안마련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2-8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 방향	포용재정포럼
’22-9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사)한국조세연구포럼
’22-10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안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주요쟁점 및 향후 과제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2-12	포용적 혁신성장 기반 선도적 선진경제 확립을 위한 사회경제, 재정금융 및 산업혁신 정책방향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절

정책 네트워크 강화

1. 국정과제협의회 운영

가. 국정과제협의회 개요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정책기획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과제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정과제협의회 의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국정과제협의회는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과제협의회 운영전략〉

위원회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정과제의 체계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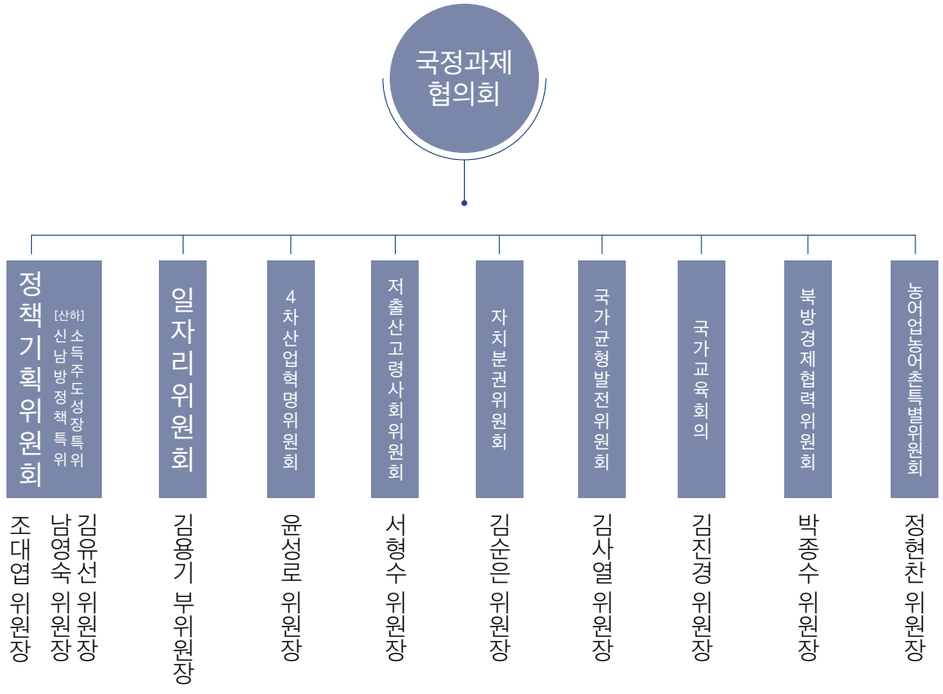
협의·조정	협력 프로젝트 추진
국정과제 관리 협력 및 업무 조정 홍보협력 강화	국가 중장기 전략·성과 담론화 공동 토론회 개최 등 협력강화

→ 정례적 회의체 운영

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제1차부터 제10차 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였으며, 국정과제위원회 간 업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제11차 협의회('20.2.28.)부터 매월 4주차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국정과제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1차 국정과제협의회('18.3.30.) 개최 시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8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제8차 협의회('19.5.30.)에서 국정과제협의회 확대개편(안)을 논의한 결과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협의회를 참관하고 있다. 현재 국정과제협의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정과제협의회 구성현황〉



나. 국정과제협의회 운영현황

1) 회의 개최 현황

국정과제협의회는 2018년 3월 30일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협의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 7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협의회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의 역할과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회 간 협력·소통을 강화하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국가 중장기 전략 담론화, 정기 토론회, 공동 연구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후 제2차 협의회부터 각 위원회 별 업무 추진현황을 기본 안건으로 하여, 각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발표, 위원회 운영 성과 및 역할강화 방안,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활동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타협 방향,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안건으로 논의함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담론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년 5월 정부 출범을 기념하여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으로 주요 국정성과를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한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성과의 확산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의 역할과 협력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국가 미래비전 논의 등 주요 아젠다와 관련하여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하TV'라는 국정과제위원회 유튜브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현황〉

차수	날짜	안건
1	'18.3.30.(금)	○ 국정과제협의회 운영 계획(붙임 참조) ○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의 역할 ○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 및 국회 협력 등
2	'18.6.26.(화)	○ 국정방향 및 위원회 현황 공유
3	'18.11.16.(금)	○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PPT) ○ 국민체감 정책사례(동영상 발표 콘티) ○ 일자리 4차위 균형위 정책발표(PPT) ○ 국정과제위원회 운영성과 및 역할강화 방안(한글)
4	'19.1.16.(수)	○ 제9차 기획단장협의회 결과 보고 ○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활성화 세부추진 계획 ○ 2019 국민소통 정책 페스티벌(가칭) 개최계획(안) ○ 위원회 운영성과 평가 및 2019년 업무계획 (서면보고)
5	'19.2.28.(목)	○ 제10차 기획단장협의회 결과 보고 ○ 문재인 정부 2주년 계기 국정과제위원회 활동계획(안)
6	'19.3.28.(목)	○ 문재인 정부 2주년 계기 국정과제위원회 활동계획(안)
7	'19.4.25.(목)	○ 문재인 정부 2주년 계기 국정과제위원회 주요행사 추진(안) ○ 문재인 정부 2주년 계기 국정과제위원회 홍보계획(안)
8	'19.5.30.(목)	○ 문재인 정부 2주년 주요행사 개최 및 홍보 추진 결과 ○ 국정과제위원회 협의체 운영방향(안)

차수	날짜	안건
9	’19.7.25.(목)	○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활용 방안 ○ 2019년 하반기 국정과제위원회 협업 추진방향 ○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활동계획
10	’19.10.24.(목)	○ 문재인 정부 2년반 성과정리 및 향후과제 점검을 위한 국정과제위원회 주요 행사 및 홍보 계획(안)
11	’20.2.28.(금)	○ 정부3주년 대국민 정책소통 계획안 ○ 주간 정책이슈브리프 운영계획안 ○ 국정과제위원회 유튜브 채널 운영방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대정부 입장문 제안
12	’20.3.27.(금)	○ 정부3주년 대국민 정책소통 행사 계획(안) ○ 주간 정책이슈브리프 추진 현황 및 주제 ○ 자치경찰제도 도입 추진 현황 ○ 코로나19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역할 ○ 국정과제 유튜브 브랜드 채널 진행(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13	’20.4.24.(금)	○ 국정과제위원회 정보공유시스템 운용 현황 ○ 국정과제위 유튜브 채널 공동 운영 지침 ○ 정부3주년 대국민 정책소통 행사 기본계획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14	’20.5.29.(금)	○ 국정과제협의회 아하TV 콘텐츠 시사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국정과제협의회 포스트코로나 정책방향 담론안
15	’20.6.26.(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타협 방향
16	’20.7.24.(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국정과제위원회 아하TV 운영TF 홍보안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방안 ○ 행정수도 이전 관련 논의
17	’20.8.28.(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국정과제위원회 아하TV 운영현황 및 시사(정책기획위, 균형위) ○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이해 ○ 한국판 뉴딜 비전과 전략(제안 및 협조) ○ 행정수도 이전과 자치분권 추진전략(현장배부) ○ 지역뉴딜 추진방안(현장배부)
18	’20.9.25.(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국정과제위원회 아하TV 현황 및 시사(농특위, 소주성특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초광역체제의 검토
19	’20.10.23.(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국정과제위원회 아하TV 시사(국가교육회의 2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 및 주요업무
20	’20.12.23.(수)	○ 국정과제위원회 아하TV 시사(정책기획위) ○ 위원회별 정부출범 4주년 주요 정책성과
21	’21.1.29.(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국정과제위원회 아하TV 시사(저출산위, 분권위) ○ 정부4년 국정과제위원회 국정성과 확산·공유 방안
22	’21.2.26.(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정부4년 위원회별 국정성과 홍보 계획안
23	’21.3.26.(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정부4년 국정과제위원회 국정성과 공유·확산 추진계획(안)
24	’21.4.13.(화)	○ 지역주도 지역균형뉴딜 촉진 계획(안) ○ 지역주도, 주민 체감의 지역균형뉴딜 거버넌스 구성방안
25	’21.4.23.(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서면) ○ 정부4년 국정과제위원회 국정성과 공유·확산 추진계획(안)
26	’21.5.28.(금)	○ 대통령 방미 주요성과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메가시티지원 범부처 T/F 운영 계획 및 메가시티 추진 동향 ○ 국정과제위원회「아하TV」공동 콘텐츠 제작계획(안)
27	’21.6.25.(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28	’21.7.23.(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인구구조변화 대응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합동토론회 개최계획
29	’21.8.27.(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추진계획(안) ○ 인구구조변화 대응 국정과제위원회 합동토론회 기획(안)
30	’21.9.24.(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지역균형 뉴딜 지원 협의회 운영 방안
31	’21.10.29.(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32	’21.11.26.(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33	’21.12.24.(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지역사회통합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

차수	날짜	안건
34	’22.1.28.(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전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성과와 과제 ○ 데이터특위(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 운영 성과
35	’22.2.25.(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 문재인 정부 5년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36	’22.3.25.(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37	’22.4.29.(금)	○ 위원회별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

2) 국정과제위원회 간 주요 협력 성과

가) 공동행사 개최

①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대응 국정과제협의회 공동토론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8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에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중요 아젠다로 부각되고 미래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대응 국정과제협의회 공동토론회〉

○ (일시/장소) ’21.9.30.(목) 13:30~17:30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 (행사주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행사명) 대통령 8개 위원회 공동토론회

○ (주최/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주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등 8개 위원회

우리나라는 저출산현상(TFR 2.1명 이하)이 35년(2085년부터)이상 지속되고 초저출산현상(TFR 1.3명 이하)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2020년, 0.84명) 미만인 국가이다. 또한, 2020년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데드크로스 현상과 함께 수도권 인구가 비

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시기로 인구유출,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간 연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특성을 기준으로 방안 모색 필요성이 국정과제협의회에서 제기되었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회를 통해 제언된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대형퍼즐 퍼포먼스도 진행하였다. 또한, 제1세션에서는 ‘미래 인적역량 강화’를 주제로 양극화 해소와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및 통합적 체계구축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2세션에서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주제로 지역만이 가진 매력창출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대응 공동토론회〉






②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연구기관이 공동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2021년 12월 2일 개최되었다. 이번 국가비전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

망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 ㅇ (일시/장소) '21.12.2.(목) 9:30~17:50 / 백범김구기념관
- ㅇ (주제)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
- ㅇ (주최)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박종수) 등 9개 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및 산하 26개 연구기관

이번 회의에서는 물질적 성장과 패권 중심의 기존 선진국 담론은 문명 전환과 새로운 가치 정립의 시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정·책임·협력의 윤리를 기초로 새 질서를 제시하는 '선도국가'에 초점을 맞춰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정의로운 세계와 공정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판 뉴딜, 권력개혁, 청년 등과 관련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었고, 제2세션은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를 주제로 탄소중립, 돌봄레짐, 공공의료 등과 관련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 제3세션에서는 '조화로운 세계와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공화적 협력, 초광역 지역시대 및 지역협력, 한반도 평화협력 및 글로벌 신질서 등과 관련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선도국 시대와 세계 공화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전체토론이 이어졌으며, 패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여하였다.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나)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

국정과제협의회에서는 정부출범 이후 4년간의 주요 국정성과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주요 정책 단위로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단행본으로 제작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제안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한국판 뉴딜, 민주주의, 선도경제, 초광역 지역시대,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번영론 등 각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정책적 활동이 대한 주요 성과를 총 21권의 단행본으로 제작하였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 현황〉

연번	위원회	필자
1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 이해와 적용	자치분권위원회
2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정책기획위원회
3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4	거대 전환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동	정책기획위원회
5	행복의 정치	정책기획위원회
6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기획위원회
7	한국 민주주의의 새길	정책기획위원회
8	포용과 혁신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정책기획위원회
9	사회보장제도의 진단과 대안모색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0	초광역 지역시대	정책기획위원회
11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 구상	정책기획위원회

연번	위원회	필자
12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 성과와 의의	자치분권위원회
13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기획위원회
14	복합재난시대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정책기획위원회
15	디지털 포용사회와 비대면 교육	정책기획위원회
16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정책기획위원회
17	사회적 경제와 중간조직	정책기획위원회
18	위기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정책기획위원회
19	위기와 미래	정책기획위원회
20	국정의 상상력 Ⅰ	정책기획위원회
21	국정의 상상력 Ⅱ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다) 홍보 협력 강화

국정과제협의회는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위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매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을 계기로 각 국정과제위원회 합동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성과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및 대국민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제7차 협의회('18.4.25.)에서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계기 국정과제위원회 주요 행사 개최 및 홍보계획(안)', 제13차 협의회('20.4.24.)에서는 '정부 3주년 대국민 정책소통 행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제25차 협의회('21.4.23.)에서는 '정부4주년 국정과제위원회 국정성과 공유 확산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매년 국정과제협의회 공통 슬로건을 정하여 각 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 및 홍보에 활용하는 등 통일성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행사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책성과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미래비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국민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스토리, 지표, 정책추진의 정당성 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 온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TV, 라디오 광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위원회 소속 전문가 위원들의 릴레이 기고, 칼럼을 통해 국정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분석 및 정책대안 등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

〈국정과제협의회 합동 홍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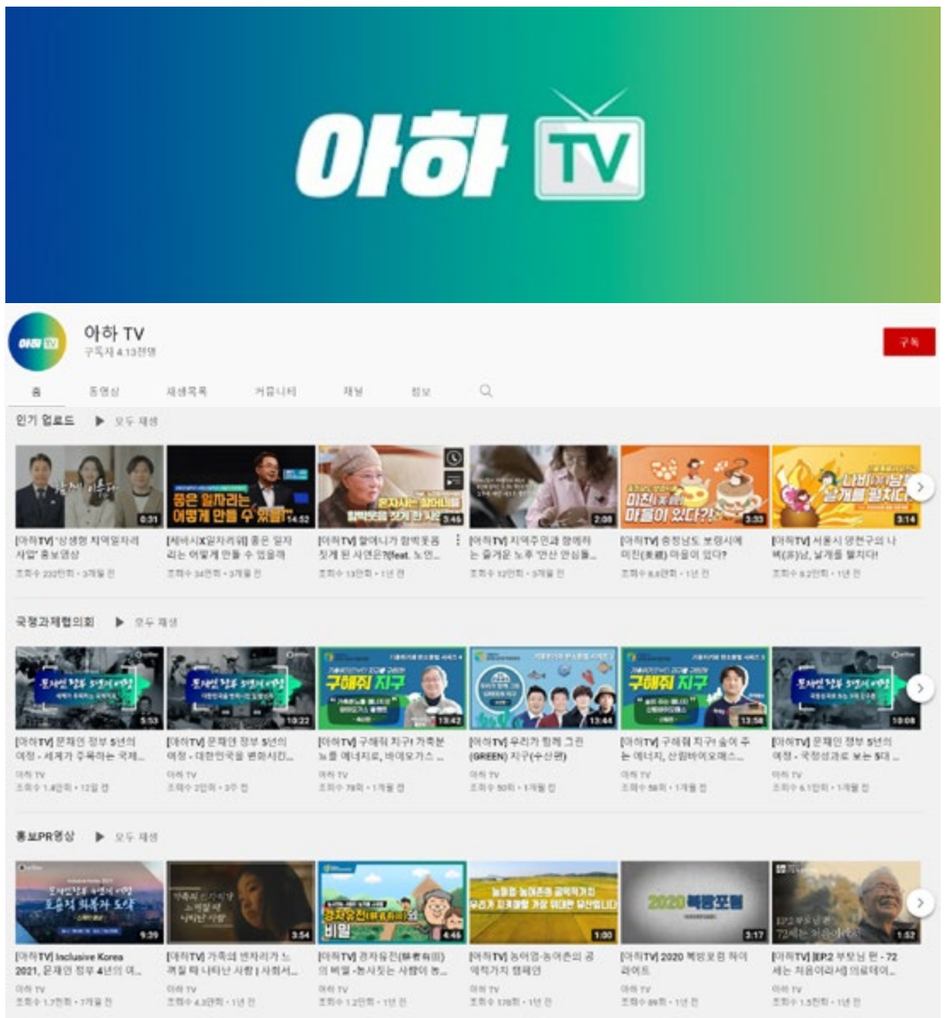
연번			
	문재인정부 2주년 계기 국정과제위원회 홍보계획(안) 2019. 4. 25 국정과제협의회	정부3주년 대국민정책소통 행사 기본계획(안) 2020. 04. 24. 국정과제협의회	정부4주년 국정과제위원회 국정성과 공유확산 추진계획(안) 2021. 04. 23. 국정과제협의회
공통 슬로건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





이와 더불어, 국정과제협의회 상시 공동 홍보 채널로서 '아하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11차 협의회('20.2.28.)에서 '국정과제 유튜브 채널 운영방안(안)'에 대해 논의한 이후, 제13차 협의회('20.4.24.)에서 '국정과제위원회 아하TV 공동 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위원회 특성에 따른 정보성 소재를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위원회 홍보담당자로 구성된 '아하TV 공동운영 TF'를 운영하며, 강연형식, 토론형식, 국민 참여형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와 정책 특성에 따른 홍보 대상 맞춤형 콘텐츠 등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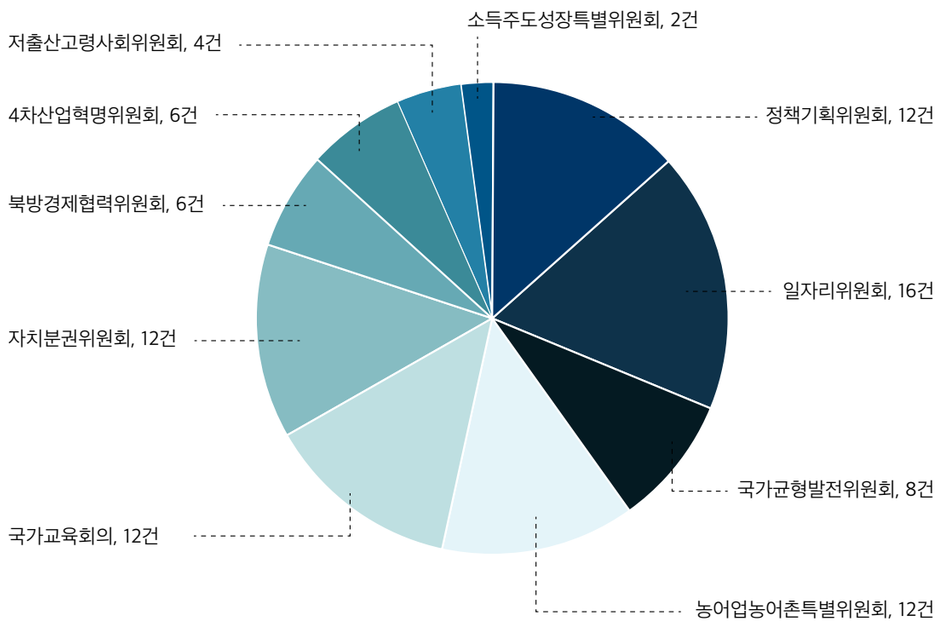
〈국정과제협의회 아하TV 운영현황〉



〈아하TV 워드 클라우드〉



〈위원회별 업로드 통계 현황〉



〈항목별 최다 콘텐츠〉

항목별 최다 콘텐츠

조회수 상위 콘텐츠



[아하TV]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홍보영상

조회수 **2,325,168**

좋아요 상위 콘텐츠



[세바시x일자리위]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좋아요 **884**

댓글 상위 콘텐츠



[아하TV] '안동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한 이유는? (feat.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댓글 **478**

조회수 TOP10

1위



[아하TV]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홍보영상

조회수 **2,335,533**

2위



[세바시X일자리위]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조회수 **356,135**

3위



[아하TV] 할머니가 함박웃음 짓게 된 사연은? (feat. 노인일자리사업)

조회수 **138,557**

4위



[아하TV]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후 '안산 안심돌봄주택'

조회수 **123,220**

5위



[아하TV]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은 어떻게 한 걸까?

조회수 **129,582**

6위



[아하TV] '안동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한 이유는?

조회수 **112,331**

7위



[아하TV] 충청남도 보령시에 미친(美親) 마을이 있다?

조회수 **86,701**

8위



[아하TV]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

조회수 **82,651**

9위



[아하TV] 부산시 아미동, 산꼭대기 마을이 달라졌어요!

조회수 **81,082**

10위



[아하TV] 21세기 대한민국 총균쇠

조회수 **81,103**

댓글 TOP10

1위



[아하TV] '안동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한 이유는? (feat.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댓글 **523**

2위



[아하TV]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나타난 사람- 사회서비스 확대

댓글 **463**

3위



[아하TV]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

댓글 **441**

4위



[아하TV] 정은경 본부장 단독인터뷰 "전 세계가 주목한 K-방역"

댓글 **370**

5위



[아하TV] 대한민국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댓글 **343**

6위



[아하TV] 21세기 대한민국 총.균.쇠

댓글 **316**

7위



[아하TV] [EP.1 엄마 편- 엄마는 처음이라서] 의료데이터 통합·활용 플랫폼 '마이헬스웨이' 홍보 영상_4차산업혁명위원회

댓글 **306**

8위



[아하TV] [EP.2 부모님 편- 72세는 처음이라서] 의료데이터 통합·활용 플랫폼 '마이헬스웨이' 홍보 영상_4차산업혁명위원회

댓글 **300**

9위



[아하TV] 대국민이 참견하는 4차 산업혁명 「전지적 대국민 시점」

댓글 **292**

10위



[아하TV] 데이터 사피엔스 1호! 요즘해녀의 특별한 데이터 활용법

댓글 **291**

좋아요 TOP10



시청 시간 TOP10



2. 정책세미나 개최

가. 추진 개요

정책기획위원회는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추진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2017년 출범 이후 2021년 12월까지 총 30회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시기의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해 효과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노력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정책세미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공청회형' 정책세미나로,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하고 운영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와 농정문제, 그리고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둘째, '정책네트워크형' 정책 세미나를 기획,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학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정책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할하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다양한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연구기관-유관부처-민간전문가의 효율적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셋째,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특히 19년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20년 '한국사회비전회의', 21년 '대한민국비전회의'는 우리나라의 시 공간적 위상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연도별 정책세미나 추진현황〉

연도	일자	장소	행사명(주제)
'17. (2회)	12.15.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12.2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성과와 과제 토론회
'18. (8회)	2.2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정책기획위원회 제1차 정책세미나(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
	4.5.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정책세미나(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연도	일자	장소	행사명(주제)
'18. (8회)	4.12.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정책기획위원회-세종연구소 공동주최 세종국가전략 포럼('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전략)
	7.19.	강릉시청, KIST 분원	○ 정책기획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도 공동 정책세미나(자치분권시대의 사회혁신과 중앙-지방의 협력방안)
	9.14.	엘타워	○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10.30.	aT센터	○ 정책기획위원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
	12.18.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책기획위원회-민주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12.2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정책세미나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19. (7회)	2.22.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정책기획위원회-한국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정책 세미나(포용국가와 청년정책 : 젠더 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4.11.	중국 상하이 홍차오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	○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제세미나 (1919년 동아시아, 대전환을 꿈꾸다)
	8.13.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정책기획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정책세미나(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11.4.	더케이호텔 가야금홀	○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 경제·사회분야를 중심으로)
	11.18.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책기획위원회-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 정책세미나 ○ 청년정책 새로운 좌표설정 토론회 : 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
	12.3.	세종문화회관	○ 정책기획위원회-세종연구소 공동주최 세종국가전략 포럼('19년 한반도의 정세평가와 '20년 한국의 전략)
	12.12.	그랜드 힐튼호텔	○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정책세미나 (광복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45)
'20. (6회)	5.1.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정책기획위원회-한국정당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지형의 변화 : 한국과 G2)
	7.9.~ 1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20. 한국사회비전회의(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
	7.23.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정책기획위원회-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
	10.14.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역·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 (K-방역, K-경제의 길을 찾다)
	11.20.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	○ 정책기획위원회-중앙일보 공동 정책세미나 ('20. 포스트 뉴노멀 컨퍼런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대응과 미래)
	11.27.	뱅커스클럽 (은행연합회 16층)	○ 정책기획위원회-한국비교사회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
'21. (7회)	2.18.	오크밸리 리조트	○ 정책기획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 국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
	2.22.	은행회관	○ 사회적가치 민간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간담회
	2.25.	김대중 컨벤션센터	○ 정책기획위원회-한국정치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6.2.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정책기획위원회-동아시아사회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뉴노멀 시대 코로나19 이후 동아시아 변화)
	8.14.	나인트리 명동II	○ 정책기획위원회-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복합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과 국제기구의 역할)
	11.4.~5.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 정책기획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 : 자치·분권·혁신)
	12.2.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

나. 연도별 정책세미나 추진현황

1)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 : 2017~2018년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염원을 국정운영의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했으며, 과거 관공서에 대통령의 사진을 걸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정목표를 게시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러한 국정목표가 정책으로 생산되기 위해 관련분야의 학자, 전문가와 소통했다.

2017년에 개최된 두 번의 정책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12월 15일, 정책기획위원회의 출범 기념 토론회인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정책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적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을 상호 보완하면서 균형을 갖추는 것임을 설명했다.

또, 12월 20일에 개최된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200일을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2018년의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200일이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민주주의와 경제, 그리고 복지의 측면에서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출범기념 토론회('17.12.15.)〉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각 부처의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한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2월 20일에 개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 정책 세미나에서는 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환경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정책세미나는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정부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사회적 가치'를 채택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4월 5일에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 12일에는 세종연구소와 함께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번 정책 세미나는 국내 전문가들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인 운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주체적인 인식과 노력을 주문했다.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정책세미나〉

2019년은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10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열린 환담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2019년은 대한민국 100년의 해이고,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2018년부터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희망하면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했다. 먼저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여러 유관기관, 학자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해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기본 구상을 처음으로 밝히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고, 세미나에서 주한 핀란드 대사관의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 설명과 100주년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토론이 있었다. 세미나의 성과는 2019년 출범한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는데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념사업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또 1년 후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의 학자들과 3·1 운동 및 임시정부 사업 등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역사학계와의 정책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료에 입각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임을 4월 11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년에 4월 11일로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7월 19일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강원도와 공동으로 '자치분권시대의 사회혁신과 중앙-지방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혁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한 본 세미나는 여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대 자치분권의 환경을 점검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간 효율적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9월 14일에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고, 10월 30일에는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정책 세미나를 통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12월 18일에는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움을 통해 국정운영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대안 및 방향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또 12월 20일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을 구체화하는 심포지엄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세미나〉

2018년 9월 14일 개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2018년 1월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사회정책전략회의' 신설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이 중심이 되어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그 뒤 총 7회의 포용사회정책포럼을 개최('18.4.5.~6.29.)하고,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9월 6일 청와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었다.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내용을 밝히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세미나를 계기로 10월 23일 '사회분야 범부처 TF회의'가 열렸고, 2019년 2월 19일에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2)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2045 : 2019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3년차가 되는 2019년, 정책기획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론장 형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2월 22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 젠더 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은 위원회가 구성한 '2030 젠더의식 TF'의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의견을 수립하는 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청년세대는 공통적으로 가족 및 성역할 의식에 유연해지고 있으며, 평등과 공정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에 비해 가족, 직장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의식과 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회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의 재구

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4월 11일에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1919년 동아시아, 대전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하여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 일관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 일관계 정책세미나〉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의미와 영향,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의 직접적 계기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경계하는 일본 아베 내각이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신냉전 체제 안에 한국을 가두려는 전략적 의도가 배경에 있다는 점에서 경제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 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다양한 경로를 개척하고, 핵심 부품 조달을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11월 4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관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 3년차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11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와 공동으로 '청년정책 새로운 좌표설정 토론회 : 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청년정책에 대한 공론장을 열었다. 12월 3일에는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2019년 한반도의 정세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변화와 과제를 점검했다. 또 포용국가 전략회의('18. 9. 6.)에서 대통령께서 사회정책의 비전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는 12월 12일 '19년 한 해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준비해 발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정책세미나〉

12월 12일 개최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세미나는 국가 중장기 미래비전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2018년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사회정책의 비전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의 필요성 강조했다. 이후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립해 '광복100주년을 기념하는 '미래비전 2045'로 변경했다. 1단계 사업('18.10.~'19.4.)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비전'의 분야, 수립방향과 핵심비전, 비전별 구성과 주요 내용, 수립방법 등을 설계 했다. 2단계 사업('19.4.~12.)에서는 1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정책기

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19.5.24.), 운영위원회 총 6회, 연구단(6개) 총94회, 기획팀 총 43회, 연인원 18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2019년 12월 12일 정책세미나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총론편과 각론편을 발표했다.

미래비전 2045는 포용, 혁신, 공정, 평화의 4대 가치를 바탕으로 5대 전략 25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국가 미래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3) 국난극복의 시간 : 2020년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증유의 국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한 해였다. 정책기획위원회 역시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5월 1일 한국정당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지형의 변화 : 한국과 G2'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질서 및 국내정치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7월 23일에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10월 14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K-방역, K-경제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역 경제 위기 극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K-방역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방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방역의 대안을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의 길'을 찾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11월 20일에는 중앙일보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대응과 미래'를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1월 27일에는 한국비교사회학회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정책세미나에서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뉴노멀 현상이 기존의 규범과 제도를 대체하며,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작은 국가에서 적극적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컨퍼런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

11월 20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산업 분야의 변화될 지형도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과제와 해법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빠르게 재편시켰다. 특히 큰 정부, 보호무역, 국수주의의 도래에 따른 각자도생의 시점에서 언택트 비즈니스의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과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의 거대전환을 위한 미래비전이다. 또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 선택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K-방역과 방역산업의 기회, 미래 AI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한국판 그린 뉴딜, 초전도 마그네틱 산업과 제조업 혁신, 케어팜, 스마트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뉴노멀 컨퍼런스는 중앙일보와 특집판으로 보도되어 한국판뉴딜 전략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 대전환의 시기, 국가비전 수립을 향한 노력 : 2021년

2021년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총체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임을 감안하여 정책기획위원회는 대전환의 시기, 희망찬 국가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2월 18일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 국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 2월 22일에는 '사회적 가치 민간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민간단체 중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희망씨(사단법인), 전태일재단, 청년재단 이사장단이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월 25일에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2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국면에서 국민의 보호와 자치분권,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광주 5·18 민주항쟁의 역사는 정치적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사익을 유보하고,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의 보존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참여'와 '연대'의 교훈을 보여준 사례였다. 코로나19의 역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재난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팬데믹 위기에서 희생이 집중되는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집중 논의되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동북아질서를 전망하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질서 속에서 우리의 대외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등 현안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25일에는 동아시아사회학회와 함께 '뉴노멀 시대 : 코로나19 이후 동아시아 변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 및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한 중일 국제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여러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했다. 특히 일본의 봉쇄정책이 일본거주 중국인에게 미친 영향이나, 한국의 여성고용 문제, 코로나19에 대한 16개국의 인식과 태도 비교 조사 등은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의 태도를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8월 14일에는 한국유엔체제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과 국제기구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기후위기, 미중간 전략경쟁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응방향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월 4일, 5일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 : 자치 분권 혁신'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월 2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2021 대한민국 비전회의 :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를 개최했다.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

12월 2일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는 대전환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국'과 '신질서'의 두 키워드를 선택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등의 누적된 위기와 복합되어,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올만한 사회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각계 분야의 연구자들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 본 세미나의 개최 배경이다.

코로나19는 그 동안 세계의 중심담론이었던 물질적 성장과 패권 중심의 선진국 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서구질서의 쇠락은 공정·책임·협력의 윤리를 기초로 하는 '신질서'와 이를 이끄는 '선도국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의 위기에는 생태적 전환이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동북아 탄소중립 공동체' 구성의 제안과 탄소중립의 시점 또한 2050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광역 지역 시대와 지역 협력의 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 하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적극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 공동체를 이끄는 나라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3. 국정현안 TF 구성·운영

가. 추진 개요

정책기획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정책 이슈에 대해서 정책방향과 실행과제 등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단기(2~3개월) 또는 장기(사회적 가치. 2019년 5월~계속)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TF를 운영한 결과 도출된 다양한 정책방안을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공유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당면한 정책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TF는 국정연구국과 국정과제국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다. 국정과제는 6대 분과(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지속가능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분과)로 나뉘어져 관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제가 명확한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과제국이 담당한다. 국정연구국은 단기적 과제로서 현안 문제해결이 필요하거나 대통령 비서실 및 위원장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6대 분과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과제(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TF를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 2022년 3월 현재까지 정책기획위원회는 총 60여 개의 TF를 운영해왔는데, 전반기에 해당하는 2017~2018년에는 아이디어 제안 차원의 소규모 활동 등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TF 형식으로 추진하였고, 후반기인 2019~2022년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기본 운영기간이 2개월인 TF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연도별 TF 추진현황〉

구분	TF명	소관
'21. (5)	○ 사회적 가치 TF (19년부터지속) ○ 농어촌뉴딜 TF (20년부터 지속) ○ 사회적 대화 TF	국정연구국
	○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방향 TF ○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방안 TF	국정과제국
'20. (14)	○ 감염병 예방 및 보건의료 혁신 TF ○ 노동미래 TF ○ 농어촌 뉴딜TF ○ 사회적 가치 TF (19년부터 지속)	국정연구국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전환과 정책과제 TF	전략홍보실

구분	TF명	소관
’20. (14)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평화번영 전략 TF ㅇ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TF ㅇ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플랫폼 TF ㅇ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TF ㅇ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TF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TF ㅇ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 ㅇ 미 대선 이후 외교정책 방향 TF ㅇ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국정과제국
’19. (15)	ㅇ 사회적 가치 TF ㅇ 청년정책 TF ㅇ 에너지대전환 TF, ㅇ 민주시민교육TF ㅇ 시민사회의제 TF ㅇ 포용국가단기정책TF	국정연구국
	ㅇ 자동차산업육성 TF ㅇ 미디어TF ㅇ 정책소통 TF ㅇ 국가거버넌스 혁신 TF ㅇ 재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TF ㅇ 글로벌 밸류체인 대응전략 TF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TF ㅇ 노동정책 TF ㅇ 관광분야 일자리 TF	국정과제국
’18. (24)	ㅇ 저소득층실태조사TF ㅇ 혁신성장정책보완TF ㅇ 다변외교TF ㅇ 과거사TF ㅇ 평화번영TF ㅇ 청년의 일과삶TF ㅇ 금융TF ㅇ 관광산업TF ㅇ 제조업 르네상스TF ㅇ 혁신성장보완TF ㅇ 100주년기념사업TF ㅇ 포용적 민주주의TF ㅇ 신년사TF ㅇ 정책담론TF ㅇ 농정개혁TF ㅇ 사회적협의TF ㅇ 일자리전략TF ㅇ 젠더의식조사TF ㅇ 동북아새로운질서TF	국정연구국
	ㅇ 평화번영의맵 TF ㅇ 반부패 TF ㅇ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 TF ㅇ 민주시민교육활성화 TF ㅇ 재생에너지수용성강화 TF	국정과제국

구분	TF명	소관
’17. (7개)	ㅇ 출범기념 토론회준비TF ㅇ J노믹스TF ㅇ 중앙-지방간정책협력TF ㅇ 혁신성장TF ㅇ 민주주의제도비교연구TF ㅇ 권력기관 제도개혁TF ㅇ 임시정부수립100주년TF	국정연구국

나. 연도별 TF 활동

1) 2017~2018년도

가) 개괄

정부 초기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역할에 대한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다양한 활동을 TF를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 초기의 TF 활동은 정형화된 틀이 없이 그때그때의 요청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징이 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TF와 100주년 기념사업 TF와 같이 대규모 행사 준비를 위한 TF가 있었고, 신년사 TF 또는 저소득층 실태조사/젠더의식조사 TF 등 외부의 요청 사항과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TF 형식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TF 구성 및 운영계획서 양식이나 운영 기간, 회의 운영 횟수 등의 형식은 2017년과 2018년도의 다양한 시도를 거쳐 운영되었다.

〈2017~2018년 TF 추진현황〉

연도	TF명	운영기간	소관
’18. (24)	저소득층실태조사TF	’18.11.~’19.1.	국정연구국
	혁신성장정책보완TF	’18.11.~12.	국정연구국
	다변외교TF	’18.1.~3.	국정연구국
	과거사TF	’18.3.~5.	국정연구국
	평화번영TF	’18.5.~7.	국정연구국
	청년의 일과삶TF	’18.2.~7.	국정연구국

연도	TF명	운영기간	소관
'18. (24)	금융TF	'18.4.~6.	국정연구국
	관광산업TF	'18.9.~11.	국정연구국
	제조업 르네상스TF	'18.10.~'19.4.	국정연구국
	혁신성장보완TF	'18.11.~12.	국정연구국
	100주년기념사업TF	'18.10.~12.	국정연구국
	포용적 민주주의TF	'18.11.	국정연구국
	신년사TF	'18.10.~11.	국정연구국
	정책담론TF	'18.10.~12.	국정연구국
	농정개혁TF	'18.5.~11.	국정연구국
	사회적협의TF	'18.11.	국정연구국
	일자리전략TF	'18.11.~12.	국정연구국
	젠더의식조사TF	'18.12.~'19.2.	국정연구국
	동북아새로운질서TF	'18.10.~'19.4.	국정연구국
	평화번영의맵 TF	'18.11.~'19.2.	국정과제국
	반부패 TF	'18.12.~'19.2.	국정과제국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 TF	'18.12.~'19.1.	국정과제국
	민주시민교육활성화 TF	'18.12.~'19.3.	국정과제국
	재생에너지수용성강화 TF	'18.10.~'19.2.	국정과제국
'17. (7)	출범기념 토론회준비TF	'17.10.~11.	국정연구국
	J노믹스TF	'17.10.~12.	국정연구국
	중앙-지방간정책협력TF	'17.11.~'18.3.	국정연구국
	혁신성장TF	'17.12.	국정연구국
	민주주의제도비교연구TF	'17.10.~'18.2.	국정연구국
	권력기관 제도개혁TF	'17.11.~12.	국정연구국
	임시정부수립100주년TF	'17.12.~'18.3.	국정연구국

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TF (2017년 12월~2018년 3월)(2018년 10~12일)

① 추진 배경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 등이 담긴 우리 100년사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정립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전국적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기획할 필요성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TF가 2017년 12월 구성되었으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념사업 추진을 검토하였다.

2018년도에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등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TF를 2018년 10월 구성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주1회 회의 개최를 통해 기념사업 기획 및 준비를 하였다.

② 주요 활동내용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TF는 기념사업 행사 준비를 위한 TF로서 구성되었다. 1차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TF는 2017년 12월~2018년 3월 운영되었으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동일 미래정책연구단장 등 5인(윤황(선문대학교),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임채원(경희대학교))으로 구성되었다.

2차 100주년 기념사업 TF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동일 미래정책연구단장 등 7명 내외(김정인(위원), 이병한(원광대학교 교수), 김지훈(성균관대학교 동아역사연구소), 권헌익(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으로 구성되었다.

③ 활동 결과 정리

새로운 100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념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행사를 준비하였다. 1~2년에 걸친 TF의 철저한 행사 준비에 따라 2019년 3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1919년 동아시아, 대전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 2030 젠더 의식조사 TF (2018년 12일~2019년 2월)

① 추진 배경

표면화되고 있는 성별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화적 전환 방안 및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② 주요 활동내용

"여성·남성혐오·미투운동 등 2030세대 의견조사" 연구 용역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3개월에 걸쳐 매월 1~2회 6회의 TF회의를 개최하였다. 김경희 위원, 이미경 위원, 정동일 단장 등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외에 여성가족비서관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 주재시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와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였다.

③ 활동 결과 정리

2030세대의 젠더 의식 및 성별간 갈등 원인 진단, 전문가 초청 주제 발표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연구 FGD 및 의식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 및 검토하여 실제 조사시 진행촉진자(facilitator)로 참여하였다.

2) 2019년도

가) 개괄

2019년도부터는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다루어 TF를 운영해 온 2017~2018년도의 여러 시도와 경험을 통하여 TF 운영방식을 통일하였다. TF 구성 및 운영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보고서 완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2019년 이후에는 국정과제 6대 부문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정과제국에서 담당하였다. 국정과제 6대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현안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과제 또는 여러 분야의 관계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경우는 국정연구국에서 담당하였다. 국정과제국에서 담당한 TF 활동은 3장에서 기술하고 있고 본 장에서는 국정연구국에서 지원한 TF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다.

〈2019년 TF 추진현황〉

연도	TF명	운영기간	소관
'19. (15)	사회적 가치 TF	'19.5.~12.	국정연구국
	청년정책 TF	'19.3.~8.	국정연구국
	에너지대전환 TF	'19.4.~7.	국정연구국
	민주시민교육TF	'19.6.~9.	국정연구국
	시민사회의제 TF	'19.6.~11.	국정연구국
	포용국가단기정책TF	'19.1.~2.	국정연구국
	자동차산업육성 TF	'19.3.~8.	국정과제국

연도	TF명	운영기간	소관
'19. (15)	미디어TF	'19.4.~8.	국정과제국
	정책소통 TF	'19.6.~7.	국정과제국
	국가거버넌스 혁신 TF	'19.8.~11.	국정과제국
	재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TF	'19.8.~11.	국정과제국
	글로벌 밸류체인 대응전략 TF	'19.9.~10.	국정과제국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TF	'19.9.~11.	국정과제국
	노동정책 TF	'19.9.~11.	국정과제국
	관광분야 일자리 TF	'19.8.~11.	국정과제국

나) 에너지 대전환 TF ('19.4.~7.)

① 추진 배경

세계 기후변화를 선도하고 205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친환경·재생에너지 중심의 비가역적 에너지 전환을 정부 임기 내 완성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② 주요 활동내용

정책기획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TF를 구성하여 2019년 4~7월(4개월) 동안 격주 회의를 원칙(약 10회 가량)으로 운영하였다.

③ 활동 결과 정리

TF 운영 결과 성장·고용·환경·지역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집권 3년차에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방안을 보고(2019년 5월 28일)하고 공유하였다.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쳐 대담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조직·기관(안) 제안 및 대통령 아젠다(행사,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3) 2020~2021년도

가) 개괄

2020~2021년도에는 위원회의 활동과 조직이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TF 형식을 통한 활동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국정과제국의 업무가 명확해지면서 다수의 정책적 요청이 기존의 분류 체계와 업무분장 내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회적 가치 TF는 6대 분과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운영해왔기 때문에 국정연구국에서 지원하여 3년에 걸쳐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보건의료 혁신 TF,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거대전환과 정책과제 TF가 운영되었다.

2020년 6월 구성 운영된 노동미래 TF는 TF 활동을 통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본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1년 4월에 노동미래 TF의 후속 작업으로 사회적 대화 기본법 TF를 구성하여 법안 마련을 위한 TF 활동을 연속하여 진행하였다.

국정과제국 소관의 분과위원회 주관 TF 활동 현황은 백서 3장에 별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고, 본 장에서는 국정연구국의 TF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2020~2021년 TF 추진현황〉

연도	TF명	운영기간	소관
’21. (5)	사회적가치 TF	’19.5.~’21.12.	국정연구국
	사회적대화 TF	’21.4.~7.	국정연구국
	농어촌뉴딜 TF	’20.12.~’21.2.	국정연구국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방향 TF	’21.2.~3.	국정과제국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방안 TF	’21.3.~6.	국정과제국
’20. (15)	사회적가치 TF	’19.5.~’20.12.	국정연구국
	감염병·재난 대응 보건 의료 혁신 TF	’20.4.~6.	국정연구국
	노동미래 TF	’20.6.~9.	국정연구국
	농어촌뉴딜TF	’20.12.~’21.2.	국정연구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평화번영 전략 TF	’20.5.~6.	국정과제국
	포용적 뉴딜 TF	’20.6.~’20.7.	국정과제국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TF	’20.7.~9.	국정과제국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플랫폼 TF	’20.7.~10.	국정과제국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TF	’20.8.~11.	국정과제국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TF	’20.8.~9.	국정과제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전환과 정책과제 TF		전략홍보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TF	’20.6.~’21.4.	국정과제국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	’20.10.~’21.1.	국정과제국
	미 대선 이후 외교정책 방향 TF	’20.10.~’20.11.	국정과제국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20.10.~’21.8.	국정과제국

나) 사회적가치 TF (’19.5.~’21.12.)

① 추진 배경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부문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진중이나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민간기업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환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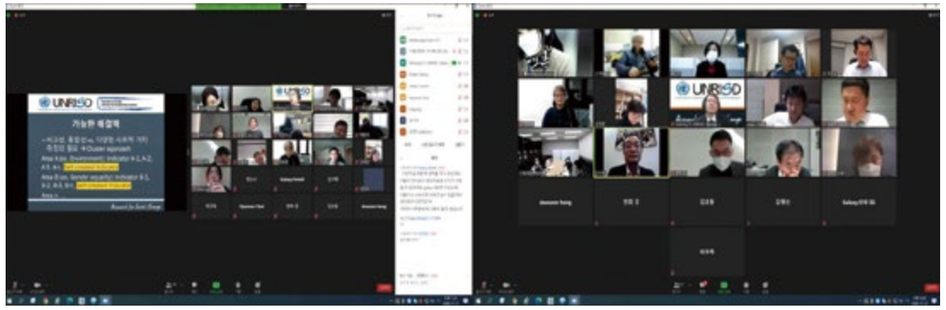
② 주요 활동내용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 기업 CSR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사회적 가치 TF를 구성하였으며 BH 사회적경제비서관실과 기획재정부와 함께 TF 회의를 운영하였다. 2019년 5월 1기 TF를 구성하면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 회의를 도입하였으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활동 결과 정리

사회적 가치 TF는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 등의 심의·조정하여 왔다.

2020년 11월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가치 개념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였다.



발표화면 온라인 참여자

2021년 2월에는 사회적가치 민간 확산을 위한 공익재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희망씨 5개 공익재단과 사회적가치 TF 위원 및 BH,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간담회 기념사진 위원 발표 전체토론

2022년 1월 18일에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책추진 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그간의 정부 노력과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 사회적 가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

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건맥 1897 협동조합, 하나금융그룹 등 공공, 민간, 사회적 경제조직이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행사 기념사진 주제 발표 및 토론 전체 토론

다) 노동미래 TF ('20.6.~9.) 및 사회적 대화 TF ('21.4.~7.)

①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지역·산업(업종)·국가단위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노동미래 TF'(2020년 6~9월)를 구성 운영하였다. 2021년도에는 노동미래 TF에서 정립한 '사회적대화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 대화 재단' 설치 등에 관한 방안 구현의 연속선상에서 입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적대화기본법 TF를 구성하였다.

② 주요 활동내용

노동미래 TF를 2020년 6~8월(2개월) 간 운영하였으나, 1개월 추가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연장 활동하였다. 노동미래 TF 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2021년 사회적대화기본법 TF를 2021년 4~7월(3개월)을 구성 운영하였다.

③ 활동 결과 정리

2020년 9차에 걸친 노동미래 TF 회의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대화 체제 혁신 방안'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다. 2021년 사회적 대화 TF는 사회적 대화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라) 농어촌뉴딜 TF ('20.12.~'21.2.)

①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농산어촌 관련 정책이 시군, 읍면동 단위까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② 주요 활동내용

농림부, BH 농해수비서관실,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뉴딜 TF를 구성하여 2020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전체 TF회의(5회,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와 실무회의(실무지원반 2회(농림부, 농해수비서관실 참여)), 집필진 회의 8회(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를 병행하여 개최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산이 심한 시기에는 방역차원에서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과 대면 혼합 회의를 운영하였다.



회의 사진



회의 사진

③ 활동결과 정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완성을 위한 '농촌뉴딜 추진전략(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BH 농해수비서관실과 농림부, 관련 위원회와 공유하였다. 농촌뉴딜을 지역격차를 줄이는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새 가치관을 구현하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에 주목하여, 전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사회적 담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마) 감염병 재난 대응 보건의료 혁신 TF ('20.4.~6.)

①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메르스 이후 기존의 대응 시스템에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감염병에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방역, 감염병 등 보건의료체계 외에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발상의 전환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고민, 설계하고자 하였다.

② 주요 활동내용

위원장(서울대 이종구 교수), 부위원장(정책기획위 김진우 단장)을 비롯하여 기획분과, 보건의료분과, 방역·감염분과, 응급·재난분과, 연구·특별분과, 자문단 등 총 35명으로 구성하였다.

2020년 4~6월까지 TF 기획분과(주1회), 분과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였다. 정부와 시민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감염병 재난 대응의 보건의료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감염병·재난대응 보건의료혁신TF 운영 현황〉

ㅇ (회의) 감염병·재난 대응 보건의료혁신 TF 회의 총 21회 개최
- TF 출범을 위한 사전회의('20.3.25.) 및 정책간담회('20.4.7.)
- 전체 및 기획분과 회의 (9회/'20. 4.1.-Kick off-, 4.3., 4.8., 4.15., 4.22., 4.29., 5.2., 5.6., 5.13.)
- 보건의료분과 회의 (5회/'20. 4.7., 4.11., 4.13., 4.17., 4.24.)
- 방역감염분과 회의 (4회/'20. 4.9., 4.16., 4.23., 4.29.)
- 보건의료분과 및 감염방역분과 연석회의 ('20.4.13.)

ㅇ (인터뷰)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의료 및 방역감염 전문가 자문 ('20.5.)

ㅇ (면담)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재난대응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개최('20.4.7.)
* 위원장, 김진우 단장, 이종구 TF위원장, 노동계, 경영계, 정부 참석
- 국립보건원 조직개편 관련 방문('20.4.22.)
* 권준욱 질본 국립보건원장,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 등
-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관련 방문('20.4.24.)
* 강민규 기획조정부장, 신재형 기획조정부 과장
- 복지부 관계자 협의('20.5.1.)

③ 활동결과 정리

코로나19에 대응한 TF의 수차례 논의를 통하여 감염병·재난 대응 보건의료체계 혁신방안(안)을 마련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가.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구성 배경과 취지

1)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이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그 이전 시기의 질서를 해체하거나 변화시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전개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감염균이 퇴치된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균의 출현과 확산 이후 시대'를 의미했다. 코로나19 감염균이 출현하고 대유행하는 시기와 그 영향이 사회질서의 해체와 변화를 드러내는 시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중첩되거나 포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2020년 7월 14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시스템, 그린사회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초정권적 국가혁신전략이었다. 무엇보다도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삼중위기에 직면해서 방역의 표준과 모범을 세계사회에 제시한 '선도성'을 기회로 세계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국가개조의 시대적 과제로 보았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 안전망강화와 지역기반성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미국 뉴딜의 성공이 미국사회를 개조(reform)한 데 있듯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또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는 데 두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담대한 구상과 계획이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사회적 대화 기반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피우려는 전략이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19 사태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등 핵심분야에 대한 사람 투자를 강화하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며, 격차를 해소하는 등 포용사회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 고용·산재보험 대상 확대, 청년층 자산형성·주거지원·교육비부담 경감·고용확대, 기초학력 강화 및 취약계층 돌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으로서 지역경제 혁신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며, 뉴딜과 지역정책 연계와 양질의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실행,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사회적 대화 기반 전략'은 진화과정에서의 신구(新舊), 흥망(興亡) 산업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전략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3층(3-tiers)의 사회적 대화를 구조화하고 중위수준(meso-level)의 지역 업종 단위 사회적 대화를 지역 기반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큰 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기업 등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2) 정책기획위원회의 한국판 뉴딜에 관한 활동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직속기구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체계화 및 실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 보완과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다.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 전까지 정책기획위원회은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 ○ '20.7.14.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 '20.7.1. BH로부터 한국판 뉴딜 대통령 자문보고서 요청(정책기획위원회)
- ○ '20.7.24.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안 논의(정책기획위원회)
- ○ '20.7.31.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기획회의 개최(정책기획위원회)
- ○ '20.9.1. 한국판 뉴딜 대통령 자문보고서('한국판 뉴딜' + 비전과 전략) 보고(정책기획위원회)
- ○ '20.9.3.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뉴딜펀드 조성방안 등)
- ○ '20.9.24.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구성을 위한 지역전문가 간담회(정책기획위원회)
- ○ '20.10.13.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지역균형뉴딜 추가)

※ '20.12.4.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

나.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역할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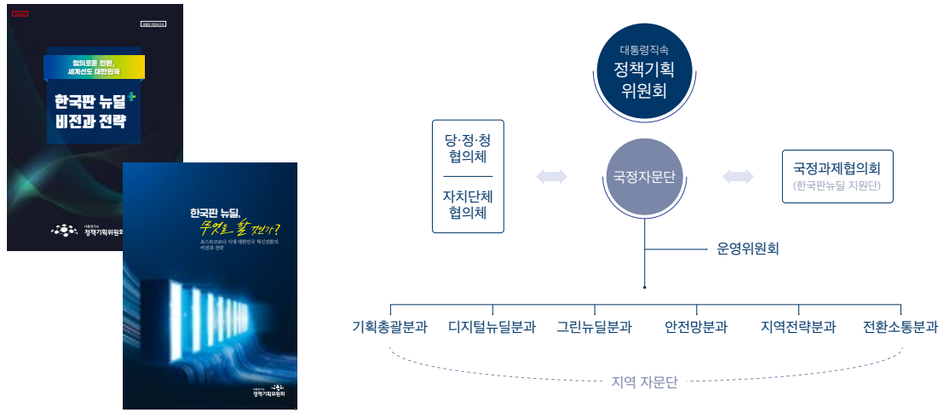
1)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의 역할

국정자문단은 한국판 뉴딜의 발전전략, 정책방향 및 내용의 수정·보완 의견 제시하고 한국판 뉴딜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토론회 등)을 하기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분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한국판 뉴딜 관련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 소통, 그 밖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결정한 사항을 진행키로 하였다.

2)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의 구성

국정자문단은 기획총괄 분과, 전환소통 분과, 지역전략 분과,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안전망뉴딜 분과 등 6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또한 위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및 발전전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키로 하였다.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구성체계>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정책세미나에

〈2기('20.~'21.) TF 추진현황〉

분과	주요역할
기획총괄 분과	○ 국정자문단 운영 총괄 및 기획 ○ 전국적인 가치 공유 및 의견 수렴 ○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전환소통 분과	○ 각 분과별 추진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 촉진·지원 ○ 전환소통 관련 정책점검 및 보완책 마련 ○ 전환소통 관련 대외협력, 지원 등
지역전략 분과	○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촉진·지원 ○ 지역균형 발전 정책 점검 및 보완책 마련 ○ 지역균형 발전 관련 대외협력, 지원 등
디지털뉴딜 분과	○ 디지털뉴딜 관련 의견 수렴 및 현황분석 ○ 디지털뉴딜 관련 정책점검 및 보완책 마련 ○ 디지털뉴딜 관련 대외협력, 지원 등
그린뉴딜 분과	○ 그린뉴딜 관련 의견 수렴 및 현황분석 ○ 그린뉴딜 관련 정책점검 및 보완책 마련 ○ 그린뉴딜 관련 대외협력, 지원 등
안전망 분과	○ 안전망 관련 의견 수렴 및 현황분석 ○ 안전망 관련 정책점검 및 보완책 마련 ○ 안전망 관련 대외협력, 지원 등

다.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

1)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20년 12월 4일 더케이호텔(양재) 그랜드 볼룸에서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국정자문단 위원들 간 목적과 역할을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본격화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은 산·학·연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 6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기획총괄 분과, 전환소통 분과, 지역전략 분과,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안전망 분과 등 6개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키로 하였다. 한편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 α)를 고려하여 온라인 행사(화상회의 Zoom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고 행사장에는 사전에 통보된 최소한의 자문단 위원만 참석하였다.

시간	주요내용	비고
16:30~16:37(07′)	인사말씀	조대엽 정책기획위 위원장
16:37~16:42(05′)	축사	국회의원 등
16:42~16:50(08′)	한국판 뉴딜 영상 시청	
16:50~16:55(05′)	국정자문단의 구성 및 역할 발표	윤태범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
16:55~17:05(10′)	자문단 위촉장 수여	
17:05:~17:15(10′)	자문단 참여자 인사말씀	
17:15~17:20(05′)	기념촬영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임명식〉









2)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운영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장은 정책기획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으로 구성하였고 국정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약간명의 부단장을 선임하였다. 기획총괄분과 등 6개 분과는 각각 분과장(1인)과 부분과장(4인 내외)을 두었다.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국정자문단'의 단장·부단장을 보좌하여 국정자문단 운영을 총괄 지휘하며, '기획총괄 분과' 분과장을 겸하도록 하였다. 우선 기획총괄 분과는 국정자문단 운영 전반, 분과별 운영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5개 분과의 분과장 5인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

였다. 나머지 5개 분과는 분과장과 부분과장이 참여하는 '분과장회의'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종합, 분과의 주요 결정사항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분과장회의'는 분과장이 주재하고 현안과 관련된 분과내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분과별 결정사항은 이후 기획총괄 분과에서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정자문단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판 뉴딜 보완 및 확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체계를 마련하였고 나머지 국정자문단 위원들을 6개 분과로 배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정자문단의 간부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간부진 명단〉

구분	이름	소속	비고
공동 단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24기 회장	
공동 부단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김연희	BCG 대표파트너	
기획총괄 분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분과장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	부분과장
디지털뉴딜 분과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분과장
	차인혁	CJ 올리브네트웍스 대표	부분과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 ㈜지아이이앤에스 대표이사	부분과장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부분과장
	박태균	정기위 미래정책연구단장	부분과장
그린뉴딜 분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분과장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문장/상무	부분과장

구분	이름	소속	비고
그린뉴딜 분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이사	부분과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분과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기획처장(교수)	부분과장
안전망 분과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분과장
	여상태	청년재단 사무총장	부분과장
	이희영	분당서울대 공공의료사업단 부교수	부분과장
	손동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부분과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 연구위원	부분과장
지역전략 분과	곽채기	동국대 부총장(행정학과 교수)	분과장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부분과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前부원장	부분과장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부분과장
	오현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사무국장	부분과장
	고영구	극동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부분과장
전환소통 분과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분과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부분과장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부분과장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분과장

한편 코로나19 및 분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의견수렴은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국정자문단 위원에게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정책기획위원회 소식,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자문단을 온라인 중심 의견수렴, 분과 중심 활동, 정책기획위원회 행사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국정자문단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서의 한국판 뉴딜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국정자문단 자문위원의 활

동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별 구성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관련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정자문단은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뉴딜 토론회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순회토론회와 한국판 뉴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하였고 여기에 국정자문단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라.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주요 활동

1) 한국판 뉴딜 개선·보완과제 제안

국정자문단은 분과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규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한국판뉴딜 신규사업 발굴, 기존과제의 보완 등에 대한 의견 268건을 수렴하여 국회와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 ('20.3.) 1차 의견수렴(정책기획위 위원 98명)
- 총 23건 의견수렴 후 8건(디지털 3건, 그린 3건, 안전망 3건) BH 전달

○ ('21.4.) 2차 의견수렴(국정자문단 490여명)
- 총 245건 의견수렴, 관계부처 전달(BH, 국회 민주당 뉴딜추진위원회, 기재부 뉴딜실무지원단)

국정자문단이 제안한 사업은 각 주무부처(행안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에서 검토하여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사업에 반영하였다.

2)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권역별)' 참여

한국판 뉴딜 경청 공감 지역 대토론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민들과 지역 주문들의 의견을 듣고, 각 계각층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2020년 11월 광주 전남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까지 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등 총 6개 권역에서 6회 개최되었고 여기에 국정자문단 위원들이 발제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1차)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광주·전남 대토론회('20.11.10.~11.5.18., 기념문화센터)

○ (2차)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세종·대전·충남 대토론회('20.11.25.~26., 한국철도공사)
○ (3차)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21.4.8.~9., 경북도청)
○ (4차)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21.5.20., 전북도청)
○ (5차)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강원 대토론회('21.6.22.~23., 춘천시청)
○ (6차)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부산 울산 경남 대토론회('21.11.10.~11.,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지역간담회〉





3)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참여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한국판 뉴딜의 국정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장이며, 한국판 뉴딜의 국정자문단 활동의 중심축이자 국정자문단의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기획되었다. 2021년 3월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총 7차례 개최되었고 여기에 국정자문단 위원들이 발제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한국판 뉴딜 '제1차 대한민국 집현포럼'('21.3.3., 백범김구기념관)
- 주제 :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

○ 한국판 뉴딜 '제2차 대한민국 집현포럼'('21.4.22., 백범김구기념관)
- 주제 : 수소경제, 한국판 뉴딜을 이끌다

○ 한국판 뉴딜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21.6.3., 한국국방연구원)
- 주제 : 모병제 :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 한국판 뉴딜 '제4차 대한민국 집현포럼'('21.9.15., 패럼타워 페럼홀)
- 주제 :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말한다, 청년과 정의

○ 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21.10.26., 한국행정연구원)
- 주제 : 지역균형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 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21.12.1., 뱅커스클럽)

- 주제 : 공공보건의료체계 선진화

○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21.12.15., 한국행정연구원)

- 주제 :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제3절

정책 소통 및 홍보

1.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가. 추진 개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중요한 기능[2] 중 하나는 국정과제 전반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 점검 그리고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 때마다 아래와 같이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는 2019년 5월에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5년의 임기 중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정부 출범 3주년과 4주년에도 각각 정책 컨퍼런스,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등 총 4회에 걸쳐 국정과제 보고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주요 계기별 국정과제 보고회 행사 개최현황〉

행사	주제	일시	장소
2주년 컨퍼런스	‘문재인 정부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19.5.7.	코엑스
2.5주년 토론회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19.11.4.	더케이호텔

2)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정과제의 조정 등 국정과제 추진 및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행사	주제	일시	장소
3주년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20.5.7.~8.	더케이호텔
4주년 컨퍼런스	'국민과 함께, 위기에 강한 나라'	'21.5.6.	백범김구기념관

나. 정부 출범 2주년 컨퍼런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여 2019년 5월 7일 코엑스에서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컨퍼런스는 오픈행사, 국민에게 듣는다, 6개 국정과제 분야별 세션,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전 오픈행사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의 개회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종래 컨퍼런스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저명인사의 기조강연 대신 일반국민 3명이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국민에게 듣는다' 코너를 마련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리플렛〉



〈행사 프로그램 및 세션별 토론〉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일반국민 발표, 개회식 행사〉








개회식 행사사진


개회식 행사사진



개회식 행사사진

행사 당일 오후에는 1, 2부로 나누어 6개 국정분야별 토론이 이어졌으며, 각 토론에서는 분야별 국책연구기관장이 좌장을 맡아 3명의 발제자와 3명의 토론자가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성과와 변화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국정분야를 대표하는 6개 부처의 차관이 직접 2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에 참석하여 더욱 더 현실감 있고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유용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분야별 토론 후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성경륭 이사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의 컨퍼런스를 정리하는 종합토론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문재인 정부 지난 2년의 주요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다. 정부 출범 2.5주년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19년 11월 4일 더케이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경제 사회 분야 전반기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후반기 동안 집중해야할 과제와 국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행사 프로그램 및 세션별 토론〉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2019년 11월 4일(월) 13:30~18:00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
정책기획위원회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소요	계획	비 고
참석 및 개회식	13:30 ~		참석자 등록 및 대기실	
	14:00 ~ 14:05	05'	국민 의례	
	14:05 ~ 14:10	05'	개회사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14:10 ~ 14:15	05'	환영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4:15 ~ 14:20	05'	축사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14:20 ~ 14:25	05'	토크세션	주요 계획
Break	14:25 ~ 14:40	15'		
Parallel sessions	14:40 ~ 16:30	110'	Session 1 : 경제분야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방향 Session 2 : 사회분야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방향	
Break	16:30 ~ 16:40	10'		
라운드테이블 및 폐회	16:40 ~ 18:00	80'	라운드테이블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구 분	Session 1 경제분야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방향	Session 2 사회분야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방향	라운드테이블
발표 및 토론	사회 우 효 일 (KDI 국제전략부문 위원)	사회 이 태 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연구사업)	사회 홍 장 표 (나주시노인복지센터 이사장)
	발표 강 동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 명 선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민 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발표 김 태 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무원단 정 해 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 경 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토론 김 정 훈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박 복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흥 종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신 진 아 (한국보건복지연구원 부연구위원) 안 재 진 (중앙대학교 교수) 이 정 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안 종 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센터 선임연구본부장) 손 인 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송 재 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 현 철 (서울대학교 교수) 이 재 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 석 원 (산업연구원 부원장) 최 정 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 동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 용 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 종 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 경제/사회 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경제세션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관계 전문가가 각각 그간 경제정책, 대외정책, 산업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진행된 사회세션에서는 '우리 사회현안과 사회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복지 보건 여성 등 분야별 전문가가 그간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양 세션이 종료된 이후 공동주최 기관장과 국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그간 대두된 정책과제와 국정방향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루어졌다.

〈개회식, 세션별 발표 및 토론〉









라. 정부 출범 3주년 토론회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으로 2019년 5월 7일과 8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주년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성과와 반성,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특별세션, 4개 분야별 세션, 그리고 국무총리 특별강연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날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재계· 노동계·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세션에서는 경총, 중기중앙회, 병원협회, 민노총과 한노총의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리플렛〉



〈행사 프로그램〉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전개

에 따른 수요·공급 및 유가 측면의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 본격화 등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진단하였다.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경제분야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경제활력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대책 성과, 코로나19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보완과제와 장기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개회식 및 세션별 발표·토론〉











산업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에서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라는 주제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및 WTO체제 변화 가능성과 자국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재편 전망,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지역통상환경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분야 정책성과와 산업기술 변화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기반·응용기술 발전,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등을 전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션 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단키트 개발업체, 여행업 소상공인, 언택트 기업대표가 직접 코로나19의 영향과 당면 현안,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하였다.

토론회 둘째 날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II에서는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정치외교질서 변화와 디지털 정당 등 새로운 국내정치체제 도입 가능성, 이에 따른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투명성·민주성·개방성에 근거한 국제공조 강화 노력, 3년간 국정과제 추진의 영향 및 성과,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위협 하에 국방대응체제 발전방향과 장기적인 군구조 발전 구상을 설명하였다. 특히 세션 III 발제와 토론에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였다.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 IV에서는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이 '포스트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근로·고용·교육 형태, 생활, 가치관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전망,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정책대응 현황, 향후 사회정책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세션 II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션 IV에서도 발제와 토론에 앞서 현장의료진, 문화예술계 대표, 온라인 개학교사가 코로나19 경험과정에서의 소회와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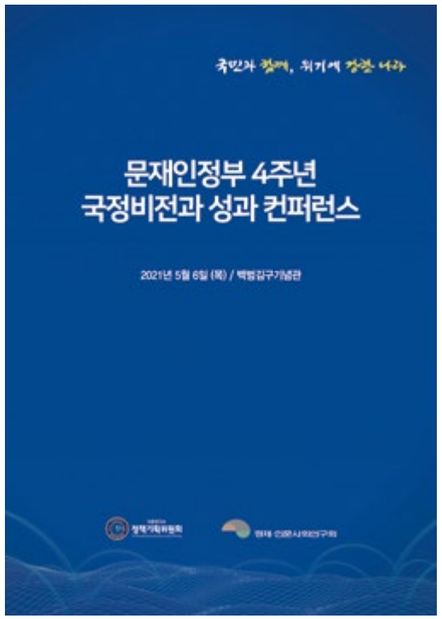
토론회의 대미를 장식한 특별강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

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성과, 그리고 연대·협력/적극행정/창의혁신이라는 극복의 원동력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남은 2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가 따라오는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였다.

마. 정부 출범 4주년 컨퍼런스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21년 5월 6일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4주년 컨퍼런스에서는 학계·국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및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여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비전과 전략을 고민하는 대토론의 장(場)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컨퍼런스 리플렛〉



〈행사 프로그램 및 세션별 토론〉





컨퍼런스 종합보고에서는 윤태범 정책위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국정성과'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시작하여 국내외의 역동적·위기적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분화하여 왔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점을 설명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K-방역모델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감염 위기 대응 평가지표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K-방역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양종곤 정책위 국민성장분과 위원장은 'K-경제 대응과 평가'라는 주제로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온 K-경제의 위기대응시스템을 '3S+1C' 특성에 맞춰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개회식 및 세션별 발표·토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제2세션에서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국운 정책위 국민주권분과 소분과장이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관점에서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 대해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이 '한국판 뉴딜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거시경제 상황과 한국판 뉴딜의 의의를 고찰하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소순창 정책위 분권발전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분권·발전정책과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래의 분권·발전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윤순진 정책위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전환기 :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2030 감축목표 상향의 효과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체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포용적 복지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제4세션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문진영 정책위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이 '포용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였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년의 고용·노동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선도국가 도약'에 대해 논의하는 제5세션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글로벌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기술동맹 중심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민경태 정책위 평화번영분과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연대협력'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의 지정학적 양자택일에서 탈피하여 지경학적 이익을 창출할 것을 제언하였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특별세션에서는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경인사연 산하 국책연구원 원장과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평가와 함께, 작금의 전인류적 위기를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국정비전과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2. 국제 컨퍼런스 Inclusive Korea 개최

가. Inclusive Korea 행사 개요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 'Inclusive Korea'는 문재인 정부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국가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흐름을 이해하고 의견을 청취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넘어 포용적 성장과 평화 국가의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컨퍼런스와 같은 계기를 통해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아 이행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성취와 비전을 세계에 부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걸친 새로운 담론을 주도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nclusive Korea 행사는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한 2018년 5월 25일 개최된 첫 번째 국제컨퍼런스는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개최되었고, 2019년에는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2020년에는 '한국판 뉴딜 :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각각 Inclusive Korea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Inclusive Korea 연도별 개최 현황〉

연도	주제	일시	장소
'18.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18.5.24.~25.	더케이호텔
'19.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19.11.20.~21.	더케이호텔
'20.	한국판 뉴딜 :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20.12.15.	포시즌스호텔
'21.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	'21.7.6.~7.	더케이호텔

나. Inclusive Korea 2018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주관화에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는 2018년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Inclusive Korea 2018 행사 포스터〉



Inclusive Korea 2018는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비전의 세 가지 원칙으로 '포용', '혁신', '평화'를 제시하고, 이를 화두로 기조세션과 6개 세션에서 주요 연사들이 발제에 나섰다.

첫 날 행사는 통상적인 컨퍼런스와 달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층 등 미래세대의 다양한 고민과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특별세션으로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으로 마련되었다. 하자센터(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계 및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10대 연구소팀 등 6개 청소년팀과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등 3개 청년팀이 무대에 올라 청소년 청년에 관한 노동과 권리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교육부 여가부 차관 등 정책당국자들이 미래 세대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Inclusive Korea 2018 1일차 특별세션〉









〈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행사 2일차 '기조세션'에서 로버트 라이스 미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포용적인 사회는 청년들이 경제계층에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Inclusive Korea 2018 2일차 개회식, 기조세션〉













세션1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메사우드 롬다니 튀니지 경제 사회적 권리 포럼 회장(‘15 노벨평화상 수상자)이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 정의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하고,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저스틴 기챠드 미 펜실베이니아대 연구교수,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한국의 촛불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각각 발제하였다.

세션2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서 강동수 KDI 연구조정실장은 “포용적 성장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생산과 노동시장에 대한 동시적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고,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구축 경험을 소개하였다.

세션3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에서 마이크 더글라스 미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포용은 국가 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임을 밝혔고, 추장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취약 계층, 지역, 세대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션4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의 과제’에서 리처드 프리만 미 하버드대 교수는 “고용과 교육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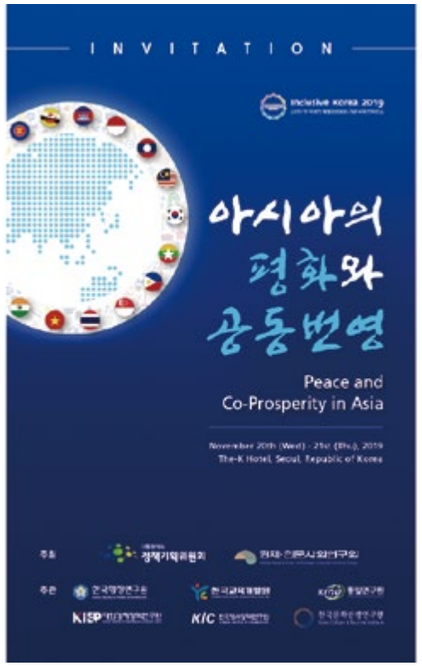
세션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서 송재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이 돌봄과 살림정책인 동시에 어떠한 정책수단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임을 밝혔고,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하였다.

세션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서는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안정적인 비핵화 구축에 필요한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다. Inclusive Korea 2019

2019년 국제컨퍼런스는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2019년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Inclusive Korea 2019 행사 포스터〉



〈Inclusive Korea 2019 주요 연사〉



컨퍼런스에서는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그리고 다양한 교류협력의 기초로서 문화를 화두로 기조세션과 4개의 개별세션이 진행되었고, 2일간 총 27명의 국내 외 저명인사가 참여해 각 분야별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 1일차(11월 20일) 특별세션에서는 정연식 창원대 교수의 사회로, 발표를 맡은 씨윤 쏘피릿(Siyonn Sophearith)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총괄 국장과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의 청사진을 논의·제시하였다.

행사 2일차(11월 21일) 기조세션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성경륭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아시아가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포용·혁신·평화의 미래적 가치에 기반하여 개방주의·평화주의·포용문명을 추구하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연합의 노력으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당 쑤언 탄(Dang Xuan Thanh) 베트남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주제로, "적어도 2030년 중반에 동아시아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며,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찾아야한다."고 발표하였다.

〈Inclusive Korea 2019 특별세션, 기조세션〉













제1세션(people)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 구축방안'은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박재신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가 '아세안과 함께하는 상생의 개발협력'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서는 에델 아그네스 파스쿠아 발렌주엘라(Ethel Pascua Valenzuela) 동남아 교육장관기구 사무총장이 '교육 및 문화 분야의 이동성 촉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제2세션(peace)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국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 한-아세안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한반도 체제와 아세안 -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의 선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응웬 티 탐(Ngyuen Thi Tham)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한국학센터장이 아세안지역포럼(ARF)의 경험과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세션(prosperity)에서는 이수훈 전 주일본 대사가 사회를 맡아 '신남방 협력과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부이 꽝 뚜언(Bui Quang Tuan) 베트남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베트남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경쟁력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언하였고,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왓차랏 리라왓(Watcharas Leelawath) 태국 메콩연구소 소장은 '메콩강 협력과 평화경제'를 주제로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메콩지역에서의 평화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특별강연에서는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Inclusive Korea 2019 제1,2,3세션 및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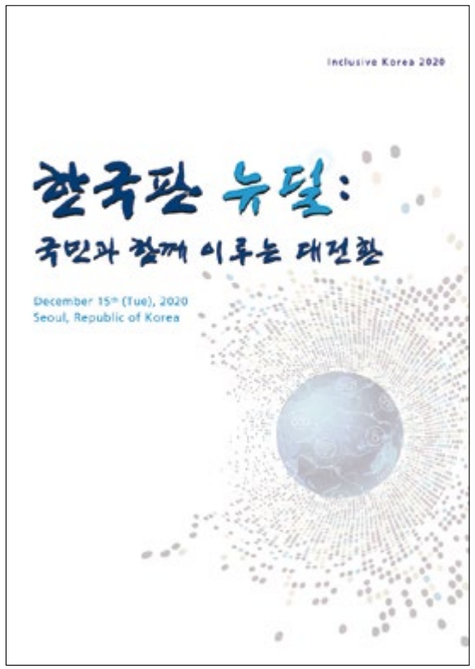




라. Inclusive Korea 2020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0' 국제컨퍼런스가 '한국판 뉴딜 :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을 주제로 2020년 12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Inclusive Korea 2020 행사 포스터〉



〈Inclusive Korea 2020 행사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에 대한 심층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컨퍼런스는 기조강연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대응 : 방역과 경제',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기조강연에서 제프리 삭스 교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K-방역'으로 대표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팬데믹 위기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세션1 '코로나 위기 대응 : 방역과 경제'에서 가브리엘 렁 홍콩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와 다른 대륙 국가 간 코로나19 확진 및 발생율을 비교하고 동아시아의 직면 과제를 소개하였고, 문명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과 특징을 진단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평가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성숙한 시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지역통합연구부장은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정책지원을 평가, 국민건강증진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 이용, 빈곤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세션2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에서 앤 페티포 영국 거시경제정책연구소장은 그린 뉴딜의 핵심은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 원인인 금융과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과 기업의 빠른 대응으로 단기간 사회 곳곳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진단하고 디지털 뉴딜의 마중물 효과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은 분권형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방식의 대전환, 지역의 주민참여 제고,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션3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에서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일의 미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교육시스템, 직업, 사회안전망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루이스 컴포트 피츠버그대학교 공공국제대학원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와 같이 불확실성과 복잡도가 높은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정책 추진, 정확한 메시지 전달, 리더십 및 공공부문 조직적 역량, IT 기술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며, 환경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청년 노동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Inclusive Korea 2020 행사 주요 현장사진〉

















라. Inclusive Korea 202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가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주제로 2021년 7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Inclusive Korea 2021 행사 포스터〉



〈Inclusive Korea 2021 행사 프로그램〉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으며, ‘Inclusive Korea 2021’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라고 언급하였고, 정해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까지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제 ‘회복’과 ‘도약’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조강연 ‘코로나19 대응과 위기에 강한 정부’에서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범정부적,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성공적인 팬데믹 대처는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의 주도국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감염병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은 한국의 ‘Testing, Tracing, Quarantine’이라는 한국의 방역 모델’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처방법이었으며, 컴퓨터 앱과 GPS, 블루투스 등의 사용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강조했다.

〈Inclusive Korea 2021 개회식, 기조강연〉













세션1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에서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탄소중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제도 신설, 예산사업의 집행 근거 마련 등 탄소 중립 이행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초광역권에 대한 권한 부여와 과감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2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에서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분야로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2차, 3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지향을 지속하되 혁신과 사회적 보장의 균형을 갖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지역사회와 신뢰 관계에서 교환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3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관련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였고,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정부의 노력과 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압력이 작용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3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사회의 청렴도가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2020년 개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의 기본이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민주화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세션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를 유지한 정부'에서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첨단무기 체계로 전력 강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 조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K-방역, K-문화 등 중견국 외교를 통해 인간안보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남북보건협력, 인도협력에는 핵문제 등 안보 문제와는 분리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nclusive Korea 2021 세션별 발표〉









3. 정기간행물 '열린정책' 발간

가. '열린정책' 개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허브로서의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하여 정책 아젠다를 주도하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제언과 논의 등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2년 4월까지 총 13권의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을 발간하였다.

'열린정책'은 기존의 정책동향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향후 예상되는 주요 아젠다를 사전에 설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여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과 분야별 주요 정책 제언 등을 담는 담론집의 기능을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정책기획위원회 주요 활동과 성과들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열린정책'은 매분기별 발행을 원칙으로 연 4회 발간되었으며, 약 10명 내외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편집위원장 : 정동일 국정과제지원단장('19.1.~8.), 김은경 위원('19.8.~'20.3.), 박태균 국정과제지원단장('20.3.~)하여 사전에 기획안을 논의하였으며, 원고 집필진 섭외와 내용 정리, 편집 및 디자인 등을 거쳐 통상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통해 계간지 성격으로 발행되었다.

발간된 책자는 매호마다 약 3천 부를 인쇄하여 국회, 청와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 도서관, 해외공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책자 이외에도 웹진과 e-book 형태로도 제작하여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린정책 각 권호별 표지〉



나. '열린정책' 각 호별 주요내용

1) 창간호('19.1.발간)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그간 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열린정책' 창간호 발행을 위한 준비는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창간호는 정해구 위원장의 창간사, 김수현 정책실장의 창간 축사와 함께 정동일 편집위원장의 여는글로 시작하였다. 창간호 특집 '열린 좌담'에서는 한완상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과 함께 평화와 공존의 시대, 현재와 미래의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묻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열린정책 창간호 목차〉



'정책특집'에서는 '포용국가'를 주제로 하는 4개의 글을 통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유은혜 부총리와 진선미 장관과의 '열정인터뷰'에서는 교육과 양성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두 장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정과제광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각 분과가 주도하는 소통의 마당으로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지속가능, 분권발전, 평화번영 등 총 6개 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 중 중요성, 시급성,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씩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정책논단'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목차로서 창간호에서는 부동산, 사법개혁, 젠더 문제와 관련된 세 편의 글이 실렸다. '현장에서 듣는다'는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마당으로 창간호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편의점 현장의 목소리와 항공사 갑질 이슈에 대한 항공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 제2호('19.4.발간)

창간호에 이어서 발간된 제2호부터 계간지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고 최근 이슈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쟁점을 소개하는 '쟁점토론'이 추가되고, 선진국의 국가 비전이나 중요 정책결정 과정과 내용 등을 연재하는 '연속기획' 파트가 추가되었다.

'정책특집'에서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100년 동안의 역사와 100년의 미래를 조명하는 네 편의 글이 실렸다.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권현익), 민주공화정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라는 두 개의 화두(임지봉, 김은경), 향후 100년간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 제시(김호기)와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열정인터뷰'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국정과제광장'에서도 각 분과별로 진행하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하는 글들이 실렸다.

'정책논단'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과정과 시사점(박병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극우 포퓰리즘(김윤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현장과 시선'에서는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로 대표되는 미디어 생태계의 지각변동(심미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호부터 새롭게 추가된 '쟁점토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슈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의견(신영철, 김상기)을 각각 소개하였으며, 국제적 소통을 위한 '연속기획'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 미래비전 수립과 관련된 동향(임채원)을 소개하였다.

〈열린정책 제2호 목차〉


Contents

04 여는 글
04 차례

정책 특집

12 한나 아렌트와 '악'의 일상성
김선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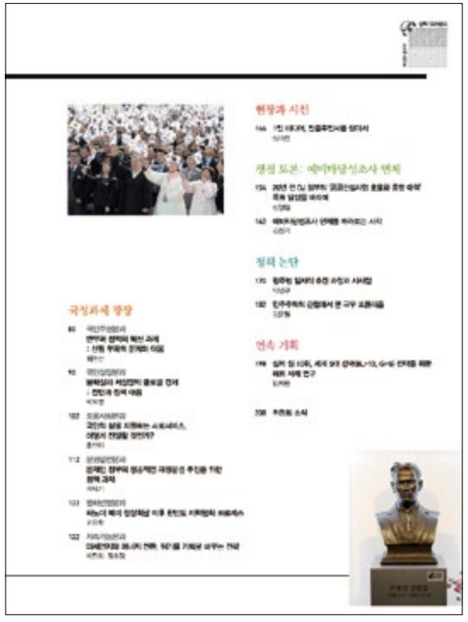
22 한반도 통일 논 인식 패러다임
김학노

34 한반도 통일 논 인식 패러다임 속 사회적 시민갈등해결에 따르는 과제
서은국

53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김종기

열정 인터뷰

64 위기의 최상 경험, 그래도 도약하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의 대화


현장과 시선

116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넘어서
심미선

생점 토론: 에너지믹스 인식조사 엔지

134 2035 전 기능 정부의 '공공기능(업무) 효율화 중장 국부 실현을 위하여
이경희

142 에너지믹스에서 선택할 바라보는 시각
김종기

정책 논단

170 원주형 일본의 추천 지방의 시대정
이강우

182 한국주식의 금융투자 본 구우 조종이을
김정일

연속 기획

198 일본 정 시대, 세대 보장 관계(보기), 0~6도 인지를 위한 세대 사례 연구
김희연

338 추천도 소식

국정과제 방향

80 국민주권정부의 분야별 정책과 확산 과제
: 선동 주제의 문제와 이슈
배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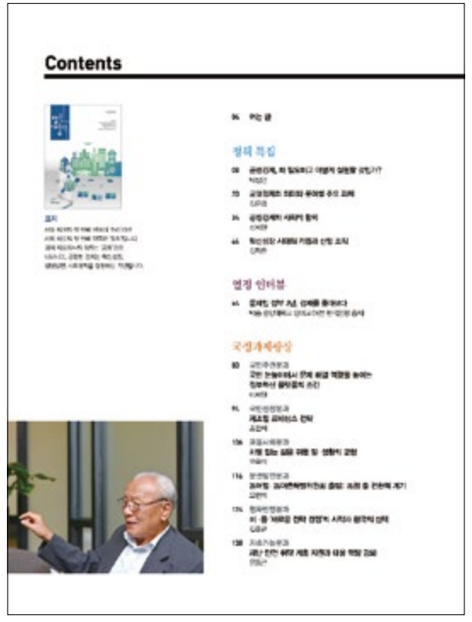
90 국민성장정부의 불확실의 세상에서 경제 안보 대응
: 전환과 전략 사례
박재영

102 포용사회분과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서비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홍석희

112 분권균형분과
전국민 참여의 생활밀착형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이재근

122 첨단산업분과
AI는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가: 전망, 우리를 기회로 성장시키는 전략
이주호, 정동희

〈열린정책 제3호 목차〉


Contents

04 여는 글

정책 특집

08 공정경제,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박상인

33 공정경제와 정의로운 투자에 관한 소고
김은경

34 공정경제에 시장이 할 역
선제원

46 혁신성장 사회에서 기업과 선택 조직
김재훈

열정 인터뷰

61 중재인, 김주 스님 인터뷰 중 하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국정과제방향

80 국민주권정부
국민 눈높이에서 만져 봐야 할 핵심 과제는
정부혁신 플랫폼의 손잡
이세영

91 국민성장정부
혁신도 중요하다 안되
조은애

106 포용사회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성장하기 교육
이철희

116 분권균형분과
자치분권 강화방안(가칭) 중점 추진 과제
고경석

126 첨단산업분과
R) 중 바로잡 전략 전망적 시각이 필요하
김용우

138 지속가능분과
과연 우리는 우리의 지속과 대응 적절 검토
한정훈



정책 입법

152 공정경제에 최선을 다하여
김수석

158 정책, 혼선기 최소화 노력하다
기준선

164 사회변화 정책 역할 수립, 이해는 이해관계 해
김수민

178 관계자간 기획적 협력 과제
김남주

생점 토론
: 태양광은 전기요금 개편 방향

174 신한울 3호부터 모든 신규 원전을 중심으로
이재근

184 신한울 3호부터 모든 신규 원전을 중심으로
이재근

심미선의 현장과 시선

194 문재인과 대학 교육의 정도, 바람을 찾다서
정동희

연속 기획

234 공무원 인재개발 체제를 정책 중심 전략
지세희

위원회 소식

254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확신을 위한 중간 점검

3) 제3호('19.4.발간)

제3호 '정책특집'의 주제는 '공정경제'로 박상인, 김은경, 선제원, 김재훈 교수의 글이 실렸다. '열정인터뷰'에서 경제계의 원로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평과 건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쟁점토론'에서는 바람직한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모두 다루었고, '연속기획'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미래 성장전략(최혜옥)에 대한 글을 소개하였다.

제3호부터는 기존의 '정책논단' 코너를 '정책칼럼'으로 개편하여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담기로 하였다. 공유경제(맹수석), 정책소통(안종주), 지방분권(김수연), 권력기관 개혁(김남준) 등의 주제에 대해 짧지만 깊은 생각을 담은 글이 칼럼으로 실렸다.

4) 제4호('19.11.발간)

제4호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완성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발전전략을 '정책특집'의 주제로 삼았고, 한-아세안의 관계와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과제 등을 다룬 총 5개의 글이 실렸다.

'열정인터뷰'에서는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을 모시고 한일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향후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책칼럼'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 타자(他者)를 이해하는 방법 및 미세먼지 대책 등의 과제를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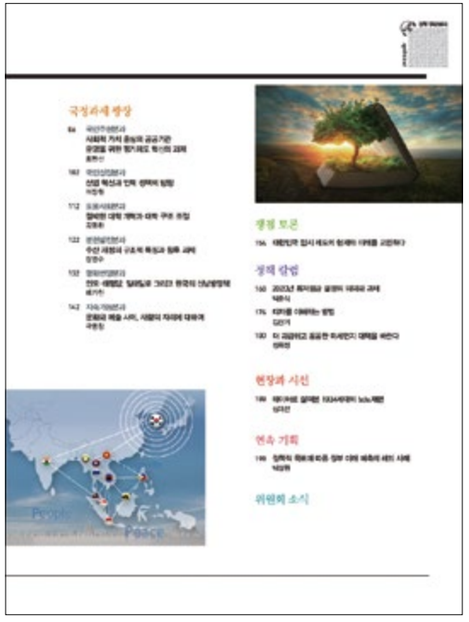
'쟁점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심미선 교수의 '현장과 시선'에서는 데이터로 살펴본 1934세대의 노노재팬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열린정책 제4호 목차〉


Contents

정책 특집

열정 인터뷰


국정과제 광장

쟁점 토론

정책 칼럼

현장과 시선

연속 기획

위원회 소식

People

Peace

〈열린정책 제5호 목차〉


Contents

정책 특집

열정 인터뷰


국정과제 광장

쟁점 토론

정책 칼럼

현장과 시선

연속 기획

위원회 소식

5) 제5호('20.3.발간)

새롭게 임명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의 '열정인터뷰'에서는 제2기 위원회의 출범과 향후 과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신임 위원장의 각오를 들어볼 수 있었다.

제5호의 '정책특집' 주제로는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될 만한 'AI'와 관련하여 일상에서의 AI와 산업에서의 AI로 크게 구분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고 AI와 관련된 법적 이슈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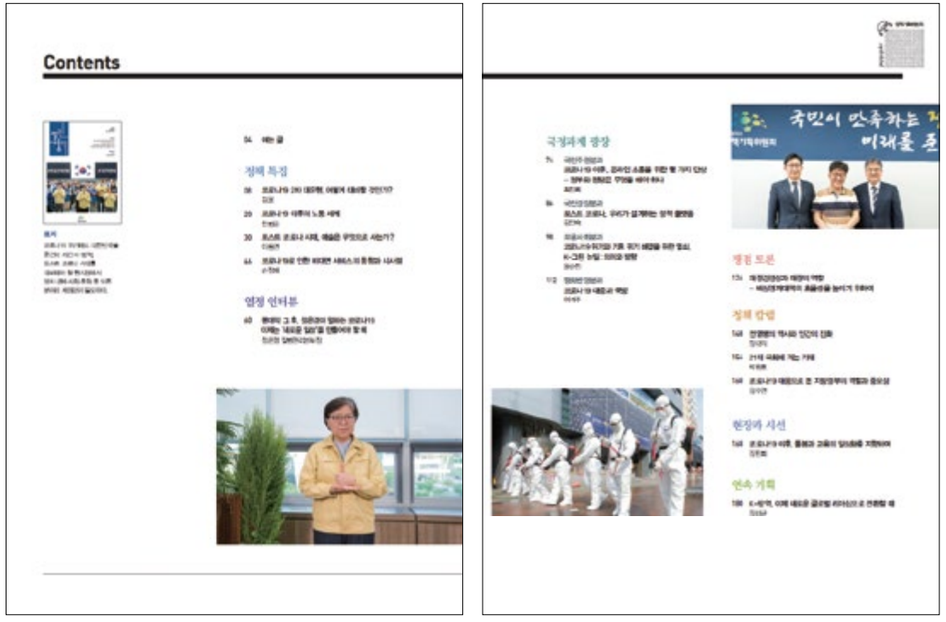
'쟁점토론'에서는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현장과 시선'에서는 플랫폼 노동 현상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루고, '연속 기획'에서는 국내외 그린 뉴딜 정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6) 제6호('20.6.발간)

제6호 열린정책은 '코로나19'가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정책특집' 주제는 '포스트코로나'로 앞으로 나타날 일상과 사회의 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열정인터뷰'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그간의 방역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국정과제광장'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는 분과별 논의가 담겼고, '정책칼럼'에서도 전염병의 역사와 인간의 진화(장대익), 코로나19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김수연)을 논의하였다. '현장과 시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돌봄과 교육의 일상화(김민희)라는 주제의 글이 실렸고, '연속기획'도 K-방역과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김태균)이라는 제목으로 국제기구 문제를 다루었다.

〈열린정책 제6호 목차〉


Contents

정책 특집

열정 인터뷰

국정과제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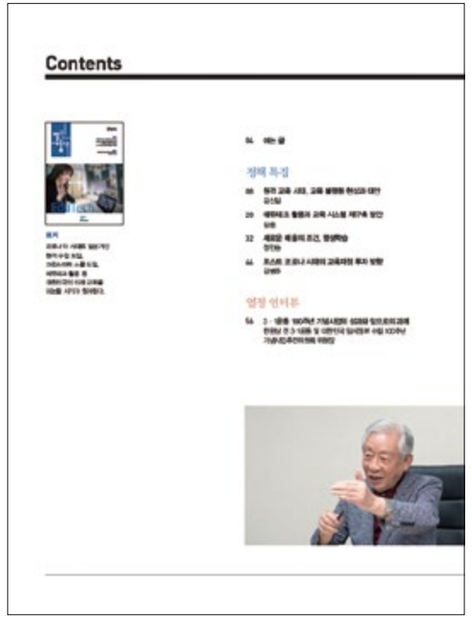
정점 토론

정책 칼럼

현장과 시선

연속 기획

〈열린정책 제7호 목차〉


Contents

정책 특집

열정 인터뷰


국정과제 광장

정점 토론

정책 칼럼

현장과 시선

연속 기획

위원회 소식

7) 제7호('20.9.발간)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제7호의 가장 중요한 화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주제가 선정되었다. '정책특집'에서는 가장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의 문제와 그 해법을 다루었으며, '열정인터뷰'에서는 한완상 3·1 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전 위원장으로부터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정과제광장'에서는 행정수도,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 등을 다루었고, '쟁점토론'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장과 시선'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추적하였고, '연속기획'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그린뉴딜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8) 제8호('20.12.발간)

2020년을 마감하는 제8호 열린정책 '정책특집'의 주제는 '한국판 뉴딜'이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판 뉴딜의 주요내용을 정책기획위원회의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대표하여 4명의 필자(김진우, 김준하, 임운택, 윤태범)가 전체적인 비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열정인터뷰'에서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로부터 팬데믹 상황에서 그가 바라본 한국과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며, '쟁점토론'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정책칼럼'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제기된 디지털 바이오 생태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돌봄 문제 해결방안, 신남방정책의 현황과 미래 등을 점검하였다.

〈열린정책 제8호 목차〉


Contents

표지

정책 특집

열정 인터뷰


국정과제 광장

정책 입법

쟁점 토론

현장과 시선

연속 기획

위원회 소식

9) 제9호('21.3.발간)

제9호 '정책특집'의 주제는 '탄소중립'이었다. 거대한 시대적 전환을 가져오며 2050년에 완수될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신중하게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였다.

'열정인터뷰'는 이제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는 방향 제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국정과제광장'에서는 각 분과별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우리사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쟁점토론'은 고등교육의 현재와 미래, '현장과 시선'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연속기획'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등을 주제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와 그 해결책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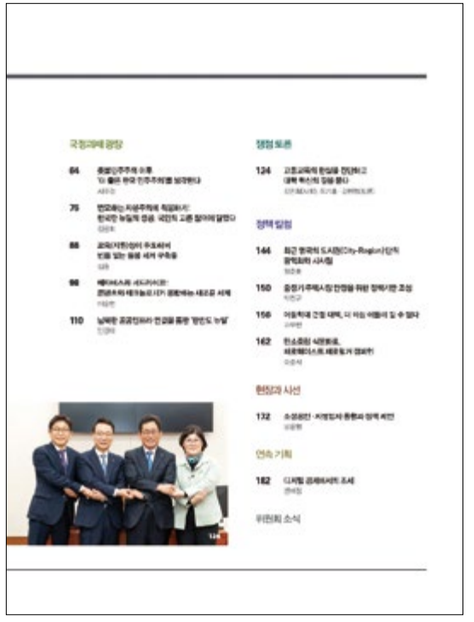
〈열린정책 제9호 목차〉


Contents

Cover story

정책특집

열정 인터뷰


국정과제 광장

정책 입법

쟁점 토론

현장과 시선

연속 기획

위원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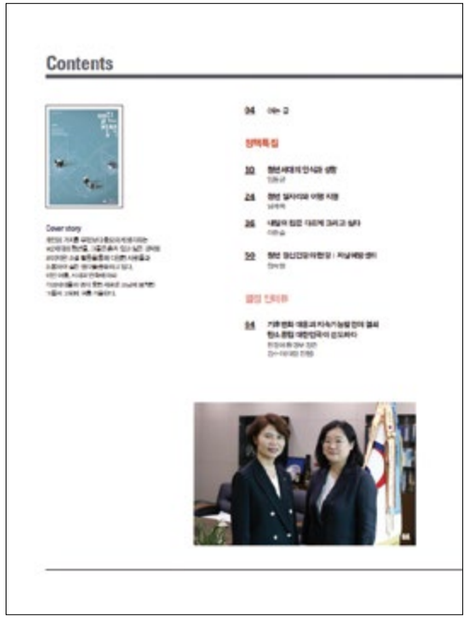
10) 제10호('21.6.발간)

제10호 '정책특집'은 MZ세대로 지칭되는 '청년세대'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청년들의 생각과 생활, 일자리와 건강에 주목했다. '열정인터뷰'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통해 탄소중립의 추진 상황과 P4G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국정과제광장'에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100대 국정과제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으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를 짚어보았다.

'쟁점토론'에서는 모병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국방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았으며, '현장과 시선'에서는 시민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연속기획'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었다.

〈열린정책 제10호 목차〉


Contents

04 여는 글

정책특집

10 청년 세대의 인식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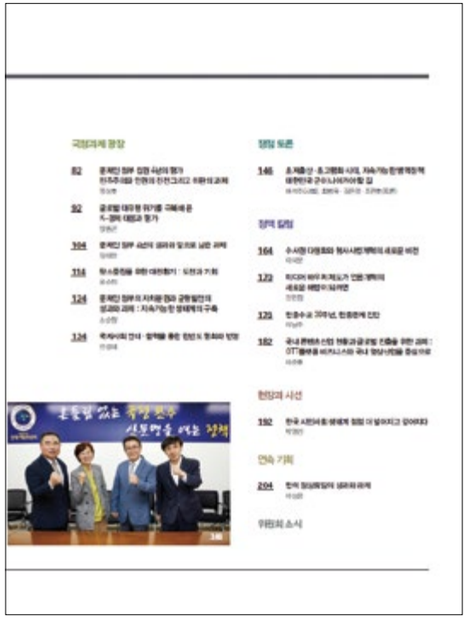
24 청년 일자리와 이행 지원

36 내일을 위한 디지털 그리고 일자리

50 청년 정신건강위원장 : 지남배움 센터

열정 인터뷰

64 기본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열쇠 청소 환경 개발인재의 성장과제


국정과제 광장

82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평가 한국주식을 진행과 진전그리고 우환 의 교육

92 글로벌 대유행 위기를 극복해온 K-정부 대응과 평가

104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114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기 : 도전과 기회

124 문재인 정부의 지속발전과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 : 지속가능한 성장체제 구축

134 국제사회 연대 ·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방향

정점 토론

146 초저출산 · 초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체제 대한민국 균형나라의 방향 길

정책 집합

164 수사권 다원화와 형사사법 체제의 새로운 비전

172 지도자 바우 최재도가 인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려면

178 한중수교 30주년, 한중관계 진단

182 국내 콘텐츠 산업 현황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과제 : OTT플랫폼 비즈니스와 국내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현장과 시선

192 한국 시민의 동성애에 대한 더 넓어지고 깊어지다

연속 기획

204 한국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위원회 소식

〈열린정책 제11호 목차〉


Contents

04 여는 글

정책특집

10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의 정부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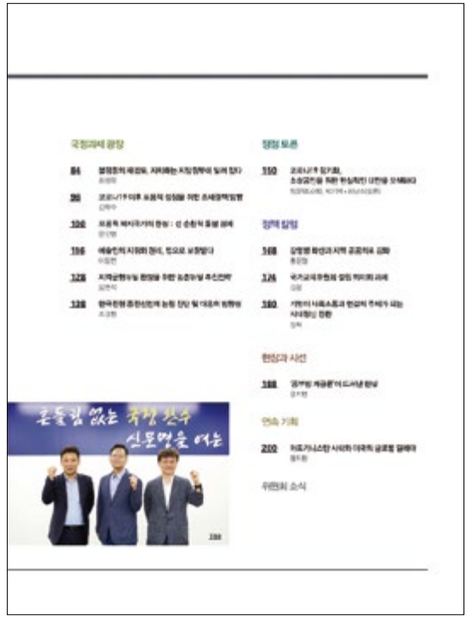
22 지방자치경찰 시스템 현재, 무엇이 달라졌나

36 지방투표 제도의 변화와 과제

50 지방교육자치 70년의 성과와 과제

열정 인터뷰

68 국제질서 인도주의적 구출 개인 이끌어가는 미래교육 인물들의 인생여정


국정과제 광장

84 불평등의 해결점, 지역혁신 지방정부의 일과 정치

98 코로나19 이후 보편적 정책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106 보훈적 예우의 기준 : 신 순환 적 통합 관계

116 예술인의 지원의 정석, 핵심은 보장입니다

128 지역균형뉴딜 현장을 위한 효율성 및 주민참여

138 한국정책 종합선진국에 능동 진입 및 대응의 방향성

정점 토론

150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인 대안을 모색해야

정점과 사선

168 갈등별 확산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

174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찬반의 과제

180 기본이 사회스포츠 한걸음씩 주체가 되는 사회체육 정책

현장과 사선

188 경부발 재생분석 도시냐 분당

연속 기획

200 차로가스산업 시대의 대응적 글로벌 협력과

위원회 소식

11) 제11호('21.9.발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제11호의 '정책특집' 주제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로 선정하였다.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는 논의를 담았다.

'열정인터뷰'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의 주역인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을 인터뷰하였다. 실현하기 어려운 작전의 성공요인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쟁점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주제로 하였으며, '현장과 시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년'과 '공정'의 이슈를 다루었다. '연속기획'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와 변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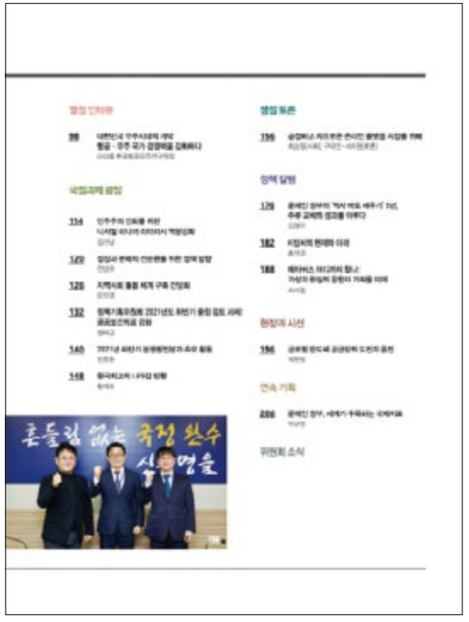
12) 제12호('21.12.발간)

제12호 '정책특집'에는 2021년 국가비전회의에서 발표된 최재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강연과 함께 '세계와 공정의 미래',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 '조화로운 세계와 협력의 미래' 등 3개 세션의 발표 내용을 담았다. '열정인터뷰'에서는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을 만나서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과 앞으로 진행될 미래를 짚어보았다.

'국정과제광장'에서는 각 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고, '쟁점토론'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책칼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로잡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루었다.

〈열린정책 제12호 목차〉


Contents



13) 제13호('22.3.발간)

열린정책 제13호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집호로 '정책특집'에서는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언론 개혁과 균형발전, 저출생 문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했던 정책들과 함께 한국판 뉴딜과 세대 젠더 갈등 그리고 군 개혁과 같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담았다.

'열정 인터뷰'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과 지난 5년 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았고, '좌담회'에서는 6개 분과위원장, 그리고 미래정책연구단장과 국정과제지원단장이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칼럼'은 대통령 선거와 언론, 행정기구 개혁을 위한 제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글이 투고되었고, '현장과 시선'에서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문제를 다루었다. '연속기획'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중심으로 세계 상황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4.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

가. 추진 개요

그동안 추진해 오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대전환에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획기적으로 '진화'해 나가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 :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기획하였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지역 대토론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 계각층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나. 개최 성과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지역 대토론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해당 지역의 시도 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정과제협의회 위원회, 한국판 뉴딜 주관 부처, 지역대학, 지역 연구기관, 지역 언론사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은 2020년 11월 광주·전남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까지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전북, 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총 6개 권역에서 6회 개최되었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 포스터〉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 개최 실적〉

구분	일시	지역/장소	주최/주관
1차	’20.11.10.~11.	광주·전남 (5.18기념문화센터)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2차	’20.11.25.~26.	대전·세종·충남 (한국철도공사)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3차	’21.4.8.~9.	대구·경북 (경북도청)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안동시 (주관) 대구경북연구원
4차	’21.5.20.	전북 (전북도청)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라북도 (주관) 전북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차	’21.6.22.~23.	강원 (춘천시청)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원도, 춘천시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강원연구원
6차	’21.11.10.~11.	부산·울산·경남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광주전남 대토론

2020년에는 첫 토론회로서 2020년 11월 10일~11일 동안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광주·전남 대토론’을 개최하였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기조발제(주제 :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적 전환의 비전과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개념, 구성 및 전환의 수준과 방향, 그리고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고, 지역기반 전략, 사회적 대화 기반 전략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특별강연을 맡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디지털 뉴딜’을 주제로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음을 설명하고, 디지털 뉴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발제 및 토론은 ‘한국판 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K-방역, 지역 경제의 길을 찾다’,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광주·전남 토론회 사진〉









2)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전세종충남 대토론

광주·전남 대토론에 이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의 기조발제(주제 :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를 시작으로 대전·세종·충남에서 두 번째 대토론(2020년 11월 25~26일)이 개최되었다.

특별강연을 맡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과 전략을 소개하고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발제와 토론은 '한국판 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K-방역, 지역 경제의 길을 찾다',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세션으로 구성·진행되었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전·세종·충남 토론회 사진〉









3)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

2021년 세 번째 대토론(2021년 4월 8~9일)은 대구·경북에서 개최되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수소경제의 중요성, 세계 동향 등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과 발제는 '한국판 뉴딜과 새마을 운동',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세션으로 구성·진행되었다.

특히 대구경북 대토론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 염홍철)가 '한국판뉴딜 지역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지고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한국판뉴딜의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토론회 사진〉









4)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

2021년 네 번째 대토론(2021년 5월 20일)은 전북에서 개최되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균형뉴딜로 한국판 뉴딜을 진화·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배경과 추진전략, 지역균형뉴딜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발제와 토론은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세션으로 구성·진행되었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토론회 사진〉









5)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강원 대토론

다섯 번째 경청·공감 대토론(2021년 6월 22~23일)은 강원도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맡은 강현수 한국국토연구원장은 지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뉴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와 토론은 '한국판 뉴딜과 그린에너지', '한국판 뉴딜과 평화·생명경제',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지역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세션으로 구성·진행되었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강원 토론회 사진〉







6)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부울경 대토론

2021년 마지막 경청·공감 대토론은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최되었다(2021년 11월 10~11일).

부울경 대토론은 한국판 뉴딜 시행 1주년, 한국판 뉴딜 2.0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1.0의 성과와 2.0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로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과 지역경제,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부울경 토론회 사진〉











다. 지역 간담회 개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지역대토론 행사기간 동안 한국판 뉴딜의 발전과 진화, 지역으로의 확산, 가치 공유를 위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공공기관장, 학계(대학총장단), 언론사 및 기자단, 지역상공인, 지역 노사민 단체, 지역 새마을운동 지도자, 지역 국정자문단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 주요 권역별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으로의 확산과 가치를 공유, 한국판뉴딜의 지역에서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회 지역간담회 개최 실적〉

구분	지역	일시	내용
1	광주·전남	’20.11.9.~11.12.	ㅇ 지역학계 간담회 - 광주전남 학계 간담회, 광주전남 대학총장 간담회 ㅇ 지역기자단 간담회 ㅇ 지역상공인 간담회 ㅇ 지역공공기관장 간담회 ㅇ 지역 노사민 간담회
2	대전·세종·충남	’20.11.25.~11.26.	ㅇ 지역학계 간담회 ㅇ 지역 언론 간담회 - 대전세종충남 기자단 간담회, KBS대전 총국장 면담 ㅇ 노사정 간담회 ㅇ 지자체장 면담 - 대전광역시장, 충남지사, 세종특별시장 ㅇ 공공기관장 면담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코레일사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3	대구·경북	’21.4.7.~4.8.	ㅇ 지역학계 간담회 - 안동대학교 총장 면담, 대구경북 대학총장 간담회 ㅇ 대구지역 및 경북지역 언론사 간담회 ㅇ 한국가스공사 사장 면담 ㅇ 대구광역시장 면담 ㅇ 전국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ㅇ 한국판뉴딜 대구경북지역 국정자문단 간담회
4	전북	’21.5.20.~5.21.	ㅇ 지역학계 간담회 - 전주대학교 총장 면담, 전북지역대학 총장 간담회 ㅇ 전북지역 언론사 간담회 ㅇ 전북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ㅇ 한국판뉴딜 전북지역 국정자문단 간담회 ㅇ 공공기관 간담회(면담) - 전북지역 공공기관장 간담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면담 ㅇ 현장방문 : 새만금개발공사

구분	지역	일시	내용
5	강원	’21.6.21.~6.23.	ㅇ 강원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ㅇ 지역학계 간담회 - 강원대학교 총장 면담, 강원지역 대학총장 간담회 ㅇ 강원지역 언론사 간담회 ㅇ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ㅇ 한국판뉴딜 강원지역 국정자문단 간담회 ㅇ 강원 공공기관장 간담회 ㅇ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면담, 강원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간담회
6	부산·울산·경남	’21.11.9.~11.12.	ㅇ 지자체장 면담 - 울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ㅇ 지방의회 의장 면담 - 경남도의회 의장,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ㅇ 공공기관 간담회 - 경남지역 공공기관장, 울산지역 공공기관장, 부산지역 공공기관장 ㅇ 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 경남 지역혁신협의회, 울산 지역혁신협의회, 부산 지역혁신협의회 ㅇ 언론사 간담회 - 울산지역 언론사, 부산지역 언론사 ㅇ 학계 간담회 - 경남지역 대학총장, 울산지역 대학총장, 부산지역 대학총장 ㅇ 부울경 지역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ㅇ 부울경 지역 국정자문단 간담회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회 지역간담회 사진〉



광주전남 상공인 간담회(’20.11.11.)



대전광역시장 면담(’20.11.26.)



전국 새마을지도자 간담회(’21.4.8.)



전북지역 대학총장 간담회(’21.5.21.)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21.6.21.)



경남지역 공공기관장 간담회(’21.11.9.)

라. 지역기반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자문단 출범 및 지자체 협약

1) 지역자문단 출범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 행사기간 동안 지역에서의 한국판 뉴딜의 확

산과 가치 공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 지역별 '한국판 뉴딜 지역자문단'이 출범하였다.

지역자문단은 지역에 기반을 둔 대학 교수, 국책연구원 연구자, 대기업 및 중소기업가, 법조계(변호사 등), 의료계 인사, 정치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에서의 한국판 뉴딜 확산 및 의견수렴 활동, 분야별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 지역 관련 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 소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자문단은 대구경북 지역자문단 출범('21.4.8.)을 시작으로 전북 지역자문단('21.5.20.), 강원 지역자문단('21.6.22.), 부울경 지역자문단('21.11.10.)이 출범하였다.

〈지역자문단 출범식 사진〉



대구경북 지역자문단 출범식('21.4,8.)



전북 지역자문단 출범식('21.5,20.)



강원 지역자문단 출범 및 간담회('21.6.22.)



부울경 지역자문단 출범 및 간담회('21.11.10.)

2) 지방자치단체 협약식 개최

정책기획위원회는 지역자문단이 '한국판 뉴딜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지역균형 뉴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으로 정책기획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의 주요 뉴딜 사업 육성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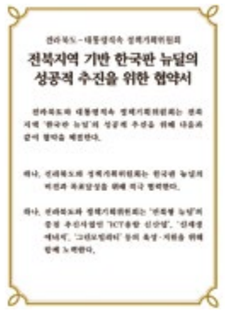
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역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역자문단은 한국판 뉴딜의 지역으로의 확산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활동,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관련 기관과의 정책교류와 협력 소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의 협약식에서 협약 당사자들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초광역지역 시대를 위한 초광역교통망 구축, 초광역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 구축, 초광역 단위 미래 전략 사업 육성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협약식 사진 및 협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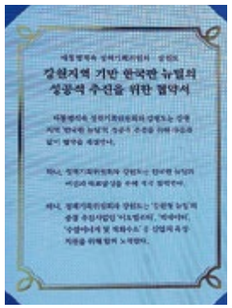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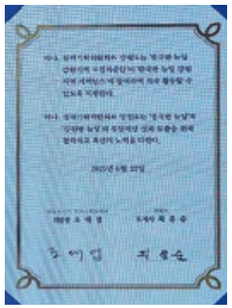

전라북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북지역 기반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
2021년 05월 20일
전라북도
도지사 송 하 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 대 엽



정책위-전북 '전북지역 기반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21.5.20.)




강원지역 기반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



정책위-강원 '강원지역 기반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21.6.22.)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협약서
2021년 11월 10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 대 엽
부산광역시
시장 박 형 준
울산광역시
시장 송 철 호
경상남도
도지사 한정애 박 명 성



정책위-부울경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협약' 체결('21.11.10.)

5.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가. 추진 개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공유하고,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의 국정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확산하며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장이자, 한국판 뉴딜의 국정자문단 활동의 중심축이자, 국정자문단의 소통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기획하였다. 현자들의 지혜를 모은다는 '집현(集賢)'의 의미를 살려 한국판 뉴딜 등 국정 공론의 광장으로서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으로 명명하였다.

나. 개최 성과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2021년 3월 3일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91개 기관 10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 및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현황〉

구분	주제	일시	장소
1차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	'21.3.3.	백범김구기념관
2차	수소경제, 한국판 뉴딜을 이끌다	'21.4.22.	백범김구기념관
3차	모병제 :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21.6.3.	한국국방연구원
4차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말하다 : 청년과 정의	'21.9.15.	페럼타워 페럼홀
5차	지역균형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21.10.26.	한국행정연구원
6차	공공보건의료체계 선진화	'21.12.1.	뱅커스클럽
7차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21.12.15.	한국행정연구원

1) 1차 집현포럼

1차 집현포럼은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의 주제로 2개의 특별강연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강연을 맡은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제24기 회장은 '새마을운동과 생명평화사상'을 주제로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와 대전환시기에 근면, 자조, 협동으로 생명, 평화, 공경의 새 세상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2강연을 맡은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한국판 뉴딜과 새마을 운동의 결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최진봉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박기관 상지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교수, 임경수 성결대 명예교수,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나미 부산광역시 새마을회 부녀회장, 한정국 새마을운동 중앙회 생활과학기술 부장이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제1차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사진〉











2) 2차 집현포럼

2차 집현포럼은 '수소경제, 한국판 뉴딜을 이끌다'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3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주제 :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을 맡은 김연희 BCG 대표파트너는 수소 기반 그린뉴딜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수소 비전제시, 수요 성장 정책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발표를 맡은 박영순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장은 수소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수소생산, 수소 인프라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발표를 맡은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소모빌리티 정책의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3발표를 맡은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연구본부장은 수소모빌리티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수 건국대 교수,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이제명 부산대 교수가 수소산업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제2차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사진〉











3) 3차 집현포럼

3차 집현포럼은 '모병제 :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3개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발표는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미래 국방환경과 병력운영을 전망하고 향후 병력운영 방향을 제언했다. 2발표는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가 군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병역제도 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3발표를 맡은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는 시민 사회와 연계한 거버넌스를 통한 병역문제 논의 필요 등 우리나라의 내실있는 모병제 논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남훈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여석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문장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주성 청주대학교 객원교수가 토론하였다.

〈제3차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사진〉









4) 4차 집현포럼

4차 집현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말하다 : 청년과 정의'를 주제로 2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주제인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김도균 서울대 교수는 공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며, 불평등한 현실 구조의 관점에서 불공정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장은 우리사회 공정성과 불평등, 신뢰의 문제를 사회통합조사와 세계가치조사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2주제인 '보이지 않는 청년과 외면하는 세상'에 대해 허태준 저자는 우리사회의 청년노동자의 지위, 소외 등 청년노동자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였고, 김지민 고양시 다문화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 다문화 청년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좌장을 맡아 장경태 국회의원, 임동균 서울대 교수,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대한민국과 청년'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제4차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사진〉











5) 5차 집현포럼

5차 집현포럼은 '지역균형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2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주제인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방향'에 대해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균형정책의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뉴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주제인 '지역균형뉴딜과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진종헌 정책기획위원회 초광역권 구상과 전략을 설명하고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권 전략, 초광역 기반 혁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그 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소개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균형뉴딜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곽채기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경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담당관, 이기원 한림대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수연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이 '지역균형 뉴딜과 균형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제5차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사진〉











6) 6차 집현포럼

6차 집현포럼은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 후, 2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국 공공의료의 기원,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1주제인 '공공의료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하고 공공의료 거버넌스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병원의 의료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향후 정책변화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2주제인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향'에 대해 임승관 안성병원장은 공공병원의 양적,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강화, 회복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장숙랑 중앙대 교수는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의 정책 흐름과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건세 건국대 교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조희숙 강원대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변진경 시사인 사회팀장이 '공공의료 뉴딜 추진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변화'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제6차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사진〉










7) 7차 집현포럼

7차 집현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4개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1발제를 맡은 정상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부위원장이 촛불의 제도화와 시민주권 시대를 개막한 문재인 정부문재인 정부의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2발제를 맡은 임도빈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평가하고, 민주적 관료통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발제를 맡은 이국은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이 민주적 공고화의 관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살펴보고 과제를 제안하였다. 4발제를 맡은 하상응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성찰을 통해서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선혁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선남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제7차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사진〉











6. 아하TV 운영

소통과 홍보의 패러다임이 활자 중심의 읽는 시대에서 동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보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게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총괄하는 선임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튜브채널 아하TV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국민이 만족하는 좋은 정책과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아하, 정부정책이 이렇구나.”하는 의미를 담아 채널명을 결정하였다. 첫 번째 영상은 코로나19로 위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에서 의료진과 봉사자,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활동 중심으로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현재까지 90여 편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국정과제위원회를 대표하는 홍보와 소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아하TV 유튜브 업로드 현황〉

순번	제목	조회수	좋아요	댓글	위원회	날짜
1	대구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3,890	481	141	정책기획 위원회	’20.3.3.
2	국민덕분에 #ThanksTo the people	17,661	225	171	정책기획 위원회	’20.6.4.
3	대한민국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2,282	300	330	일자리 위원회	’20.6.12.
4	위험사회, 미래교육의 방향은?	7,127	165	13	국가교육 회의	’20.6.18.
5	정은경 본부장 단독인터뷰 “전 세계가 주목한 K-방역”	39,442	684	341	정책기획 위원회	’20.6.29.
6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2,398	9	1	4차산업 혁명위원회	’20.8.10.
7	균형발전의 거점 혁신 도시	11,691	36	7	균형발전 위원회	’20.8.12.
8	21세기 대한민국 총.균.쇠	66,329	528	298	정책기획 위원회	’20.8.18.
9	먹거리를 부탁해	6,414	107	4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9.7.

순번	제목	조회수	좋아요	댓글	위원회	날짜
10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소득주도 성장정책 성과	5,497	67	24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20.9.15.
11	미래교육 질문 있습니다 1교시 “라떼는 말야”	2,692	96	14	국가교육 위원회	’20.9.28.
12	미래교육 질문 있습니다 2교시 “지금은 말야”	1,874	75	9	국가교육 위원회	’20.9.28.
13	미래교육 질문 있습니다 3교시 “미래는 말야”	2,571	73	12	국가교육 위원회	’20.9.28.
14	PCAD-OECD Conference 2020(English)	5,634	16	1	자치분권 위원회	’20.10.27.
15	2020 자치분권위원회 - OECD 컨퍼런스 (한국어)	1,524	205	14	자치분권 위원회	’20.10.27.
16	2020 자치분권위원회 - OECD 컨퍼런스 (한국어, 2일차)	6,945	122	16	자치분권 위원회	’20.10.29.
17	PCAD-OECD Conference 2020(English, Day2)	6,411	3	0	자치분권 위원회	’20.10.29.
18	2020 북방포럼 홍보영상	224	14	1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20.10.30.
19	정의로운 전환 세계선도 국가 “한국판 뉴딜”	54,899	396	262	정책기획 위원회	’20.11.21.
20	새뜰마을 사업, 그 후 5년	11,813	11	20	균형발전 위원회	’20.11.30.
21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	781	22	0	일자리 위원회	’20.12.2.
22	할머니가 함박웃음 짓게 된 사연은?(feat. 노인일자리사업)	138,559	24	8	일자리 위원회	’20.12.7.
23	202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1,174	23	1	일자리 위원회	’20.12.9.
24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2020 대국민 보고대회’홍보영상	196	6	0	국가교육 회의	’20.12.10.
25	[EP.1 엄마 편 - 엄마는 처음이라서] 의료데이터 통합· 활용 플랫폼 ‘마이헬스웨이’홍보 영상_4차 산업혁명위원회	1,690	425	282	4차산업혁명 위원회	’20.12.14.
26	[EP.2 부모님 편 - 72세는 처음이라서] 의료데이터 통합·활용 플랫폼 ‘마이헬스웨이’ 홍보 영상_4차 산업혁명위원회	1,609	448	227	4차산업혁명 위원회	’20.12.14.
27	2020 제2회 북방포럼 스케치영상	159	17	0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20.12.21.
28	2020 북방포럼 하이라이트	201	20	1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20.12.21.
29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 상생형 지역일자리 홍보영상	3,519	21	5	일자리위원회	’20.12.24.
30	국가먹거리종합전략	197	13	4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20.12.31.
31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가치 캠페인	236	27	5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12.31.
32	부산시 아미동, 산꼭대기 마을이 달라졌어요	81,108	118	106	자치분권 위원회	’21.1.4.
33	충청남도 보령시에 미친(美親) 마을이 있다?	86,706	114	107	자치분권 위원회	’21.1.4.
34	서울시 양천구의 나비(非)남, 날개를 펼치다!	82,659	105	106	자치분권 위원회	’21.1.4.
35	국정과제협의회 산학융합지구 기업편	6,344	6	2	균형발전 위원회	’21.1.6.
36	국정과제협의회 산학융합지구 학교편	6,277	5	0	균형발전 위원회	’21.1.6.
37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고령정책	21,695	4	1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21.1.19.
38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청년정책	16,905	9	2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21.1.19.

순번	제목	조회수	좋아요	댓글	위원회	날짜
39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성평등정책	21,351	9	15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21.1.19.
40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유튜브 영아기부모정책	20,437	14	7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	’21.1.19.
41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비밀 -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	12,659	12	6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21.2.22.
42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나타난 사람	사회서비스 확대	63,315	482	417	일자리 위원회	’21.2.22.
4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2주년 기념 -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 730일의 여정	10,724	22	3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21.5.12.
44	찾아가는 토크택시_전북 진안군편	12,720	7	0	균형발전 위원회	’21.5.17.
45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	81,085	531	415	정책기획 위원회	’21.5.26.
46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해, 신북방정책	3,732	131	12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1.6.10.
47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	61,677	179	197	자치분권 위원회	’21.6.16.
48	찾아가는 희망토크택시, 강원 원주시편	18,545	5	0	균형발전 위원회	’21.6.25.
49	데이터 사피엔스 1호! 요즘해녀의 특별한 데이터 활용법	664	243	271	4차산업혁명위원회	’21.7.5.
50	Inclusive Korea 2021,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 스케치 영상	1,791	115	82	정책기획 위원회	’21.8.12.
51	웹드라마 : 같이 이겨나가요!	2,161	196	203	일자리 위원회	’21.8.28.
52	찾아가는 토크박스 토크택시_ 경남진주시편	15,253	9	4	균형발전 위원회	’21.9.6.
53	「친절한정책사용설명서」 한국판 뉴딜 : 그린뉴딜 - 탄소중립편	19,730	216	244	정책기획 위원회	’21.9.10.
54	북방키친, 맛있는 신북방정책 토크	3,592	127	13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1.9.30.
55	자치경찰제 100일 현장을 말하다	47,202	155	150	자치분권 위원회	’21.10.8.
56	제4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1,137	149	0	일자리 위원회	’21.10.14.
57	2021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1,630	173	0	일자리 위원회	’21.10.15.
58	‘안동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한 이유는?(feat.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19,352	524	478	일자리 위원회	’21.10.22.
59	국가교육회의 OX퀴즈~	3,952	131	176	국가교육 위원회	’21.10.27.
6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주년 성과	37,524	12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10.27.
61	돌아보니 나를 자라게 한 손이 있었다	39,710	9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10.27.
62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4년의 변화’	6,390	47	41	균형발전 위원회	’21.11.7.
63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은 어떻게 한 걸까? feat.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141,295	280	208	일자리 위원회	’21.11.12.
64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민참여 2022 개정 교육과정	219	6	2	국가교육회의	’21.11.19.
65	교육과정 개정 사회적 협의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3,201	105	164	국가교육회의	’21.11.22.
66	제3차 북방포럼 오프닝 영상	199	13	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1.11.25.
67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홍보영상	2,350,499	21	0	일자리 위원회	’21.12.3.

순번	제목	조회수	좋아요	댓글	위원회	날짜
68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표창 시상식	318	7	0	일자리 위원회	’21.12.07.
69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_ 오키드룸	1,194	83	1	일자리 위원회	’21.12.08.
70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_ 소연회장(코스모스+바이올렛)	434	12	1	일자리 위원회	’21.12.08.
71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356,073	882	66	일자리 위원회	’21.12.20.
72	터닝 포인트	1,631	19	1	소득주도 성장특별 위원회	’21.12.22.
73	농특위정책 E02 농촌소멸	3,333	72	4	농어업 농어촌특별 위원회	’21.12.24.
74	우리 마을 주민자치 이야기,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	51,843	209	202	자치분권 위원회	’21.12.24.
7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후 ‘안산 안심돌봄주택’	123,222	9	4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21.12.27.
76	대국민이 참견하는 4차산업혁명 「전지적 대국민 시점」	781	230	275	4차산업혁명위원회	’21.12.30.
77	바다로 간 쓰레기 - 플라스틱의 역습	2,379	40	3	농어업 농어촌특별 위원회	’22.1.5.
78	데이터로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 이야기	636	230	256	4차산업혁명위원회	’22.1.6.
79	지구를 위해, 탄소중립	206	23	5	농어업 농어촌특별 위원회	’22.1.28.
80	우리가 함께 그린(GREEN) 지구 (농업편)	220	23	4	농어업 농어촌특별 위원회	’22.1.28.
81	「친절한정책사용설명서」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 항공·우주산업편	2,500	90	82	정책기획 위원회	’22.2.7.
82	문재인 정부 5년의 여정 -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	65,254	280	272	정책기획 위원회	’22.2.16.
83	구해줘 지구! 숲이 주는 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림편)	204	25	4	농어업 농어촌특별 위원회	’22.2.18.
84	우리가 함께 그린(GREEN) 지구 (수산편)	208	27	8	농어업 농어촌특별 위원회	’22.2.18.
85	구해줘 지구!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축산편)	307	27	7	농어업 농어촌특별 위원회	’22.2.18.
86	문재인 정부 5년의 여정 -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입법성과	73,077	181	143	정책기획 위원회	’22.3.3.
87	문재인 정부 5년의 여정 -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지표	56,738	256	213	정책기획 위원회	’22.3.17.
88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주년 기념 '자치분권 대토론회'	5,505	8	0	자치분권 위원회	’22.3.31.
89	조동혁이 알려준다! -자치분권 6법-	41,599	175	175	자치분권 위원회	’22.4.5.
90	국가교육회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열다	346	39	14	국가교육 회의	’22.4.12.

〈아하TV 영상별 썸네일〉



[아하TV] 대구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 '20.3.3.)



[아하TV] 국민덕분에 #ThanksTo the people
(정책기획위원회 / '20.6.4.)



[아하TV] 대한민국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 '20.6.12.)



[아하TV] 위험사회, 미래교육의 방향은?
(국가교육회의 / '20.6.18.)



[아하TV] 정은경 본부장 단독인터뷰 "전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정책기획위원회 / '20.6.29.)



[아하TV]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4차산업혁명위원회 / '20.8.10.)



[아하TV] 균형발전의 거점 혁신도시
(균형발전위원회 / '20.8.12.)



[아하TV] 21세기 대한민국 총.균.쇠
(정책기획위원회 / '20.8.18.)



[아하TV] 먹거리를 부탁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0.9.7.)



[아하TV]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소득주도 성장정책 성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20.9.15.)



[아하TV] 미래교육 질문 있습니다 1교시 "라떼는 말야"
(국가교육위원회 / '20.9.28.)



[아하TV] 미래교육 질문 있습니다 2교시 "지금은 말야"
(국가교육위원회 / '20.9.28.)



[아하TV] 미래교육 질문 있습니다 3교시 "미래는 말야"
(국가교육위원회 / '20.9.28.)



[아하TV] 2020 북방포럼 홍보영상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0.10.30.)



[아하TV] 정의로운 전환 세계선도 국가 "한국판 뉴딜"
(정책기획위원회 / '20.11.21.)



[아하TV] 새뜰마을 사업, 그 후 5년
(균형발전위원회 / '20.11.30.)



[아하TV]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
(일자리위원회 / '20.12.2.)



[아하TV] 할머니가 함박웃음 짓게 된 사연은?
(feat.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위원회 / '20.12.7.)



[LIVE] 202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일자리위원회 / '20.12.9.)



[아하TV] [EP.1 엄마 편 - 엄마는 처음이라서] 의료데이터 통합·활용 플랫폼 '마이헬스웨이' 홍보 영상_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위원회 / '20.12.14.)



[EP.2 부모님 편 - 72세는 처음이라서] 의료데이터 통합·활용 플랫폼 '마이헬스웨이' 홍보 영상_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 '20.12.14.)



[아하TV] 2020 제2회 북방포럼 스케치영상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0.12.21.)



[아하TV] 2020 북방포럼 하이라이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0.12.21.)



[아하TV]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
상생형 지역일자리 홍보영상
(일자리위원회 / '20.12.24.)



[아하TV] 국가먹거리종합전략
(국가먹거리종합전략 / '20.12.31.)



[아하TV]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가치 캠페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0.12.31.)



[아하TV] 부산시 아미동, 산꼭대기 마을이 달라졌어요
(자치분권위원회 / '21.1.4.)



[아하TV] 충청남도 보령시에 미친(美親) 마을이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21.1.4.)



[아하TV] 서울시 양천구의 나비(非)남, 날개를 펼치다!
(자치분권위원회 / '21.1.4.)



[아하TV] 국정과제협의회 산학융합지구 기업편
(균형발전위원회 / '21.1.6.)



[아하TV] 국정과제협의회 산학융합지구 학교편
(균형발전위원회 / '21.1.6.)



[아하TV]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고령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 '21.1.19.)



[아하TV]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청년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 '21.1.19.)



[아하TV]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성평등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 '21.1.19.)



[아하TV]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유튜브 영아기부모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 '21.1.19.)



[아하TV]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비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1.2.22.)



[아하TV]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나타난 사람 |
사회서비스 확대
(일자리위원회 / '21.2.22.)



[아하TV]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2주년 기념
-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 730일의 여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1.5.12.)



[아하TV] 찾아가는 토크택시_전북 진안군편
(균형발전위원회 / '21.5.17.)



[아하TV]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
(정책기획위원회 / '21.5.26.)



[아하TV]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해, 신북방정책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1.6.10.)



[아하TV]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2.0시대
(자치분권위원회 / '21.6.16.)



[아하TV] 찾아가는 희망토크택시, 강원 원주시편
(균형발전위원회 / '21.6.25.)



[아하TV] 데이터 사피엔스 1호!
요즘해녀의 특별한 데이터 활용법
(4차산업혁명위원회 / '21.7.5.)



[아하TV] Inclusive Korea 2021,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 스케치 영상
(정책기획위원회 / '21.8.12.)



[아하TV] 웹드라마 : 같이 이겨나가요!
(일자리위원회 / '21.8.28.)



[아하TV] 찾아가는 토크박스 토크택시_경남진주시편
(균형발전위원회 / '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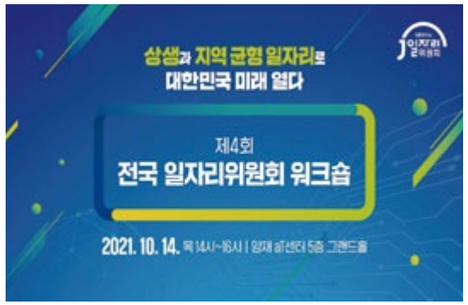
[아하TV] 「친절한정책사용설명서」 한국판 뉴딜 : 그린뉴딜 - 탄소중립편
(정책기획위원회 / '21.9.10.)



[아하TV] 북방키친, 맛있는 신북방정책 토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1.9.30.)



[아하TV] 자치경찰제 100일 현장을 말하다
(자치분권위원회 / '21.10.8.)



[LIVE] 제4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
(일자리위원회 / '21.10.14.)



[LIVE] 2021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일자리위원회 / '21.10.15.)



[아하TV] '안동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한 이유는?
(feat.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일자리위원회 / '21.10.22.)



[아하TV] 국가교육회의 OX퀴즈~
(국가교육위원회 / '21.10.27.)



[아하TV]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주년 성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1.10.27.)



[아하TV] 돌아보니 나를 자라게 한 손이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1.10.27.)



[아하TV]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4년의 변화'
(균형발전위원회 / '21.11. 7.)



[아하TV]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은 어떻게 한 걸까? feat.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일자리위원회 / '21.11.12.)



[아하TV]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민참여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교육회의 / '21.11.19.)



[아하TV] 교육과정 개정 사회적 협의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국가교육회의 / '21.11.22.)



[아하TV] 제3차 북방포럼 오프닝 영상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21.11.25.)



[아하TV]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홍보영상
(일자리위원회 / '21.12.3.)



[아하TV] 터닝 포인트
(국정과제협의회 / '21.12.22.)



[아하TV]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후 '안산 안심돌봄주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1.12.27.)



[아하TV] 데이터로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 이야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 '22.1.6.)



[세바시X일자리위]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일자리위원회 / '21.12.20.)



[아하TV] 농특위정책 E02 농촌소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1.12.24.)



[아하TV] 우리 마을 주민자치 이야기,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
(자치분권위원회 / '21.12.24.)



[아하TV] 대국민이 참견하는 4차산업혁명「전지적 대국민 시점」
(4차산업혁명위원회 / '21.12.30.)



[아하TV] 바다로 간 쓰레기 - 플라스틱의 역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2.1.5.)



[아하TV] 지구를 위해, 탄소중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1.1.28.)



[아하TV] 우리가 함께 그린(GREEN) 지구(농업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2.1.28.)



[아하TV] 「친절한정책사용설명서」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 항공·우주산업편
(정책기획위원회 / '22.2.7.)



[아하TV] 문재인 정부 5년의 여정 -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
(정책기획위원회 / '22.2.16.)



[아하TV] 구해줘 지구! 숲이 주는 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림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2.2.18.)



[아하TV] 우리가 함께 그린(GREEN) 지구(수산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2.2.18.)



[아하TV] 구해줘 지구!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축산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22.2.18.)



[아하TV] 문재인 정부 5년의 여정 -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입법성과
(정책기획위원회 / '22.3.3.)



[아하TV] 문재인 정부 5년의 여정 -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지표
(정책기획위원회 / '22.3.17.)



[Live]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 "자치분권 대토론회"
(자치분권위원회 / '22.3.31.)



[아하TV] 조동혁이 알려준다!-자치분권 6법
(자치분권위원회 / '22.4.5.)



[아하TV] 국가교육회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열다(결산영상)
(국가교육위원회 / '22.4.12.)

3 분과위원회

제1절 | 국민주권분과 **298**

1. 개요 및 구성 298
2. 주요 활동 300

제2절 | 국민성장분과 **317**

1. 개요 및 구성 317
2. 주요 활동 322

제3절 | 포용사회분과 **335**

1. 개요 및 구성 335
2. 주요 활동 338

제4절 | 지속가능사회분과 **352**

1. 개요 및 구성 352
2. 주요 활동 357

제5절 | 분권발전분과 **382**

1. 개요 및 구성 382
2. 주요 활동 385

제6절 | 평화번영분과 **399**

1. 개요 및 구성 399
2. 주요 활동 403

제1절 국민주권분과

1. 개요 및 구성

가. 개요

국민주권분과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모두가 국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공론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정운영 혁신 구현을 목표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시스템 구축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및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나. 구성

국민주권분과는 법학, 정치·행정, 언론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정책위 출범당시에는 '권력기관 개혁 소분과', '민주주의 소분과', '소통·투명정부' 등 3개 소분과 체제로 조직되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목표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정치·행정 분야 15대 국정과제를 담당하였다.

한편, 2020년 1월 정책기획위원회 제2기 활동이 시작되면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 국민 참여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국민주권 분과와 분권·발전 분과가 통합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주권 분과 내 '권력기관 개혁 소분과', '민주주의

소분과' 및 '분권·발전 소분과'의 3개 소분과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권력기관 개혁 소분과에서는 5개의 국정과제를,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10개의 국정과제를, 분권·발전 소분과에서는 11개의 국정과제를 각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분과위 내 심도 있는 논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분야가 다소 이질적이었던 국민주권 분과와 분권 발전 분과가 다시 분리되면서 국민주권 분과는 '권력기관개혁 소분과'와 '민주주의 소분과' 2개 소분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각 시기별 분과 위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민주권분과 위원 현황〉

구분	위원 현황
1기 ('17~'19)	김인회 (위원장), 김남준, 김정인, 김지미, 서복경, 서유경, 유남영, 이석범, 이소영, 이원태, 이윤석, 이재원, 임지봉, 임채원, 정상호, 정태호, 최민희, 최현선
2기 ('20~'22)	<국민주권, 분권발전 통합 운영> 소순창 (위원장), 정상호(부위원장), 최민희(부위원장), 곽채기, 김선남, 김선혁, 김수연, 김양현, 김정인, 김종철, 김훈규, 박태균, 서유경, 오현석, 원준호, 윤태범, 이국운, 이석범, 이　진, 진민정, 진종헌, 최정묵, 하상응
	<국민주권, 분권발전 분리 운영> 김선혁 (위원장), 정상호(부위원장), 최민희(부위원장), 김선남, 김양현, 김정인, 김종철, 박태균, 서유경, 원준호, 이국운, 이석범 ('21.7.사임), 진민정, 최정묵, 최진봉, 하상응

2. 주요 활동

가. 전체회의 개최

국민주권 분과는 2018년 1월 4일(목) 정책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민주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위원 등 11명이 참석하여 분과위원회와 소분과 활동계획, 국정과제 누락사항 반영 검토, 타분과 과제 참여 조정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이후로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전체회의가 개최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가 이뤄졌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 40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2019년 상반기 정책기획위 워크숍 모습 (2019년 1월 17일(목)~1월 18일(금))〉



〈연도별 분과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개최수	주요 논의내용
’18	14	○ 국정과제 관리와 정책기획위원회 역할 정립 ○ 소분과 및 위원별 과제 배분 ○ 분과위 및 소분과 활동계획 논의 ○ 분기별 국정과제 점검 및 국정현안 보고 논의 ○ 국정과제 조정·보완 절차 논의 ○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 관련 논의 등
’19	7	○ 문재인 정부 2년 추진 성과 관련 자료 검토 ○ 소분과 운영 경과 및 향후 분과 운영계획 논의 ○ ‘정부혁신’ 용역과제 중간보고 ○ 20대 청년대책 논의 등
’20	7	○ 분과 통합에 따른 소분과 확정 ○ 위원별 소분과 배정 및 전담 국정과제 지정 ○ 국정과제 조정·보안 검토 ○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TF 운영 결과 보고 등
’21	12	○ 국정주요현안, 한국판 뉴딜 관련 분과 활동계획 등 논의 ○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 TF 결과 보고 ○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간담회 운영 경과 보고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TF 결과 보고 등
’22	4	○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단행본 발간 진행상황 공유 ○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백서 검토 등

〈2020년 4월 17일 제22차 국민주권 분과위 개최 사진〉



나. TF·간담회 등 주요활동

1) TF 활동

가) 개요

국민주권 분과는 자문위원회 성격에 맞게 정책방향 및 비전 정립, 담론 마련 등에서부터 국정과제 정책성과 및 미흡 과제의 점검에 이르기까지 TF를 운영하였다.

〈TF 활동 현황〉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반부패 개혁 TF (단장 : 이석범)	'18.12.12. ~'19.2.13.	14명 (내부 11, 외부 3)	○ 한국형 부패의 원인과 진단 ○ 권력형 부패와 생활형 부패의 개념과 패러다임 재정립 ○ 반부패 정책의 방향 제시
정책소통 TF (단장 : 최민희)	'19.6.11. ~'19.7.11.	8명 (내부 7, 외부 1)	○ 정책소통과 그 피드백 시스템, 운영철학 ○ 해외 국가의 정책소통 사례 비교 및 지자체 우수사례 연구 ○ 정책소통을 위한 개선점 및 대책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TF (단장 : 최현선)	'19.9.10. ~'19.11.11.	12명 (내부 6, 외부6)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사례 검토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논의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TF (단장 : 최민희)	'20.7.9. ~'20.9.3.	13명 (내부 7, 외부6)	○ 미디어 규제체계 점검 - 플랫폼 간 비수평적 규제체계 점검 - 융합컨텐츠 시대 규제완화 방안 점검 -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방안 모색 ○ 미디어 신뢰도 제고 방안 모색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 TF (단장 : 이국운)	'21.6.2. ~'21.8.7.	7명 (내부 3, 외부7)	○ 수사권 다원화 체제와 후속 개혁의 방향 ○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실태분석 ○ 수사기구 전문화의 방향 ○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 모색

나) 반부패 개혁 TF

2018년 12월 3일 권력기관 개혁 소분과에서는 당시 반부패 개혁 정책에 대하여 산발적, 비체계적, 단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진단하고 반부패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로 반부패 개혁 TF 활동을 착수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이행과제로 부정부패의 척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구성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패인식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으나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지수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상존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TF 팀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와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 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공감하였고,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이고 특징적인 부패인 고위공직자-재벌-법조계-언론 등 엘리트 집단으로 연결되는 카르텔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여 이에 맞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다고 판단하였다.

2018년 12월 12일 활동을 개시한 TF 팀의 논의 범위는, 국가기관·공공기관 부패문제, 법·제도적 개선성과, 반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점검, 향후 제도개혁 과제, 비제도적·문화적 개선 문제, 권력형 부패와 생활형 부패의 개념과 패러다임 재정립, 바람직한 반부패 정책의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하였다. 정책위원 11명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외부팀원이 모여 2019년 2월 13일까지 총 8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반부패 개혁 TF가 제시한 정책대안은 먼저, 엘리트 부패 카르텔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부 개혁 의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 취업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전관예우 목적의 보직관리(경력세탁) 현상에 대한 집중적 통제를 통해 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개선, 재취업심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퇴직 후 특정직의 재취업을 위한 보직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이 예상되는 최소 2년 전부터 순환보직을 제한하거나, 퇴직 시 직급이나 직위, 수행업무에 따라 퇴직 후 취업 양태가 달라지는 만큼 유형별로 취업제한 기간에 차별을 두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의 개선 및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엘리트 부패 카르텔의 구성 특성을 분석하고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윤리성을 강화해야 할 직군 또는 개인을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반부패 관점에서 적합한 사회적 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회피와 공직자 역량의 사회적 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고위공직자 및 엘리트 부패 카르텔 문제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적극 대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소수의 부처 및 관료들에게의 지나친 권한 집중화는 관료사회 전체의 소극행정의 원인이자 잠재적 부패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부처간 권한 분산 및 균형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감독 규정 또한 완화하여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시·도의 자율적인 수평적 조정방안 마련 및 합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관이 관여하고 있는 업무의 합법성·타당성에 대한 예방적·사후적 점검,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다) 정책소통 TF

2019년 6월 국민주권 분과에서는 정책소통 TF 출범을 준비하면서 그 필요성으로, 미디어 공론장이 왜곡되어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애로가 많고, 방송매체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국민 공론장 왜곡 현상을 지적하였다. 또한 모바일 유튜브 등 SNS 중심의 미디어 환경변화로 국민 미디어 이용 지형이 변했고, 레거시(전통적)미디어와 정보통신기반 진화뉴미디어 간 경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를 고려한 능동적 국민소통역할이 체계화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오보에 대한 팩트체크와 즉각적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꼬집었다.

정책소통 TF는 2019년 6월 11일 7명의 정책위원과 1명의 외부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논의 주제로 정부 부처 정책소통 현황, 정책소통과 그 피드백 시스템과 운영철학, 정책소통을 위한 개선점 및 대책을 포함하였다. 쟁점을 위한 연구로 현재의 언론환경과 의제지형을 확인하고 해외 국가의 정책소통 사례 비교 및 지자체 우수사례 연구도 수반하였다.

총 5차례에 걸쳐 TF회의가 진행되었고, 연구를 통해 현재의 정책소통 시스템의 한계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책소통 시스템 확립 및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과 지지를 이끌어내어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당시 TF는 정부 각 부처와 국민간의 소통 확대 및 오보·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한 바, 정부 발간자료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정철학과 성과를 담고 있는 통계분석 자료, 이미지 등을 각 부처와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종합 정리하여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행사·워크숍 자료 가운데, 정부 고위공무원이 사용한 우수한 자료(PPT)를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정리·공개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 홈페이지의 정책홍보 초기화면 및 게시자료를 정비하여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국민·정책대상 집단의 관점과 의견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오보·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정비를 위해 각 부처별 오보·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사례들을 분석하여, 유사사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필요시 각 부처 보도자료 작성 시 FAQ 등에 반영하거나 오보발생 빈도 및 강도 등의 내용 현황을 부처별 자체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TF

2019년 9월 1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TF'가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전체 공공기관의 사업규모는 정부 총지출의 1.6배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관료중심의 폐쇄적인 관리체계로 인하여 경영 자율성, 책임성이 약화되고 단기 실적 중심의 획일적 평가체계로 인하여 공공성에 대한 책무와 정부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등 공공기관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TF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발전방안을 제언하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TF는 6명의 정책위원과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논의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을 활동 계획으로 수립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과 2018년 성과평가 결과와 평가단 운영방식, 지표 등 분석을 수반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로 개편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TF는 2019년 9월 10일부터 2019년 11월 11일까지 총 5회의 회의 개최를 통해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혁신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책임성 및 기관운영 자율성 강화를 제시하였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실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편익 중심 경영평가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과 공공기관의 혁신추진정책을 통합 시행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사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청하였다.

마)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TF

2020년 7월 민주주의 소분과는 넷플릭스 등 해외 융합플랫폼의 도전에 직면한 미디어업계 컨텐츠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미디어 산

업 발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다. TF는 미디어 규제체계 점검을 위해 플랫폼 간 비수평적 규제체계를 파악하고 융합컨텐츠 시대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미디어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TF는 7명의 정책위원과 6명의 외부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7월 9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9월 3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TF회의를 통해 이슈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디지털 광고의 성장으로 국내 방송광고 매출액은 급격하게 하락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였다. 현재 방송광고 규제는 수량, 유형, 거래, 내용 및 품목 면에서 매체 간 비대칭적이며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신기술과 신유형 광고를 도입하고 매체 간 불균형을 해소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미디어렙, 결합판매, 협찬 등에 관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OTT(Over The Top)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OTT 시장 활성화는 이용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구현 가능하기에 이를 위해 ①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전통적 미디어가 콘텐츠 영역에서의 기존 장점을 OTT 환경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 ② OTT에 특화된 기술과 그에 잘 결합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육성하는 것, ③ 국내외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동아시아 권역을 타겟으로 삼는 협력형 플랫폼과 제작허브를 형성하는 것, ④ 국내외 사업자간, 동일서비스 사업자간 규제 동등화를 실현하는 것, ⑤ 투자의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R&D/제작 지원 기금을 형성하여 선별 지원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 피해 구제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언론사의 속보, 단독 경쟁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오보가 생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해구제제도는 미흡한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현실적 피해 구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증가로 인해 오보 발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완전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성을 확보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신청의 처리기간 단축', '알림표시 의무화' 등의 「언중위법」 개선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 TF

2021년 4월경 국민주권 분과 권력기관 소분과에서는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 방안'과 관련하여 TF 추진을 제안하였다. 당시 TF 추진 필요성으로는, 첫번째로 수사권 거버넌스의 불비를 지적하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은 다원화되었으나, 국가 수사권 전체의 거버넌스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시급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행정권에 속하면서도 형사절차적 권한을 관행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예 :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감독체계는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전문화된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에 주목하였다. 환경, 식약, 방역, 금융, 노동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높음에도 형사적 수단에 대한 행정청의 도구적 인식으로 인해 행정적 조치에 대한 실효성과 위하력 확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적법성 통제 위주의 치안조직으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민생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원적 형사사법 서비스의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수사권 개혁의 공백에도 초점을 두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과정에서 형사불법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사주체에 대한 제도개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진단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수사주체에 대한 수사권 부여방식, 수사권의 범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지휘·통제 문제, 기관별 수사권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TF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다원화된 수사권 및 수사기관과 관련된 형사법적, 헌법적,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과거 검경 중심 수사권의 독점적 운용에 대한 문제점 및 역대 정부의 수사권 개혁 방안들을 검토하고 수사권 개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도모하였다.

수사권 다원화와 수사기구 전문화 TF는 크게 다섯가지 영역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현재까지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을 추진한 결과, 수사권 체제의 혁신을 이뤄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을 통한 수사권 개혁의 성과를 내놓았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수사권 다원화 체제와 후속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기존 '수사권 일원화 체제'와 구분되는 '수사권 다원화 체제' 가 출현하였기에 현재 다원화된 수사권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완비,

수사문화 개선을 지속해 나가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부분적 분리와 자치경찰제의 시행도 유의미한 환경 변화 요소로 작동하였으며 기존 권력기관 개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수사권 다원화 체제 출현 이후 후속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전문적인 수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운영되어 왔고, 주로 행정조사의 편의를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면이 적지 않았다. 권력기관 개혁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정책 의제화되지 못했고,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에서 위상도 모호한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개혁은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 구축, 전문적 수사영역에서 양질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의제이고, 특별사법경찰 개혁을 출발점 삼아 '수사기구 전문화'와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로 권력기관 개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네 번째로, 수사기구 전문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수사권 다원화 체제에서 형사 사법과정 전체의 합리성 증대를 위해서는 ①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의 분리 및 효과적인 관계설정, ② 사실판단의 분업화·전문화가 우선적 개혁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감독권의 공백을 방지하고, 수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검·경의 수사전문성 강화, ②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보완 (예 :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인력의 안정된 운영), ③ 일부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성 부여(예 : 국외의 이민청), ④ 지자체별 자치경찰과의 통합·병행 운영 등의 방안 고려를 제시하였다. 한편, 수사기구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권 감수성 갖춘 전문 수사인력 양성은 필수이고, 특별사법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해 ① 특별사법경찰 직렬 신설, ② 특별사법경찰 자격법정화, ③ 교육훈련 강화, ④ 전직·전보·특채 등을 통한 전문 수사 인력 확보 방안 고려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 모색을 강조하였다. 수사기구 전문화와 함께 형사사법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수 전문수사기구 지휘·감독, 민주적 통제, 시민적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 형사사법기구를 감독·통제하기 위해 각 기관의 내부 감찰 및 감독 강화 필요와 더불어 포괄적 감독·통제권을 적절한 기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검찰시민위원회, 지검장 주민직선제 시행, 기소배심제 도입 검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한편,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전반에 합리적 행위

기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절차법의 절차적인 통제가 필수적 영역이므로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기본권 보장, 부수적 수사권의 부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 강화, 조직 문화 혁신, 부패생태계 차단을 위한 공공변호인제도의 대폭 확대, 형사사법 비용의 공영화를 위한 제도 등 도입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미시적 권력균형이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하였다.

2) 간담회

가) 개요

국민주권 분과 내 각 소분과는 전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이슈 등과 관련하여 내부위원 및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현황〉

소분과	주제	일시·장소	주요내용
민주주의	미투 (Me·Too) 운동 관련 정책 제안	'18.3.9. '18.3.30.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	○ 권력형 성범죄 관련 법적 대책 ○ 정부 대책 관련 내용 및 평가 ○ 미투 현상에 대한 정치학, 사회공학적 접근 ○ 미투 진단과 대응방안 토의
민주주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8.4.13. '18.5.18.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	○ 공직선거법에 대한 자의적, 포괄적 해석 문제 ○ 새로운 표현행위나 정치활동 방식의 보수적 해석 문제 ○ 엄격하고 제한적인, 일관성 있는 해석 기준 마련 ○ 미국 해치법 (Hatch Act) 사례 분석
권력기관 개혁	범정부적 사법개혁 추진 기구 제안	'18.8.9. '18.8.30. '18.10.4.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	○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 논의 파악 ○ 현 사법개혁 정책의 문제점 및 보완책 ○ 사법개혁 과제 마련 (단기, 장기)
민주주의	가짜 뉴스 관련 제언	'18.8.30. '18.10.5. '18.10.15.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	○ AI를 통한 '가짜 뉴스 탐지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 팩트체크 프로젝트 도입방안 ○ 미디어 가짜뉴스센터 운영 관련 의견 ○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책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21.5.14. '21.5. 28. '21.6.4. 정책기획위 회의실	○ 해외의 직접 민주주의 운영 사례 연구 ○ 입법, 사법, 행정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직접·숙의 민주주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혁신 방안

소분과	주제	일시·장소	주요내용
민주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21.10.15. '21.10.29. '21.11.12. '21.11.26. 정책기획위 회의실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세계적 추세 파악 ○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모색

나) 미투(Me·Too) 운동 관련 정책 제안

2018년 1월 현직 검사가 언론을 통해 검찰 조직내에서 겪은 성추행 및 2차 피해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법조계는 물론 문화예술계, 정치인,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유사 후속 폭로가 이어지면서 '미투(Me·Too)'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미투'의 무한 확장성으로 다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직장내 여성 동료와의 협업을 기피하는 '펜스룰' 등에 따른 2차 피해, 가해자의 자살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을 미투 혁명으로' 라는 슬로건 하에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조직(3.15.)하고, '미투 연대 운동(#With You)'에 돌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2018년 3월 9일 및 2018년 3월 30일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미투 (Me·Too) 운동'과 관련한 정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진단한 '미투' 운동의 출현 원인으로는, 조직 내 남성 상급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하급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력 부재의 처지를 인정하고 굴종을 종용하는 '구조화된 비정의'(structured injustice) 행태와, 조직 내 남성의 성희롱·성폭력이 남성에게 명시적·관행적으로 유리한 사회 내 권력구조로 인해 젠더폭력화하여 해당 여성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히는 '성폭력의 젠더폭력화'라고 보았다. '미투'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성적 유린에 대한 저항 운동 이라기보다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구조 타파 운동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부처별 대책의 문제점으로는 대통령의 '미투'운동 지지 및 대응책 마련 지시 이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구성,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고, 공공부문 외 민간 분야에 대한 대책은 물론, SNS 등을 통한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적극 활용, 고소·고발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공영화 등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

고 진단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부처별로 분산된 개별 신고센터들로 인한 인력 및 재원 낭비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 등 기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일원적이고 효율적인 신고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한 정책 대안으로는 '성폭력'과 '젠더폭력'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과 젠더폭력에 대한 투-트랙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남아공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도입한 '면대면 중재' 방식 법제화를 통해 '가해자의 진솔한 화해와 자발적인 용서 기회를 통해 피해자의 내상 치유와 가해자의 재발방지 및 갱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젠더폭력'은 성격상 인권 유린의 문제이며, 공공과 민간부문을 망라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조사·심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국가 순위 향상도 기대하였다.

또한, 젠더감수성 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의 일부로 초중등 교육과정에 '젠더감수성 교육'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편입하여 차세대 젠더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 내 젠더폭력의 추방이나 일소에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젠더감수성'의 향상이며, 이를 위해 보편타당한 '지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직장(조직)내 젠더폭력 발생시 사용자 및 기관 대표의 미온적 대처 및 은폐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 및 기관 대표의 신고와 가해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중징계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자 및 기관 대표의 책임을 제도화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번 국정과제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과 관련하여 2018년 4월 13일 및 2018년 5.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촛불집회와 박 前대통령 탄핵 이후 시민들의 활발해진 권리 요구,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민감도 상승 및 선거 이후에 뒤따를 법적 쟁송 등에 대비하여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서, 법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선거운동 관련 일관된 기준 마련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고, 공무원의 선거 관련 활동 규제와 관련하여 일명 '해치법'으로 규정된 미국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에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간담회 논의 결과 정책 제안으로,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활동 유형별, 기간 및 방식에 따른 규제가 아닌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보장하고, 헌법 제116조 개정 등을 통해 현행 중앙 및 각급 선관위의 '선거관리' 기능을 미국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선거(정치)자금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의 틀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정치활동 관련 조항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권한 남용과 집단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정치활동은 표현의 자유에 준하여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라) 범정부적 사법개혁 추진 기구 제안

권력기관 개혁 소분과에서는 사법개혁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2018년 8월 9일 첫 간담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등 재발 방지 위해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사법개혁 추진기구의 구성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후 2018년 8월 30일 및 2018년 10월 4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2018년 11월 12일 권력기관 소분과는 '범정부적 사법개혁 기구 추진'을 제언하였다.

당시 제안내용에서는,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기구의 구성이 중단되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는 심화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들이 후퇴하여 사법부 과거사 청산 등 미완의 과제 역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심각하게 보았다. 국민들은 유사 이래 가장 강하게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고, 이런 민의는 사법 농단 사건의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에 대한 지지로 모아지고 있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지지부진했던 사법 개혁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아닌 법원이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과 삼권분립 등의 가치를 저버린 초유의 사태로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개혁 추진기구 구성에 대한 정부의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보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발판 삼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수행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의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등 굵직한 사법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던 전례를 거울삼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범

정부적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구성만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완의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 목소리를 같이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역시 법원행정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내지는 규칙 개정을 과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이를 제외한 장, 단기 사법개혁 과제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강력한 사법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단기적 과제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하급심 강화 방안,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제도 개혁, 사법부 과거사 정리, 사법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방안,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방안 등도 제안하였고, 이에 더해, 사법의 지방 분권,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임명 절차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장기 과제로 선정해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 가짜 뉴스 관련 제언

2018년 8월 30일, 2018년 10월 5일 및 2018년 10월 15일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가짜 뉴스로 인한 언론피해 확산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현황을 파악한 바, 가짜뉴스와 악의적 언론의 결합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양산 구조화를 지적하였고, 인터넷·모바일의 특성으로 인한 가짜뉴스·오보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 피해의 구조가 지연되며 회복불능 상황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언론피해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하나, 언론의 자율규제는 형해화된 상태로 미디어 소비행태가 언론사(5%)에서 포털·유튜브 등(77%)으로 급속히 변화함에도 법적·제도적 대응은 부실하다고 진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영국에서 언론피해구제자율기구로 1990년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설립·운영했지만 자율기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영국언론표준기구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로 대체된 사례와, 프랑스에서 2017년 프랑스 대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협업 저널리즘 프로젝트인 '프랑스 크로스체크(CrossCheck)' 사례를 살펴보았다. 크로스체크를 통해 각 언론사에 소속된 언론인들 사이에서 크로스체크가 이뤄지면서 정보 검증의 신뢰성이 강화되었고, 독자들과도 협업하면서 정당성이 부여되었으며, 프랑스 전통 미디어의 신뢰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한 제언으로, '한국형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설립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언론규제기구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은 언론피해당사자가 피해신청을 해야만 심의대상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주로 법적 위반 사항을 다루며 언론윤리문제나 보도준칙 준수여부 등은 다루지 않는 편이었다. 그리고 오보피해 당사자가 국내에 없는 등의 이유로 오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오보를 인지하더라도 정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일반 언론 피해자들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언론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연계해서 민간독립기구형태로 '한국형 IPSO' 설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칭 '팩트체크센터' 설립 추진을 건의하였다. 현 규제체계는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작동하고, 결론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프랑스의 '크로스체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언론 속에서 허위정보를 걸려내는 일종의 환경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팩트체크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중립성을 고려할 때, '팩트체크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의 형태가 아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을 하되 네이버, 카카오 등 유통 플랫폼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협업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비영리단체 민간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바) 직접 민주주의 제도화

2021년 5월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촛불혁명 이후 달라진 국민의 정치참여 지형과 열망에 부응하여 한국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민주성 결여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과 법적·제도적 미비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2021년 5월 14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28일 및 2021년 6월 4일 총 3회에 걸쳐서 학계, 정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전통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해온 국가(스위스), 근래 전자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새로 도입한 국가(영국, 독일, 핀란드 등)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한국 민주주의가 직접·숙의민주주의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행 입법, 사법, 행정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국민(또는 주민) 주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제1차 간담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실현을 위한 법률 현황과 개정방안'을 살펴보면서, 국민투표제도의 연혁과 국민투표법 개요, 국민발안제도 연구, 국민소환제도의 의의와 해외 도입 현황 등에 대해 비교·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접민주주의적 입법과정'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의제 형식화 보완 및 대의제 숙의기능 실질화 방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국민발안제의 기능과 유형, 국외의 국민발안제 사례 (스위스, 핀란드, 미국)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2차 간담회에서는, '스위스,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숙의적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스위스 연방주의 연혁 및 연방·칸톤(州)·게마인데(규모가 큰 시) 수준별 행정·입법·사법 체계 소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유형별 설명,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실제, 스위스 직접민주제도가 한국 정당정치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하여 고민을 함께 하였다. 또한,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 직접민주주의의 숙의적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숙의민주주의와 결합 또는 숙의적 요소 강화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간 역동적 양립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디자인 및 실제 운영경험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위한 참여, 숙의, 직접민주주의 기획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고, 직접민주주의 숙의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 모색, 미니퍼블릭 중심의 미시적 숙의 민주주의 접근이 갖는 한계 극복 위한 이론적·실천적 노력을 동시에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간담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숙의형 공론화와 온라인 국민청원의 결합'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의사 결정에 시민 참여 증가 경향과 숙의형 공론화·온라인 청원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자치 및 행정차원의 숙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민주권과 민관 협력을 위해 정책과정에서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참여와 숙의 강화 필요성과 민선 5기 이후 정책결정과 실행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 구조를 형성하여 참여와 숙의를 통한 정책수립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간담회 논의 결과는 정책기획위원회 단행본으로도 편찬되어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한 뜻깊은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2021년 10월 민주주의 소분과에서는 '민주주의 진화'를 중점 검토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구성원들이 21세기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필수 역량이고, 디지털 미디어가 수용자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알권리와 커뮤니케이트 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대미문의 비대면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부각시켰고,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시켜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진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만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필터버블(filter bubble)을 형성하여 인식의 확증편향,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을 생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과 참여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기에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진화를 위하여 몇 가지 이슈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간담회는 2021년 10월 15일 개최되었으며, 시민성 확장에 필요한 디지털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할 '시민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등의 점검을 하는 자리였다. 다음으로 2021년 10월 29일 2차 간담회가 개최된바, 선도적으로 공교육 및 시민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해온 국가(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제도적 특성과 운영방식 및 교육정책 사례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2021년 11월 12일 3차 간담회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방안 및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체 간 연결성 모색을 주제로 발제와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26일 4차 간담회에서는 학교 외 미디어 교육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게 된 바, 디지털 미디어 기술환경 변화에 뒤쳐지는 정책과 지원사업 문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과 운영 정책 분산, 시민사회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부진,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인정-재교육-교류' 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과제 수립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제2절 국민성장분과

1. 개요 및 구성

가. 개요

국민성장분과는 국정과제 조정·보완을 위한 실천과제의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TF 운영 및 정책 제안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포럼 개최, 언론기고 등 대외활동을 통해 국정과제 및 한국판 뉴딜 관련 대국민 소통 가교 역할 수행하기도 하였다

국민성장분과 제1기는 이한주 분과장 등 21명의 위원으로 출발하였으며(2018년 2월 기준), 이후 위원 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2018년 10월부터는 김재훈 분과장 등 19명의 위원이 활동하였다. 제2기에는 양종곤 분과장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분과 전반적인 사항 논의 및 의결, 국정과제 조정·보완 과제에 대한 BH 자문의견 의결을 위하여 매월 1회 전체회의를 개최 하였다

국민성장분과는 제1기에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5개의 소분과를 운영 하였고, 제2기에는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통합하여 4개의 소분과를 운영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26개 국정과제를 관리하였다.

〈제1~제2기 분과위원 명단〉

구분	위원 현황
1기 ('17~'00)	김재훈, 김경미, 김용기, 김우철, 김은경, 김인숙, 류건우, 박찬희, 성정현, 원희연, 이건범, 정대영, 정동일, 조원희, 박복영, 소준노, 이장원, 조영철, 조수진, (임기 초반부 활동한 위원 : 김연순, 김유찬, 이한주, 임춘택)
2기 ('00~'22)	양종곤, 임운택, 소준노, 김공회, 김윤정, 최승필, 조민호, 곽주영, 김수이, 김준하, 김진우, 원희연, 김학수, 최민식, 박기백, 이종현, 최민식, 송지연, 전병유, 최지은, 유혜미, (임기 초반부에 활동한 위원 : 김은경, 이건범, 조영철)

〈제2기 국민성장분과 양종곤 위원장〉



〈제2기 국민성장분과 위원들 활동모습〉









〈국정과제 현황〉

번호	국정과제	부처	전담위원 (1기위원)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임운택 (김용기)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송지연 (김용기)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김공회 (조영철)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전병유 (이장원)
29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최지은 (박찬희)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유혜미 (이건범)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최승필 (이건범)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김윤정 (조수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김윤정 (김은경)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김윤정 (김은경)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최민식 (김연순,김재훈)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이종현 (김재훈,조수진)
(전략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이종현, 안은희 (박복영)

번호	국정과제	부처	전담위원 (1기위원)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양종곤 (김우철)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최승필 (김유찬,박찬희)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등	최민식 (정대영,소준노)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박기백 (김우철)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부	조민호 (성정현)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	곽주영 최민식 (임춘택,원희연)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	소준노 (김경미)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부	김준하 (소준노,김인숙)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김수이 김진우 (임춘택,소준노)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원희연 (원희연)
(전략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김학수 (류건우)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김준하 (조원희)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임운택 (조원희,이장원)

나. 구성

〈1~2기 국민성장분과 소분과 현황〉

기수	소분과장	소분과 해당 국정과제	소속 위원
1기	김용기	① 소득주도성장(16~22)	김용기, 조영철, 이장원, 박찬희, 이건범
	김은경	② 공정경제(23~27)	김은경, 김재훈, 조수진, 김연순, 이한주, 김유찬
	박찬희	③ 민생경제(28~32)	박찬희, 박복영, 김우철, 소준노
	소준노	④ 4차산업혁명(33~38)	소준노, 성정현, 원희연, 김경미, 김인숙, 임춘택
	조원희	⑤ 혁신성장(39~41)	조원희, 류건우, 이장원, 김재훈, 임춘택
2기	김공회	① 소득주도 성장	김공회, 최승필, 임운택, 송지연, 전병유, 최지은, 유혜미
	김윤정	② 공정경제	김윤정, 이종현, 최민식
	최승필	③ 민생경제	최승필, 양종곤, 이종현, 최민식, 박기백
	조민호	④ 4차산업혁명 ⑤ 혁신성장	조민호, 소준노, 곽주영, 최민식, 김수이, 김준하, 김진우, 원희연, 김학수, 임운택

2. 주요 활동

가. 전체회의 개최

국민성장분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회의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1기에는 국정과제 조정·보완, 중소기업 지원,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집중 하였으며, 2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탄소중립 전환 등의 과제에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각종 현안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 하였다.

〈연도별 분과 전체회의 개최 현황〉

연도	개최수	주요 논의내용
’18	11	신용카드 수수료,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저임금 및 청년일자리, 혁신성장, 국정과제 조정·보완 등
’19	11	국정과제 조정·보완·평가, 중소기업 R&D 지원방안, 헌법개정 관련 경제조항 등
’20	7	신재생 에너지, 부동산 정책, 디지털 바이오,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인공지능, 자영업 등
’21	10	투자 활성화 정책, 탄소중립 전환, 수소경제의 역할과 과제, 초광역에너지망 등
’22	3	공정·평등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 디지털 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등

〈제1기 국민성장분과 위원, 2019년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



2018년에는 총 11회의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분과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는 ① 소분과 구성, ② 위원별 국정과제 배분, ③ 국정과제 조정 보완 배분 및 검토, ③ 운영위 회의결과 공유, ④ 소분과 회의결과 및 활동계획, ⑤ TF, 정책연구과제 등 주요 진행사항 공유, ⑥ 국정과제 전담위원 재조정, ⑦ 현안보고서 사례공유, ⑧ TF(청년,금융), 사람중심경제 보고서, 문재인 정부 경제론, ⑨ 중소기업 생산성혁신 간담회(6월 8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전문가 간담회(6월 22일), 저임금 및 청년일자리 간담회(7월 11일) 등을 개최하고 외부전문가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2019년도는 총 11회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① 운영위 회의결과 공유, ② 소분과, TF 등 주요 진행사항 공유, ③ 국정과제 전담위원 조정, ④ 국정과제 조정 보완 검토 결과, ⑤ 현안사항 논의(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2019년 5월 7일, 코엑스), ⑥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전문가 간담회(중소기업 R&D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⑦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및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보고, ⑧ 2019년도 하반기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 ⑨ 헌법개정 관련 경제조항에 관한 논의, ⑩ 일본 경제침탈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현황 점검 등을 논의하였다.

〈2019년도 정책기획위원회 전체회의, 2019년 8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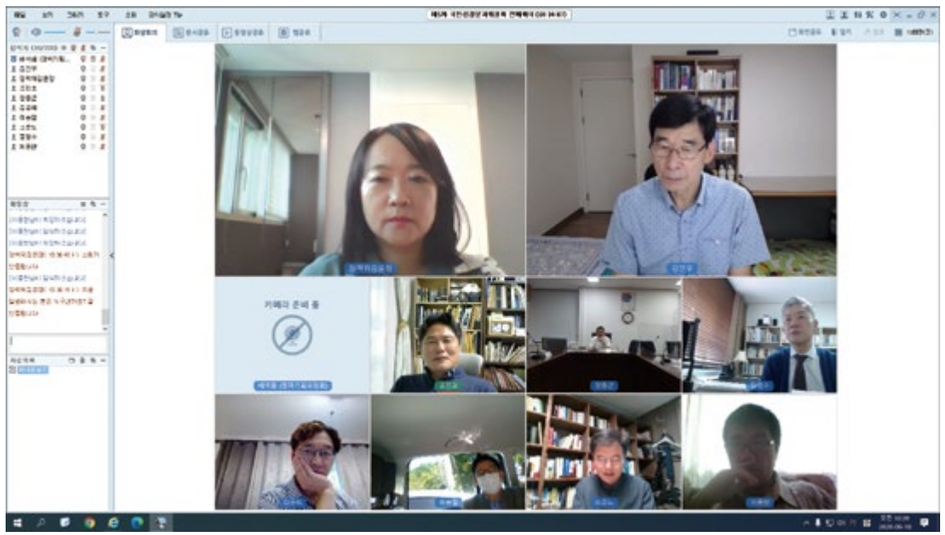
2020년도 분과 전체회의는 총 7회 개최하였다.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② 위원별 국정과제 배분 및 조정·보완 검

토, ③ 국정현안 및 기타사항 논의, ④ TF 운영방안, ⑤ 신재생 에너지분야 정책 간담회, ⑥ 부동산 정책 간담회, ⑦ TF 운영현황 공유(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 플랫폼 TF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TF /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 TF), ⑧ 자영업 정책 간담회, ⑨ 자율주행차 외부전문가 초청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 하였다.

〈국민성장분과 대면 간담회 모습, 2020년 9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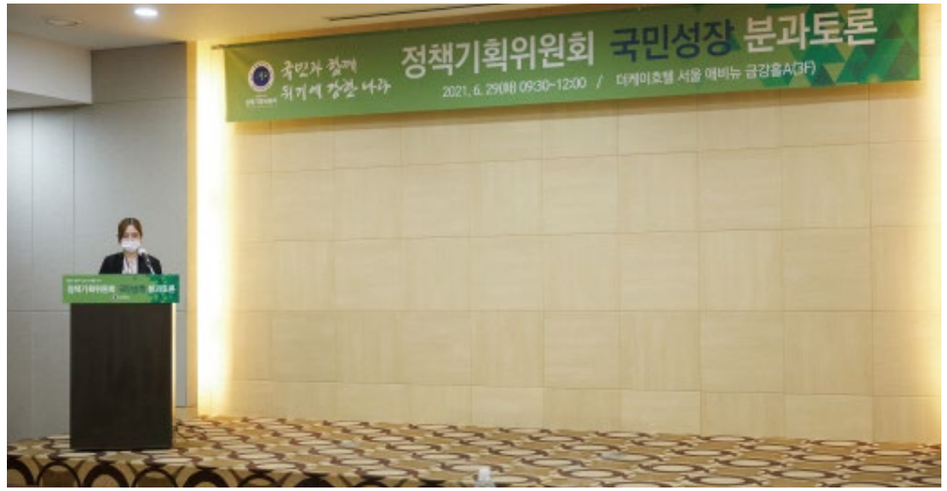
〈국민성장분과 온라인 간담회 병행, 2020년 9월 18일〉



2021년도 분과 전체회의는 총 10회 개최하였다. 주된 의제로는 ① 자영업 정책 외부전문가 초청 정책 간담회, ② TF 및 K-뉴딜 간담회, ③ 투자 활성화 방안 정책 간담회, ④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의 전환, ⑤ 국정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⑥ 분과 단행본 '문재인 정부 경제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검토, ⑦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력강화 TF 결과보고서, ⑧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의 역할과 과제, ⑨ 호남RE300 성공을 위한 초광역에너지망, ⑩ 문재인 정부 혁신정책 5년의 성과와 과제 등이었다.

2022년 3월까지 분과 전체회의는 총 3회 개최하였다. 주된 의제로는 ① 공정·평등의 사회경제적 시스템, ② 디지털 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국민성장분과 분과 주제발표, 2021년 6월 29일〉



〈국민성장분과 분과 토론, 2021년 6월 29일〉



〈국민성장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대엽 위원장과 양종곤 분과위원장, 2021년 6월 29일〉



〈전체회의에 발표하는 소준노 분과 부위원장, 조민호 분과 위원, 2021년 6월 29일〉







나. TF·간담회 등 주요활동

1) TF 활동

국민성장분과는 '국가 거버넌스 혁신 TF' 등 7개의 TF를 국내의 최고의 전문가 들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하였으며 그 성과물로 7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총 9건의 주요현안 보고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민성장분과 TF 활동 현황〉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국가 거버넌스 혁신 TF (단장 : 김재훈)	'19.8. ~'19.11.	10명 (내부 9, 외부 1)	○ 혁신성장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조직 개선방안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대응전략 TF (단장 : 조원희)	'19.9. ~'19.10.	7명 (내부 5, 외부 2)	○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의 원칙
자동차 산업 육성 TF (단장 : 소준노)	'19.3. ~'19.8.	11명 (내부 8, 외부 3)	○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의 주요 흐름 ○ 한국 자동차 산업/시장의 위험요인과 혁신방향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 플랫폼 TF (단장 : 양종곤)	'20.7. ~'20.10.	14명 (내부 7, 외부 7)	○ 현장형 정책수립 플랫폼(정책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의사결정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TF (단장 : 조민호)	'20.8. ~'20.9.	15명 (내부 5, 외부 10)	○ 인공지능-데이터 사업(한국형 뉴딜)을 위해 혁신적인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의 신설
고용창출형 지역산업정책 TF (단장 : 임운택)	'20.8. ~'20.11.	10명 (내부 4, 외부 6)	○ 지역별 산업구조와 고용전략 ○ 디지털 뉴딜과 지역별 산업구조 혁신방안 ○ 한국판 뉴딜과 지역의 인력양성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TF(단장 : 이종현)	'21.4. ~'20.6.	9명 (내부 6, 외부 3)	○ 도소매물류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 플랫폼 공정화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분야 비용 절감 방안 ○ 지방의 소상공인 정책 참여기능 강화 및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국민성장분과 주요 현안보고서황〉

연도별	보고서명	비고
’18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18.3.
	중소기업분야 SW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8.5.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경제활성화 방안	’18.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계적 보완조치 건의	’18.8.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전략화	’18.9.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확대	’18.6.
	화평법, 화관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18.6.
’19	공적자금 운용 및 관리 개선방안	’19.3.
’20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플랫폼 구축 방안	’20.12.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력 강화 TF 각종자료와 결과보고서, 2021년 4월~2021년 6월〉





2) 간담회

국민성장분과는 총 28회 위원들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에는 재정개혁과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주제로 2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간담회 등 총 5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에는 분과 소통간담회를, 2021년에는 물환경기술 해외협력방안 간담회, 분과 단행본(세계 10대 경제대국) 간담회 7회, 디지털·통상시대 간담회 5회, 공정·평등의 사회적경제 시스템 간담회 7회 개최하였다.

〈간담회 현황〉

주제	일시·장소	주요내용
’18년재정개혁 전문가 초청 간담회	’18.7.10. 16:00~18:00 정책위 회의실	○ 재정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의 의의 및 전반적인 내용, 향후 조세재정 정책방향 ○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내용, 향후 추진방향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내용, 향후 추진방향 ○ 주택임대소득 개편 내용, 향후 추진방향
’18년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간담회	’18.1.30. 08:00~10:30 정책위 회의실	○ 10만+10만 희망 프로젝트 ○ 신규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해외 일자리 만들기(장보고 프로젝트) ○ 이공계 인력활용 청년 ICT 재교육 ○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청년 고용보조금 지급 ○ 전문직 공급 적극 확대 ○ 중소기업 청년혁신인재 10만명 양성 및 취업지원
’19년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전문가 간담회	’19.4.3. 13:00~18:00 정책위 회의실	○ 포용적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 ○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 애로 및 정책 시사점
’19년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전문가 간담회(2차)	’19.4.5. 15:00~18:00 정책위 회의실	○ 부동산공화국 역사와 현실 그리고 해체 방안 ○ 모두가 행복한 재정정책을 위한 대안적 관점 ○ 주택시장의 장기추이와 정책방향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9년 분과 정책 간담회(1차)	’19.10.11. 10:00~12:00 정책위 회의실	○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과 소재 부품산업의 정책 방향
’19년 분과 정책 간담회(2차)	’19.11.1. 11:40~17:30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주)유니온시티	○ 전북지역의 산업발전방향 및 미래산업 준비를 위한 논의 ○ 기업현장방문 및 기업인과의 간담회
’19년 분과 정책 간담회(3차)	’19.12.6. 13:00~18: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테크노파크	○ 경남권 산업단지 현황설명 및 발전방향 논의 ○ 경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상생협의회 통합 간담회
’20년 분과 소통 간담회	’20.7.3. 18:30~20:00 진일정	○ 정책위와 BH간 소통 강화 및 교류 확대 ○ 국정자문 방향, 분과 주요현안 토론 등
’21년 K-물환경기술 해외협력방안 간담회	’21.3.11. 10:30~11:30 정책위 회의실	○ 물산업진흥전략 소개(환경부) ○ K-물환경기술 중국 진출 방안

주제	일시·장소	주요내용
'21년 공정·평등의 사회적 경제시스템 간담회(1차~7차)	'21.9.16.~12.15. 정책위 회의실	○ 정책평가와 정책의 정치경제학 ○ 불평등의 원인과 한국불평등 체제의 특성 ○ 성장체제와 분배체제의 정합성 ○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불평등의 구조와 정책방향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기존 정책대응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방향 ○ 청년의 시각에서 본 일자리 기회균등과 세대간 불평등
'21년 디지털·통상시대 간담회 (1차~5차)	'21.10.15.~12.3. 정책위 회의실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거버넌스 추진 전략 ○ 국내 기업의 디지털 표준화 선도 지원 ○ 디지털 싱글마켓과 데이터 동맹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 및 수출 전략 ○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책임성 강화 방안 ○ EU GDPR 및 중국과 한국의 데이터3법
'21년 분과 단행본 간담회 (1차~7차)	'21.8.12.~12.23. 정책위 회의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도전과 선도경제>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의의와 성과 ○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코로나 충격의 한국경제에의 도전 ○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디지털, 바이오, 저탄소경제) ○ 선도경제로서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2021년 공정·평등의 사회적 경제시스템 간담회(1차~6차), 2021년 9월 16일~12월 1일〉



제1차 온라인 간담회, '21.9.16.



제3차 온라인 간담회, '21.10.13.



제4차 온라인 간담회, '21.10.27.



제6차 온라인 간담회, '21.12.1.

〈2021년 디지털·통상시대 간담회(1차~5차), 2021년 10월 15일~12월 3일〉



제1차 온라인 간담회, '21.10.15.



제5차 온라인 간담회, '21.12.3.

〈2021년 분과 단행본 간담회(1차~7차), 2021년 8월 12일~12월 23일〉



제2차 온라인 간담회, '21.8.23.



제4차 온라인 간담회, '21.11.3.



제6차 온라인 간담회, '21.12.8.

3) 현장 활동

국민성장분과 제1기에는 위원, 지역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정책집단과 현장의 소통을 위한 2회의 현장방문 간담회와 국제교류를 위한 동방포럼 참석(본 정책기획위 평화번영분과와 동반 참석) 등 의미 있는 외부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제2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장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외부 현장 활동 현황〉

주제	일시·장소	주요내용
국민성장분과 현장(경남지역) 정책 간담회	'19.12.6. 13:00~18:0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경남TP	ㅇ 경남권 산업단지 현황 설명 및 발전방향 ㅇ 창원 산단 기업체 방문 및 현장 간담회 ㅇ 경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상생협의회 통합 간담회 ㅇ 분과참석자(김재훈, 김인숙, 소준노, 원희연, 정승일자문위원, 배석희과장) ㅇ 지역참석 (경남TP, 경남산단공, 성진엔테크, 협의회 주요기업, 경남도, 지역 전문가)
국민성장분과 현장(전북지역) 정책 간담회	'19.11.1. 11:00~18:00 전북TP (그랜드호텔 회의실), 기업현장(유니온시티)	ㅇ 전북지역 산업발전 동향 및 미래산업 논의 ㅇ 기업 현장 투어 및 기업 대표와 현장 간담회 ㅇ 분과 참석자 (김재훈, 김은경, 류건우, 성정현, 소준노, 원희연, 이건범, 배석희과장) ㅇ 지역참석 (전북TP, 제논전장 등 5개 기업, 글로벌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등)
동방경제포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19.9.3.~9.6. (러시아)극동연방대학, 롯데호텔회의실 (기업 주최)	ㅇ 주요이슈는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해결방안, 극동 및 아시아 태평양 협업 조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등 ㅇ 러시아, 인도, 몽골, 일본 등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적 포럼, 한국 정부대표단(경제부총리) 참석 ㅇ 포럼의 주요 세션에 참석하고 세션 별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 보고함 (김재훈, 소준노, 원희연)

〈제1기 국민성장분과 위원,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2019년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



〈국민성장분과 현장 (전북지역) 정책 간담회, 2019년 11월 1일〉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2019년 9월 4일〉



〈동방포럼, 블라디보스톡, 2019년 9월 4일〉





〈동방포럼, 블라디보스톡, 참가기업 주최 간담회, 2019년 9월 5일〉



제3절 포용사회분과

1. 개요 및 구성

가. 개요

포용사회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된 5개 국정전략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문화국가에 포함된 32개 국정과제, 162개 실천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과제 재설정 및 조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품위있는 삶과 사회 통합을 위해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나. 구성

포용사회분과는 소관 5개 국정전략을 기반으로 보건복지, 보육·교육, 안심사회, 공정사회, 문화국가 등 5개 소분과로 구성되었으나, 분과가 지나치게 크고, 분야별 연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 보건복지·교육과 △ 환경·안전을 주축으로 분과가 진행되어, 복지·보건·교육보육을 담당하는 포용사회분과와 환경·안전·공정을 담당하는 지속가능사회분과가 분리 운영되었다.

포용사회분과의 1기와 2기 분과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기, 2기 포용사회 분과 위원 현황〉

구분	위원 현황
1기 ('17~'00) ('18.1.31. 기준)	조흥식(1대 분과위원장), 김연명 (2대 분과위원장), 박준식 (3대 분과위원장) 홍선미(4대 분과위원장), 고석규, 곽병창, 권혜원, 김경희, 김국진, 김명환, 김좌관, 김창룡, 김태만, 박진희, 박진희, 석재은, 심미선, 안종주, 어미정, 오유석, 윤순진, 이건세, 이미경, 장준호, 정희정, 조의연, 조재희 최경숙, 최성숙, 허문경
2기 ('00~'22) ('20.4.2. 기준)	문진영(위원장), 김경희(부위원장), 윤순진(부위원장), 김대현, 김명희, 김민희, 김선미, 김수정, 김용, 김원섭, 김윤, 김은지, 김진우, 김태완, 남찬섭, 류양지, 류현숙, 박영정, 박은정, 신진욱, 어미정, 윤동근, 윤홍식, 이동연, 이숙정, 이태수, 장덕진, 전병유, 정백근, 주영수, 최세정, 최인이, 추장민, 한귀영

2022년 1월 현재, 포용사회분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보육 3개 소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분과에서 담당하는 국정과제와 소속 위원은 아래와 같다.

〈포용사회분과 소분과 운영 현황〉

구분	담당 국정과제	소속 위원
사회복지 소분과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김원섭(소분과장), 문진영, 김태완, 남찬섭, 신진욱, 김진우, 윤홍식, 김지선
보건의료 소분과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정백근(소분과장), 이숙정, 김 윤, 류양지, 김명희, 정혜주
교육보육 소분과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52)고등교육의 질 제고 등	김대현(소분과장), 김은지, 김민희, 김수정, 김 용, 김선미

〈제2기 포용사회분과 활동사진〉



〈제2기 포용사회분과 (2021년 11월 17일 제9차 전체회의)〉



2. 주요 활동

가. 전체회의 개최

포용사회분과 전체회의는 2017년 이후 2021년 12월 현재까지 총 36회의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년 12월 18일에 최초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5개 국정전략별로 5개 소분과를 구성하고 소분과장 및 간사위원 선임, 분과전체회의 정례화, TF 운영 방향 등 전반적인 분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8년에는 포용사회분과 전체회의를 총 9차례 정례 개최하여 국정과제 조정·보완 과제 배분,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담론 형성을 위한 역할, 정책위 1주년 활동 성과 정리, 소분과별 TF 운영 방안, 국가미래비전 2040 수립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2019년에는 총 10차례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비전 2045 사회분과 진행상황 검토, 개최하여 국정과제 조정보완 심의·의결,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 평가 사업 계획, 분과별 TF 진행상황, 열린정책 주제 논의, 자문위원 위촉 관련 사항, 국정과제위원회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계획, 포용적 복지국가 연속간담회, 노동정책 TF 운영상황, 미투이후 입법·정책과제 현안보고서 검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0년에는 총 7차례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2기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 및 간사단 역할, 위원별 국정과제 배분,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소분과별 운영계획, 분과 TF 운영방향, 한국판 뉴딜 보완 방안, 공적연금 현황과 개혁과제, 성과 생식 건강 보장 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총 10차례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의료 확대, 청년고용 안정화, 정책연구용역 추진방안, 실업자 소득 개선방안, 소득주도성장특위와 협력 방안, 커뮤니티케어 스마트헬스 도입방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동시장 대응방안, 포스트 코로나 신복지 체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 컨퍼런스 추진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 생존력 강화 TF 계획, 소분과별 간담회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2022년에는 총 4차례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기획위원회 활동백서 진행상황, 포용사회분과 연구용역 추진방안, 2021년 하반기 중점검토과제 간담회 진행상황 및 보고서 작성방안, 정책기획위원회 단행본 집필상황 등을 논의하였고, 청년 및 교육개혁 관련 정책간담회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포용사회분과 전체회의 개최 현황〉

연도	개최수	주요 논의내용
’18.	9차	국정과제 조정보완 심의·의결, 국가비전 2040 수립 검토, 포용사회정책포럼 추진 등
’19.	10차	국가비전 2045 검토,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평가 사업, 포용적 복지국가 연속간담회 등
’20.	7차	2기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한국판 뉴딜 보완 방안, 공적연금 현황과 개혁과제 등
’21.	10차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 컨퍼런스 추진방안, 정책연구 추진방안,포스트 코로나 신복지 체제 등
’22.	4차	포용사회분과 연구 추진방안, 중점검토과제 보고서 작성, 청년 및 교육개혁 정책간담회 등

나. TF·간담회 등 주요활동

1) TF 활동

포용사회분과는 국민의 품위있는 삶과 사회 통합을 위해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 사회 전 영역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의 TF를 구성·운영하였다.

〈TF 활동 현황〉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TF	’18.12. ~’19.1.	19명 (내부 12, 외부 7)	○ 사회서비스 지역책임성, 공공성, 통합성 강화 ○ 서비스 기획, 조정을 위한 총괄조직 신설 ○ 서비스 초기진입 접근성 확보 및 상시 관리 등
민주시민교육 TF	’18.12. ~’19.3.	16명 (내부 7, 외부 9)	○ 창제 시간을 시민교육으로 재구성 ○ 예비교사 교육과 교원연수 체계화 ○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노동정책 TF	’19.9. ~’19.11.	5명 (내부 2, 외부 3)	○ 단체교섭 구조 및 효력 확대 ○ 사회적 대화 복원 및 미래사회 협약 ○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장
포용적 뉴딜 TF	’20.6. ~’20.7.	14명 (내부 8, 외부 6)	○ 상병수당제도, 청년고용보장제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한국형 뉴딜의 돌봄서비스 강화방안 ○ 회색일자리에서 녹색일자리로 연착륙 ○ 유니버셜 오너로의 공적 연기금 개혁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	’20.10. ~’21.1.	12명 (내부 8, 외부 4)	ㅇ 돌봄에 대한 보편주의 원칙 천명 ㅇ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등 설치 ㅇ 학교공간을 놀이 통합적 교육공간으로 재설계 ㅇ 학교와 시설 연합돌봄체계 마련 ㅇ 다함께 돌봄시설을 학교와 연계하여 설치 ㅇ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전달체계 개편

가)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TF

포용사회분과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 TF’를 구성·운영하였다. TF는 급격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른 공공성 확보 문제가 나타나고, 서비스가 대상과 분야별로 파편적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성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TF는 홍선미 위원을 총괄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사회복지소분과 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 이용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제공방안, 다분야 간 협력에 기반한 사회보장서비스공급관리 및 운영체계, 지역 중심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운영 모델 플랫폼 제안 등을 목표로 약 3개월 동안 운영되었다.

TF는 지역책임성, 공공성, 통합성을 주요 개편방향으로 하는 ‘포용국가의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개편방안’ 보고서를 마련하고, ① 서비스 기획,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총괄조직 신설, ② 급여 및 서비스 이용 자격심사 및 지급 결정, ③ 서비스이용권 보장을 위한 공공연계조정 시스템 구현, ④ 지방분권형 재정지원 방식, ⑤ 모든 서비스의 초기진입 접근성 확보 및 상시적인 관리기능, ⑥ 모든 주민 대상 커뮤니티케어 통합 지원 플랫폼 지원, ⑦ 거점 사례관리기관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대상 서비스 구매계약 및 성과관리, ⑧ 중앙 공공·전문기관의 시군구 지방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⑨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및 중간지원 기능 강화, ⑩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등 개편을 위한 추진 주체별 10대 과제를 제안하였다.

TF는 그간 다양한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와 공공사례관리 및 주민복지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고,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전달체계 구축방향을 제안하였다고 평가되었다.

나) 민주시민교육 TF

포용사회분과는 우리 사회의 미래 역량은 시민교육에서 성취되는 시민역량과 일치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TF’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TF는 인간 본성 및 휴머니즘 성숙,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에서, 학교폭력 감소, 성숙한 정치문화, 혐오와 갈등의 치유 등 기본질서 및 사회통합 확보를 위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TF는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초등과 중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시간을 시민교육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초등학교는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체험 중심수업,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적극 활용, 고등학교는 창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예비교사 교육과 교원 연수를 체계화하여 시민교육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 대상 시민교육 실시하고, 학급별 상황별 선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인성교육진흥법」을 「인성·시민교육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및 활용 등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TF’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방안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노동정책 TF

포용사회분과는 노정갈등과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방안이 시급하고, 노동시장 구조에서의 사회적 대화 복원 및 대처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노동정책 TF’를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구성 운영하였다. TF는 노사정 갈등의 원인이 되는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적 대화의 쟁점과 과제 도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진단과 해법, 디지털화와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정책 TF’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기본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정부 주도를 벗어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 양대 지침 폐기와 불법적 노조정책 해소에서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

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 환경을 중심으로, 우선 임금양극화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구조 및 효력 확대, 공정임금제도 구축, 고용차별 시정제도 개선 등 차별해소 정책을 제안하였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의 위기로 핵심지지층 이탈, 노동계와의 관계악화, 고용감소·노동갈등·역차별 프레임 등의 언급하였다.

TF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의 중래사회협약을 위해 노사·노정·노사정의 다층적 대화테이블을 가동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기구의 포용성을 강화해야한다고 하면서, (가칭)포용국가가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합의모델을 창출하고 미래사회협약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자성과 자영업자성을 동시에 지닌 디지털 특수고용 형태를 지닌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장을 위해 임금 노동자 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며 관련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노동정책 TF'는 후반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쟁점·우선순위 등을 설정하여 노동 존중 패러다임의 일관성 유지와 국정과제의 내실있는 이행을 제언하고,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청와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재점검하였으며, 주변화되는 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기적 노동정책과제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뉴딜 정책 TF

포용사회분과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의 엄중한 경제사회적 위기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에 적합한 포용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코로나19 위기의 고통과 희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현실에서 단순한 고용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포용뉴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뉴딜 정책 TF'를 구성하여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였다.

TF는 「한국형 뉴딜정책 보완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 보고서를 마련하여, ① 상병수당 제도의 현황과 도입방안, ② 청년고용보장제 정책방안,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④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방안, ⑤ 한국형 뉴딜의 돌봄 서비스 강화방안, ⑥ 회색 일자리에서 녹색 일자리로의 연착륙 방안, ⑦ 유니버셜 오너로의 공적 연기금 개혁 등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며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핵심아젠다를 발굴하고, 이에 관한 국가비전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7가지 정책 제안을 마련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뉴딜 정책 TF'의 활동은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

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가정환경과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일으켰다. 이에 고용·안전망과 사람투자에 더해, 불평등과 격차해소, 청년지원 필요성을 확대해 '휴먼 뉴딜'로 확대해야한다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2021년 7월)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된다.

〈한국판 뉴딜 2.0 中 휴먼 뉴딜〉



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

포용사회분과는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간 연계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초등돌봄 관련 사업과 제도를 통합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법령개편(안) 마련 TF' (이하 '온종일돌봄 TF')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다.

TF는 온종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며, 인력자원을 확보·개발하고, 적합한 공간 구성과 재정지원대책을 위한 정

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① '온종일 돌봄' 용어 변경, ② 돌봄에 대한 보편주의 원칙 천명, ③ 중앙정부 수준에 (가칭)'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설치,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칭)'기초 돌봄 협의회' 또는 '마을 돌봄 협의회'를 시범 설치 운영, ⑤ 초등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신설 및 학교 공간을 놀이 통합적 교육공간으로 재설계, ⑥ 학교 단위 돌봄을 학교 연합 또는 학교-시설 연합 돌봄으로 변경하여 수용력 제고, ⑦ 돌봄 공동 사업비 제도 운영, ⑧ 돌봄 인력 재교육, ⑨ 다함께 돌봄 시설을 학교 내 또는 학교와 이웃하여 설치, ⑩ 장기적으로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전달체계 개편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는 전문가 협의회 5회, 위원회 내부 회의 6차례 등 총 11차례 회의를 거쳐 온종일 돌봄에 대한 방대한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부처마다 분산된 돌봄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과 이론을 접목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TF 모델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정책 추진과 종합계획 수립의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간담회

포용사회분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보육과 관련된 사회 현안에 대해 학계, 현장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를 총 8차례 개최하였다.

〈간담회 현황〉

소분과	주제	활동기간	주요내용
보건의료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21.3. ~'21.5.	○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도입과 보급 ○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의 공적제공 확대 ○ 성재생산 건간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의사결정구조 구축
교육보육	지방대학 위기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1.5. ~'21.11.	○ 중앙정부의 재정 및 법체계 재구조화 ○ 공유대학 모델 확산 및 한계대학 정비 ○ 지역 국립대 역할 강화 ○ 정원 및 대학 규모 조정 ○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발굴 ○ 대학평가 및 평가 기준 개선

소분과	주제	활동기간	주요내용
보건의료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	'21.8. ~'21.11.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제도적 쟁점과 과제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 ○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연계방안 ○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실행방안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1.10. ~'21.1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방안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진료체계
사회복지	지역 돌봄 체계 구축 간담회	'21.11. ~'22.1.	○ 돌봄윤리와 돌봄경제, 커뮤니티케어 현황 ○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초등생 방과후돌봄서비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장애인 돌봄서비스 ○ 노인요양 서비스 및 종합토론
교육보육	긴급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 간담회	'21.11. ~'21.12.	○ 긴급돌봄체계 구축 관련 쟁점 검토 ○ 긴급돌봄 운영 실태 진단 및 점검 ○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교육보육	교육개혁과 인력양성 간담회	'22.1.	○ 지역균형발전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개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과 대학체제 개편 ○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대 상생 발전방안
사회복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22.1. ~'22.2.	○ 국면연금제도의 적정성과 재정안정화 방안 ○ 기초연금제도의 발전방안 ○ 국민연금과 타 연금제도 ○ 연금개혁 방안과 거버넌스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위한 간담회 활동〉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20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자동 소멸하여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되기는 했으나, 성·재생산 권리의 측면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나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제도의 공백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임신중지는 성·생식 보건서비스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

지되어야 할 필수 서비스로 언급하였고, 국내에서 약 5만건의 임신중지가 이루어졌지만 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불법행위였기에 정확한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포용사회분과에서는 '성·재생산건강권 보장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간담회'를 2021년 3월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포용사회분과는 간담회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 정책의 국내외 추이와 방향, 성·재생산 건강정책을 위한 의료보장 체계, 취약집단의 의료적·사회적 보호, 의료인 교육과 역량 강화,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① 내과적·외과적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②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도입과 보급, ③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재생 건강 서비스의 공적 제공 확대, ④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생산과 보급, ⑤ 의료 제공자를 위한 지침 개발과 교육훈련, ⑥ 성·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 대한 규제와 처벌, ⑦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⑧ 성·재생산 관점의 전환과 보건의료 고급체계의 전환, ⑨ 정부 부처내 협력과 업무 명확화, ⑩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의사결정구조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가) 지방대학 위기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021학년도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전국에 162개소이며, 2037년에 수능 응시가 예상되는 학생수가 입학정원보다 약 16만 명이상 감소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신입생이 대폭 감소하는 등 지방대학의 존립이 위태로운 심각한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포용사회분과에서는 지방대학의 위기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 간담회'를 기획하여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포용사회분과 교육보육소분과 위원들은 학령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수도권으로의 좋은 일자리와 핵심 역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방대 미충원 문재로 지방대 지속가능성 위기가 지속되며,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교육의 질 하락, 졸업자의 취업 상황 악화 등 악순환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였다.

〈간담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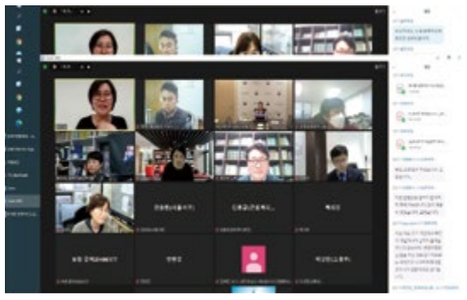
이에 지방대학 위기 대응 방안으로 ① 중앙정부의 재정·법체계 재구조화, ② RIS/지방혁신 플랫폼 구축, ③ 공유대학 모델 확산, ④ 한계대학 정비, ⑤ 지역 국립대 역할 강화, ⑥ 정원 및 대학 규모 조정, ⑦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발굴, ⑧ 대학평가 및 평가 기준 개선 등 8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나)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

코로나19로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국회와 노동계의 상병수당제도 도입 논의가 지속 촉구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년 7월)을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로드맵이 제시되고, 2022년 시범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이에 포용사회분과에서는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시범사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하여, 건강·고용·산재·연금 등 사회보험과 조세·의료·보건·복지·민간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다학제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간담회 활동〉





포용사회분과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쟁점을 수혜자의 인권적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였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간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환자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상병수당제도 실행방안을 위한 콜로퀴엄을 개최하였다.

다)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추진하였고,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정책을 지속 발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

도 높은 상화이였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양적 확충에 대한 의지 부족,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 분권에 대한 의지 부족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나타나게 되었다.

〈간담회 활동〉



이에 포용사회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및 진료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강화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극복방향과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한계와 극복방향을 논의하고,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확충방안, 공공보건의료 재원조달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및 진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복지부, 질병청,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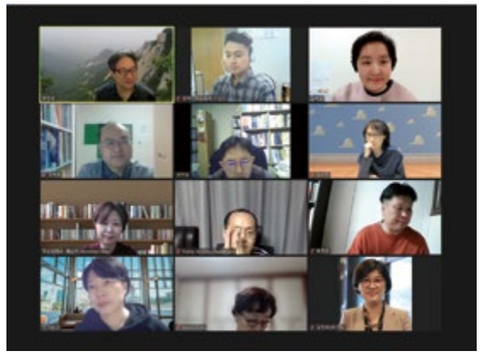
라) 지역 돌봄 체계 구축 간담회

코로나19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돌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고, 이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므로 이를 위하여 영유아·초등학생·장애인·환자·노인에 대한 돌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포용사회분과는 인구 집단별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지역사회통합돌봄전문위원회와 협조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운영하는 '지역돌봄 체계 구축 간담회'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추진하였다.

포용사회분과는 우선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로써 돌봄 서비스의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커뮤니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사회의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구상하였다. 또한 인구집단별로 영유아·초등학생·간호간병·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현황과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을 학계·현장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간담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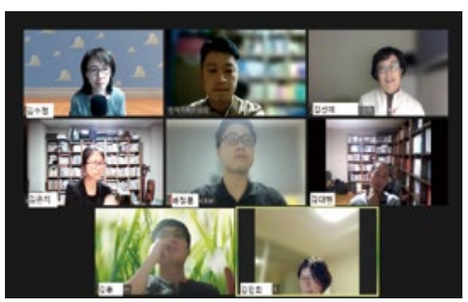


마) 긴급돌봄체계 구축 방안 모색 간담회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필요성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돌봄 대응 역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취약계층 영유아 및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이 대두되었다.

〈간담회 활동〉





이에 긴급돌봄체계 구축 관련한 쟁점을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고,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의 긴급돌봄 운영실태를 진단한 뒤, 교육부·복지부·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긴급돌봄 체계를 내실있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간의 긴급돌봄 정책 추진경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긴급돌봄체계 구축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급돌봄 체계 구축 실태를 진단하고, 내실있는 긴급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며,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이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바) 교육개혁과 인력양성 간담회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와 지속가능사회분과는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서열화 해소, 교육양극화 극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체제 개혁 방안이 필요하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교육대전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분과 합동으로 '교육개혁과 인력양성' 간담회를 2021년 12월에 추진하였다.

〈간담회 활동〉





이를 통해 대학 서열 해소,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 불평등 해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불평등 해소, 청년세대를 위한 교육복지와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와 창조권력으로서의 대전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내실있는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서울대 10개를 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식과 함께, 지역거점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을 서울대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방안,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교육혁명과 대학체제 개편방안,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대 상생 발전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거점국립대학체제 연구, 마스터플랜을 위한 TF 마련,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행과제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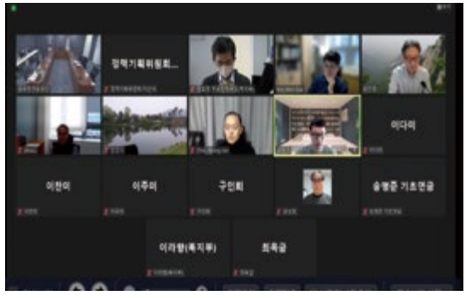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심각한 도전이 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용사회분과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다양한 연금제도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국민연금제도의 적정성과 재정안정화 방안, 기초연금제도의 발전방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등 타 연금제도, 연금개혁 방안과 거버넌스 방안 등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구체적인 대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급여인하와 조세투입과 같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금개혁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연급수급연령 검토, 퇴직연금의 공공성 강화 등의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도적 이슈들이 연계되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간담회 활동〉





제4절

지속가능사회분과

1. 개요 및 구성

가. 개요

1) 분과의 활동 목적 및 방향

지속가능사회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된 3대 국정전략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기후환경·안전 소분과),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공정사회 소분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문화사회 소분과)에 포함된 19개(55~73번) 국정과제에 대하여 각 기관과 친밀한 소통·협력을 통한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조정·보완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기후환경·안전 소분과는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노력 및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한국 사회 전반의 친환경, 저탄소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국가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제도 확대를 담당하였다.

공정사회 소분과는 대표적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로 노동정책의 개혁성을 지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휴식 있는 삶’의 구체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젠더 폭력 및 채용을 포함한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응하여 직장 내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및 제도의 설치 확대를 통해 폭력 예방 및 피해 보호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당하였다.

문화사회 소분과는 노동시간에서 자율시간으로, 인간 소외에서 인간 해방으로 이행하는 문화사회(경제사회-복지사회-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문화안전망 구축으로 국민 누구나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회복과 전환의 관점에서 예술인 권리보장, 스포츠 인권, 문화도시 건설,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 관광, 국민 여가 등 문화와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추진현황 평가 및 미래 정책의제 발굴을 담당하였다.

2) 소분과 구성 및 담당 국정과제

가) 지속가능사회 분과 위원 현황

지속가능사회분과는 15명의 위원과 1명의 분과위원장, 2명의 부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후환경·안전소분과, 공정사회소분과, 문화사회소분과 3개의 소분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각 시기별 분과 및 소관 국정과제별 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 현황〉

구분	위원 현황
1기 (’18~’19)	안종주(위원장), 김태만, 정희정, 김좌관, 윤순진, 박진희, 윤동근, 류현숙, 심미선, 곽병창, 김국진, 김창룡, 허문경, 홍기원 위원
2기 (’21~’22)	윤순진(위원장, ~’21.5.), 추장민(위원장, ~’21.11.), 김경희(위원장, ~’21.12.), 박영정(부위원장), 강태선, 김종영, 류현숙, 박은정, 이동연, 유정민, 장덕진, 정재엽, 주영수, 최동진, 최세정, 최인이, 한귀영 위원

나) 소분과별 국정과제 및 소속위원 현황

〈소분과별 국정과제 및 소속 위원 현황〉

구분 (분과 위원장)	소분과 해당 국정과제	소속 위원 현황
1기 (’18.10.~’19.12.) (안종주)	안심사회(8개) 55~62번	○ 소분과장 : 안종주 ○ 분과위원 : 김좌관, 류현숙, 박진희, 윤동근, 윤순진, 정희정
	문화국가(6개) 67~70번, 72~73번	○ 소분과장 : 김태만 ○ 분과위원 : 김국진, 김창룡, 곽병창, 심미선, 홍기원, 허문경

구분 (분과 위원장)	소분과 해당 국정과제	소속 위원 현황
2기 ('21.1.~'22.5.) (윤순진, 추장민, 김경희)	기후환경·안전(8개) 55~62번	○ 소분과장 : 강태선 ○ 분과위원 : 류현숙, 유정민, 주영수, 최동진, 추장민
	공정사회(5개) 63~66번, 71번	○ 소분과장 : 김경희 ○ 분과위원 : 김종영, 박은정, 장덕진, 최인이, 한귀영
	문화사회(6개) 67~70번, 72~73번	○ 소분과장 : 박영정 ○ 분과위원 : 이동연, 정재엽, 최세정

다) 국정과제별 전담위원 현황

〈국정과제별 전담위원 현황, 2021년 12월 1일 기준〉

번호	국정과제	부처	전담위원
(전략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기후환경·안전 소분과)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류현숙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강태선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 식약처	주영수
58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추장민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추장민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 원안위	최동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최동진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류현숙, 강태선
(전략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공정사회 소분과)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최인이, 김종영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박은정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김경희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김경희
(전략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문화사회 소분과)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박영정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이동연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정재엽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최세정
71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한귀영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이동연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박영정

나. 구성

○ 2기 지속가능사회 분과(15명 : 男 9명, 女 6명 / 연임 3명, 신규 12명 /'22.4.1. 기준)

- 위원 구성 현황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성명순

〈2기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 현황, 2022년 4월 1일 기준〉

성명	학력	주요경력	비고(임기)
김경희 분과 위원장	○ 연세대 사회학과 ○ 위스콘신-매디슨대 사회학 박사	○ 現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국가인권위 차별조정위원(전)	연임('19.12.31. ~'21.12.30.)
박영정 분과 부위원장	○ 전남대 역사학과 ○ 건국대 국어국문학 박사	○ 現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신규('19.12.31. ~'21.12.30.)
강태선	○ 서울대 농생물학과 ○ 서울대 보건학 박사	○ 現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 前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신규('21.4.30. ~'23.4.29.)

성명	학력	주요경력	비고(임기)
김종영	○ 서강대 사회학과 ○ 미국 일리노이대 박사	○ 現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 現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	신규('21.11.2.~'23.11.1.)
류현숙	○ 이화여대 철학과 ○ 영국 맨체스터대 정책학 박사	○ 現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자체평가위원	연임('20.12.29.~'22.12.28.)
박은정	○ 이화여대 법학과 ○ 이화여대 법학 박사	○ 現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현)	신규('19.12.31.~'21.12.30.)
이동연	○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 중앙대 영어영문학 박사	○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 서울시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위원장(현)	신규('19.12.31.~'21.12.30.)
유정민	○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 美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 박사	○ 現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前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신규('22.3.15.~'24.3.14.)
정재엽	○ 고려대 영어영문학 ○ 중앙대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 現 예원예대 교양학부 부교수 ○ 前 예원예대 교학지원처 부처장	신규('21.11.2.~'23.11.1.)
주영수	○ 서울대 의학과 ○ 서울대 의학 박사	○ 現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 ○ 한림대 의대 교수	신규('19.12.31.~'21.12.30.)
추장민 미래정책 연구단장	○ 서울대 신문학과 ○ 북경대 환경과학 박사	○ 現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신규('19.12.31.~'21.12.30.)
최동진	○ 서울대 토목공학과 ○ 한국과학기술원 토목공학과 박사	○ 現 국토환경연구원 대표이사 ○ 現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신규('21.5.28.~'23.5.27.)
최세정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 美 미시간주립대 광고학 석·박사	○ 現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 現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신규('20.4.3.~'22.4.2.)
최인이	○ 이화여대 사회학과 ○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 사회학 박사	○ 現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現 비판사회학회 부회장	신규('20.4.3.~'22.4.2.)
한귀영	○ 서울대 사회학과 ○ 서울대 행정학 박사	○ 現 한겨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 現 경희대 미래시민리더십학과 겸임교수	연임('19.12.31.~'21.12.30.)

2. 주요 활동

가. 전체회의 개최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들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분야의 19개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가 국정 정책목표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추진상황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분과는 2018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분과를 신설하는 운영세칙이 개정되면서 포용사회에서 분리 신설되었다. 첫 번째 분과 전체회의는 10월5일에 개최되었고 안건으로는 ① 운영위 회의결과 공유, ② 소분과 회의결과 및 활동계획 보고, ③ 정책위원 계간지 기고(가짜뉴스), ④ 정책연구 TF(재생에너지, 문화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3번의 분과회의를 진행하면서 ⑤ 지속가능분과 운영계획, ⑥ 2018년 하반기 국정과제 조정·보완 검토 및 의결 요청서 작성 및 보고, ⑦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TF 제안서 검토, ⑧ 2019 아젠다 추진 계획서 작성 및 선정 안건을 논의하고 추진하였다.

2019년도 분과 전체회의에서는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주요 현안으로는 ① 운영위 회의결과 공유, ② 소분과, TF(재생에너지 수용성강화, 관광분야 일자리 활성화 방안,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TF)등 주요 진행사항 공유, ③ 국정과제 전담위원 조정, ④ 상·하반기 국정과제 조정 보완 검토 결과 의결 및 보고, ⑤ 문재인 정부 2주년 전문가 간담회 개최(환경, 미디어, 재난안전 분야), ⑥ 미세먼지 긴급 대책 제안 - 위기를 기회로 - 보고서 작성, ⑦ 하반기 정책과제(7대 분야) 제안 보고서 작성, ⑧ 한중 물·환경산업협력 전략방안TF 진행 및 보고서 작성, ⑨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서 작성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도 분과 전체회의는 총 11회를 개최하였다. 제2기 정책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포용사회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되었던 분과위가 '포용사회분과'와 '지속가능사회분과'로 분할되었다. 제2기 지속가능사회분과는 기존 기후환경·안전 소분과, 문화사회 소분과 외에 공정사회 소분과가 이관 조정되어 3개 소분과로 구성되었다.

주된 의제로는 ① 국정과제 이슈 발굴 및 상반기 활동 계획(TF/현안 간담회 등) 논의, ② 2050 탄소중립 연속 간담회 및 정의로운 전환 간담회 진행 및 제언 보고서 작성, ③ 복합위기시대 범정부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보 방안 TF 진행, ④ 공정사회 간담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 ⑤ 문화 미디어분야 정책 이슈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⑥ 분과 단행본 '미래사회 재난관리'(안) 단행본 제작, ⑦ 문재인 정부 4주년 '50대 핵심성과'에 대한

분과 위원 의견서 작성, ⑧ 지속가능분과위원회 미래정책의제 선정 발표, ⑨ 정책 간담회 진행(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 산림청) 등 이었다.

2022년도 분과 전체회의는 총 4회를 개최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① '복합재난 시대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단행본 발간 마무리, ② 국정백서 감수 및 수정 보완, ③ 정책기획위원회 백서(지속가능사회분과) 작업 진행, ④ 3개 소분과별 간담회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이었다.

지속가능사회분과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전체회의가 개최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가 이뤄졌으며 2024년 4월 1일 기준 총 29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연도별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전체회의 개최 현황〉

연도	개최수	주요 논의내용
'18	4	ㅇ 지속가능분과 운영계획 수립 ㅇ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TF 제안서 검토 ㅇ 2018년 하반기 국정과제 조정·보완 검토 및 의결 요청서 작성 및 보고 ㅇ 2019 아젠다 추진 계획서 작성 및 선정
'19	10	ㅇ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TF 진행 및 보고서 작성 ㅇ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TF,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보고 ㅇ 2019년 상·하반기 국정과제 조정·보완 검토 및 의결 요청서 작성 보고 ㅇ 문재인 정부 2주년 전문가 간담회 개최(환경, 미디어, 재난안전 분야) ㅇ 미세먼지 긴급 대책 제안 - 위기를 기회로 - 보고서 작성 ㅇ 관광분야 일자리 활성화 방안TF 진행 및 보고서 작성 ㅇ 한중 물·환경산업협력 전략 방안TF 진행 및 보고서 작성 ㅇ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서 작성 ㅇ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TF' 진행 및 보고서 작성 ㅇ 하반기 정책과제(7대 분야) 제안 보고서 작성
'21	11	ㅇ 국정과제 이슈 발굴 및 상반기 활동 계획(TF/현안 간담회 등)논의 ㅇ 2050 탄소중립 비전 구체화 : 탄소중립 연속 간담회 진행 ㅇ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 간담회 진행, 제언보고서 작성 ㅇ 복합위기시대 범정부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보 방안 TF 진행 ㅇ '미래사회 재난관리'(안) 단행본 제작 ㅇ 공정사회 간담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 진행 ㅇ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간담회 진행, 제언보고서 작성 ㅇ 문화·미디어분야 정책 이슈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ㅇ 문재인 정부 4주년 '50대 핵심성과'에 대한 분과 위원 의견서 작성 ㅇ 지속가능분과위원회 미래정책의제 선정 발표 ㅇ 정책 간담회 진행(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 산림청)
'22	4	ㅇ '복합재난 시대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단행본 발간 마무리 ㅇ 국정백서 감수 및 수정 보완 작업 논의 ㅇ 정책기획위원회 활동백서(지속가능사회분과) 작업 진행 ㅇ 3개 소분과별 간담회 보고서 작성 및 보고(공정사회, 문화사회, 기후환경안전)

1) 지속가능사회 분과위 신설, 통합, 분할

정책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18년 9월 14일) 운영세칙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분과를 신설하였다.

2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권(분권발전 통합), 국민성장, 포용사회(지속가능 통합), 평화번영 분과(2020년 2월 27일)로 통합 운영하였다.

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되었던 분과 운영은 소관분야의 이질적(국민주권), 인원의 대규모(33명)로 인하여 정책기획위원회 제7차 회의(2020년 12월 4일) 운영세칙 개정(안)으로 포용사회 분과를 포용사회, 지속가능 분과로 분할하고, 공정사회 소분과 이관을(포용사회→지속가능사회)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사회분과는 기후환경 안전소분과, 문화사회소분과, 공정사회소분과로 운영되었다.



'19년 정책기획위원회 워크숍 (1.17.~1.18.)



제8차 전체회의 지속가능사회분과('21.6.29.)

나. TF·간담회 등 주요활동

1) TF 활동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지나면서 일상적인 국정과제 관리기능은 줄여나가고, 분과TF 등을 통한 '중장기적 전략'과 '현안과제 연구 개선', '시급하고 구체적인 정책이슈'에 대한 집중 연구 검토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사회분과는 2019년 재생에너지 수용성강화 TF,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TF,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TF, 관광분야 일자리 활성화 방안 TF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TF 활동 현황〉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방안 TF (단장 : 안종주)	'18.10.~'19.2.	10명 (내부 5, 외부 5)	○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환경영향 전반 가이드라인 재정비 필요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TF (단장 : 김창룡)	'19.4.~8.	6명 (내부 5, 외부 1)	○ 보편적 미디어서비스 향유권,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시 ○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 구축 필요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TF (단장 : 안종주)	'19.8.~11.	4명 (내부 3, 외부 1)	○ 안전취약계층 전담조직 개설 ○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고 휠체어가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한 안전한 대피소 필요
관광분야 일자리 활성화 방안 TF (단장 : 허문경)	'19.8.~11.	5명 (내부 4, 외부 1)	○ 협동조합연합회 결성 촉진 및 규모화 ○ 관광분야 사회적경제 일자리 관리

가)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방안 TF('18.10.~'19.2.)

① 시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48.7GW의 태양광, 풍력 신규 설비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태양광 시설로 주변 온도 상승으로 농사 피해',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조업 피해', '육상풍력 설치로 인한 소음과 저주파 피해'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등 이행 계획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개별 갈등 해결 방안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3건 중 1건은 주민 반발 때문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주민 참여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② TF 활동 배경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집요하게 재생 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갈등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왜곡·과장보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특히 태양광 시설이 돈벌이가 된다는 판단에 일부 업자들이 부적절한 위치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훼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왜곡·과장보도와 이것이 맞물려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져 사업을 반대하는 등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③ 제안 주요 내용

태양광 발전의 경우 벌목-간벌을 통한 편법 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환경영향 전반을 고려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이격거리 제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과 입지 계획이 연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관련 지침을 개선하여야 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담당 지자체 인력이 부족해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담당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이를 하루빨리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익 공유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마을 공모형 계획입지 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워크숍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역 계획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정부 연구기관에서 현장 갈등에 대한 종합 분석 및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TF('19.6.~'19.8.)

① 시기

국민의 미디어역량제고를 위해 방통위(미디어리터러시), 과기부(인터넷윤리), 문체부(뉴스리터러시) 등이 부처별로 산하 기관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 컨트롤 타워 부재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11,636개 초 중 고교 중 연간 방통위(300개), 과기부(700개), 문체부(420개)의 미디어교육 지원학교는 12.2%에 불과하다('18년 기준). 또한, 미디어 교육정책의 수행에 있어 ① 부처 간 협업·공유 부재, ② 일년 단위 정책 수립, ③ 교육부 역할부재, ④ 부처별 미디어교육 전담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TF 활동 배경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3]의 핵심 추진사항인 보편적 미디어서비스 향유권, 국민의 미디어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안을

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서 '전 국민의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국민이 누려야할 중요한 미디어복지로 제시함

제시하고 있으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는 이를 견인할 미디어교육환경 조성에 그 성패가 달려 있으므로 국민이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건강한 미디어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정책, 근거법안 제정 등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③ 제안 주요 내용

(정책방향)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국민의 능동적인 미디어 선용과 건강한 미디어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경제, 정치, 사회적 참여기회를 좌우함에 따라 계층·지역간 차별 없는 미디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 연령, 전 지역, 전 계층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여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을 지향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국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미디어융합환경에 맞춰 매체 구분 없는 통합 미디어교육 시행 및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제공을 위한 종합관리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추진체계) 미디어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ㅇ 미디어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미디어교육 분과위원회, 사회미디어교육 분과위원회를 두고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처를 운영한다.
- ㅇ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미교위)는 과기부, 문체부, 교육부, 방통위 등에서 관련전문가를 추천받아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학교미디어교육 분과위원회(9인)와 사회미디어교육 분과위원회(9인)는 미교위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교위 위원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학교미디어교육 분과위원장과 사회미디어교육 분과위원장은 미교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ㅇ 사무처는 상근조직으로 사무처장을 두고 관련 전문가, 부처별 파견인력으로 운영한다.

다)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TF('19.8.~'19.11.)

① 시기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 대응지원을 확보하여 최저안전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장애인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재난대응의 취약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급증한다. 건축법령상 안전기준이 아동관련 시설과 노인관련 시설에만 적용되어 장애인 관련시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였다.

② TF 활동 배경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관련 담당부서(안전개선과, 장애인정책과 등)는 있으나,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과 재난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자는 없는 상황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은 대피소 접근조차 어려우며, 모든 장애유형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는 전무한 상태이다.

③ 제안 주요 내용

안전취약계층 전담조직을 개설하고, 전문 인력 충원 및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고 휠체어가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한 안전한 대피소를 확보해야 한다.

첫째는, 안전취약계층 전담조직 개설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장애통합조정실(ODIC)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 안전취약계층 전담팀 신설이나 전담직원 배치, ② 안전취약계층 코디네이터(가칭)를 충원(기존 재난도우미 등의 역할 확대 가능), ③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및 시설환경 취약성 점검(장애유형별 안전시설, 경보장치·점멸기, 안전벨 등), ④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재난대응 계획 마련, ⑤ 안전취약계층의 인적정보(장애정도 및 유형, 비상연락망 구축 등)와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 사항 등록 및 DB화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연계 가능성 확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장애정보(장애 등급 유무 등)는 민감 정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정보 수집' 가능 조항 추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안전취약계층과 조력자(가족, 이웃, 활동지원사, 코디네이터, 소방관, 담당공무원 등) 대상 맞춤형 안전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둘째는,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고 휠체어가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한 안전한 대피소가 필요하나 장애인만을 위한 대피소를 새로이 설치하기보다는 이미 설치된 대피소에 모든 사람을 위한(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장애유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층 거주 안전취약계층의 계단 이동 수단 마련,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고 편의시설이 있는 내진설계 대피소 마련도 필요하다.

라) 관광분야 일자리 활성화 방안 TF('19.8.~'19.11.)

① 시기

관광분야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미흡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없이 400여개 관광분야 협동조합이 업종별로 분산 관리되어 일자리 실태파악이 곤란하고 관광분야 일자리측정지표에도 협동조합은 누락되어 있는 상태였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업체 수만 제시하였다. '2017협동조합 실태조사'는 산업별 분석이없고, 세부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아 관광분야 현황파악이 곤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중 55개 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경제 일자리는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분야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는 성공사례에서도 영세성을 탈피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연합회 결성 등 규모화가 필요하였다.

② T/F 활동 배경

기획재정부는 현재 설립지원 중심 정책을 추진 중으로 양적 성과만 반영하였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사업 운영률은 낮으며(53.4%) 운영지원은 미흡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정책이 미흡하였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기업육성단계로 진입했으나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③ 제안 주요 내용

'협동조합연합회 결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정책 추진'을 통해 협동조합 규모화를 강력 추진하고 운영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기능을 발휘토록 하는, 관광분야 협동조합 정책이 필요하다.

2) 간담회

〈간담회 현황〉

소분과	주제	일시·장소	주요내용
지속가능 분과위원회	미세먼지 긴급 대책 - 위기를 기회로 -	'19.3.8,11,12.(일)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	○ 전문가 합의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 ○ 행정력 강화 및 체감할 수 있는 긴급 대책 ○ 대중국 및 국제협력 강화
공정사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21.2~6.(월) (4째 목) 2021.7.12.,21 및 2021.8.2. 영상회의	○ 청년세대의 공정성 ○ 고용패러다임의 전환과 고용차별 시정 ○ 고용차별에 대한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사회 분과위원회	탄소중립 연속간담회	'21.3~4.(월)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	○ 탄소중립과 전력시장 ○ 탄소중립과 기업, 지역의 변화 ○ 탄소중립과 대외협력 및 행정·입법 과제
문화사회	문화·미디어분야 정책 이슈 점검	'21.12.8.(수)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문화도시 현황과 과제 ○ 코로나 이후 국민여가 및 관광 회복력 전망 ○ 스포츠 인권 개선,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산업
기후환경·안전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21.10~12.4.(월) 영상회의	○ 글로벌 탄소중립과 국가간 기후정의 ○ 산업부문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과 지역간 기후정의
기후환경·안전	복합위기 시대 범정부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보 방안	'21.3.~7.(월)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	○ 최근 발생하는 글로벌 위기 및 재난의 특징 ○ 해외 미래환경변화 예측과 재난관리 ○ 통합적 국가위기 및 재난안전 체계 구축
공정사회	동일임금 동일노동	'21.10. ~2022.2.(월) 영상회의	○ 동노동임금의 이론적 법리적 쟁점 및 시사점 ○ 다양한 형식의 해외사례 비교 및 정책 시사점 ○ 국가표준직무분석 도구 검토 및 쟁점

가) 미세먼지 긴급 대책 제안

① 배경 및 총론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를 계기로 수질 개선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등 환경 문제가 큰 사건을 계기로 계단식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 곪아왔던 문제가 터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환경 기준을 강화하거나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정에 미세먼지만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 가능한 문제 목록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이어질 장기전이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원인물질을 줄여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프레임을 바꿔 결국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소비행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② 제안 주요 내용

제언1. 전문가 합의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전문가 대 시민 토론회를 통한 합의회의 진행, ② 미세먼지 시민 원탁 테이블(또는 타운홀 미팅) 지역별 개최, ③ '미세먼지소통센터(가칭)' 설립·운영해 미세먼지 소통 강화, ④ 유명인 등 참여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 캠페인, ⑤ 언론인을 위한 미세먼지 길라잡이 제작 등이 필요하다.

제언 2. 행정력 강화 및 체감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미세먼지 관련 전문기관 미세먼지대책위 참여를 통한 컨트롤 타워 역량 강화, ②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응 일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③ 공공기관 2부제 실시 고위공무원은 모두 대중교통 이용 등 솔선수범, ④ 도시 공원 일몰제 적극 대응 통해 도시공원 확대, 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목표 강화 및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제시, ⑥ '미파라치' 도입 ⑦ 미세먼지 발생원 감시에 시민 참여 및 공공일자리 창출, ⑧ 미세먼지 긴급 대피소 설치를 제안하였다.

제언 3. 대중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다자간 대기오염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 간담회

① 배경 및 필요성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청년세대 중심의 공정성 이슈 및 무기 계약직화의 한계 등 쟁점이 대두되었으며,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면서, 정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였다.

〈간담회 추진 일정〉

일시	간담회 주제
1차('21.2.24.)	공정성의 트랩에 갇힌 비정규직 문제전반
2차('21.3.31.)	청년세대 노동과 공정성
3차('21.4.28.)	청년층의 삶의 질: 일과 생활을 중심으로
4차('21.5.26.)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현황과 문제점, 대안
5차('21.6.30.)	자회사를 이용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식의 법적 쟁점
6~8차(내부 간담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 평가

② 정책과제

○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근래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사람의 지위는 다양해졌지만, 최저근로조건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보호법제는 경제적 및 인적 종속성 개념에 기초하여 적용범위에 한계를 갖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제를 통해 보호받는 일반적인 최저근로조건(특히, 최저임금의 보장, 휴일과 휴식의 보장, 유급휴가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 전문 분쟁해결제도의 이용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 요구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제안되었다.

① 첫째는,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특별법적 형태로 노동의 조건을 보호하는 것(예를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이 필요하다.

② 둘째는, 일하는 사람의 다양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노동의 조건을 정하거나 구분해 분류하는 것은 다소 어려우므로, 주로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통해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재해보상제도나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셋째는,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고 이 기본적 권리들이 최대한 노사자치의 영역 및 입법의 영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은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기본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비정규직차별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태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가 충족된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동등한 노동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이나 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당연하게 고용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는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인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지위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탄소중립 연속 간담회 결과

① 배경 및 필요성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점검·평가·보고 수단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관련 개별법 제·개정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주제	간담회 주제
전력시장	○ 현안 :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영향 ○ 정책과제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운영시스템 도입,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및 고도화,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기업변화	○ 현안 : 산업 및 기업 탄소중립전략 마련, 화석연료 관련 산업 고용 및 지역 영향, 기업 인식 미흡, 탄소무역장벽 대두 ○ 정책과제 : 시장 작동 제도 및 시스템 도입, 기술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화석연료 관련 산업 단계적 퇴출방안 마련, 중소기업 정책 홍보 및 지원, 탄소누출방지 통상전략 마련
지역변화	○ 현안 :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국민여론,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및 이해당사자 갈등, 지역 권한 및 역량 한계 ○ 정책과제 : 에너지정보 공유시스템 확충,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제 마련, 지역기반 에너지전환 융복합 사업 촉진,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분권화 검토, 지역 탄소중립 지원기구 설치
에너지전환/정의로운 전환	○ 현안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패러다임 변화요구 증대, 산업과 지역별 정의로운 전환 이슈 대두 ○ 정책과제 : 신규 전력수요 반응자원(DR) 시장 및 보상체계 도입, 분산에너지원 전력계통 고도화,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및 정책수단(소요 재원 등) 마련, 산업 및 지역별 전환 영향 메커니즘 현장 조사분석 및 사전 갈등예방 방안 마련
대외협력	○ 현안 : 국제사회 2030 국가온실가스목표(NDC) 상향 압력 대두, 한미 정상회담 탄소중립 의제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탄소중립 연계 접근 가능성 ○ 정책과제 : 2030 NDC 상향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기후 정상회의 외교전략 마련, 한미 정상회담 탄소중립 협력강화 방안 마련, 한반도 탄소중립 남북협력 방안 마련
행정/입법과제	○ 현안 : 탄소중립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정립, 정부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통합·조정,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 및 개별법 제·개정 ○ 정책과제 : 탄소중립위위원회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국민 참여 및 전문성 강화 등) 마련, 탄소중립 이행계획 점검·평가·보고 환류체계 제도화 및 제도간 정합성 확보, 탄소중립 이행계획 기반 정부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 탄소중립 관련 개별법 제·개정

② 제안 주요 내용

(정책개발) 탄소중립 이행계획 점검·평가·보고 수단 개발, 탄소중립 관련 개별법 제·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조사) 탄소중립 산업 및 지역별 영향 메커니즘 현장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정책홍보) 오피니언 리더 참여 및 예산 확충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공론활동) 상반기 내에 탄소중립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주관 '(가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추진한다.

라) 문화·미디어분야 정책 이슈 점검과 과제 제안 간담회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전환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문화·미디어 분야 미래정책 의제를 발굴, 제안하기 위하여 6개 분야 전문가를 초대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문화·미디어분야 간담회 현황〉

구분	일시·장소	논의내용
1차	'21.12.8.(오전) 정책위 대회의실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문화도시 지정 현황과 과제 : 이영준(김해문화도시센터 센터장) ○ 코로나 이후 관광 회복력, 그 과제와 전망 : 이훈(한양대 교수)
2차	'21.12.8.(오후) 정책위 대회의실	○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전망 : 최세경(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스포츠 인권 개선 현황과 과제 : 정용철(서강대 교수) ○ 코로나 이후 국민 여가의 전환과 전망 :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12월 8일 오전 오후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의 과제, ②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문화도시의 실현, ③ 지역 중심 관광정책 체계 구축, ④ 디지털 공정 경쟁 환경 조성, ⑤ 인권이 존중되는 스포츠문화 확립, ⑥ 일과 여가의 균형, 여가시간 및 공간 확보 등 문화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 탄소중립과 정의로운전환 간담회

① 배경 및 필요성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이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이슈를 국가간 정의, 지역간 정의, 계층간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가 주로 산업구조의 전환에 국한하여 논의되어왔는데, 국가 간 기후정의, 지역 간 기후정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② 제안 주요 내용

○ 국가간 기후정의

우리나라의 책임에 대한 평가 : 국가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책임과 감축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NDC 상향 안이 국제적 책임과 기후정의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각국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수입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배출량을 유발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책임은 20위 안에 포함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과 원조의 확대 :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과 개발원조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편할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규모도 작고 여전히 개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제관계 속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평가 : NDC 산정에 국외감축량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혹은 공급과 소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세 등이 현실화될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산업부문 기후정의

저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 산업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은 기존산업에 대책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강화 : 산업부문 전환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중심의 기술개발에 맞추어져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피해집단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미련 :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재편과 재직 중 교육을 연계하고 전직준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지원 : 전환의 과정에서 고용영향은 직종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역간 편차도 클 것이므로 고용감소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NDC 상향안을 반영할 경우 석탄발전소의 LNG 발전으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취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ㅇ 지역간 기후 정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 지역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간 협력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전남간 협력모델인 지역상생나눔발전소, 광역지자체간 공동목표의 설정(예 : 부울경 메가시트)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마련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바) 복합위기 시대 범정부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보 방안 간담회

①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집중, 고령화, 기술 발전에 의한 초연결사회 등 글로벌 환경변화로 세계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과 미래재난의 특징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가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재난의 위치적 경계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유엔 재해위험경감사무국(UNISDR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과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 등에서도 이러한 위험의 신종, 대형복합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재난의 피해 역시 기존의 경제, 사회, 정치, 환경적 요인들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차별적으로 집중되면서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현행 재난관리 체계와 역량은 재난의 대형복합화, 이번 코로나19처럼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신종위험 증가, 그리고 재난의 양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 및 거버넌스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가 통합되어 있어 일상적 안전사고 대응과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재난재해가 비체계적,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체계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난 2011년 일본 쓰나미가 원전 사고로 이어지는 초대형복합재난에 속수무책이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재난에는 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의 법제, 재난 유형에 따른 분과적 거버넌스 기반으로는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재난 사고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즉,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양상은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거나 이러한 새로운 위험이 전

통적인 자연, 사회재난과 복잡하게 얽혀 신종복합대형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 화학사고, 자살 등을 필두로 한 기존 사회재난은 그 발생빈도와 총 피해규모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안전 체감도와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평택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2021년 4월 22일), 광주시 학동(2022년 6월 9일)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원인을 제어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관리 주무 부처 혹은 예방 관련 주무 부처만이 아니라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② 제안 주요 내용

① 서론,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재난관리 발전과정과 특징, 최근 국내·외 재난발생 동향,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미래 재난관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 및 발전 방향을 제시(류현숙, 추장민) ② 기후재해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언(이상은, 최동진) ③ 미래사회 도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윤동근) ④ 코로나19 유행과 공공보건의료의 대응(주영수) 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의 과제(강태선) ⑥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한계와 과제(나채준) ⑦ 정책제언 및 결론(정지범)으로 이어지는 간담회 결과를 단행본('복합재난시대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으로 제작하였다.

*집필진 : 추장민 미래정책연구단장, 강태선 소분과장, 류현숙, 주영수, 최동진 위원, 이상은 센터장(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정지범 교수(UNIST), 나채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윤동근 교수(연세대)

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간담회

①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한 차별은 임금격차로 나타나며,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고용차별을 시정하고 평등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고용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및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책적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임금체계 비교〉

구분	연공급 (직위등급제)	직능급 (직능자격제)	역할급 (역할등급제)	역량급 (역량등급제)	직무급 (직무등급제)
내용	○ 사람중심 접근 ○ 조직내의 위계질서 결정 ○ 직위와 직급 일치 ○ 근속연수가 중요	○ 사람(능력) 중심 접근 ○ 직무수행 능력의 발전단계에 따라 자격등급 ○ 직위와 직급 분리 ○ 능력 중요	○ 사람에 직무 중심가미 ○ 직무수행자의 역할에 따른 등급 결정 ○ 직무수행역할 중요	○ 직무에 사람중심 가미 ○ 직무수행자의 역량에 따른 등급 결정 ○ 직무(직군)에 따라 역량등급 차이 ○ 직무역량 중요	○ 직무 중심 접근 ○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 결정 ○ 직무평가에 의한 직무의 상대적 가치 중요
장점	○ 기업충성도 및 장기근속 유도 ○ 승진욕구 동기부여 ○ 기업특수적 인재육성 가능	○ 승진과 승격의 분리로 인사적체 현상 해소 ○ 능력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 능력단계의 설정 가능 ○ 인력 운영의 유연성	○ 조직의 구조와 일치하는 직급체계 설계 가능 ○ 브로드밴드로 인해 인력관리 유연성 강화 ○ 우수인재의 발탁인사 가능 ○ 성과주의 인사관리 강화	○ 브로드밴드로 인해 인력관리의 유연성 강화 ○ 승진보다는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 우수인재 확보 용이 ○ 역량 단계의 설정으로 인재육성 강화	○ 합리적인 인사관리 가능 ○ 동일가치 동일임금으로 공정성 확보 ○ 인건비상승 억제 ○ 우수인재 확보 용이 ○ 성과주의 인사관리 가능
단점	○ 승진 및 인사적체 ○ 고령화로 인건비 상승 ○ 직급과 생산성의 불일치로 인한 인건비 부담 ○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한 승진 결정	○ 연공서열적 운영 ○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과중 ○ 승격관리의 비효율	○ 역할의 의미가 애매모호함 ○ 승진 및 인사적체로 동기저하 ○ 사람 중심 인사관리관행으로 인한 연공서열적 운영	○ 역량수준의 측정이 어려움 ○ 보상의 강화로 인해 인건비 상승 가능 ○ 역량등급과 수행하는 직무가치의 불일치 발생	○ 직무 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조직경직성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관리부담 및 갈등 ○ 능력개발 미흡 ○ 승진에 의한 동기저하
적합환경	○ 안정적인 환경 ○ 지속적 성장 전략 ○ 위계적 조직문화 ○ 기업 특수적 조직역량	○ 불확실한 환경 ○ 성장의 둔화 ○ 능력주의 조직문화 ○ 구성원 역량 강화	○ 불확실한 환경 ○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 ○ 성과주의 조직문화 ○ 리더십역량 강화	○ 불확실한 환경 ○ 인력의 유연한 활용 ○ 성과/능력주의 조직문화 ○ 구성원역량 강화	○ 안정적인 환경 ○ 비용절감형 조직 전략 ○ 공정한 문화 ○ 전문가적역량 중요

* 출처 : 박용철('21)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및 쟁점, 발표문, p.6~7.

* 자료 : 박준우('11), 유규창('14), 이사다 마쯔오('06) 정리.

② 제안 주요 내용

○ 직무급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① 여성 집중 직무, 비정규직 업무, 위계가 반영된 직무 등에서 저평가 경향 극복하는 문제, ② 연공급 요소 반영의 문제 및 새로운 임금제도에 대한 저항을 해소하는 문제, ③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직무분석의 틀에 갇힐 우려 존재, ④ 직무분석 기준 마련에 노동의 참여 보장의 문제 등이다.

○ 고용평등 패러다임 혹은 담론 지형의 전환이 필요하다.

① 현재 고용형태 중심 논의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성격과 가치, 차별의 문제에 주목, ② 고용불평등 해법을 고용형태만을 바꾸는 것에서만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노동에 대한 보상인 임금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논의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건의 보고서 및 단행본

보고서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폐기물 관리 정책 개선 방안 (대표집필 : 박진희 위원)	'18.5.	2명 (박진희 위원, 안종주 소분과장)	○ 재활용, 재사용, 폐기물을 포괄하는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 분리수거 및 선별 체계 개선
생활 자연방사선(라돈 침대 사태)관리 정책 개선 방안 (대표집필 : 안종주 위원)	'18.6.	2명 (박진희 위원, 안종주 소분과장)	○ 신속한 제품 수거 처리 및 안전조치 시급 ○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선제적 대응 ○ 방사선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재생에서지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서 (대표집필 : 안종주 위원)	'18.9.	5명 (김좌관, 박진희, 윤순진, 안종주, 정희정 위원)	○ 에너지 전환 정책 지향에 맞게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 ○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체제를 개선할 필요 ○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법제화 필요
복합재난 시대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단행본)	'21.9. ~'22.3.	9명 (추장민 단장, 강태선 소분과장, 류현숙, 주영수, 최동진 위원 외 4명)	○ 기후재해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언 ○ 미래사회 도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 코로나19 유행과 공공보건의료의 대응 및 향후 과제 ○ 산업재해관리-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한계와 과제 ○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가) 폐기물 관리 정책 개선 방안

2018년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이후 민간 재활용 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재활용만이 아니라 재사용, 폐기물 처분을 모두 포괄하는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내용으로는 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아우르는 국내 발생 폐기물 전체에 대한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필요, ② 제조 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생산자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 ③ 분리 배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기반 구축, ④ 분리수거 및 선별 체계 개선, ⑤ 재활용 수요 확대를 위해 지역순환완결구조에 대한 인센티브제.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만든 재활용품 구매 시 공공구매 가산점 부여, ⑥ 소비자의 녹색 구매 활동 진작으로 재활용 제품 수요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생활 자연방사선(라돈 침대 사태)관리 정책 개선 방안

라돈 방사성 침대 사태 이후 생활방사선 및 자연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라돈 침대 사용자는 물론이고 방사성 광물을 사용한 각종 생활제품으로 인한 건강 영향과 대표적 자연방사선인 라돈에 대한 공포가 국민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내용으로는 ① 방사성 광물이 들어간 생활제품은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② 음이온 광고 제품들 모두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여 제품 사용자들이 보이는 불안감 해소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③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라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금연 광고처럼 라돈 위험 경고도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⑤ 종합 대책 수립 필요(제도 개선, 조직 개선,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라돈위원회는 단순 자문조직이 아니라 심의·의결 성격의 상설 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건의하였다.

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이 최근 농·산촌 현장에서 주민과의 잦은 갈등 등과 제

도 미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내용으로는 ① 에너지 전환 정책 지향에 맞게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 ②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③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기 목표를 법제화, ④ 수송과 열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율 제고 노력 제도화, ⑤ 'RE100'과 같은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촉진 프로그램 마련, ⑥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 ⑦ 이익공유제·시민자산화·계획입지제도 도입, ⑧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 방안 마련, ⑨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재생에너지 관련 보험 도입, ⑩ 재생에너지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⑪ 태양과,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⑫ 재생에너지 확산 가로막는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등) 개정 등 이었다.

마) 단행본 '복합재난 시대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① 제안 주요 내용(결론)

인류는 상호 연결되어 경계가 불분명한 복합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는 신종, 대형, 복합으로 특징되는 재난의 위험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재난이 일상화되고 통제력이 미비한 위험사회에 벗어나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을 통제하는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행 재난관리 시스템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성찰하고 복합재난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사회의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 도시, 코로나19, 산업, 재난관리 법체계 및 정책수단 등 분야와 영역별로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서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 체계 정립,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 등 인명구조 기관의 현장 대응 제도 및 역량 강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재해 적극 대응, 국민 안전권 보장 및 안전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생활 안전관리 강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코로나19의 모범적 방역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진화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재난관리의 정책추진 여건이 점점 악화되면서 정책의 한계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한계로서 초대형화와 복합화 추세에 있는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미비, 국민 안전권 보장과 국민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법적·제도적 기반 미흡, 지자체 역량 부족과 중앙-지방-민간 협력 미흡, 재난 발생과 피해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인권보호 조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재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래 복합재난 관리의 4대 정책방향으로서 첫째, 전 재해 차원, 회복력 중심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위험 및 신종재난 대비 위험관리, 셋째, 포용적 재난관리 확대, 넷째, 재난대응과 인권보호의 균형과 조화를 제시하였다.

[제1부 : 기후재해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언]

미래 기후재해 위기관리 정책은 먼저 기존 정책이 수리·수문, 생태·환경, 안전관리와 재정부담, 위험도 인식, 도시개발 등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주요한 정책방향은 첫째, '기술사회' 접근법에 따른 방어시설에 의존하는 위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재해로부터 토지이용, 생활패턴 변화 등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녹색사회'의 접근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기후재해 극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도시·환경과 조화되어 공편익을 가져다주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 방재시설의 제 기능 발휘를 위한 적정한 관리 의무화 및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완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후재해 위기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서 기후재해 안전도시 조성사업 본격화, 위기경보체계 정비 및 '잘 계획된' 응급조치 수단 확보, 자연기반 홍수관리해법 적극 활용, 기후재해 방어시설 유지관리 강화, 기후재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5가지를 제안하였다.

[제2부 : 미래사회 도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도시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방향은 첫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위험요소 자체의 차단이나 제거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의 완화, 취약성 개선, 피해에 대한 회복능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즉, 재난으로부터 국가 및 지역사회, 개인의 안전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저감 및 복구 역량 강화를 통한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재

난안전과 관련한 통합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안전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에 기반한 도시안전정보 수집·공유,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응 대책 수립, 미래 재난 대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도시 회복력 증진 전략 수립, 미래 재난 대비 ICT 등 신기술과 방재·안전 서비스를 접목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등 5가지를 제안하였다.

[제3부 : 코로나19 유행과 공공보건의료의 대응 및 향후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공공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임상의학적 측면에서 개선사항으로 중환자 간호사 수련교육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시스템 운영, 일정 수의 중환자 간호사들의 사전 보유, 그리고 의료인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의 합리적 적용 등이 들 수 있다. 둘째, 대규모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현장 가용성이 입증되었고 보건학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염병 검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시설 등 감염병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감염병의 특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중환자 병상 자원 확보와 공공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중환자 병상 동원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책임성을 갖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감염병 확진자 수 저감 중심의 정책에서 희생자 최소화 전략으로 방역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감염병의 방역 대응과 의료 대응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재구성 및 이를 뒷받침할 의료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의료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 인구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이 선제적 게이트키핑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감염병 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및 지속적인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4부 : 산업재해관리-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개편 여부가 법률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개편 방안으로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하여 독립적인 중앙행정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이미 입법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등 가시화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사회윤리적 동기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윤리적 동기는 중재대해처벌법 집행의 핵심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산재 유가족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고 관련 직제와 기능을 조직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적 근로감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예방법인 산업안전법에 근거하여 예방 중심의 전달체계로서 전략적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속 관할기관으로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 중복에 대한 부처간 입장 차이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 치안과 산업안전의 문제는 원인과 대책이 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을 다루어 온 산업안전보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를 전속 관할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책임자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결과 및 교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사고조사 시스템과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재발방지에 활용하는 환류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청은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법 개정과 행정력 강화를 통해 현행 「산업안전법」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개입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및 책임성은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노동안전권 보호할 수 있는 물적·조직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제5부 :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한계와 과제]

미래사회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으로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비하여 가칭 「안전기본법」과 「재난관리기본법」으로 분

법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재난안전 관리제도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상호 모순·저촉되는 법령의 통폐합과 분산된 법령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6부 :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미래 복합재난에 대비한 사회 회복력 증진과 장기적인 복구 중심의 패러다임에 따른 재난관리 정책과제로서 첫째,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분리한 재난안전관리법 제도 정비, 둘째, 재난관리 인력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재난예비군 제도 도입, 셋째,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넷째, 미래 초대형 재난에 대비한 위기경보와 특보 체계 개선, 다섯째, 국가 차원의 재난피해에 대한 장기복구 체계 구축, 여섯째, 재난지원금 지급원칙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일곱째, 최악의 재난피해 상황에 대비한 국가재난기금의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제5절 분권발전분과

1. 개요 및 구성

가. 개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11개 국정과제를 추진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는 분권발전 분과를 구성하고 활발한 정책자문과 국정과제 점검·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나. 구성

행정, 경제, 농어촌 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권발전 분과는 2020년 1월부터 1년간 국민주권 분과와 통합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부터 분리되면서 다시 독립적인 분과로 운영되었다.

〈분권발전 분과위원 현황〉

구분	위원 현황
1기 ('17.9.~'19.12.)	안성호(위원장, '17.12.~'18.6.), 소순창(위원장, '18.6.~'19.11.), 곽채기, 곽현근, 김수연, 문성종, 박경환, 박진도, 손은일, 오현석, 이 진, 정기환
2기 ('20.12.~'22.5.)	소순창(위원장, '20.12.~'21.11.), 곽채기(위원장, '21.11.~), 김수연, 오현석, 윤태범, 이 진, 장영수, 전인석, 진종헌, 허진아

분권발전 분과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농산어촌 등 3개 분야를 담당하는 소분과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자치분권 소분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실질화하여 지역친화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 권한, 재정이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을 만들었다. 균형발전 소분과는 고도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위주로 발전을 도모했던 국가발전전략을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균형발전의 개념을 복원하였으며, 국가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농산어촌 소분과는 농산어촌정책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전략으로 4개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모델 확산, 그리고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업인 재해지원 강화에 노력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직속 농특위 설치 추진 및 농업회의소 등 지방분권형 농업정책을 추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업의 첨단화와 규모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그리고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등의 논의도 적극 추진하였다.

〈소분과별 구성 및 소관 국정과제〉

구분	소관 국정과제	위원 구성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1기) 소순창, 곽채기, 김수연, 이 진 (2기) 곽채기, 김수연, 윤태범, 이 진
균형발전	(78) 전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1기) 곽현근, 문성종, 박경환, 손은일 (2기) 진종헌, 허진아, 전인석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1기) 박진도, 오현석, 정기환 (2기) 오현석, 장영수

2. 주요 활동

가. 전체회의 개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분권발전 분과는 2017년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이후 총 35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년 12월 첫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분과 구성, 국정과제 조정·보완, 국정과제 우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2018년에는 소분과별 로드맵 구성, TF 구성 필요과제 발굴, 현장 의견 청취 등 출범 초기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2020년에는 분권발전 분과가 국민주권 분과와 통합되어 별도의 분과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농어촌 뉴딜 TF' 등을 마무리하고, 지역균형 뉴딜,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등 국정이슈 발굴 및 해소에 주력하였다.

〈2019년 상반기 분권발전 분과토론〉



〈전체회의 개최 현황〉

연도	개최수	주요 논의내용
’17	1	○ 소분과 구성, 국정과제 조정·보완, 국정과제 우선사항
’18	11	○ 소분과별 로드맵 ○ 사회적 경제와 지방 일자리 창출방안 ○ 재정분권, 자치경찰 등 현안보고서 작성 ○ 자치분권위, 균형발전위 등 타위원회와 협력방안 ○ TF 구성 필요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세미나 추진 ○ 시·도 지자체 방문을 통한 현장의견 청취
’19	8	○ 국정과제 조정·보완 ○ 국정과제 평가 및 향후과제 제시 ○ 지방분권 장기비전 ○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 ○ 국고보조금 제도개혁 TF 운영
’21	15	○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운영 ○ 농어촌 뉴딜 TF 운영 ○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등 국정이슈 발굴 ○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성과와 한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 검토
’22	3	○ ’21년 하반기 중점검토과제(‘지역균형 뉴딜’) 논의 ○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백서 검토

〈온·오프라인 분과 전체회의 개최(’21.5.14)〉





나. TF·간담회 활동 등

1) TF 활동

분권발전 분과는 농정개혁, 분권형 균형발전, 농어촌 뉴딜 등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개선을 위한 정책이슈에 대해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분권발전 분과 TF 활동 현황〉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농정개혁 TF (단장 : 박진도 위원)	’18.5.14. ~’18.10.30.	14명 (내부 3, 외부 10)	○ 직불제의 확대·개편 ○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도입 ○ 지속가능한 농촌의 조성 ○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단장 : 진종헌 위원)	’20.10.26. ~’21.8.7.	12명 (내부 5, 외부7)	○ 과거 균형발전 한계·초광역 전략 방향 ○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 검토 ○ 지역의 초광역화 현황 ○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전략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농어촌 뉴딜 TF (단장 : 진종헌 위원)	'20.12.7. ~'21.3.8.	8명 (내부 3, 외부 5)	○ 귀농귀촌 플랫폼 마련 ○ 농산어촌 사업 지원방안 ○ 지역 단위 사업 협업 추진방안

가) 농정개혁 TF ('18.5.~'18.10.)

정부 출범 이후 '농정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 및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농정개혁 TF를 구성하게 되었다. 박진도 위원을 단장으로 한 농정개혁 TF는 2018년 5월에 구성하여 10차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세부 주제별 현황과 문제점, 개혁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농정개혁 TF 논의주제〉

회차	논의주제
1차 ('18.5.14.)	(Kick off 회의) 주요 농정개혁 그룹별 논의동향, TF 운영방안 논의
2차 ('18.5.28.)	농정개혁 틀이란 무엇이고,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3차 ('18.6.11.)	직불제 중심 농정의 방향과 내용(1) - 직불제개편, 왜, 무엇을, 어떻게?
4차 ('18.6.25.)	직불제 중심 농정의 방향과 내용(2) - 제도적 여건 : 농지, 농업인 정의
5차 ('18.7.9.)	농촌정책의 방향과 내용(1) - 사회적경제, 일자리, 에너지
6차 ('18.7.23.)	농촌정책의 방향과 내용(2) - 지방분권, 농촌계획, 농촌지역개발
특별세션	농특위 설립 운영 방안 - 이슈페이퍼 검토
7차 ('18.8.20.)	푸드플랜 - 생산과 소비관계의 재창조
8차 ('18.9.3.)	정책위 농정개혁TF 직불제개편(안) 논의
9차 ('18.9.17.)	정책위농정개혁TF 농촌정책개편(안) 논의
10차 ('18.10.15.)	정책위농정개혁TF 푸드플랜 정책방향과 내용(안) 논의
종합보고 ('18.10.30.)	농정개혁 TF 활동 공개 정책 세미나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기능 농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TF에서는 직불제의 확대·개편,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의 도입, 지속가능한 농촌의 조성,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정개혁 TF 착수회의('18.5.14.)〉



〈농정개혁 TF 활동공개 정책세미나('18.10.30.)〉



나)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 ('20.10.~'21.4.)

우리나라의 공간적·지리적 불균형,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초광역권 전략에 기반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20년 10월 진종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를 구성하였고,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존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해외의 광역권 사례 검토(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경제광역권을 위한 산업전략 등을 점검·논의하고, 초광역권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였다. TF팀은 2021년 4월 초광역 메가시티 및 산업생태계 구축, 초광역 행정을 위한 행정체계 조정·개편을 목표로 사업방식, 추진체계, 법·제도 개선 등을 포괄하는 5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추진전략 체계도〉

비전 — 공간, 산업, 행정의 연계전략으로 초광역기반 분권과 균형국가 실현

목표
-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도시 및 교통 인프라) 정책
- [초광역 산업생태계 구축] 산업전략(특화산업정책+고등교육체계)
- [초광역 행정을 위한 행정체계 조정 및 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4+1 정책과제

정책 방향	핵심 과제
공모방식에서 수평적 계약으로의 전환	1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계획계약으로 전면화 2 공모방식의 단계적 축소
중앙부처의 일원화 및 추진주체 형성	1 범부처 초광역전략 추진기구의 설치 2 포괄보조의 개편확대(single pot)
자율적·제도적 권역화와 지역의 추진주체 형성	1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제도화 2 메가시티 전략을 통한 산업-공간 권역화
'사업협력에서'계획관리 및 조정체계로 전환	1 특정분야 계획의 중앙-지방 계약모델 제도화 2 지역발전계획(초광역 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법제도 개선
- 포괄보조금제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및 개편
- 중앙정부내 초광역전략 추진기구 설치

다) 농어촌 뉴딜 TF ('20.12.~'21.3.)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의 실현 방안을 도출하고 '농촌 르네상스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는 농어촌 지역 관련 대통령위원회 및 범부처와 협력하여 농어촌 뉴딜 TF를 구성하였다. 2020년 12월 구성된 TF는 5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지역균형 뉴딜 완성을 위한 농촌 뉴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우리 농촌을 기초생활서비스망이 잘 구축되고 자발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혁신과 뉴 라이프스타일이 꽃피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간혁신, 그린혁신, 사회혁신, 추진기반 정비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농촌재생의 공간적 거점을 조성하여 농촌 특성을 살린 경제활동,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을 집중 육성의 통해 농촌을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석연료 과다의존 농업에서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반의 관리로 확대하여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선도하는 녹색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농촌세대 육성을 위한 청년층 이주·정착 프로그램,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확대 등의 사회혁신 방안도 포함하였다. 혁신방안과 함께 「(가칭)농촌재생뉴딜특별법」 제정,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효과적 예산지원 체계도 마련하였다.

〈농촌뉴딜 추진전략 체계도〉

비전: 사람, 환경, 활동의 혁신으로 농촌 르네상스 구현

목표:
- [공간 혁신] 사람과 환경 중심 미래형 생활·경제 공간 창출
- [그린 혁신]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선도하는 녹색환경 실현
- [사회 혁신] 미래 농촌세대 육성과 농촌사회 혁신

4+1 실행전략

정책 방향	핵심 과제
농촌공간 재창조	[1] 미래현 농촌공간 정비 [2] 다부처 융복합형 농촌재생뉴딜사업 추진 [3] 농촌재생뉴딜특별법 제정과 제도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1] 저탄소·생태 시스템 구축 [2] 농촌사회 상생형 에너지 전환 [3] 산림뉴딜30-30
농촌사회 미래혁신 주체 형성	[1] 농촌청년육성 프로그램 다각화 [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플러스사업 [3]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구현	[1] 농업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2] 농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촉진 [3] 문제해결형 스마트농업정책 강화

추진 기반 정비
- 관련 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 지역 주도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과 민관협치 강화
- 재정 제도 개선
- 농촌재생뉴딜운동의 범국민적 추진

2) 간담회

가) 시·도 지자체 간담회

분권발전분과는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각 시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9월~12월간 소순창, 곽채기, 곽현근, 김수연, 오현석, 정기환 위원 등이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경기도 등을 방문하여 지자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총 5회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일자리, 경제·산업, 보건복지, 도시재생·생활SOC, 지방분권, 농산어촌, 환경·문화관광, 주요 지역공약 등의 분야에 대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시·도 간담회 현황〉

지역	일시·장소	시·도 참석자
충청북도	'18.9.19. 충북도청	○ 소순창, 곽채기, 곽현근, 김수연, 오현석, 정기환 위원 등 ○ 이시종 충북지사, 이장섭 정무부지사 등
경상남도	'18.11.9. 경남도청	○ 소순창, 곽채기, 곽현근, 김수연, 오현석, 정기환 위원 등 ○ 김경수 경남지사, 박성호 행정부지사 등 20여명
제주도	'18.11.28.~29. 제주연구원· 제주도청	○ 소순창, 김수연, 문성종, 박진도, 오현석, 이 진, 장영수, 정기환 위원 등 ○ 원희룡 제주지사, 전성태 행정부지사 등 20여명
전라북도	'18.12.14. 전북도청	○ 소순창, 김수연, 문성종, 이 진, 정기환 위원 등 ○ 송하진 전북지사, 김송일 행정부지사 등 20여명
경기도	'18.12.20. 경기도청	○ 소순창, 곽현근, 문성종, 박경환, 오현석, 이 진, 장영수, 정기환 위원 등 ○ 김희겸 경기부지사 등 20여명

나) 정책위·분권위·균형위 연석회의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서 정책위와 분권위·균형위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통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3개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 위원장을 포함한 정책위 위원 4명, 분권위 위원 3명, 균형위 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책위·분권위·균형위 연석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시·장소	논의내용
1차	'18.10.11. 정책위 회의실	○ 수평적 재정조정 및 균형발전 현안
2차	'18.10.26. 정책위 회의실	○ 지방분권 비전과 전략 및 연방제 수준의 분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실태와 향후과제 ○ 지역 선순환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
3차	'18.11.16. 정책위 회의실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세부과제 ○ 재정분권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4차	'18.12.6. 정책위 회의실	○ 지방단위 정책융합 : 자치분권 비전 ○ '19년 지방분권·균형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위한 추진방안
5차	'19.1.3. 정책위 회의실	○ 균형·분권 정책과 공간전략
6차	'19.1.18. 정책위 회의실	○ 지방교육자치 사무이양의 현황과 과제 ○ 지역과 대학의 유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7차	'19.2.1. 정책위 회의실	○ 지방분권 시대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의견
8차	'19.2.13. 정책위 회의실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복지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역과 대학을 융합한 지역균형발전',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지방분권'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표하였다. 지역과 대학을 융합한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공영형 사립대-사립·전문대 등의 체계로 이루어진 지역혁신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복지'를 주제로 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 책임 원스톱 서비스 전달 체계 모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책위·분권위·균형위 연석회의〉





다) 현안 간담회

분권발전 분과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구체적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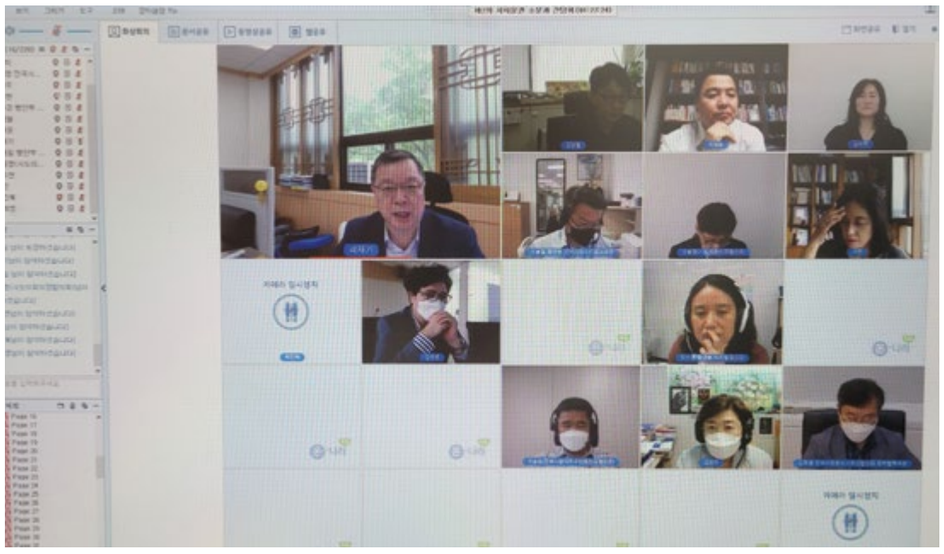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개별 법률제정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학계 등이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법 관련 간담회 현황〉

구분	일시·장소	논의내용
1차	’21.6.2. 정책위 회의실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후속조치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활성화 방안
2차	’21.7.9. 영상회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후속조치 ○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후속조치

2021년 6월~7월간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 구성의 다양화, 지방의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법 관련 간담회 개최(’21.7.9.)〉



② 2021년 하반기 중점 검토과제(지역균형 뉴딜) 간담회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완수를 지원하고 체감성과가 미흡했던 정책이나 중장기 과제 등을 발굴하여 2021년 하반기 중점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다.

분권발전 분과는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그간의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체계와 역할을 평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안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과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부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및 농어촌 뉴딜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책담당관과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들과 초광역 기반의 지역균형 뉴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균형 뉴딜 간담회 개최 현황〉

구분	일시·장소	논의내용
1차	'21.9.30. 영상회의	ㅇ 지역균형 뉴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2차	'21.10.8. 영상회의	ㅇ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 뉴딜 추진방안 ㅇ 어촌 뉴딜 300 추진현황 및 성과
3차	'21.10.15. 정책위 회의실	ㅇ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어떻게 할것인가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4차	'21.10.22 정책위 회의실	ㅇ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천전략 ㅇ 2기 혁신도시의 광역적 발전전략 :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제6절 평화번영분과

1. 개요 및 구성

가. 개요

평화번영분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국방, 남북관계·통일, 외교 통상 분야의 국정목표와 국정전략,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정책 자문을 담당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국방, 남북관계·통일, 외교 통상 분야에서 국정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며, 국정전략은 첫째,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둘째,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셋째,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이다. 평화번영분과는 안보·국방(85~89번), 남북관계·통일(90~95번), 외교·통상(96~100번) 등 총 16개 국정과제의 이행점검과 조정·보완 업무를 수행하였다.

평화번영분과는 안보 국방, 남북관계·통일, 외교 통상 분야의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 안보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문하였다. 먼저, 모든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분과위원장의 주재 하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분과의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연구 및 현안검토 수요에 따라 소분과, 간담회 TF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현안보고서의 형식으로 대통령 안보실에 전달하였다. 또한, 주요 기념일과 외교행사 계기 대통령의 안보 국방, 남북관계·통일, 외교 통상 분야의 정책 메시지 발신과 관련하여 정책 방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평화번영분과 위원들은 방송출연, 언론기고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정부의 국정 방향을 홍보함으

로써 청와대와 국민 간 정책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책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부처, 국책연구소, 시민단체 등과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활발한 정책 소통을 해 나가는 데서도 힘을 기울였다.

나. 구성

평화번영분과 소속 위원들은 1기(2017~2019)와 2기(2020~2022)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1기에서는 고유환 분과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이 활동하였다. 2기에서는 구갑우 분과위원장, 여석주 부분과위원장, 정철 부분과위원장 등 17명의 위원이 활동하였다. 평화번영분과의 1기와 2기 분과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평화번영분과 위원 현황〉

구분	위원 현황
1기 ('17.~'19.) ('18.1.31. 기준)	고유환(위원장), 강태영, 김동엽, 김성경, 김용현, 김준형, 김지윤, 김흥규, 문장렬, 배기찬, 서형원, 양무진, 정승연, 조정아, 진시원 위원
2기 ('20.~'22.) ('20.4.2. 기준)	구갑우(위원장), 여석주(부위원장), 정철(부위원장), 김성경, 남기정, 도경옥, 문장렬, 민경태, 양기호, 이남주, 이영훈, 이혜정, 제현정, 조경환, 차창훈, 황재호, 황지환 위원

평화번영분과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전담 국정과제의 주무 부처 등을 고려하여 남북관계·통일 소분과, 안보·국방 소분과, 외교·통상 소분과 등 3개의 소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1기 소분과장은 안보·국방 문장렬 위원, 남북관계·통일 김용현 위원, 외교·통상 김흥규 위원이며, 2기 소분과장은 안보·국방 여석주 부분과위원장, 남북관계·통일 김성경 위원, 외교·통상 양기호 위원이다. 평화번영분과 소관 국정과제와 각 국정과제의 1, 2기 전담위원은 다음과 같다.

〈평화번영분과 소관 국정과제 전담위원〉

구분	국정과제(소관부처)	전담위원
안보 국방 소분과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1기) 김동엽 위원 (2기) 조경환 위원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1기) 문장렬 위원 (2기) 이혜정 위원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1기) 문장렬 위원 (2기) 여석주 위원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방사청)	(1기) 김동엽 위원 (2기) 문장렬, 여석주 위원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1기) 문장렬 위원 (2기) 문장렬, 여석주 위원
남북관계 통일 소분과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1기) 강태영 위원 (2기) 이영훈 위원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1기) 양무진 위원 (2기) 도경옥, 조경환 위원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1기) 김성경 위원 (2기) 김성경, 도경옥 위원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1기) 양무진 위원 (2기) 민경태 위원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1기) 조정아 위원 (2기) 민경태 위원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1기) 김용현 위원 (2기) 황지환 위원
외교 통상 소분과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1기) 서형원 위원 (2기) 남기정 위원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1기) 김흥규 위원 (2기) 양기호, 이남주 위원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1기) 배기찬 위원 (2기) 차창훈, 황재호 위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기) 김지윤 위원 (2기) 정철 위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1기) 정승연, 진시원 위원 (2기) 제현정 위원

〈평화번영분과 1기 위원 활동사진〉



〈평화번영분과 2기 위원 활동사진〉



2. 주요 활동

가. 전체회의 개최

평화번영분과는 월 1회 정례적으로 분과위원장의 주재로 전체 분과위원이 참석하는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사항 정보 공유, 국정과제 관련 사항, 신규 TF·간담회 운영 및 진행 관련 사항, 주요 국정현안 점검 및 관련 사항, 기타 분과 활동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전체회의는 2017년도에는 총 1회, 2018년도에는 총 12회, 2019년도에는 총 11회, 2020년도에는 총 7회, 2021년도에는 총 9회, 2022년도에는 총 5회 개최되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면 회의와 함께 비대면 회의를 병행하거나 비대면 회의의 형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전체회의 개최 현황〉

연도	개최수	주요 논의내용
’17	1회	○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비전 구체화
’18	12회	○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 ○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국정과제 발굴 논의 ○ 외교 다변화, 남북관계 발전방안, 남북정상회담 과제와 대응 등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전략을 제언하는 현안보고서 마련
’19	11회	○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 ○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국정과제 발굴 논의 ○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관계 정세를 평가하고 관련 전략을 제언하는 현안보고서 마련
’20	7회	○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 ○ 추가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한 분야와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 TF 운영 ○ 포스트코로나 과제를 반영하는 국정과제 조정·보완 논의
’21	9회	○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로 정책 구상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21년 하반기 중점검토과제로서 추진
’22	5회	○ ’21년 하반기 중점 검토과제 보고 결과 논의, 국정백서 자문 업무 진행 토의

〈2019년 상반기 정책기획위원회 워크숍에서 평화번영 분과토론〉



〈평화번영 전체회의 개최〉



〈2021년 정부 4주년 국정성과 미래비전 회의 개최 때 평화번영 분과토론〉



나. 국정과제 이행검토 및 조정 보완 업무

국정과제의 이행검토와 조정 보완은 정책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검토 등을 거쳐 청와대에 건의하고, 청와대가 최종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연간 2회 진행되었다.

1기 평화번영위원들은 소관 국정과제의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이행 수준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국정과제가 제대로 수행되고 또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이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예컨대, 평화번영분과는 국정과제 98번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추진을 통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기 평화번영위원들은 대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 그간 국정과제 추진 상의 문제점 개선, 새롭게 발표된 계획 등을 반영하는 국정과제의 조정 보완 업무를 매년 상 하반기 수행하였다. 예컨대, 2020년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외교 전략을 새로이 정립하는 과정에서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간 생명공동체와 평화공동체 구현 등 국정과제의 구체화에 기여하였다.

다. 자문 활동 수행 : 정책 TF/간담회 운영 및 정책현안보고서 작성

평화번영분과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국방, 남북관계·통일, 외교 통상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적 제언 마련을 위해 정책 TF 또는 간담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정책 TF는 국정과제 이행 및 청와대의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담회는 위원회와 분과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하였다. 정책 TF 또는 간담회는 분과위원들과 외부 초빙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의한 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TF 운영

평화번영분과 1기에서는 2018년~2019년도에 '평화번영 TF'와 '평화번영의 맵(map) TF'를 운영하였다.

평화번영분과 2기에서는 2020년도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재구성 TF' 및 '미 대선 이후 외교정책방향 TF'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방안 TF' 및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방안 TF'를 운영하였다.

〈TF 활동 현황〉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평화번영TF	'18.5.~6.	9명 (내부 6, 외부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구상 실현 방안 마련
평화번영의 맵 TF (팀장 : 김용현 위원)	'18.11. ~'19.2.	10명 (내부 7, 외부 3)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개괄하는 개념 정의, 현황정리, 평화 주요 이슈, 번영 주요 이슈, 미래비전 등에 대해 논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재구성 TF (팀장 : 구갑우 분과위원장)	'20.5.~6.	29명 (내부 15, 외부 14)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 관련 정책방향과 비전 정립 및 관련 담론 마련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집권 후반부 국방·외교·통일 핵심 아젠다 및 관련 국가 비전과 미래전략 제시
미 대선 이후 외교정책 방향 TF (팀장 : 이혜정 위원)	'20.10.~11.	29명 (내부 15, 외부 14)	미국 대선이 국제정세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시점에서, 우리의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 방안 TF (팀장 : 문장렬 위원)	'21.2.~3.	24명 (내부 13, 외부 11)	202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전망하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제언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 방안 TF (팀장 : 양기호 위원)	'21.3.~6.	26명 (내부 12, 외부 14)	한일 관계의 현재 상태를 검토하고, 대일 투트랙 접근을 전제로 한 한일 관계개선과 신뢰구축 해법 제시

가) 평화번영 TF

평화번영분과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비핵화 로드맵과 연계하여 비핵화의 각 단계별로 실현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구체 내용과 관련한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5~6월간 9명으로 구성된 평화번영 TF를 운영하였다.

동 TF에서는 △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 방안, △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방안 △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의 평가 및 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정치·군사) 로드맵, △ 김정은 시대의 경제 발전전략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나) 평화번영의 맵(map) TF

평화번영분과는 통일부 담당자와 함께 국정과제 '평화번영의 한반도'의 비전과 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관련 책자 발간을 추진하였다.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평화번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화와 번영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개괄하는 개념 정의, 현황 정리, 평화 주요 이슈, 번영 주요 이슈, 미래비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재구성 TF

2020년 초 코로나19는 국제관계에서의 불확실성 증대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거대한 도전 과제로서 돌연 등장하였다. 이에 평화번영분과는 2020년 5~6월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재구성 TF'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하여 우리의 평화번영 전략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관련 담론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부의 국정운영에 유용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정부 실무부처(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와도 소통하였다.

이에 따라, 동 TF에서는 총 2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 포스트코로나 시

대의 한반도 경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국, 중국, 유럽, 일본과 한반도, △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복지정책과 한반도,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과 통상정책 등의 주제에 대해 총 2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의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라) 미국 대선 이후 외교정책방향 TF

평화번영분과는 2020년 10~11월간 '미국 대선 이후 외교정책방향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미·중 간 경쟁 심화 등 주요 국제정세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 주요국과의 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부 통일·외교·안보 관련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 TF에서는 총 2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및 미국 대선 이후 전망·과제, △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 한중·한일관계 평가, 전망 및 향후 과제, △ 신북방·신남방 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과제, △ 한미동맹과 국방개혁, △ 미중관계와 우리의 대응, △ 미국 대선 이후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등을 토의하고 정부의 선제적, 창의적 대외전략을 제언하였다.

마)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방안 TF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2~3월간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방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20년~2021년간 남-북-미 교착국면의 지속과 美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 북한의 8차 당대회 개최 등과 관련한 움직임 등 변수들을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 구상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따라서 동 TF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 TF에서는 총 2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 북한 8차 당대회 분석·평가 및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 △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망과 대응, △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 핵무력 증강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대응, △ 대북 제재의 상황의 극복과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방안, △ 남북관계 복원 및 발전전략 등과 관련한 구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바)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방안 TF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3~6월간 총 7회 2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방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18년 10월 및 11월, 2021년 1월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루어진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로 우리 국민의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산 압류처분이 가능해지고 이에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방안 TF'는 △ 사법부 판결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과 대응, △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일 안보협력, △ 일본의 수출규제와 대응방안 모색, △ 북일관계의 전망, △ 투트랙 전략과 한일관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일관계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및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 TF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한일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과거사 문제, △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 미중 전략경쟁 속의 대일 외교, △ 한일 미래비전 등과 관련하여 제언하였다.

〈2020년 10월 미 대선 이후 외교정책방향 TF 개최〉



2) 간담회 운영

평화번영분과는 자체 발굴한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방향 논의와 관련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운영하였다.

평화번영분과 1기에서는 2018년도에 한반도·동아시아 관계 대응 방향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평화번영분과 2기에서는 2021년도에 '국방 뉴딜 간담회',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국제통상질서의 개편 간담회', '한반도 평화의 인간안보적 접근(인권과 생태) 간담회', '한국 외교의 방향과 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 현황〉

주제	활동기간	주요내용
한반도·동아시아 관계 대응 방향 정책간담회	'18.7.	분단 해체기의 한반도·동아시아 질서 재구축(미국·중국·일본 관계와 남북관계)과 대응 방향을 논의
국방 뉴딜 간담회 (담당위원 : 여석주 분과 부위원장)	'21.1.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국방 뉴딜'의 가능한 정책과 담론 모색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국제통상질서의 개편 간담회 (담당위원 : 정철 분과 부위원장)	'21.9.~10.	미중 기술 패권경쟁 심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산업정책의 부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통상 질서의 재편에 주도적 참여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한반도 평화의 인간안보적 접근 (인권과 생태) 간담회 (담당위원 : 김성경 위원)	'21.10.~11.	가치 중심 국제질서 하에서 남북관계의 주요한 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인권'과 '생태'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마련에 기여
한국 외교의 방향과 틀 간담회 (담당위원 : 황재호 위원)	'21.11.~12.	공공외교, 통일외교 등을 포함하여 한국 외교의 방향성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한국 외교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전과 품격, 방향성과 포지셔닝 등 한국 외교의 발전 틀과 방향 모색

가) 한반도·동아시아 관계 대응 방향 정책간담회

평화번영분과는 2019년 7월 분단 해체기의 한반도·동아시아 질서 재구축(미국·중국·일본관계와 남북관계)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반도·동아시아 관계 대응 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 한반도·동아시아 관련 미국의 최근 화두, △ 중국의 변화와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의 정책방향, △ 한일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 신자유주의 이후 지역질서와 한일관계, △ 한일갈등 관련 대북문제 대응 방향, △ 남북관계 등 주제와 관련한 논의와 정책적 제언이 이루어졌다.

나) '국방 뉴딜' 간담회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1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인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킨 '국방뉴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인구절벽, 4차산업혁명 등의 새로운 도전 속에서 우리 군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최적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정예강군으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휴먼 뉴딜'의 차원에서 직업군인을 포함한 전역 장병을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좋은 일자리로서 직업군인의 비중을 확대하는 아젠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국제통상질서의 개편 간담회

평화번영분과는 미중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탈세계화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약화, 디커플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무역과 노동·환경(기후변화) 등의 신(新)통상 이슈 부상으로 국제통상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대전환기를 맞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9~10월간 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외부 전문가로 국제통상은 물론 국제정치, 외교·안보, 반도체 등 산업기술 분야와 미국 및 중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제통상환경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 간담회는 미중 기술 패권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미국 및 중국의 접근방식, 경제안보적 접근, WTO 다자체제와 통상법적 접근,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산업기술적 접근으로 구성되었다. 미중 기술 패권경쟁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동 간담회에서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과 산업기술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정책 제언 도출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분야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분야별 이슈에 대응하는 통상 조직의 정비 및 유기적 연결성 제고, △ 미중 패권경쟁과 경제안보 관련 리스크를 대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 △ 불공정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라) 한반도 평화의 인간안보적 접근(인권과 생태) 간담회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10~11월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수립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 및 생태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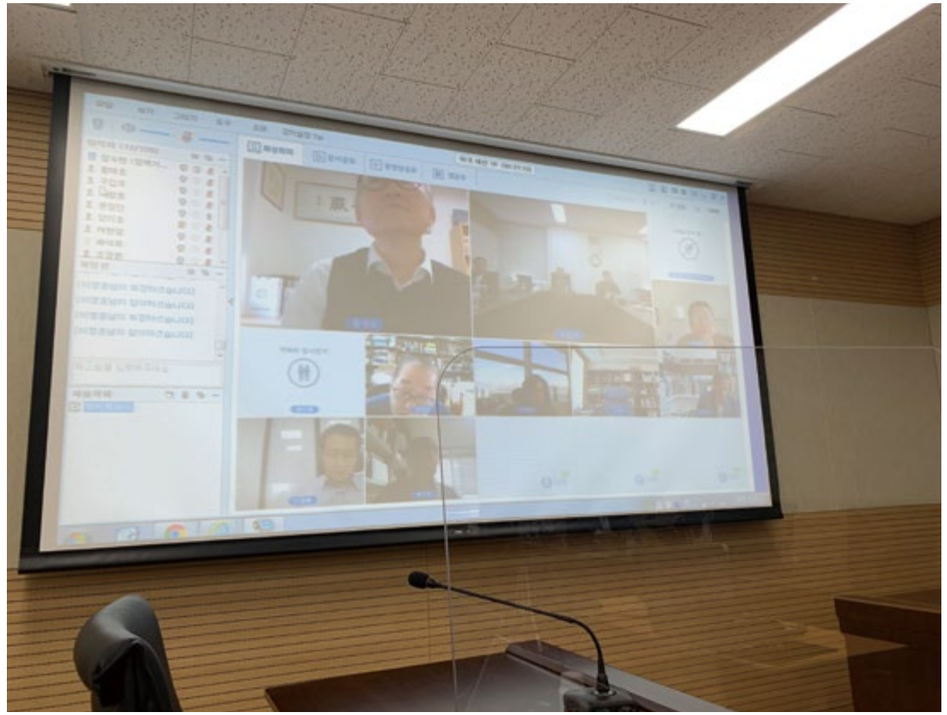
평화번영분과는 간담회 토론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나친 정치화를 경계하면서 북한 인권의 범위와 내용을 한반도 인권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와 같은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인권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서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접근을 인권 패러다임에 적용할 것을 중장기적 전략으로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환경 협력을 위해 민, 관, 지자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아젠다도 남한 중심이 아닌 한반도를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 한국외교의 발전 틀과 방향 간담회

평화번영분과는 향후 외교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외교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체 틀의 조직·재조직의 문제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경쟁 속 한국외교의 비전과 품격, 방향성과 포지션닝 및 한국외교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평화번영분과는 한국외교의 방향성과 대응력을 논의하기 위해 주변국의 외교정책, 한국의 공공외교, 한국의 외교정책, 한국의 대북정책을 각각 틀, 방향,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2021년 11~12월 운영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 외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지리적, 심리적 제약을 넘어 역동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 △ 정파를 초월한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며, 제도적 개혁을 포함한 외교역량을 자체 혁신할 것, △ 한미 동맹관계의 다층적, 다차원적 협력체계를 구체화하는 한편, 30주년을 기점으로 한중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할 것, △ 미중 딜레마 발생 시 한국은 '상식의 가드레일'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선명성'은 상호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 개념이기에 이를 적절히 병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유관국들의 입장 조율도 우선순위에 둘 것, △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미래협력을 분리한 투트랙 접근이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트랙에서 적극적인 대일외교를 시도할 것, △ 경제 다자주의를 넘어 외교안보 다자주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 공공외교는 상대국 맞춤형, 포괄적 공공외교를 구상할 것 등이다.

〈2020년 하반기 평화번영분과 간담회 온라인 개최〉



3) 현안보고서 작성

평화번영분과는 남북 정치 경제 사회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 토론을 통해 다수의 정책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자문하였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 남북관계, 2030 세대와의 소통 방안, △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발전방안, △ 신남방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 2018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대응, △ 북한 10년, 경제 사회 10대 변화, △ 외교 다변화의 의미와 추진전략, △ 평화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 2018 광복절 계기 남북관계 메시지, △ 평양-뉴욕 정상회담 추진전략, △ 한반도신경제구상 : 평가와 제언,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안) 등을 주제로 하는 다수의 정책현안보고서를 도출하였다.

그 외에도 평화번영분과는 정부 국정운영의 주요 계기마다 그간의 외교성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아젠다, △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의 한반도 평화번영과의 연계, △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한 새로운 외교적 과제, △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한 우리 산업계의 대처 방안 등의 이슈를 다루고 제언하였다.

라. 정책 소통

평화번영분과는 비정기적으로 청와대 안보실에 대면 자문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장 방문, 포럼, 세미나, 간담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정부부처, 정당, 국책연구소, 시민단체, 주한대사관 등과 다양한 정책소통 노력을 하였다. 이를 통해, 가급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정부의 접근 방법을 보다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중 주요한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방문('18.4.)

평화번영분과는 안보·국방 소분과를 중심으로 하여 2018년 4월 국정과제(87번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의 추진성과 중 하나로서 창설된 육군동원전력사령부(용인 소재)를 방문하였다. 동 방문에서 평화번영분과 위원들은 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보환경과 국방개혁 성과를 점검하였다.

2) 세종국가전략포럼 개최('18.12.)

평화번영분과는 2019년 4월 12일 세종연구소와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을 주제로 한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바람직한 대북 협상 방향에 대해 정부에 제언하였다. 평화번영분과 위원들은 포럼에서 △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배경과 의의, △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 전략, △ 남북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경협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정해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담보하고 항구적인 평화 안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세종국가전략포럼 개최('18.12.)〉



3) 세종국가전략포럼 개최('19.12.)

평화번영분과는 2019년 12월 3일 세종연구소와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한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공동 주최하였다. 평화번영분과 위원들은 동 포럼에 참여하여 △ 한반도 비핵화 협상, △ 남북관계 및 △ 한국의 대미·대일·대중·대러 전략에 대해 토론하였다. 정해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되고 있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이며, 이는 저성장의 남한과 저발전의 북한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동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세종국가전략포럼 개최('19.12.)〉



4) 통일연구원과 한반도 미래·평화 정책협의회 개최('20.11.)

평화번영분과는 2020년 11월 20일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여 '한반도 미래·평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평화번영분과위원들은 외부 통일·외교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참석하여 대내외 정세를 반영한 정부의 평화경제 정책 정교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보완 정책 대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토론하고 제언하였다.

5)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21.6.)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6월 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공동으로 '모병제 :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한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주최하였다. 조대엽 위원장이 개회사를,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였으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前 국방부장관이 축사하였다. 동 포럼에서 평화번영분과 위원들은 확산되고 있는 △ 급격한 인구감소 등 인력수급 불안전성, △ 미래 첨단 군사력 건설 방향, △ 개인의 가치관 변화, △ 젠더 평등 등을 고려한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한 병역제도의 문제는 더 이상 징병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진 군 병력의 수급과 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 휴먼 뉴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모병제 전환의 문제가 동 포럼을 통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현장 사진



개회사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축사하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개회식 사진

4 특별위원회

제1절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420

1. 출범배경 420
2. 구성·운영 및 주요활동 422
3. 재정개혁보고서 주요 내용 431

제2절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440

1. 출범배경 440
2. 구성·운영 및 주요활동 442
3.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경과 460

제3절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478

1. 출범배경 및 활동현황 478
2. 주요 활동내용 485

제4절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552

1. 신남방정책의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 552
2. '사람'분야 정책 및 주요 성과 582
3. '상생번영'분야 정책 및 주요 성과 596
4. '평화'분야 정책 및 주요 성과 612
5. 종합 평가 및 후속 정책 방향 623

제1절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1. 출범배경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산과 조세 분야의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와 동의에 기초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4월 9일 출범하였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여건 하에서 커지는 빈부격차, 성장잠재력의 둔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재정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⑮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기재부)

○(특별기구 설치) 년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 설치. '18년에 개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국회 보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출범식 축사에서 "특위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들과 소통하여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재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재정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고 재정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18년 4월 9일 재정개혁특위 출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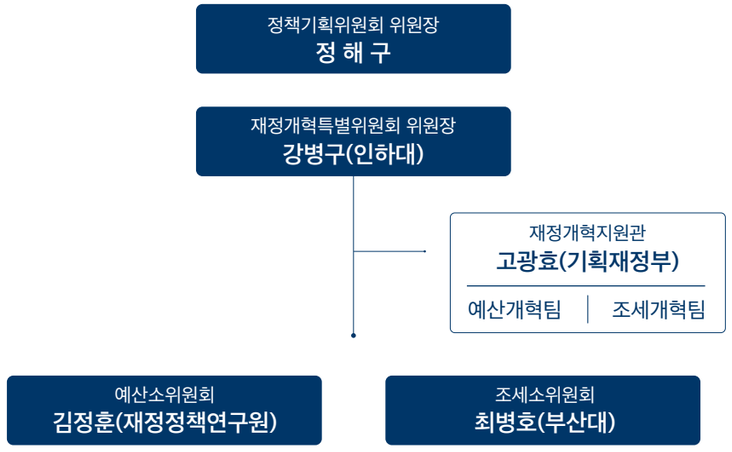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강병구 교수는 위원장으로,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이어서, 소위원회 위원장(예산소위원장 : 부위원장이 겸직, 조세소위원장 : 최병호 부산대 교수)을 선임하였고, 전체회의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하였고, 각 소위원회 별로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2. 구성·운영 및 주요활동

가. 위원회 구성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과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개혁과제 논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조세 각 분야별로 예산소위원회(15명)와 조세소위원회(15명)를 설치하였다. 한편, 위원 2명은 특위 활동기간 도중에 공공기관장에 임명되어 사임함에 따라 28명으로 운영되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직도〉



위원은 예산 조세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현 정부관료(기재부 세제실장, 재정관리관), 전 국기기관근무자, 세무사 등으로 위촉되었으며, 위원장은 특위 전체 위원 가운데 호선하였고, 사무국 역할을 하는 재정개혁지원관실은 재정개혁지원관(고위공무원 1명)과 2팀(예산개혁팀, 조세개혁팀)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30명)〉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예산(15)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변창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당연직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세(14)	구재이	세무법인 굿텍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조세(14)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정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소위원장
	최봉길	세무사 최봉길 사무소 대표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나. 위원회 운영

1)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개혁방안 심의 확정, 특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2019년 2월까지 총 4회 개최되었다. 제1차 전체회의는 '18년 4월 9일 위원회 출범과 구성을 위해 개최되었고, 제2차 전체회의는 '18년 7월 3일 상반기 권고안 심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제3차 전체회의는 '18년 10월 4일 하반기 과제 심의를 위해, 제4차 전체회의는 '19년 2월 26일 최종 권고안 심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2) 소위원회

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는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19년 2월까지 예산소위 총 20회, 조세소위 총 26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소위원회별 개혁과제 논의 결과는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각 소위원회는 필요시 별도의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과회의 구성 현황〉

소위	분과회의	참여 위원 (분과회의 장)
예산(4개)	1분과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김태일 윤영진, 박용주
	2분과 (국가재원의 통합 활용)	김정훈 박인화, 조규홍, 변창흠
	3분과 (중장기 투자를 위한 제도혁신)	국경복 박정수, 하연섭
	4분과 (재정여력 확보)	조영철 김대호, 김진영, 주병기
조세(4개)	재산과세	주만수 박훈, 구재이, 김우철, 박명호, 최봉길
	환경에너지세제	홍종호, 구재이, 박훈, 신승근
	소득·법인세제	이창희 김우철, 신승근, 이우진, 허용석
	총괄·부가세제	박명호 허용석, 강병구, 이우진

다.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18.6.22.)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18년 6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세 재정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로,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장기적 개편 방향 및 여러 가지 단기적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김성달 경실련 팀장,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토론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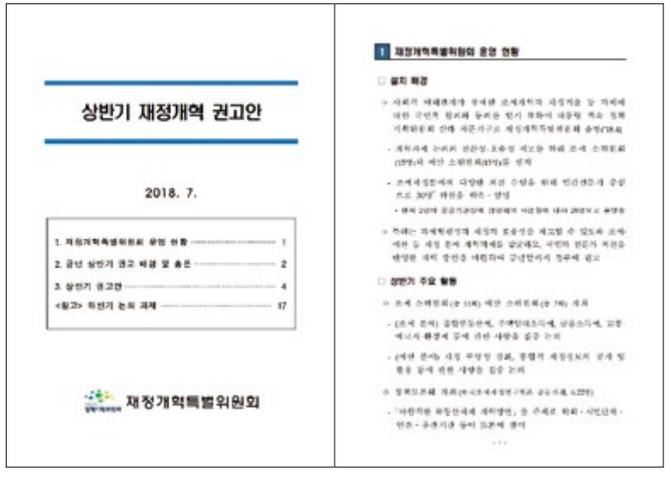
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발표('18.7.3.)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 확정하고, 동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8년 4월 9일 발족 이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조세 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 개최하여 조세 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 토론하였고,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에 대해서는 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2018년 6월 22일 개최하였다.

상반기 권고안은 △ 권고 배경 및 총론, △ 상반기 권고안(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 △ 하반기 논의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분야 권고안은 ① 종합부동산세 개편,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③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④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이며, 예산분야 권고안은 ①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②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③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④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⑤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었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 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고,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 연말에 정부에 추가로 권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8년 7월 3일 발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2 금년 상반기 경과 배경 및 종료

□ 금년 상반기 경과 배경

○ 조세 제한 개혁하에 중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지금한 개혁이 요구되는 바에는 주된 입법과 중에 개편안을 조고하여 근년도 계획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에 반영

-(주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지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의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

-(개혁 방향) ①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②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세제도 합리화
③ 세정의 투명성과 예측성 제고

□ 상반기 경과한 종료

< 조세 개혁과제 >

① 저출 및 소득 중심한 사적정책방향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 부동산세제를 정립해

○ 금융자산 소득과 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세제를 두세제로을 정비

② 이세번째로 위협받는 국민의 권장에 대한국민의 자유 가능한 미래을 위해 환경 친화적으로 에너지 세제을 개편

○ 유도 있는 연구에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금년 탄력 방법을 조세 세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에 세정의 효율성을 강화

< 예산 개혁과제 >

①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 범위를 기준으로 세정질도을 등합적으로 재검에서 예산편성 및 세정집행 수립 시 활용

○ 고급적인 관점에서 세정을 개혁할 수 있도록 공정, 지방, 교육 각각 별도의 출생준에서 해당 공인 정보를 인계(상당)

○ 국가재정 비조 준생되고 있는 건강보험을 재정순작은, 복지사업 등도 함께 조망하여 국가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

② 정부의 재정지출은 조세 등 국민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정부는 재로해은 및 지출 현황 등의 재정정보을 국민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을 편집해 준비 등 인프라 주요재 맞춤형 재정사업 정보 제공

○ 행정도가 낮거나, 단순 정책정보, 민감에 그치는 재정 관련 보고내용 보완하여 재정운영 점검의 실효성 강화, 최대한으로 재정 이슈 변화 등 생산한 정보을 알기 쉽게 제공

3 상반기 경과한 (하간)

1. 조세분야

[1]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 경과 및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제가 '2005 제도도입 후, 주택가격의 급격상승 등에 따른 보유세액의 급간하는 등 주된 입법과 중에 개편안을 조고하여 근년도 계획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에 반영

• 세도도입 직후 넘세대비(05년) 0.4배 수준(12%) 이 고통으로 확대

○ 최동산 가격 상승 및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집중문제 대한 관심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무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정주 미흡

• Piketty(2014) 연구를 계기로 한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에 대한 관심고조 확대되고, 선진국(OECD) 전기에 대비한 부동산세의 경우 '12년 상위 1%가 전체 부동산 63%, 상위 7%가 20%, 상위 37%가 92%를 계지

– OECD 대체 보유세 비중(GDP대비 0.8%, OECD 평균의 1.7%)
보유세 실효세율(GDP대비 0.18%, OECD 13개국 평균의 0.33%)

○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

□ 현고 내용

○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

– 주택은 개별주 개로 6억원 초과 구간을 0.85%→0.95p 인상해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강조

– 종합합산토지은 개별주 개로구간으로 0.2%→1%p 인상

– 별도합산토지은 이용주 큰 개로구간 입동적으로 0.2%p 인상

○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 범위를 기준으로 재정질도을 등합적으로 재검에서 예산편성 및 세정집행 수립 시 활용

○ 고급적인 관점에서 세정을 개혁할 수 있도록 공정, 지방, 교육 각각 별도의 출생준에서 해당 공인 정보를 인계(상당)

○ 국가재정 비조 준생되고 있는 건강보험을 재정순작은, 복지사업 등도 함께 조망하여 국가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

② 정부의 재정지출은 조세 등 국민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정부는 재로해은 및 지출 현황 등의 재정정보을 국민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을 편집해 준비 등 인프라 주요재 맞춤형 재정사업 정보 제공

○ 행정도가 낮거나, 단순 정책정보, 민감에 그치는 재정 관련 보고내용 보완하여 재정운영 점검의 실효성 강화, 최대한으로 재정 이슈 변화 등 생산한 정보을 알기 쉽게 제공

○ 종합부동산세제가 '2005 제도도입 후, 주택가격의 급격상승 등에 따른 보유세액의 급간하는 등 주된 입법과 중에 개편안을 조고하여 근년도 계획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에 반영

• 세도도입 직후 넘세대비(05년) 0.4배 수준(12%) 이 고통으로 확대

○ 최동산 가격 상승 및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집중문제 대한 관심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무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정주 미흡

• Piketty(2014) 연구를 계기로 한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에 대한 관심고조 확대되고, 선진국(OECD) 전기에 대비한 부동산세의 경우 '12년 상위 1%가 전체 부동산 63%, 상위 7%가 20%, 상위 37%가 92%를 계지

– OECD 대체 보유세 비중(GDP대비 0.8%, OECD 평균의 1.7%)
보유세 실효세율(GDP대비 0.18%, OECD 13개국 평균의 0.33%)

○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

□ 현고 내용

○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

– 주택은 개별주 개로 6억원 초과 구간을 0.85%→0.95p 인상해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강조

– 종합합산토지은 개별주 개로구간으로 0.2%→1%p 인상

– 별도합산토지은 이용주 큰 개로구간 입동적으로 0.2%p 인상

○ 스수이전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임해을 유지하려, 주변 · 중립합산토지은 원모면세로 개출을 인상해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비례적 세시설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조 개편 >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인 별	개선후	현 간(%p)
주 택	3억원 이하	0.5%	0.5%	
	3 ~ 6억원	0.75%	0.8%	+0.05
	6억 ~ 12억원	1%	1.2%	+0.2
	12 ~ 50억원	1.5%	1.8%	+0.3
	50억원 초 과	2%	2.5%	+0.5
종합합산 토 지	5억원 이하	1.75%	1%	+0.25
	5억 ~ 40억원	1.5%	2%	+0.5
	40억원 초 과	2%	3%	+1.0
별도합산 토 지	20억원 이하	0.5%	0.7%	+0.2
	20억 ~ 400억원	0.6%	0.8%	+0.2
	400억원 초 과	0.7%	0.9%	+0.2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96년 최초 시행 후 '12년 부부합산제에서 개인단위제로 전환하였으나, '13년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

– 현재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

○ 금융소득의 상당액을 원천징수(분리) 하기만 하면, 가계자금등은 제외 증거하여 제주 증대라는 입력도는 미비 분석

• 주요국별 소득금액 분리 5% 내외(미국 제외(6.3%), 네덜란드 2%)

– (12.12) → (13.1) → (14.12) → (15.1) → (16.12) → (17.1) → (18.12) → (19.1) → (20.12) → (21.1) → (22.12) → (23.1) → (24.12) → (25.1) → (26.12) → (27.1) → (28.12) → (29.1) → (30.12)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위축 등 부작용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소

– 개인별로 이해 정리하여도 연리 금융소득자 중 합계세율이 높은 고소득계에게 피부터 공정할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 저하

–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종합 간 수평적 형평성 저하

□ 현고 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납세의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고 다른 소득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 소수의견으로 타 개인소득세율(6%)을 동일이 유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서 세부를 도래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주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에 대해 과세하고, 전체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 중

• (보유분 구분) 6.0% 세율(1년 미 만) 1.5% · 임대면적 제외 · 세법

• 간주임대료 산입시 소형주택(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제외(임대료에만 제외) ('14.1.1 영 개정)

–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18년부터 적용)

• 분리율액 = 무임금액 × 60% · 사업형(주택건설주택 제 종합소득 세액의 20%를 적용한 경우 × 10%

○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상의 소득구분 특례, 기본공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형태변화에 따라 주소득자 외의 형태 소득주택 특례는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분리과세시 개인공제 등으로 근로소득공급 간 업역한 이양인 경우는 차이하고 있어 기본공제(근로소득세)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현고 내용

○ 주택 임대소득의 소득구분 체계적례는 주소 또는 업종 중심

– 소수의견으로 해외업체 소득구분 방법 개도(database)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체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제시됨

○ 주택 임대소득 관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업대업주사업체에게만 적용해서나 공제실액 주소 보는 최저

– 소수의견으로 일부의 업권업자 임대사업 안정을 위해 업무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되는 의견이 제시됨

[4]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전력 발전 중 석탄발전 비중은 약 40%이고, LNG 발전 비중은 약 32%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 예상 소생등전에 대한 환경이슈를 반영해 전기 발전량 기준 중 환경피해비용은 주변년 발전에 LNG 발전의 3배 수준

– 국내전기 및 대기환경을 고려한 실제 해외업계의 최대한 제고로 도입하려면

○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상의 소득구분 특례, 기본공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형태변화에 따라 주소득자 외의 형태 소득주택 특례는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분리과세시 개인공제 등으로 근로소득공급 간 업역한 이양인 경우는 차이하고 있어 기본공제(근로소득세)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현고 내용

○ 주택 임대소득의 소득구분 체계적례는 주소 또는 업종 중심

– 소수의견으로 해외업체 소득구분 방법 개도(database)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체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제시됨

○ 주택 임대소득 관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업대업주사업체에게만 적용해서나 공제실액 주소 보는 최저

– 소수의견으로 일부의 업권업자 임대사업 안정을 위해 업무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되는 의견이 제시됨

[4]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전력 발전 중 석탄발전 비중은 약 40%이고, LNG 발전 비중은 약 32%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 예상 소생등전에 대한 환경이슈를 반영해 전기 발전량 기준 중 환경피해비용은 주변년 발전에 LNG 발전의 3배 수준

– 국내전기 및 대기환경을 고려한 실제 해외업계의 최대한 제고로 도입하려면

		요금 (원/kWh)	연료비 (원/kWh)	기타비용 (원/kWh)	고정비 (원/kWh)	총 발전단가 (원/kWh)
평균단가 (전체)	LNG	5.91	4.69	0.32	15.37	25.29
	무연탄	11.74	11.19	0.82	30.98	54.61
한전 자회사 기준 (개별)	LNG	3.3	30.9	5.1	122.0	160.4
	무연탄	45.3	42.3	2.0	31.4	175.3

○ 유연탄은 '16.2월 최초 계약 후 재송송 지정 민간개발으로, 발전용 LNG의 계약부담금 지도가 이전보 상당한 수준이므로 교정계 부담완화에 따른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 조정 필요

- (기존 과세체계) → (기준1) → (조정1안) → (기준2) → (조정2안)

< LNG, 발전용 유연 에너지부담금 현황(기준안) 조정(기준) >

구분		LNG	유연탄
세율	과세단위	0.82원/kg	감면기준 (0.82원/kg, 0.82원/㎥)
	감면	0%	없음
	기준(기준2)	10%	10%
대한민국	국제 미세먼지 대응에	미세먼지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금융	금융그룹계열사별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없음
	주요주주	30.2%(한)	

□ 현고 내용

○ 변동 제출량 개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탄력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탄력 LNG 수준을 모라하여 인상 조정로서

○ 원재료값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세부부담을 입회 조정

2. 예산분야

[1]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의 재정에 관한 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각각 제공 중

○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통합적 재정정보 파악에 어려

-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인 국가지원과 지방의 역할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등에 대한 이해 곤란

- 국민들은 국세, 지방세 등의 세제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떠게 비칠지 프라이지 업계 파악해기 어려운 상황

□ 현고 내용

○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의 범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정책 인의 재정정보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인계(일람)하여 공개

- 국민은 중앙정부 일반 하이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교육일반 재정사항을 모두 나라살림으로 인식

- 나라살림에 관한 정보는 지정 플랫폼에서의 자세적인 공개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통합 사이트)에서 일괄 공개

○ 관계부처은 행정, 플랫폼 빌그레이션에 소요되는 기관등 간인하여, 재정정보의 통합공개을 단계적으로 확대

○ 이로 인해 국민이 국가재정 및 재지사용 규모을 재조 인식

-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정부 '16년 국가재정(총지출, 순이긴 기준) 규모은 428조 → 460조원으로 증가

- '16년 재지사용 브한 123조 → 142조6천조로 증가

○ 건강보험 등의 복된은 국민이 보장하으로 심무해는 보험으로 손일등에도 대비기관인 국회가 한계 정보을 심비 논의하기 질증

- 국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등 재정책(을사업에 보험하는 구성인 심비·의결

□ 현고 내용

○ (대안1) 통합적 국가재정 공보서 싸작은 의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 확대

-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공지을 및 재지사용 규모 정보 공개 (현재 예산 방식으로의 확장)

- 중장기 재정전망 등에 고령한 '16년 국가재정(총지출, 순이긴 기준) 규모은 428조 → 460조원으로 증가

- '16년 재지사용 브한 123조 → 142조6천조로 증가

○ 건강보험 등의 복된은 국민이 보장하으로 심무해는 보험으로 손일등에도 대비기관인 국회가 한계 정보을 심비 논의하기 질증

- 국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등 재정책(을사업에 보험하는 구성인 심비·의결

□ 현고 내용

○ (대안1) 통합적 국가재정 공보서 싸작은 의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 확대

-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공지을 및 재지사용 규모 정보 공개 (현재 예산 방식으로의 확장)

- 중장기 재정전망 등에 고령한 '16년 국가재정(총지출, 순이긴 기준) 규모은 428조 → 460조원으로 증가

- '16년 재지사용 브한 123조 → 142조6천조로 증가

[3]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개인별로 식위안을 수 있는 예정사업 정보가 분산돼, 기관별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

- 국민은 중앙정부 일반 하이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교육일반 재정사항을 모두 나라살림으로 인식

- 지방 자치단체 정책하이 정보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부족

○ 정부는 일반의 재정정보의 구축 완료 후,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정책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재정서비스' 실시

- 현재 이용 검색정보의 비중이 많은 정보을 우선적으로 한다(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학교 '소득연계형 등록금 부담 완화' 등)

○ 정부는 일반의 재정정보의 구축 완료 후,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정책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재정서비스' 실시

- 현재 이용 검색정보의 비중이 많은 정보을 우선적으로 한다(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학교 '소득연계형 등록금 부담 완화' 등)

[4]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 '열린재정' 홈페이지을 통해 예산 관리 정책 및 보고서 등을 제공 중이나,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 미흡

- 예산 관련 보고서 중 예산안 심의자료는 불분이 많은 데 비해 국회 심사 시 활용도가 높지 않음

○ (분산) 국회에 제출하는 분산자료는 등에 정보의 단순 제시기법고 예정금액 분류의 방식이 달라 일반 상개 이해 곤란

- 예정금액 결과에 대한 논의 불가 부족

- 대다수 분산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for U.S. Government 정부투자기관의 분산에 관한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를 제공

- 한국은행은 예산을 예정금액을 정책을 예정하여 큰 예산은 산정의 목적에는 내역에 따라서 자산을 달리하여 근거 설명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 비해

- 국회의 이해을 돕기 위한 시각화(차트 등) 자료 제공 부족

- 예산은 정부의 경제상에 대한 예측에 효과 산출자에 시작하면 분석보고서(Fiscal Outlook 수준), "Executive Summary" 제작

○ (예정금융공단보고서) 예정실에 관점을 최적화도, 중 위치을 함께 분석 부족하여, 보험료 예정이관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정보 미흡

- "예정금융공단보고서"

- OECD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을 위해 예산단에 및 정책 예정 전달 등에 대한 예정준수등급(best-in-class)" 개발 검토

-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 "Improving Value for Money(OECD) 예산정책의 대한 효율적인 영향으로 개선, 준예 예산단에 인정서, 예산의 과정을 이용 두 있는 한국정부 구축



3. 재정개혁보고서 주요 내용

가. 재정개혁보고서 확정 및 발표('19.2.26.)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 확정하고, 동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재정특위는 2018년 4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 조세 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4회, 2회, 20회 개최하여 조세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 토론하였고, 정책토론회 워크샵 개최 및 여론조사를 통하여 조세 재정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비전 및 목표, 조세 예산 개혁방안 등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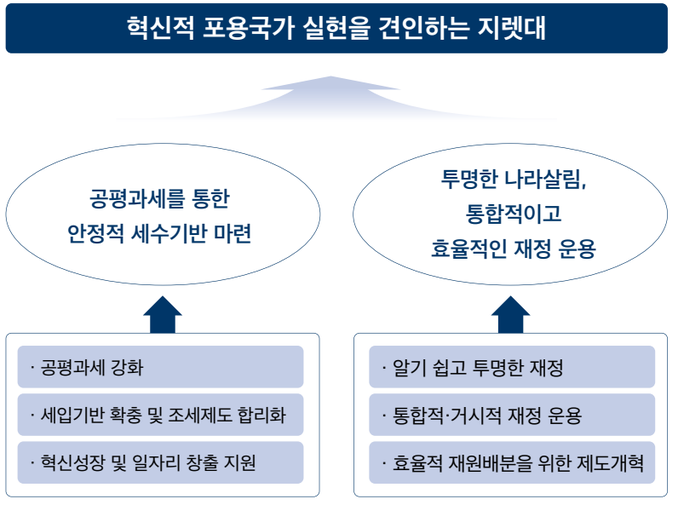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문제로 어느 대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나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관리 방안으로서 국민의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제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목표로 한 '재정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재정개혁보고서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견인하는 지렛대'라는 비전과 ①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② 투명한 나라살림 및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목표 하에 조세 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전, 분야별 목표, 추진전략 및 개혁과제〉



1) 조세 분야 주요 개혁과제

목표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추진 전략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개혁 과제	①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합리화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합리화 -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 공시가격 제도 개선 ②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상속여세제 개선 - 상증세 과세체계 합리화 - 공익법인 세제혜택 조정 ③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소득세제 합리화 - 주식양도차익 과세 개편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 EITC/CTC 제도 합리화	④ 조세구조 선진화 - 중장기 세수 확충방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⑤ 능동적인 교정과세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등 해결 - 환경 관련 개별 소비세 등 개편 ⑥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 조세 불복제도 개편	⑦ 혁신성장 세제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 지원세제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정비 - 벤처 창업/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 -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합리화 ⑧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세제 개편 - 청년·노인 근로자 등 세제 지원 - 다자녀가구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가) [추진전략1] 공평과세 강화

첫째,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한다.

둘째,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합리화시킨다.(상반기 권고안 포함 내용)

셋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형주택에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기본공제를 축소한다.

넷째,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이원화된 평가기관(한국감정원/민간)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시킨다.

다섯째, 응능부담 원칙의 적용,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시킨다. 특히 상속에의 경우에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과 공제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하는데, 주내용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곱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타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주내용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조정도 제안하였다.

여덟째,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출산·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 [추진전략2]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첫째,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넓은 세원·적정 세율 원칙 하에서 적정한 세입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합법인의 사회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 구축을 제안하는데, 주내용은 사회적인 비용을 반영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함으로써 휘발유와 경유 간에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특히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

경세의 경우에 세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친화적 조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관련 부담금 강화를 검토하는 방안과 함께, 발전용에너지세 부담에 대해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를 인상하고, 대신에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하는 안을 담고 있다.

넷째,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정책에 대응하여 납세자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불복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다) [추진전략3]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첫째, 4차산업혁명이 실효성 있게 지원되도록 연구조직과 설비 중심의 지원에서 인력·기술·사업화 등 사람 중심의 지원으로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기업성장과 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의 원천이 되는 벤처·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조달과 투자자·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되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범위 확대 등 지원제도 강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섯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자녀관련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



가) [추진전략1] 알기쉽고 투명한 재정

첫째,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괄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중앙+지자체+교육자치단체의 재정통계 일괄공개를 2019년까지하고, 2단계에서는 '열린재정'에서 설명자료와 집행정보까지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세분화된 검색기능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운용중간보고서' 신규 도입을 제안하였다. 특히 '재정운용중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에 작성·공개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

나) [추진전략2] 통합적 거시적 재정 운용

첫째,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국민 부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분석보고서 작성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공적연금의 변화랄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탄력적인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 등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셋째, 국가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건강보험 기금화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2022년까지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넷째,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간 연계를 규모가 큰 분야부터 dBrain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다섯째는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를 관리하고, 정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책해설을 추가하고,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기재부 등이 제외되어 있는데 포함시키도록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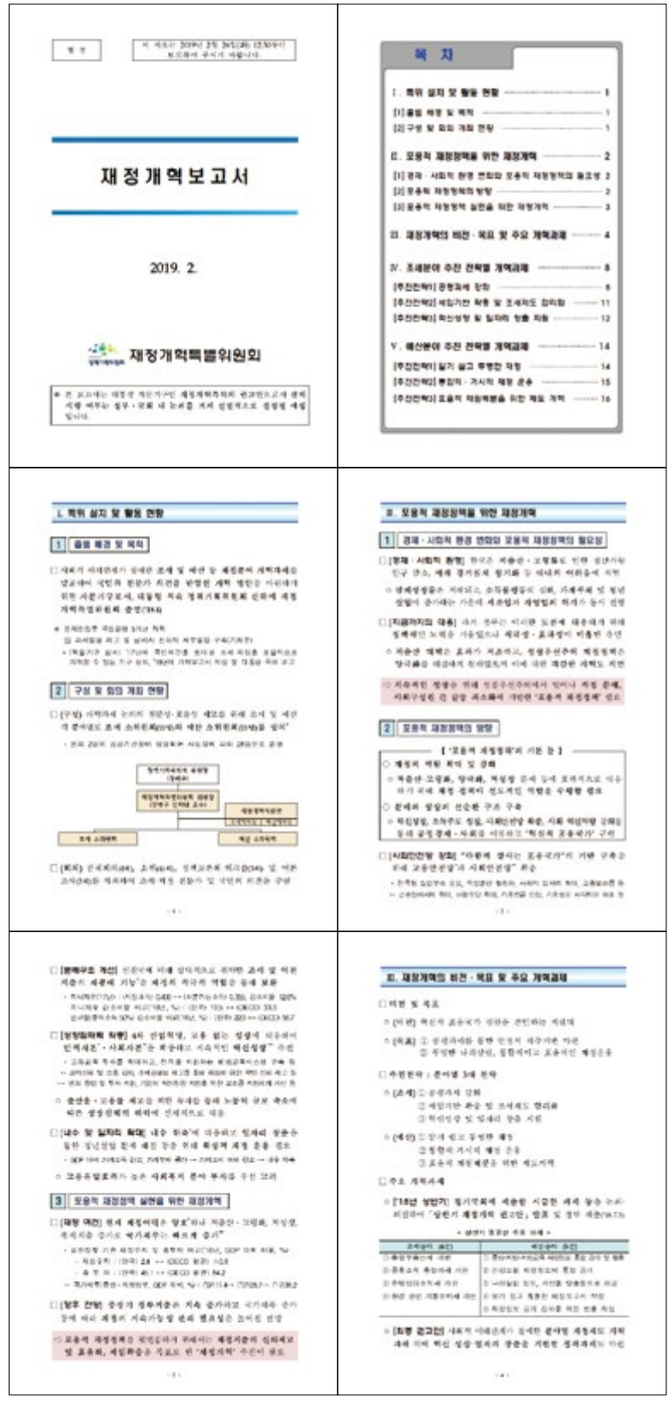
다) [추진전략3]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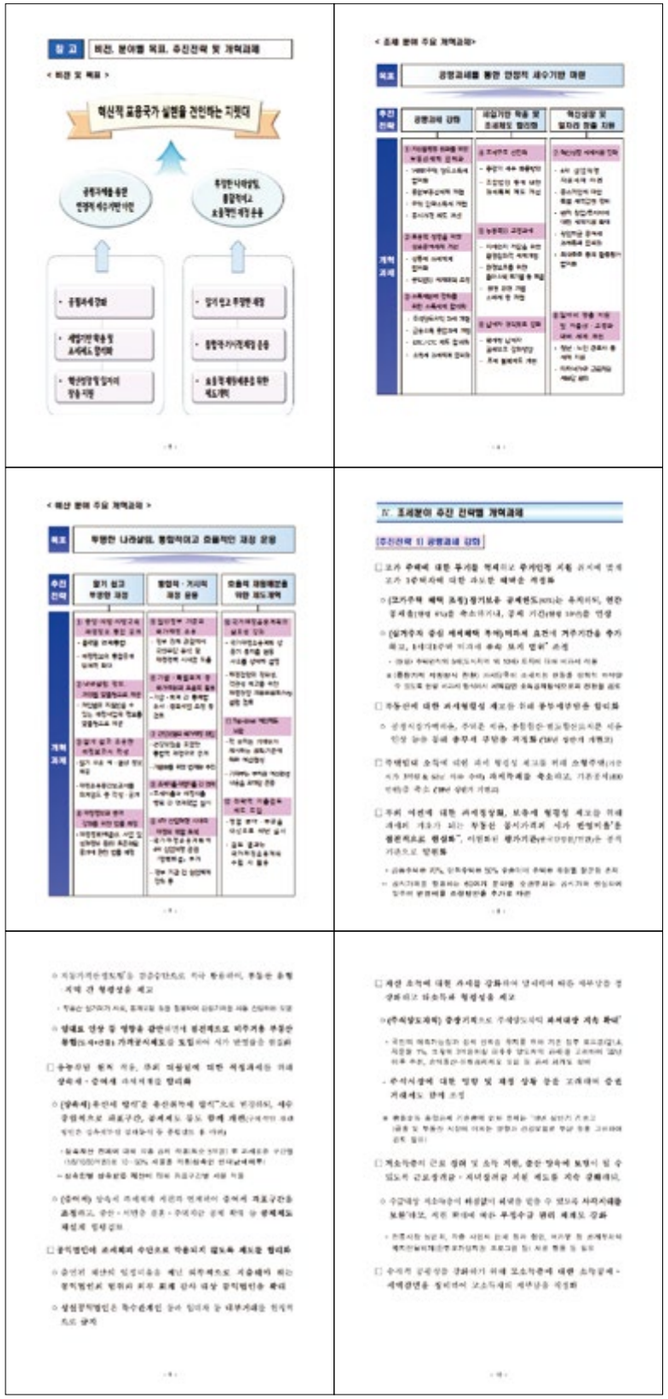
첫째, 국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전망의 정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재정전망자문위원회(가칭)' 설립 운영 방안 검토를 제안하였다.

둘째, 부처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top-down 제도의 전략적인 예산요구나 미시적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일단 기재부가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기재부는 부처의 예산편성 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거시적 차원에서 지출구조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쟁점 분야 부문을 매년 검토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잔기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개혁보고서 발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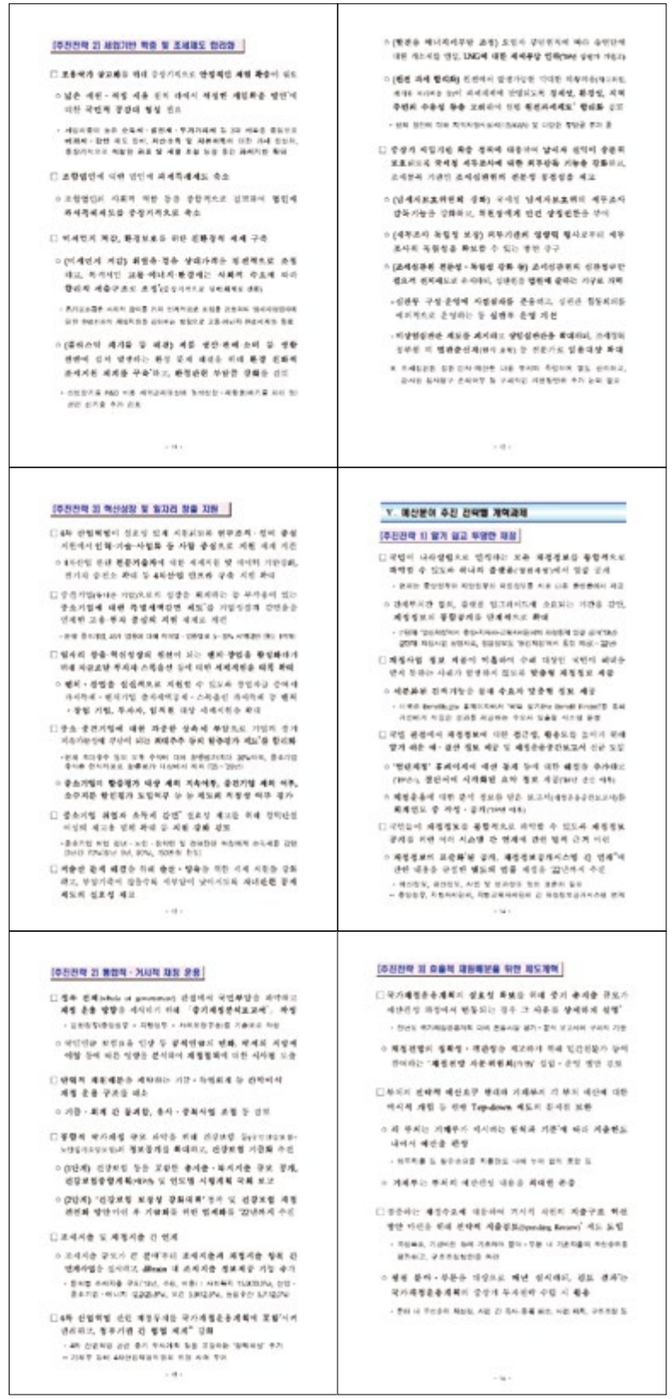



참 고
비전, 분야별 목표, 추진전략 및 개혁과제
< 비전 및 목표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견인하는 지렛대
공평부담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기반 마련
투명한 나라살림,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 공평과세 강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체계 합리화
· 재정성과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창출 투명한 재정
· 효율적 기금개편을 위한 제도개편

< 조세 분야 주요 개혁과제 >
목표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추진전략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체계 합리화
재정성과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개혁과제

< 재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 >
목표
투명한 나라살림,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추진전략
개혁과제

Ⅳ. 조세분야 추진 전략별 개혁과제
[추진전략 1] 공평과세 강화


[추진전략 2]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체계도 합리화
□ 조세부과 공교롭을 위해 공정기획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충이 필요
○ 넓은 세원 · 적정 세율 등의 세제의 세원한 세입확충 방안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조세법령의 이한 간인성 과세적용에서도 축소
○ 조세법령의 이해의 적한 등을 공한기적으로 실현하여 법률에 따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공정기적으로 확보
□ 미세한지 계산,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 구축
○ (미세먼지 저감)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특수차인 고율 에너지·환경세는 지속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율구조로 조정(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
○ (플라스틱 폐기물 및 폐유) 제품 생산·판매 초기 및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관련 부담금 강화를 검토
□ 비과세·감면 제도의 합리적 정비 및 투명성 제고
○ (조세지출 관리)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 대상 확대 및 조세지출 성과분석 실시
○ (조세지출 일몰관리) 조세지출 일몰관리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 및 조세지출 일몰 연장 시 엄격한 심사 실시
□ 조세지출 투명성 제고
○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분석 결과 등 조세지출 관련 정보 공개 확대
○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 대상 확대 및 조세지출 성과분석 실시 대상 확대
□ 조세지출 성과분석 실시
○ 조세지출 성과분석 실시 대상 확대 및 조세지출 성과분석 실시
□ 조세지출 일몰관리 강화
○ 조세지출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 및 조세지출 일몰 연장 시 엄격한 심사 실시
□ 조세지출 투명성 제고
○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분석 결과 등 조세지출 관련 정보 공개 확대
○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 대상 확대 및 조세지출 성과분석 실시 대상 확대
□ 조세지출 일몰관리 강화
○ 조세지출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 및 조세지출 일몰 연장 시 엄격한 심사 실시

[추진전략 3] 재정성과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4차 산업혁명이 진로일 인해 시장리로써 변무조직·정비 중심 시장에서 민적·기술·사람투 등 사람 중심으로 저한 세제 지은
○ 4차산업 분야 전문기술계에 대한 세제지원 및 데이터 기반금융, 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4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 중견기업(매출액 기업)으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중 부각중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세제인센 세도"을 기업지원과 선택중심 인센티브 고용·투자 중심에 지원 세제로 개선
□ 일자리 창출·확산장려를 위한 세도" 중 세액공제 일부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구상이 되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
○ 중소기업의 할증평가 대상 제외 지속여부, 중견기업 제외 여부, 손주지분 할인특가 도입여부 등 논 제도화 치열성 여부 검토
□ 중소기업 과점주 소득세 감면" 일몰도달 제도를 위해 정책산업 비상위 제도를 단계 확대 등 지속 검토 필요
□ 지출한 환계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지속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가족이 많을수록 지부담이 낮아지도록 재산세제의 합계제도의 일조정 제도
○ 출산·양육 관련 지출 세액공제 확대 및 소득·재산 요건 완화
○ 부양가족 세액공제 확대 및 소득·재산 요건 완화
○ 출산·양육 관련 지출 세액공제 확대 및 소득·재산 요건 완화

Ⅴ. 예산분야 추진 전략별 개혁과제
[추진전략 1]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 국민이 나라살림으로 인식하는 모든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일원화 방식)에서 일괄 공개
○ 분야별 통상정책의 체인정보의 재정성과 등 다른 분야별 정보와 연계
□ 재정투자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 재정투자 결과 분석 및 환류 결과를 다음 재정투자 의사결정에 반영
□ 재정사업 정보 제공이 비효율적이 안내 대상인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
○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 국민 생활에서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알게 해준 에 · 결산 정보, 예산 및 재정운용공간보고서 신규 도입
○ "탄소중립" 분야(이하에서 대상 동에 등에 대한 세정을 추가하고 (R&D, 결산이어 시작예산 포함 정보 제공(R&D 신규 예정)
□ 재정사업 정보 제공이 비효율적이 안내 대상인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
○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 국민 생활에서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알게 해준 에 · 결산 정보, 예산 및 재정운용공간보고서 신규 도입
○ "탄소중립" 분야(이하에서 대상 동에 등에 대한 세정을 추가하고 (R&D, 결산이어 시작예산 포함 정보 제공(R&D 신규 예정)
□ 재정사업 정보 제공이 비효율적이 안내 대상인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
○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추진전략 3]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개혁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기 총지출 관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는 정부 그 사용을 명세하게 설명
○ 재정전망의 정확성 ·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전망 자문위원회(가칭)" 입법 · 운영 방안 검토
□ 부처의 전략적 예산요구 행태와 기재부의 기 부처 예산에 대한 하향식 개입 등 현재 Top-down 예도의 문제점 보완
○ 각 부처는 기재부가 제시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
○ 개재부는 부처의 예산안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

제2절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

1. 출범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개헌 추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17년 4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개헌의견 발표시,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고, 2018년 초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에 개헌 로드맵은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담겨지게 되었다.

2017년 5월 18일 주요 정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하여 개헌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고, 2017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 30주년 기념행사, 2017년 6월 14일 시·도지사 간담회, 2017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7년 12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2018년 새해가 되어서도 국회의 개헌 논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추진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계속 기다리는 한편, 필요 시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하여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월말까지도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5일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8년 2월 5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이에 정책기획위원회는 2018년 2월 13일 각계각층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주권 실현,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 합리화, 민생 개헌이라는 5대 원칙과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이라는 개헌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헌 자문안 준비에 착수하였다.

2. 구성·운영 및 주요활동

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

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2월 13일 31명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특위') 위원을 위촉하였는데, 헌법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표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국민헌법특위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겸임하였고, 부위원장에는 하승수 위원(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과 김종철 위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각각 임명되었다. 국민헌법특위 위원은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 중심의 학계 인사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시민사회 또는 법조계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특히, 11명의 여성 위원을 위촉(33%)하여 여성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30대도 2명 위촉하였다. 2월 20일에는 경제 분야 논의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추가로 위촉하여 국민헌법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3명으로 구성 운영되었다.

〈국민헌법특위 위원 구성〉

구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기타	합계
위원장		1				1
분과위	총강·기본권	6	1		1	8
	정부형태	8				8
	국민주권·지방분권	5		1	2	8
국민참여본부		1		6	1	8
합계		21	1	7	4	33

〈국민헌법특위 위원 현황〉

구분	성명 및 직책	
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학부 교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前))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곽상진 (분과위원장/경상대 법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선문대 법·경찰학과 객원교수, 前 법제처 차장/법제연구원장)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정태호 (분과위원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부위원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일반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과위원회	이국운 (분과위원장/한동대 법학과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
	이 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한주 (가천대 부총장/경제학과 교수)
국민참여본부	하승수 (부위원장/국민참여본부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구분	성명 및 직책	
국민참여본부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상임이사장)
	구예림 (클레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2)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기구

국민헌법특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체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국민참여본부, 확대운영위원회, 조문화소위원회 및 국민헌법특위 지원단을 각각 설치 운영하였다.

전체회의는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 개정 시안의 작성, 국민 여론 수렴, 국회 등과의 협조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헌법특위 출범 이후 총 4회 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는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 조정을 수행하며,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장, 부위원장 2명, 각 분과위원장 3명, 국민참여본부장 등 총 7명으로 구성 운영되었고, 총 4회 개최되었다.

국민헌법특위 분과위원회는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로 설치되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국민헌법특위 위원장이 임명하였다.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는 곽상진, 김기표, 송기춘, 송석윤, 양현아, 이준일, 임지봉, 정연순 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고, 곽상진 위원(경상대 법과대학 교수)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는 헌법 전문, 총강 및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을 그 소관으로 하여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형태 분과위원회는 정태호, 김인회, 김종철, 김호기, 박명림, 서복경, 이소영, 최형익 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고, 정태호 위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정부형태 분과위원회는 국회, 정부, 선거 및 사법제도 관련 쟁점을 그 소관으로 하여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는 이국운, 강현수, 김수현, 김중권, 안성호, 이두영, 이진, 이한주 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고, 이국운 위원(한동대 법과대학 교수)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절차 및 국민 참여 관련 쟁점에 대해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국민헌법특위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의견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본부를 설치하였다. 국민참여본부는 하승수, 장덕진, 최은순, 이태호, 최정묵, 이진순, 구예림, 송효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하승수 위원(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국민참여본부는 국민의견 수렴·분석, 공청회 또는 토론회 운영, 그 밖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홍보 등과 관련하여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3월 2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개헌 쟁점에 대한 조정·통합을 위해 기존의 운영위원회(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곽상진 총강·기본권 분과위원장, 정태호 정부형태 분과위원장, 이국운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장, 송기춘 위원)에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 이한주 위원과 국민참여본부 이태호 위원을 추가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위원회 내부 또는 각 분과위원회 간 이견 등을 조정·통합한 후 3월 7일 개최된 제3차 국민헌법특위 전체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8년 3월 7일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헌 자문안 마련을 위해 조문화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조문화소위원회는 국민헌법특위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조문화소위원회 위원장은 정해구 국민헌법특위 위원장이 맡았으며, 김종철 부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곽상진 총강·기본권 분과위원장, 정태호 정부형태 분과위원장, 이국운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장,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김기표 위원 및 송기춘 위원,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 이한주 위원, 국민참여본부 최은순 위원이 조문화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조문화소위원회는 총 13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여 3월 12일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국민헌법특위가 2018년 3월 13일 대통령께 보고한 개헌 자문안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칙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문화소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마련하였다.

국민헌법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국민헌법특위 지원단이 설치되었는데, 단장, 부단장, 운영지원팀, 국민참여팀 및 법제팀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헌법특위 지원단 단장은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국장이, 부단장은 법제처 국장급 공무원이 각각 임명되었다. 그리고 운영지원팀장은 국무조정실 과장급 공무원이, 법제팀장은 법제처 과장급 공무원이, 국민참여팀장은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과장급 공무원이 각각 맡았는데, 운

영지원팀은 개헌안 마련 일정 관리와 헌법 관련 유관단체 의견 수렴을, 국민참여팀은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분석을, 법제팀은 개헌 자문안 논의와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또, 법제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공무원 21명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4명도 소관 전문분야별로 지원단에 참여하였다.

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활동

1) 제1차 전체회의

국민헌법특위 제1차 전체회의는 2018년 2월 13일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해구 국민헌법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헌을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의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추진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책기획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국민헌법특위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헌법특위 제1차 전체회의 정해구 위원장 인사말〉



국민헌법특위 제1차 전체회의 첫째 안건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으로, 운영위원회, 국민참여본부, 분과위원회, 조문화소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상정되었다. 둘째 안건으로는 국민헌법특위의 전반적 활동계획이 상정되었다. 국민헌법특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총 4회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일의 제1차 회의에 이은 제2차 회의는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3차 회의는 자문예비안 보고 및 국민의견 수렴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4차 회의는 최종 자문안 보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것으로 안내되었다. 셋째 안건으로는 국민의견 수렴계획과 개헌 홍보계획이 상정되었다. 특히,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개헌 여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국민 참여 지역 토론회, 청년들이 토론하고 조문화까지 하는 개헌워크숍,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토론하는 오픈테이블 설치, 4대 도시에서의 국민헌법콘서트,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고지되었다.

〈국민헌법특위 제1차 전체회의 모습〉



2) 논의자료 TF 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향후의 집중적·효율적 개헌 논의를 위한 기본 논의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헌법특위 논의자료 TF'를 구성해서 기본 논의자료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국민헌법

특위 논의자료 TF'는 정해구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김종철 부위원장, 정태호 정부형태 분과위원장, 이국운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장, 송기춘 위원(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되었고, 국민헌법특위 지원단 법제팀이 그 활동을 지원하였다.

'국민헌법특위 논의자료 TF'는 그간의 개헌 논의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개헌 쟁점을 선별한 후 해당 쟁점별로 논의 시안, 배경·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반영하되, 개헌 쟁점별로 복수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국민헌법특위 논의자료 TF'에서는 개헌 쟁점별로 현행 조문, 대통령 공약사항 관련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 각 정당의 의견, 관련 시민사회단체 논의 내용, 해당 조문의 연혁, 외국사례 등을 정리하여 총 110개 개헌 쟁점에 대해 500쪽이 넘는 분량의 '국민헌법특위 논의자료'를 작성하였다. '국민헌법특위 논의자료'는 배포 당시부터 TF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과 그 내용적 완결성에 대해 깊은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헌법특위의 개헌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민헌법특위 논의자료의 개헌 쟁점별 분포〉

합계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
110개	33개	34개	43개
	○ 전문/총강 14 ○ 기본권 19	○ 국회 8 ○ 정부 11 ○ 법원 8 ○ 헌법재판소 5 ○ 선거관리위원회 2	○ 지방자치 31 ○ 경제 7 ○ 헌법개정 1 ○ 국민주권 강화 4

3) 분과위원회 활동

각 분과위원회는 2018년 2월 13일 열린 국민헌법특위 제1차 전체회의 직후에 첫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의 논의 방향 및 회의 일정을 정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는 '국민헌법특위 논의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등 국회 논의 결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개헌 의견, 그리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개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헌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① 간사의 직전 회의결과 및 당일 논의대상 보고, ② 분과위원장 주재 쟁점별 집중 토론, ③ 간사의 회의결과 정리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 각 분과위원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쟁점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운영원칙에 따라 2018년 3월 1일까지의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5회,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6회,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 6회 등 총 17회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등이 총 3회 개최되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논의 결과 개헌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별로 개정 배경, 개정 내용, 개정 설명 및 조문 시안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3월 2일 국민헌법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가)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는 현행 헌법 전문, 제1장 총강(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분야를 그 소관 사항으로 하였다. 다만, 다른 분과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전문이나 총강 또는 기본권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총강·기본권분과위원회는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개략적 운영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회의 차수	논의 사항
1차 회의 (2.13.)	○ 향후 회의 일정 및 운영 방안
2차 회의 (2.19.)	○ 헌법 전문 및 총강 관련 개헌 쟁점 - 역사적 사건 및 새로운 헌법적 가치 명시, 수도 규정,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등
3차 회의 (2.21.)	○ 기본권 관련(현행 헌법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개헌 쟁점 - 기본권 주체 확대, 생명권, 차별금지 사유 확대, 검사의 영장신청권 등
4차 회의 (2.23.)	○ 기본권 관련(현행 헌법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개헌 쟁점 - 언론매체의 다원성·다양성, 정보기본권, 노동권,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등
5차 회의 (2.25.)	○ 기본권 관련(현행 헌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개헌 쟁점 - 사회보장 강화, 안전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등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나)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정부형태 분과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3장 국회(제40조부터 제65조까지), 제4장 정부(제66조부터 제100조까지), 제5장 법원(제101조부터 제110조까지), 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에 관한 분야를 그 소관 논의사항으로 정하였다 정부형태 분과위원회는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개헌 쟁점에 대해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개략적 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일자	논의 사항
제1차 회의 (2.13.)	○ 향후 회의 일정 및 논의 방향
제2차 회의 (2.19.)	○ 국회 관련 개헌 쟁점 - 선거 비례성 원칙, 국회 상시화, 정부 법률안 제출권, 예산법률주의 등
제3차 회의 (2.21.)	○ 국회 및 정부 관련 개헌 쟁점 - 국정감사제도, 대통령 헌법상 지위,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근거 등
제4차·제5차· 제6차 회의 (2.24.~26.)	○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 관련 개헌 쟁점 - 결선투표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임명방식, 감사원 독립성 및 조직 구성, 법원·헌법 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식 등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다)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과위원회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및 제118조), 제9장 경제(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분야를 소관 논의사항으로 정하였다. 특히,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의 경우 지방분권 강화, 경제민주화 확대,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가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헌 쟁점을 그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어 위원들

간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개략적 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일자	논의 사항
1차 회의 (2.13.)	○ 향후 논의 방향 및 회의 일정
2차 회의 (2.22.)	○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및 위원별 역할배분 등
3차 회의 (2.24.)	○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관련 개헌 쟁점 - 지방분권국가, 주민자치권, 국가자치분권회의,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4차 회의 (2.25.)	○ 지방분권 및 경제 관련 개헌 쟁점 - 자치입법권, 보충성의 원칙,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등
5차 회의 (2.28.)	○ 지방분권 관련 개헌 쟁점 - 자주재정권, 재정배분원칙, 자주과세권, 자주조직권 등
6차 회의 (3.1.)	○ 소관 개헌 쟁점 전반에 대한 최종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견 정리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4) 제2차 전체회의

국민헌법특위 제2차 전체회의는 제1차 전체회의(2018년 2월 13일) 이후 3주 후인 2018년 3월 2일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국민헌법특위 지원단장으로부터 국민헌법특위의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각 분과위원회별 진행 상황, 운영위원회 개최 상황 및 국민의견 수렴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공유되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3월 7일 국민헌법특위 제3차 전체회의, 3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국민헌법특위 조문화소위원회, 3월 12일 국민헌법특위 제4차 전체회의 일정도 함께 공지되었다.

하승수 국민참여본부장으로부터 국민참여본부 활동경과 보고도 있었는데, 카드뉴스 형태로 작성된 28개 주요 개헌 의제의 온라인 의견 수렴, 숙의형 시민토론회와 청소년·청년토론회, 국민인식 여론조사, 지역시민사회 간담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홍보 활동 등이 보고되었다. 국민의견 수렴 부분은 진행 중인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최종 결과는 3월 7일 국민헌법특위 3차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분과위원장의 분과위원회별 논의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는 34건, 정부형태 분과위원회는 39건,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는 37건의 개헌 쟁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국민참여본부 위원들이 국민수렴 의견을 일부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장애인단체 의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의견, 여성단체 의견, 농업·교육·환경·지방분권과 관련된 의견들이 소개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별 결과보고, 전체회의 제시 의견 및 국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추가적 내용 조정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각 개헌 쟁점에 대한 조정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정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국민헌법특위 제2차 전체회의 모습〉



5) 확대운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위원회 결과보고서 내용,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국민의견 수렴결과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기 위해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운영위원회(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곽상진 총강·기본권분과위원장, 정태호 정부형태분과위원장, 이국운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위원장, 송기춘 위원)에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위원회의 이한주 위원과 국민참여본부의 이태호 위원을 추가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확대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2018년 3월 4일에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와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을 검토·조정하였고, 2018년 3월 6일에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소관 중 논의되지 않은 부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검토·조정하였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조정·통합 결과를 반영하여 헌법개정요강 시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 7일 국민헌법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6) 제3차 전체회의

국민헌법특위 제3차 전체회의는 2018년 3월 7일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국민참여본부의 국민의견수렴 종합보고, 확대운영위원회의 조정결과, 조문화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 날 회의는 3월 7일 15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3월 8일 새벽 3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을 만큼 위원들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국민참여본부의 국민의견수렴 종합보고가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국민인식 여론조사 및 국민헌법 토론회 결과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분권 항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정 논의에 반영되지 못한 국민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조문화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확대운영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보고되었다. 조정결과는 단일안이 복수안으로 변경된 경우, 복수안이 단일안으로 변경된 경우,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복수안의 순서 조정이 있는 경우, 문구와 표현을 수정한 경우 등 80여건의 조정 사항이 보고되었다. 조정결과에 대한 논의는 전문부터 시작하여 조문 순서대로 진행되었는데, 조문화소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 때문에 모든 개헌 쟁점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전체회의의 의견이 모아진 쟁점에 대해서는 바로 조문화소위원회에 넘기기로 하였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으로 정리하여 조문화소위원회에 넘기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범위, 성평등에 대한 규정 방식,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범위 및 수준,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여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선출 방식의 적정성, 자치입법권 강화 수준 등의 쟁점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전체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헌법개정시안의 마련을 위한 조문화소위원회의 구성안이 보고되어 의결되었다.

〈국민헌법특위 제3차 전체회의 모습〉



7) 조문화소위원회

국민헌법특위 제3차 전체회의(2018년 3월 7일)에서는 구체적인 헌법 개정 조문안 작성을 위해 조문화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곽상진 총강·기본권 분과위원장, 정태호 정부형태 분과위원장, 이국운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장,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김기표 위원 및 송기춘 위원,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위원회 이

한주 위원, 국민참여본부 최은순 위원 등 10명으로 조문화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정해구 국민헌법특위 위원장이 조문화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조문화소위원회는 밀도 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2018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연속하여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헌법 전문 및 총 137개 조문의 개헌 자문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12일 국민헌법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한편, 2018년 3월 14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은 대통령께서 부칙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조문화소위원회는 3월 15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한 부칙안을 마련하였다.

〈조문화소위원회 운영 실적〉

일자	논의 사항
1차 회의 (3.8.)	○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소관 중 헌법 전문, 총강, 기본권 일부(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관련 개헌 쟁점
2차 회의 (3.9.)	○ 총강·기본권 분과위원회 소관 중 기본권 일부(제21조부터 제39조까지)관련 개헌 쟁점 ○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소관 중 국회, 정부(감사원 제외) 관련 개헌 쟁점
3차 회의 (3.10.)	○ 정부형태 분과위원회 소관 중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관련 쟁점 ○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회 소관 개헌 쟁점
4차 회의 (3.11.)	○ 개헌 쟁점 전반에 대한 최종 검토 및 확인

〈조문화소위원회 회의 모습〉



8) 제4차 전체회의

국민헌법특위 제4차 전체회의는 2018년 3월 12일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조문화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개헌 자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회의였다. 먼저 국민헌법특위 지원단장으로부터 국민헌법특위의 전반적 활동경과 보고가 있은 후 자문안에 대한 보고가 시작되었다. 개헌 자문안은 ① 조문화 과정에서 한글화 적용 원칙, ② 쟁점별로 작성된 자문안 요강안, ③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④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비교표로 구성된 책자 형태로 보고되었다. 특히, 조문화 과정에서 한글화 적용원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헌법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다른 용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를 병기한다. 둘째, 일본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한글 문법에 맞추어 변경하며, 가급적 일상 생활 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줄임말을 사용한다. 셋째는 학계와 실무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그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 등은 원래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국민헌법특위 지원단 부단장이 조문별로 자문안의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회의가 개헌 쟁점에 대한 최종 점검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모든 개헌 쟁점마다 격론이 펼쳐졌다. 또, 개헌 자문안에 반영되지 못한 의견도 대통령이 발의안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자문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각자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 의 마지막에는 정해구 위원장이 조문별로 부칙 필요 사항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부칙 내용은 대통령이 발의안을 작성할 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자문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해구 위원장이 제4차 전체회의 토론 내용을 반영한 개헌 자문안을 2018년 3월 13일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국민헌법특위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은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마련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국민헌법특위 제4차 전체회의 모습〉



3.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경과

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

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 보고

국민헌법특위는 2018년 3월 13일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개헌 자문안 보고회에는 정해구 국민헌법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먼저 정해구 위원장이 국민헌법특위 활동 경과, 국민의견 수렴 절차, 국민의견 주요 내용 및 개헌 자문안 개요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이번 개헌 자문안이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의 내실화', '민생 안정'의 5대 원칙 아래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민헌법특위 개헌 자문안 보고회에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해구 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해구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국민헌법특위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이 차례로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종철 부위원장과 하승수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식견과 국민들의 많은 참여로 의미 있는 자문안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곽상진 총강·기본권 분과위원장, 정태호 정부형태 분과위원장, 이국운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위원장도 각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별 논

의 과정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었다. 각 분과위원장 모두 대통령께 보고된 자문안은 각 분과위원들 간 치열한 논쟁과 합의를 통한 산고의 결과물임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김수연 위원, 송기춘 위원, 이태호 위원, 박명림 위원, 김중권 위원, 이두영 위원 등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각자의 소감을 이어갔다. 위원들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개헌 자문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그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국민헌법특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어 현재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어 국력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헌을 통해 차기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같이 갈 수 있게 되면 선거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의 비례성 원칙, 선거연령 하향,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예로 들며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에 본문들은 준비가 잘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고 말하며, "부칙은 왜 이 시기에 개헌을 해야 하는지가 나타나고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헌법특위는 2018년 3월 15일 조문화소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고 개헌 자문안 부칙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추가로 보고하였다.

〈국민헌법특위 개헌 자문안 보고회 회의 모습〉



〈국민헌법특위 개헌 자문안 보고회에서 당부 말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2)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표

대통령은 국민헌법특위에서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국회에 제출할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개헌안을 국민에게 알리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민정수석비서관이 개헌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종료한 후 기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 자리에 배석한 법무비서관과 정무기획비서관이 상세하게 답변했다. 첫 날인 3월 20일에는 헌법 전문, 기본권 및 국민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둘째 날인 3월 21일에는 지방분권, 총강 및 경제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 날인 3월 22일에는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3일간 연속해서 진행한 발표는 대통령이 준비한 개헌안이 국민의 뜻에 맞게 개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민의수렴의 기회였다.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 개헌안 발표〉



〈3월 20일에 발표한 헌법 전문, 기본권 및 국민주권 분야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헌의제	현행	개정안
□ 헌법 전문 개정안		
○ 새로운 가치와 지향(전문)		
▷ 역사적 사건 (민주이념) ▷ 사회적 가치	▷ '4·19'만 명시	▷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추가 ▷ '자치·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추가
□ 현행 기본권 개선		
▷ 기본권 주체 확대(제2장)	▷ '국민'으로 한정하여 명시	▷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제10조), 생명권(신설),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 (제20조), 자기정보통제권(신설),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 기본권 규정 방식 변경으로 기본권 보장 강화	▷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의 형성을 법률에 위임	▷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이 헌법에서 직접 보장됨을 명시하여 해당 기본권 강화

개헌의제	현행	개정안
○ 노동권 강화		
▷ 노동자의 권리 강화	▷ '근로'라는 용어 사용 ▷ 국가의 고용증진 보장 노력 ▷ 단체행동권 행사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으로 규정	▷ '노동'으로 수정 ▷ 고용안정과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의무로 강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지급 노력의무 신설 ▷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시행 의무 신설 ▷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 신설 ▷ 단체행동권 행사 목적에 노동조건 개선 외 권익보호 추가
▷ 공무원 노동3권 강화	▷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만 노동3권 보유	○ 공무원은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노동3권 보유
□ 신설되는 기본권		
○ 생명권과 안전권		
▷ 생명권 ▷ 안전권	 ▷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 노력 의무	▷ 생명권 신설 ▷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 ▷ 안전하게 살 권리 신설 ▷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사람 보호를 위한 국가 의무로 강화
○ 정보기본권		▷ 알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신설 ▷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 예방 및 시정 노력 의무 신설
○ 평등권 강화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 차별금지사유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추가 ▷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노력 의무 신설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 증진 노력 의무 ▷ 쾌적한 주거생활에 대한 국가 노력 의무 ▷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보호의무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변경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변경 ▷ 건강하게 살 권리로 변경 ▷ 사회적 약자를 기본권 주체로 규정
□ 삭제되는 규정		
○ 검사의 영장청구권	▷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명시	▷ 법률에 규정할 사항으로서 삭제

개헌의제	현행	개정안
○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 불합리한 차별로서 삭제
□ 국민주권강화 관련 조항 신설		
○ 국민소환제		▷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국민발안제		▷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월 21일에 발표한 지방분권, 총강 및 경제 분야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헌의제	현행	개정안
□ 지방분권 강화		
○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
○ 자주조직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 내용은 조례에 위임
○ 자치행정권 강화	▷ 주민복리 사무 처리 및 재산 관리	▷ 사무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 원칙 신설
○ 자치입법권 강화	▷ '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시 법률 위임 필요
○ 자치재정권 보장		▷ 자치사무 수행 경비 자기부담 원칙 명시 ▷ 사무 위임 시 위임자 비용부담 원칙 명시 ▷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 재정조정제도 신설
○ 주민참여 강화		▷ 지방정부 자치권의 유래를 주민으로 명시 ▷ 지방정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권 명시 ▷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 신설
○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 지방정부의 국회에 대한 법률안 의견제시권 도입

개헌의제	현행	개정안
□ 총강		
○ 수도조항	* 관습헌법사항	▷ 수도에 관한 사항 법률에 위임
○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 금지 규정 신설
○ 정당의 자유 강화 및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제도 개선	▷ 정당 설립 시 필요 조직구비 ▷ 정당운영 자금의 국고보조	▷ 정당의 조직 구비 요건 삭제 ▷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명시
□ 경제조항		
○ 경제민주화 명확화	▷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 경제민주화 실현에 경제주체 간 '조화'외에 '상생'도 추가
○ 국토와 자원 보호 강화	▷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 ▷ 중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등에 대한 국가 특허	▷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계획 수립 목적에 지속가능성 추가 ▷ 수산자원을 넓은 개념인 '해양수산자원'으로 변경하고, 산림자원 및 풍력을 특허 대상에 추가
○ 토지공개념	*현행 헌법 제23조 및 제122조의 해석상 인정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도입 * 최종 발의안에는 확인적 차원에서 특별한 제한 앞에 '법률로써'를 추가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	▷ 농어업의 가치를 산업적 측면 중심으로 규정	▷ 식량 보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추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	▷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자조조직 육성 의무	▷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에 대한보호·육성 및 자조조직의 육성 의무 별도 규정 ▷ 사회적 경제의 진흥에 대한 국가 노력 의무 명시
○ 소비자보호 강화	▷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 소비자운동 보장으로 국가의 보장 범위 확대 ▷ 소비자 권리에 대한 국가 보장 및 정책시행 의무 신설
○ 기초학문의 장려와 과학기술의 목적	▷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노력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학문 장려 노력 추가

〈3월 22일에 발표한 선거제도,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분야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헌의제	현행	개정안
□ 선거주권 강화		
○ 선거권 연령	▷ 선거권의 법률 위임	▷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 헌법에서 직접 보장
○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사항의 법률 위임	▷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국회의석 배분하는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강화	▷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선거운동 허용하되, 균등 기회 보장	▷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하되, 후보자간 공정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 제한
□ 정부형태 및 운영		
○ 대통령 4년 중임제	▷ 5년 단임제	▷ 4년 1차 연임제로 변경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규정	▷ 최초 선거 종료 :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 ▷ 결선투표 종료 : 최초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 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
○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절차 신설	▷ 대통령 궐위, 사고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 대행	▷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질병 등'추가 ▷ 서면 통보에 따른 개시 :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권한대행 할 사람에게 서면 통보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시 : 대통령 서면통보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신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 권한대행 종료 : 대통령 복귀의사 서면 통보 때 권한대행 종료. 대통령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다툼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 국회의 권한 강화 및 대통령의 권한 분산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법률안 제출권 부여	▷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변경
○ 국회의 예산심의 권 강화	▷ 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으로 확정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 국회 제출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변경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하도록 변경

개헌의제	현행	개정안
○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유보	▷ 국회 동의 필요 조약을 법률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확대
○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로 한정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통제		▷ 특별사면에 대한 사면위원회 심사 제도 도입
○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관여 제한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받아 대통령이 임명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
○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기관화	▷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 설치 ▷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 ▷ 감사위원은 국회, 대통령,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선임
○ 국무총리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	▷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통할	▷ '행정에 관해 대통령 명을 받도록'한 부분 삭제
□ 사법제도 개선		
○ 대법원장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록 변경 *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법관회의 선출 3명 ▷ 대법관회의에서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변경
○ 일반법관 임명절차 개선	▷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 대법관회의의 동의 전에 법관인사위원회 제청 절차 추가
○ 법관 임기제 폐지 및 징계 해임 추가	▷ 일반법관 임기 10년 ▷ 징계유형 :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 임기 규정 삭제 ▷ 임기 규정 삭제에 따른 법관 책임성 확보 위해 징계유형에 해임 추가
○ 대법원 조직 개선	▷ 대법원에 부 설치 가능	▷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개편 근거 마련
○ 배심재판의 헌법적 근거 마련	▷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 부여	▷ 일반 국민의 재판 참여 근거 마련
○ 군사법원 개혁	▷ 군사재판 관할 위해 군사법원 설치 가능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	▷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원 설치 가능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 폐지

개헌의제	현행	개정안
□ 헌법재판제도 개선		
○ 헌법재판 관할권 확대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관장	▷ 법률로 심판 대상 추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확대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개방	▷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자격 요구	▷ 법관 자격 요건 삭제
□ 헌법재판제도 개선		
○ 헌법재판 관할권 확대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관장	▷ 법률로 심판 대상 추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확대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개방	▷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자격 요구	▷ 법관 자격 요건 삭제

3)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비서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은 3월 22일 3차 발표가 끝난 직후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및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 개헌안의 제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추후 국회 의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무수석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 합의안이 나오지 않아 여야 공동으로 공약한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가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발의권 행사에 대한 양해를 당부하면서 이번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개헌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방문 설명을 마친 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법제처에 개헌안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 요청된 대통령 개헌안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일반에 공개되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비서관과 정무기획비서관은 3월 23일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여성 관련 조항들을 따로 정리하여 특별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그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 심사를 의뢰받은 후 개헌안 심사 TF를 구성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개헌안 심사를 수행하였다. 개헌안 심사에는 법제처

처·차장과 국장급 간부들,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을 포함한 60여명의 법제전문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였다. 법제처는 헌법 규정 의미의 명확화, 표현의 통일, 일본식 표현 정비 및 부칙의 수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4일간 집중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회신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법제처 의견과 그간 제시된 언론,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3월 25일 법제처에 대통령 개헌안 수정안의 심사를 요청하였다.

대통령 개헌안 수정안의 심사를 완료한 법제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3월 26일 국무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대통령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공고안은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되었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의 발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여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배경 설명과 국회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김외숙 법제처장과 대통령비서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대통령 개헌안을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입법차장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 관보 제19921호에 대통령공고 제278호로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처리되기 위해서는 2014년 7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2018년 4월 23일까지 개정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하였고, 개헌 추진에 대한 국회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6월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현행 정부정책을 통해서라도 개헌안 취지와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2018.4.24.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대통령 헌법 개정안 국회 논의

대통령 개헌안은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후 바로 본회의 의안(의안번호 2012670)으로 접수되었다. 통상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국회의 관례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접수·부의되는 절차적 특성이 있다. 또, 국회 본회의에 접수·부의된 헌법 개정안은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헌법 규정의 취지상 그 가부(可否)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내용 변경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는 실체적 특성이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헌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한 후 개헌안 본회의 상정 시 그 보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1)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라 한다)는 2017년 1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로 출범하여 1년간 활동하였는데, 2018년 1월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 중인 상태에 있

었다. 헌정특위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3월 26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제12차 헌정특위 회의에서는 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평가, 국회의 독자적 개헌안 마련 및 「국민투표법」 개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우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 발의배경, 발의절차, 개헌안 내용, 국회 개헌 논의에 미치는 영향 또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긍정적·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부정적·소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헌정특위 위원들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국회안을 만들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와 속도, 즉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상당수 개진되기도 하였다. 한편,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2017년 3월 30일 헌정특위에서의 효율적 개헌 논의를 위해 4월 2일까지 구체적 개헌안을 제출해 줄 것을 각 교섭단체에 요청하였다.

헌정특위는 4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및 정의당 등에서 헌법 개정 의견이 각각 제출되었다. 제13차 헌정특위 회의에서 각 정당의 개헌의견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각 개정 내용에 대한 본격적 논의나 의견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정치구조 또는 권력구조의 개편에 따른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정 입장과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의 도입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헌정특위는 4월 16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헌법 개정 의견이 각각 제출되었다. 헌정특위 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개헌의견이 발표됨으로써 모든 교섭단체의 헌법 개정 의견이 공개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을 헌정특위의 공식 논의자료에 포함하여 향후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대립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도 법률의 위헌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6월 13일 동시 개헌 추진을 위해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시 한번 강하게 개진되었다.

2)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투표 불성립

대통령 개헌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월

26일부터 60일이 되는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였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설명을 대독하였다. 국무총리의 제안 설명 대독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정상회담 목적으로 미국 순방 중이어서 직접 제안 설명을 할 수 없었던 점, 이승만 대통령이 발의한 3차례의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허정 총리서리(1952년 1월 17일), 정재환 법무부차관(1952년 6월 21일), 백두진 국무총리(1954년 2월 25일)가 제안 설명을 한 사례가 있었던 점,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개헌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설명은 헌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 기본권, 지방분권 등의 헌법사항에 대해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지난 30년간, 국회에서의 개헌 작업에 진척이 없어 국민헌법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24일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안 설명〉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와 경위 및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합니다.

먼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헌법은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탄생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국민의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행헌법은 대통령직선제를 부활하고, 5년 단임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집권을 근절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현행헌법은 그 시대의 가장 간절했던 소명을 이행했습니다.

현행헌법이 시행되고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같은 새로운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전국적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구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학계와 국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헌법 개정이 논의돼 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입니다.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개헌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에 따라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특위는 여러 토론회, 간담회와 여론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론수렴에는 58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개헌안 마련에 참여해, 70만 건이 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개헌안을 법제처 심사 등 소정절차를 거쳐 제가 3월 26일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안전권,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성별과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도 국가에 지웠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이 계승하는 민주이념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그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했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으며, 자치재정권을 보장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의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법률안 의견 제시권도 도입했습니다.

향후 국가기능의 분산과 수도이전의 필요가 대두될 경우에 대비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경제 질서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국가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했습니다.

농어민 지원, 사회적 경제 진흥, 소비자운동 장려 등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넷째, 정치개혁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부의 법률제안권을 제약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출방식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관추천회의의 추천을, 일반법관의 임명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했습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도 단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헌법재판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습니다. 그 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대통령 문 재 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안 설명 대독 이후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및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 의사진행발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최인호 의원, 전현희 의원 및 김종민 의원의 토론이 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토론을 마친 후 토론 종결과 투표 실시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전원(113석) 불참하였고, 바른미래당의 헌정특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및 헌정특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 정의당 의원(6석)들은 본회의에 출석하였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재석 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자 개표 시작을 선언하면서 명패함의 명패 수부터 점검하였다. 명패 수에 대한 확인 결과 투표 참여 의원의 수는 114명으로서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2명)에 미치지 못하여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선포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불성립 선포 후 이번 대통령 개헌안 투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면서 헌정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6월 안에 여야가 국회단일안을 발의하여 제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안에 반드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촉구하였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는 결과가 초래되자 5월 24일 청와대 대변인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다. 다음 날인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이 무산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의 가부를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켜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3절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1. 출범배경 및 활동현황

가. 출범배경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정책으로서, 과거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대기업·수출기업에 의존하던 기존의 불균형 성장 패러다임은 저성장·고착화·양극화 심화라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 성장의 과실이 가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응답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배경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2018년 6월 26일)에 따라 2018년 9월 6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2018년 9월 6일 현판식〉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75호, 2018.2.20. 일부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통계청 차장 등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의 고위공무원 4인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였다.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하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두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위 위원을 소위원회에 배정하고,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는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수행하였다. 소위원회도 업무를 보다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분과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였다. 소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원장 임기에 맞추어 1기와 2기로 구분하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특위 전체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두었으며,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전체회의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였으며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일반 운영 및 소위원회별 협의·조정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필요시 개최하였는데 운영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원장, 당연직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소득주도성장추진단장 및 그 밖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였다.

〈제1기('18~'20)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임명·위촉직 위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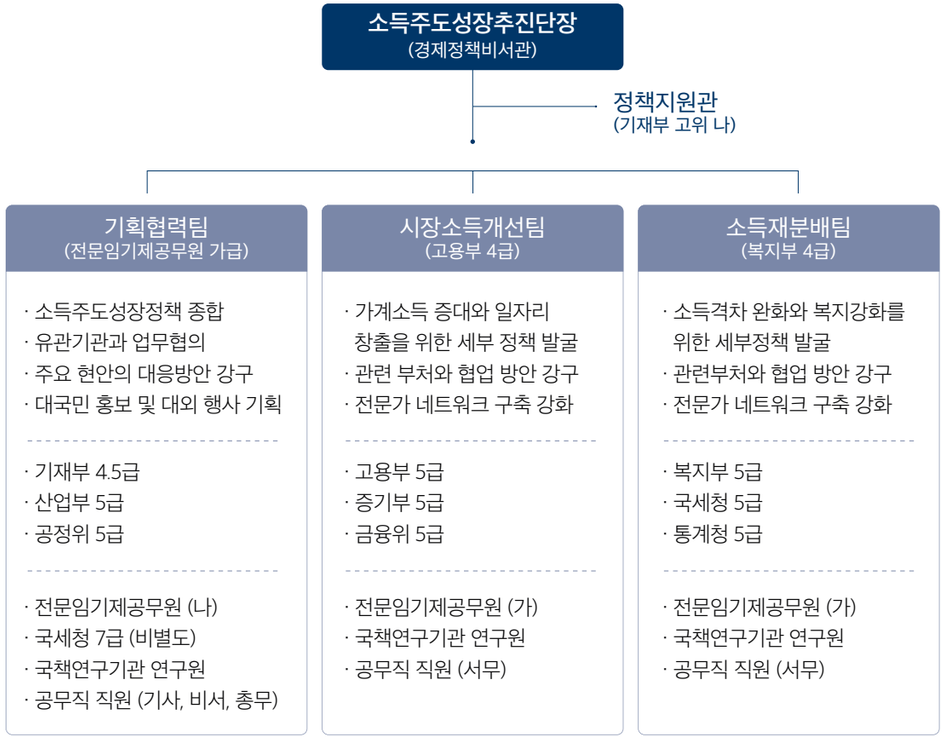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
1	홍장표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	'18.8.1.~'20.12.31.	
2	주 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10.1.~'20.12.31.	
3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18.9.6.~.20.9.5.	
4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18.9.'6.~'20.3.2.	
5	임원혁	한국개발원 연구위원	'18.9.6.~'20.3.2.	
6	김준동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8.9.6.~'20.3.2.	
7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8.9.6.~'20.7.16.	
8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8.9.6.~'19.5.30.	
9	우태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4.3.~'20.12.3.	
10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4.3.~'20.12.31.	
11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0.3.27.~'20.12.31.	
12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19.4.23.~'20.12.31.	
13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20.3.3.~'20.12.31.	
14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3.3.~'20.12.31.	
15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20.3.3.~'20.12.31.	
16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20.3.3.~'20.12.31.	
17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	'20.3.3.~'20.12.31.	
18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3.3.~'20.12.31.	
19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18.10.29.~'20.10.29.	
20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9.6.~'20.9.5.	
21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9.6.~'18.11.23.	
22	성낙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18.9.6.~'20.3.2.	
23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8.9.6.~'18.10.29.	
24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10.01.~'20.12.31.	
25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9.6.~'20.9.5.	
26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18.9.6.~'20.9.5.	
27	김 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3.27.~'20.12.31.	
28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8.9.6.~'20.9.5.	
29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18.9.6.~'20.9.5.	
30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18.9.6.~'20.9.5.	
31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9.6.~'20.9.5.	
32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18.9.6.~'20.9.5.	
33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센터장	'18.10.29.~'20.10.28.	
34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20.4.20.~'22.4.19.	

〈제2기('21~'22)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임명·위촉직 위원 현황〉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
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1.1.11.~'22.5.31.	
2	주 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1.11.~'22.5.31.	
3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1.11.~'22.5.31.	
4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21.1.11.~'22.5.31.	
5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1.1.11.~'22.5.31.	
6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21.1.11.~'22.5.31.	
7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1.1.11.~'22.5.31.	
8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1.11.~'22.5.31.	
9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1.11.~'22.5.31.	
10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21.1.11.~'22.5.31.	
11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1.1.11.~'22.5.31.	
12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1.1.11.~'22.5.31.	
13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1.1.11.~'22.5.31.	
14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1.11.~'22.5.31.	
15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21.1.11.~'22.5.31.	
16	박정연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21.1.11.~'22.5.31.	
17	신원철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1.1.11.~'22.5.31.	
18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1.1.11.~'22.5.31.	
19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1.1.11.~'22.5.31.	
20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1.1.11.~'22.5.31.	
21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1.1.11.~'22.5.31.	
22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1.1.11.~'22.5.31.	
23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1.1.11.~'22.5.31.	
24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1.11.~'22.5.31.	
25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21.7.26.~'22.5.31.	
26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21.9.17.~'22.5.31.	
27	문영만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1.7.26.~'22.5.31.	
28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1.9.17.~'22.5.31.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 산하에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두었다.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은 추진단장, 정책지원관, 기획협력팀, 시장소득개선팀, 소득재분배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추진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정책비서관으로 하고, 정책지원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팀장과 팀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정책지원관은 추진단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획협력팀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종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평가, 대외협력, 홍보 등의 업무, 시장소득개선팀장은 소득개선 분야 개혁 과제 발굴과 개혁 방안 마련 등의 업무, 소득재분배팀장은 소득재분배 분야 개혁 과제 발굴과 개혁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직제 및 구성〉



2. 주요 활동내용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6일 출범한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튼튼히 그리고 세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페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전체회의, 소위원회, 세미나, 정책연구 용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였으며, 토론회, 정책성과보고서,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국민들과 상호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활동 내역 및 업무처리 과정을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가. 전체회의 개최

전체회의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특위 전체회의는 반기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특위기간동안 임시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한편, 전체회의는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전체회의 개최 실적〉

구분	주제	일시/장소	주요내용
1차	소득주도성장특위 구성 및 출범	'18.9.6./ 이마빌딩 5층	소위원회 위원 배정 및 소위원장 선정, 부위원장 선임, 특위 준비현황 및 운영(안) 보고
2차	업무보고 및 문재인 정부 경제부문별 주요성과 및 과제 논의	'19.4.24./ 이마빌딩 12층	출범 이후 특위 추진현황 및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주요부문별 정책을 평가·정리
3차	업무보고 및 특위 운영방향 논의	'19.9.2./ 더플라자호텔	업무보고 및 특위 운영내실화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4차	업무보고 및 정책보고서 논의	'20.6.29./ 프레스센터	정책보고서 보완 사항 논의
5차	업무보고 및 TF별 정책보고서 중간보고·토론	'20.11.19./ 나인트리호텔	행정자료 통합연계 연구 TF 등 각 TF별 정책보고서 중간보고 및 보완방향 논의

구분	주제	일시/장소	주요내용
6차	업무보고 및 '21년 중점 추진과제 논의	'21.1.27./ 프레스센터	'18~'20년 특위 업무성과 보고 및 '21년 중점 추진 과제 논의
7차	업무보고, 주요안건 및 '22 년 업무계획 보고·토론	'21.12.9./ 프레스센터	'21년 업무성과 보고, 문재인 정부 5년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 및 '22년 업무계획 보고·논의

1) 제1차 회의

제1차 전체회의는 2018년 9월 6일 서울 광화문 소재 이마빌딩 5층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식을 겸하여 개최되었다. 특위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홍장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의 상견례 및 소위배정, 소위별 위원장 선정 및 부위원장 호선, 보안 서약서 낭독 및 서명, 특별위원회 준비현황 및 운영(안) 보고, 추진단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2) 제2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는 2019년 4월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이마빌딩 12층 소득주도성장특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전체회의에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과 구인회 부위원장 등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 15인이 참석하였다.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 이후의 업무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부문별 주요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9월 6일 제1차 전체회의〉



3) 제3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는 2019년 9월 2일 서울 광화문 소재 더 플라자호텔 4층 및 22층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전체회의는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 1주년 행사를 겸하여 진행되었으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과 구인회 부위원장 등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 18인 및 TF 외부위원 18인이 참석하였다.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위 1년간의 업무성과 보고와 함께 특위의 향후 주요계획 및 특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4) 제4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는 2020년 6월 29일 서울 광화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전체회의에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과 구인회 부위원장 등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 16인이 참석하였다.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위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보고와 함께 정책보고서 추진경과 보고 및 보완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9년 9월 2일 제3차 전체회의〉



5) 제5차 회의

제5차 전체회의는 2020년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소재 나인트리호텔 5층에서 개최되었다. 제5차 전체회의에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과 구인회 부위원장 등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 16인과 자문위원 13인이 참석하였다.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위 2020년 주요 업무성과 보고와 함께 TF별(① 행정자료 통합연계연구 TF, ② 사회보장연구 TF, ③ 부동산 TF) 정책보고서 중간 보고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6) 제6차 회의

제6차 전체회의는 2021년 1월 27일 서울 광화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되었다. 제6차 전체회의에는 2대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인 김유선 위원장 등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 21인과 자문위원 2인이 참석하였다.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2018년~2020년 기간 동안의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요 업무성과 보고와 함께 2021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7) 제7차 회의

제7차 전체회의는 2021년 12월 9일 서울 광화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되었다. 제7차 전체회의에는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등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 16인이 참석하였다. 제7차 전체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업무성과 보고와 함께 문재인 정부 5년의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 및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021년 12월 9일 제7차 전체회의〉



나. 소위원회 및 분과회의 구성·운영

1)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

가) 2018년 (제1차~제5차)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는 시장소득개선 관련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를 각계 전문가와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하였다. 동 소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소득개선 관련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TF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고 신규 및 보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제언하거나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하였다. 2018년 9월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회 운영하였으며, 향후 소위 운영방향 및 분야별 TF 구성 등을 논의하고,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2018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1회차 (9.16.)	○ 소위 향후 운영방향 ○ 자체발굴 과제 논의 및 분야별 TF 구성 등	총 14명 ○ (임명직) 12명 - 임원혁(KDI), 박복영(경희대), 김성희(고려대), 장민(금융연), 윤자영(충남대), 홍민기(노동연), 한귀영(한겨레), 전병유(한신대), 박창균(자본연), 전인우(중기연), 김준동(대한상의), 이성경(한노) ○ (당연직) 2명 - 이찬우(기재부), 이상훈(중기부)
2회차 (10.18.)	○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현황 ○ 자영업 간담회 건의사항 논의	
3회차 (11.15.)	○ 공정한 소득분배, 임금격차 해소 등 주제로 경영계, 노동계 발제 및 논의	
4회차 (11.29.)	○ 연구용역 과제 중간보고	
5회차 (11.30.)	○ 연구용역 과제 중간보고	

나) 2019년 (제6차~제17차)

2019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는 총 12회 운영하였으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 과제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소·자영업자를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육성 방안 등을 과제로 논의하였다.

〈2019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6회차 (1.9.)	○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유도 방안 ○ 소상공인·자영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총 15명 ○ (임명직) 13명 - 주 현(산업연), 박복영(경희대), 김성희(고려대), 장민(금융연), 홍민기(노동연), 한귀영(한겨레), 전병유(한신대), 박창균(자본연), 정은미(산업연), 전인우(중기연), 송경화(골프협), 김준동(대한상의), 이성경(한노) ○ (당연직) 2명 - 방기선(기재부), 이재홍(중기부)
7회차 (2.13.)	○ 최근 주요 현안과제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육성 방안	
8회차 (3.14.)	○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간편결제 수단을 활용한 영세·중소상공인 결제 비용 부담 완화방안	
9회차 (4.10.)	○ '18.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검토결과 ○ 고용·산업 위기지역 정책 방안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방안	
10회차 (5.8.)	○ 생애주기별 취업지원정책과 고용서비스 ○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과제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11회차 (6.13.)	○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방안	
12회차 (7.10.)	○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및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방향 ○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52시간제의 쟁점	
13회차 (8.21.)	○ 카풀 관련 협의 진행경과 및 주요 쟁점 ○ 일본 수출규제의 한-일 산업구조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 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연구	
14회차 (9.26.)	○ 중소기업 선제적 산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조직화 개선방안 연구	
15회차 (10.24.)	○ Taas 3.0,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 ○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방안 연구	
16회차 (11.20.)	○ 저소득층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설계 연구 ○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	
17회차 (12.19.)	○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과제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소득분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 2020년 (제18차~제28차)

2020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는 총 11회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전국민고용안전망, 수소경제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안 과제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증대를 위한 퇴직연금 현황 및 퇴직연금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020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18회차 (1.16.)	○ 고령시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방지 방안 연구	총 15명 ○ (임명직) 13명 - 주현(산업연), 김성희(고려대), 장 민(금융연), 홍민기(노동연), 한귀영(한겨레), 전병유(한신대), 이병희(노동연), 박창균(자본연), 정은미(산업연), 전인우(중기연), 송경화(전국골프존), 우태희(대한상의), 이동호(한노) ○ (당연직) 2명 - 방기선(기재부), 조주현(중기부)
19회차 (2.19.)	○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고서 일자리 분야 ○ 자영업 보호원 신설에 대한 정책제안	
20회차 (4.29.)	○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고서 자영업 분야 및 고용노동 분야	
21회차 (5.20.)	○ 미국의 뉴딜정책 ○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신용법」 제정 추진 방향	
22회차 (6.24.)	○ 보편적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 코로나19 이후 경제동향 및 해외 정책 대응 사례	
23회차 (7.15.)	○ 청년 이슈의 쟁점과 과제 ○ 바이오 산업 동향과 한국에서의 가능성	
24회차 (8.26.)	○ 노후소득증대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발전 과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시사점과 과제	
25회차 (9.24.)	○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8월 고용동향을 중심으로)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6회차 (10.28.)	○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 주요 공약 분석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 추진상황	
27회차 (11.27.)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및 향후과제	
28회차 (12.26.)	○ 수소경제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과제 ○ 한국산업의 저탄소화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라) 2021년 (제29차~제39차)

2021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는 총 11회 운영하였으며, 최저임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들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현안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산업부문의 추진전략과 공정한 노동전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21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29회차 (2.4.)	○ '21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 운영방안 ○ 정책연구용역 추진 필요과제 선정	총 17명 ○ (임명직) 15명 - 김혜진(세종대), 이병희(노동연), 이시균(한고원), 강성태(한양대), 신원철(부산대), 박명준(노동연), 문영만(부경대), 정은미(산업연),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김현우(기후정책원), 박정연(에너지전환협의회), 지만수(금융연), 임재만(세종대) ○ (당연직) 2명 - 한 훈(기재부), 조주현(중기부)
30회차 (3.10.)	○ 녹색일자리와 그린뉴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31회차 (4.14.)	○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해외정책 사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32회차 (5.12.)	○ 한국의 최저임금 ○ 코로나19 관련 정책현황 및 계획	
33회차 (6.9.)	○ 가사서비스 공식화 방안 ○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34회차 (7.14.)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 및 평가	
35회차 (8.18.)	○ 집단적 노사관계의 포용성과 민주성 신장방안 ○ 중소기업 산업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36회차 (9.15.)	○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포용성과 민주성 신장방안 ○ 최저임금제도 관련 정책평가와 과제	
37회차 (10.13.)	○ 중소기업 산업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38회차 (11.12.)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39회차 (12.14.)	○ 집단적 노사관계의 포용성과 민주성 신장방안 ○ 최저임금제도 관련 정책평가와 과제	

마) 2022년 (제40차~제42차)

2022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는 총 3회 운영하였으며,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제도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22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40회차 (1.12.)	○ '중소기업의 산업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	총 17명 ○ (임명직) 15명 - 김혜진(세종대), 이병희(노동연), 이시균(한고원), 강성태(한양대), 신원철(부산대), 박명준(노동연), 문영만(부경대), 정은미(산업연),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김현우(기후정책원), 박정연(에너지전환협의회), 지만수(금융연), 임재만(세종대) ○ (당연직) 2명 - 한 훈(기재부), 조주현(중기부)
41회차 (2.16.)	○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 중국견제 시대, 중국 경제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평가	
42회차 (3.3.)	○ '소득분배의 변화와 원인분석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 ○ 노후소득보장제도 기능분담과 발전방향	

2)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가) 2018년(제1차~제4차)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득재분배 강화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 과제를 각계 전문가와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하였다. 2018년 9월부터 매월 1회씩 총 4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범부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한편, 청년과 노인 세대의 사회보장 과제를 검토하고, 주거복지 분야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정책 진단과 향후 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18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1회차 (9.20.)	○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향후 운영방향 ○ 향후 논의안건 과제 발굴 및 분야별 TF 구성방안	총 12명 ○ (임명직) 10명 - 구인회(서울대), 김미곤(보사연), 기현주(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주은선(경기대), 최영준(연세대), 류덕현(중앙대), 성낙선(한신대), 오건호(내만복), 오종현(조세연), 주병기(서울대) ○ (당연직) 2명 - 배병준(복지부), 최성욱(통계청)
2회차 (10.18.)	○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현황 ○ 청년 일자리대책 및 노인빈곤 문제 논의	
3회차 (11.22.)	○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현황과 과제 ○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4회차 (12.6.)	○ 정책연구용역 과제 중간보고	

나) 2019년(제5차~제15차)

2019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는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현 정부 사회보장 강화 과제와 함께, 사회보장 재정 확보와 관련된 조세·재정 정책의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보장 과제로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전략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제도 등 개별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소득세 공제 개편 등 개별 제도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2019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5회차 (1.17.)	○ 사회보장5개년 기본계획 ○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저소득가구 소득지원 대책 논의	총 13명 ○ (임명직) 11명 - 구인회(서울대), 김미곤(보사연), 기현주(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주은선(경기대), 최영준(연세대), 류덕현(중앙대), 성낙선(한신대), 오건호(내만복), 오종현(조세연), 주병기(서울대), 강미나(국토연) ○ (당연직) 2명 - 배병준(복지부), 김광섭(통계청)
6회차 (2.2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보충성 원리와 기초연금 ○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7회차 (3.28.)	○ 중장기 사회정책 추진방향 ○ SOC 투자규모 중장기 정책이슈	
8회차 (4.18.)	○ '18 국가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분석 ○ 청년 일자리정책 성과평가 ○ 주거비 부담현황과 주거지원 정책	
9회차 (5.30.)	○ 소득·서비스 보장의 수급지형과 정책과제 ○ 혁신에 대한 이해와 혁신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0회차 (6.27.)	○ 혁신과 포용국가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11회차 (8.8.)	○ 소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방향 ○ 주거빈곤가구의 유형과 특성	
12회차 (9.19.)	○ 특위 운영 개선방안 ○ '18~'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13회차 (10.17.)	○ 목표수급률 설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14회차 (11.14.)	○ 중하위 소득가구의 구성과 실태 분석 ○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평가와 과제 ○ 주요 정책의 파급경로에 관한 연구 ○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분석에 관한 연구	
15회차 (12.19.)	○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 경감방안 연구 ○ 한국 공적연금의 중층보장체제 구축방안 ○ 주요 정책의 파급경로에 관한 연구	

다) 2020년(제16차~제25차)

2020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는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사회보장을 둘러싼 저출산·인구 고령화 등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소득 분배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방안과 기본소득제도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운용 방안으로, 우리나라 재정 정책을 진단하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0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16회차 (1.30.)	○ 국민연금 재정추계 방법과 결과의 이해 ○ '20년 소위원회 논의 안건 검토	총 14명 ○ (임명직) 12명 - 구인회(서울대), 김미곤(보사연), 강병구(인하대), 주은선(경기대), 기현주(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최영준(연세대), 류덕현(중앙대), 김 윤(서울대), 오건호(내만복), 오종현(조세연), 주병기(서울대), 강미나(국토연) ○ (당연직) 2명 - 양성일(복지부), 김광섭(통계청)
17회차 (2.19.)	○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 ○ '20년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논의	
18회차 (4.28.)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보고서 논의(사회서비스·사회안전망 분야)	
19회차 (5.18.)	○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 근로장려금 보완과제	
20회차 (6.11.)	○ 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 지역돌봄체계 개선 방안, 행정자료연계활용 정책과제	
21회차 (7.9.)	○ 기본소득 모의실험 : 근로연령대를 중심으로 ○ 기본소득 현안과 쟁점	
22회차 (8.25.)	○ 재정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	
23회차 (9.17.)	○ 주택정책 다시보기 ○ 소득 기회불평등 장기 추세	
24회차 (10.15.)	○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 ○ 한국 경제와 저출산	
25회차 (12.17.)	○ '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라) 2021년(제26차~제36차)

2021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는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현 정부 중장기 추진 과제들을 논의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보장 현안 과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거시적 차원에서 재정 운용 합리화를 통한 사회복지 재정의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과 개편 방안을 살펴보았다.

〈2021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26회차 (2.2.)	○ '21년 소위 운영방안 논의 ○ 연구용역·정책토론회 필요주제 논의	총 12명 ○ (임명직) 10명 - 노대명(보사연) → 이현주(보사연)* 강병구(인하대), 김 윤(서울대), 오건호(내만복), 강미나(국토연), 정세은(충남대), 이우진(고려대), 나원준(경북대) * 노대명 위원이 사회보장정보원 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위원 교체 ○ (당연직) 2명 - 박인석(복지부), 김광섭(통계청)
27회차 (3.5.)	○ '21년 소위원회·TF 구성 및 운영방향 논의 ○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28회차 (4.1.)	○ '21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TF 운영계획 ○ 공적노후소득보장 간 관계에서의 기초연금 쟁점과 발전방향 ○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편 : 주요 소득보장체계 효과 평가	
29회차 (5.6.)	○ 4세대 사회서비스 정책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시범사업 모델 비교·분석	
30회차 (6.3.)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31회차 (7.1.)	○ 복지목적세로서의 사회보장세 도입방안 ○ 소득재분배 TF 하반기 운영계획 공유	
32회차 (8.5.)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 재정운용 합리화를 통한 사회복지재정 조달방안	
33회차 (9.2.)	○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 상병수당 도입방안 논의-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설계 현황	
34회차 (10.7.)	○ 주택정책 현황과 과제 ○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방안	
35회차 (11.4.)	○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종합논의	
36회차 (11.25.)	○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 '22년 소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마) 2022년(제37차~제39차)

2022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는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과제로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돌봄·의료 등 지역에서 제공되는 공적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추진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2022년 소득재분배 소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논의사항	구성위원
37회차 (1.6.)	○ 고령화 시대 노후보장의 중심, 국민연금 ○ 한국 연금개혁 방향 모색 -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	총 12명 ○ (임명직) 10명 - 이현주(보사연), 강병구(인하대), 김 윤(서울대), 오건호(내만복), 강미나(국토연) 정세은(충남대), 이우진(고려대) 나원준(경북대) ○ (당연직) 2명 - 박인석(복지부), 강창익(통계청)
38회차 (2.10.)	○ 사회서비스 보장과 사회서비스원 과제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 진단과 대안	
39회차 (3.3.)	○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 기초연금의 성격과 개혁 방안	

3) 시장소득개선 분야 분과회의

가) 고용·임금 TF ('18~'20)

고용·임금TF는 특위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8월 1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9회 운영하였다. 고용·임금TF는 총 15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조건 격차 개선, 구조조정·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완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고용·임금 TF 구성·운영('18~'20)〉

차수		안건	구성위원
'18	1차	○ '18년 TF 정책 연구과제	총 6명 ○ (소위 위원) 3명 - 김성희(고려대), 홍민기(노동연), 이성경(한국노총) ○ (외부 전문가) 3명 - 김유선(노사연), 황선웅(부경대), 윤자영(충남대)
	2차	○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 관계 개선방안 연구 범위 및 방향	
'19	1차	○ '19년 TF 운영방향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2차	○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	
	3차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	
	4차	○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생산성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 연구 착수보고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소득분배,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착수보고	
	5차	○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결과보고 ○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생산성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보고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소득분배,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중간보고	
'20	1차	○ '19년 고용동향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심층분석 연구 착수보고	
	2차	○ '19년 고용동향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심층분석 연구 최종보고	

나) 금융 TF ('18~'19)

금융TF는 특위 위원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여 2019년 2월 2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9회 운영하였다. 금융TF는 총 9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가계와 영세 자영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금융 TF 구성·운영('18~'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8	1차	○ TF 정책 연구과제	총 4명 ○ (소위 위원) 1명 - 박창균(자본연) ○ (외부 전문가) 3명 - 이건범(한신대), 이수진(금융연), 한재준(인하대)
	2차	○ 서민·지역 특화 금융회사 육성 방안 ○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3차	○ 지역서민 금융기금 설립 및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서민정책금융 육성 ○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4차	○ 서민 금융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중간보고	
'19	1차	○ '19년 TF 운영방향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2차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선정	
	3차	○ 주택연금 공급실적 및 주요 현안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매칭형 저축상품 개발방안	
	4차	○ 저소득층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설계 연구 중간보고	
	5차	○ 금융안정·혁신금융·금융혁신·포용금융 4가지 측면에서의 향후 금융정책방향	

다) 산업·중기 TF ('18.~'20.)

산업·중기 TF는 특위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2회 운영하였다. 산업·중기 TF는 총 14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중기 TF 구성·운영('18~'20)〉

차수		안건	구성위원
'18	1차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 개선방안 관련 연구 중간보고	총 5명 ○ (소위 위원) 3명 - 임원혁(KDI), 김준동(대한상의), 정은미(산업연) ○ (외부 전문가) 2명 - 조철(산업연), 지민웅(산업연)
'19	1차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2차	○ 섬유산업에서의 국내외 스마트 제조전략 사례 및 시사점	
	3차	○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 자동차산업 진단 및 경쟁력 강화	
	4차	○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및 상생협력 관련 연구 착수보고	
	5차	○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현화, 사례분석 및 과제 연구 중간보고 ○ 중소제조업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 및 동태적 변화 분석 연구 중간보고	
	6차	○ 중소제조업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 및 동태적 변화 분석 연구 결과보고	
	7차	○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현화, 사례분석 및 과제 연구 결과보고	
'20	1차	○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분석 연구 착수보고	
	2차	○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분석 연구 중간보고	
	3차	○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분석 연구 결과보고	
	4차	○ 제조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	

라) 소상공인 TF ('18~'20)

소상공인 TF는 특위 위원 2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9월 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1회 운영하였다. 소상공인 TF는 총 13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 TF 구성·운영('18~'20)〉

차수		안건	구성위원
'18	1차	○ '18년 TF 연구방향	총 6명 ○ (소위 위원) 2명 - 전인우(중기연), 송경화(골프협) ○ (외부 전문가) 4명 - 양창영(법무법인정도), 류태창(우송대), 이장균(현경연), 신승만(비스타)
	2차	○ '18년 TF 정책 연구과제 ○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 주도성장 토론회 개최	
'19	1차	○ '19년 TF 운영방향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2차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선정	
	3차	○ 소상공인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4차	○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개선방안 관련 연구 착수보고	
	5차	○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개선방안 관련 연구 중간보고	
	6차	○ 자영업 생태계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협업과제 및 추진방향 연구 중간보고	
'20	1차	○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보고서 관련 논의	
	2차	○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보고서 관련 논의	
	3차	○ 자영업 생태계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협업과제 및 추진방향 연구결과 논의	

마) 인적자본개발(직업능력개발) TF ('19.)

인적자본개발(직업능력개발) TF는 특위 위원 1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여 2019년 4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7회 운영하였다. 인적자본개발(직업능력개발) TF는 총 7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과정 설계방안, 직업훈련 공급자 역량강화 및 평가체계 정립 등을 통한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인적자본개발(직업능력개발) TF 구성·운영('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9	1차	○ TF 운영방안	총 5명 ○ (소위 위원) 1명 - 주병기(서울대) ○(외부 전문가) 4명 - 김안국(직능원), 장홍근(한노연), 남재욱(직능원), 이덕재(경사노위)
	2차	○ 직업능력개발 정책 현황	
	3차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4차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직업능력개발 사업 분야) 현황	
	5차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선정	
	6차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착수보고	
	7차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결과보고	

바) 인적자본개발(교육) TF ('19)

인적자본개발(교육) TF는 특위 위원 1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여 2019년 3월 2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0회 운영하였다. 인적자본개발(교육) TF는 총 10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인적자본개발(교육) TF 구성·운영('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9	1차	○ TF 운영방안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총 4명 ○ (소위 위원) 1명 - 주병기(서울대) ○ (외부 전문가) 3명 - 안현효(대구대), 이강주(교육개발원), 이 범(전 민주정책연구원)
	2차	○ 특목고 입시와 교육 불평등 ○ AI 활용 영여 공교육 필요성	
	3차	○ 지역과 대학의 융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방안	
	4차	○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재정개혁방안	
	5차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및 성과 ○ 지역대학 고용 증진을 통한 청년 불평등 해소 전략	
	6차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선정	
	7차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정책 추진방향 및 사례	
	8차	○ 불평등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기업-대학 간 협력 방안	
	9차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교육 불평등 완화 및 교육비 부담 절감 방안 연구 중간보고	
	10차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교육 불평등 완화 및 교육비 부담 절감 방안 연구 결과보고	

사) 청년 TF ('19)

청년 TF는 특위 위원 2명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 2019년 2월 2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 운영하였다. 청년 TF는 총 6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청년을 중심으로 세대, 젠더, 계층, 노동시장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생활비 절감, 소득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청년 TF 구성·운영('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9	1차	○ TF 운영방안 ○ '19년 TF 정책 연구과제	총 7명 ○ (소위 위원) 2명 - 한귀영(한겨레), 기현주(서울시) ○ (외부 전문가) 5명 - 김유빈(노동연), 김공회(경상대), 정초원(복지국가네트워크), 김영민(청년유니온), 조라정(저출산위)
	2차	○ 청년의 세대, 젠더, 계층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 진단	
	3차	○ 청년 라이더 노동 현황 ○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와 정책과제 ○ 청년 주거지원 강화방안	

아) 노동정책 TF ('21.)

노동정책 TF는 특위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2021년 3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6회 운영하였다. 노동정책 TF는 총 7개의 안건 논의를 통해 2021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선정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집단적 노사관계의 포용성과 민주성 신장 방안 등을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하였다.

〈노동정책 TF 구성·운영('21)〉

차수		안건	구성위원
'21	1차	○ TF 운영방안 ○ '21년 TF 정책 연구과제	총 7명 ○ (소위 위원) 6명 - 김혜진(세종대), 이병희(노동연), 이시균(한고원), 강성태(한양대), 신원철(부산대), 박명준(노동연), 문영만(부경대)
	2차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노동소득 분배율 증가요인 분석'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전국민노동법 TF 기획안 ○ 집단적 노사관계의 포괄적 재구성 개혁방안 ○ 대안적 노동체제 TF 운영방안	
	3차	○ '전국민노동법 체계 마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노동소득 분배율 증가요인 분석' 연구용역 추진 ○ '집단적 노사관계의 포괄적 재구성 개혁방안' 논의	
	4차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	
	5차	○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요인 분석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6차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중간보고	

자) 대안적 노동체제 TF ('21)

대안적 노동체제 TF는 특위 위원 2명과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1회 운영하였다. 대안적 노동체제 TF는 총 11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최근 디지털화·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비정형 고용 형태 증가 등 노동체제 전반의 구조변화 논의 및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였다.

〈대안적 노동체제 TF 구성·운영('21)〉

차수		안건	구성위원
'21	1차	○ TF 운영방안 ○ 탈표준적 노동체제로의 전환 추이 진단	총 9명 ○ (소위 위원) 1명 - 김혜진(세종대) ○ (외부 전문가) 8명 - 배규식(경사노위), 이병훈(중앙대), 박태주(고려대), 전병유(한신대), 장지연(노동연), 정이환(과기대), 정승일(새사연), 강혜경(중앙대)
	2차	○ 전환기와 재난기의 노동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 보호의 새로운 접근	
	3차	○ 그린뉴딜과 일자리 창출 ○ 디지털화 전환과 노동	
	4차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성 모색 ○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간극과 정치·경제·사회적 함의	
	5차	○ 노동시장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6차	○ 정년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용문제	
	7차	○ 제조업 르네상스	
	8차	○ 노사관계 발전계획 방안	
	9차	○ 불안전 노동 및 청년고용 문제 논의	
	10차	○ 노동안전 및 일하는 사람의 노동법	
	11차	○ 그간의 안건 및 토의내용 정리 등	

차) 임금정책 TF ('21)

임금정책 TF는 특위 위원 2명과 외부 전무가 3명으로 구성하여 2021년 5월 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9회 운영하였다. 임금정책 TF는 총 11건의 안건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임금정책 TF 구성·운영('21.)〉

차수		안건	구성위원
'21	1차	○ TF 운영방안 및 과제발굴	총 5명 ○ (소위 위원) 2명 - 이시균(노동연), 주진우(자문위원) ○ (외부 전문가) 3명 - 오상봉(노동연), 황선웅(부경대), 김현경(보사연),
	2차	○ 최저임금 평가 기조발제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효과 평가 ○ 고용보험 등 데이터로 본 노동시장 추이	
	3차	○ TF위원별 집필 담당영역 주요내용, 결론방향 등	
	4차	○ 최저임금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주요쟁점 해결 방안	
	5차	○ 각 파트별 보고서 원고초안 제출 및 검토	
	6차	○ '22년 최저임금 결정사항 평가 및 정책보고서 초안 검토	
	7차	○ 정책보고서 파트별 제출 원고 검토	
	8차	○ 정책보고서 종합본 발제 및 토론	
	9차	○ 정책보고서 최종본 검토	

4) 소득재분배 분야 분과회의

가) 복지 TF('18~'19)

복지 TF는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진단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성하였으며, 2018년~2019년에 걸쳐 총 11회 운영되었다. 본 TF에서는 저소득층 실태 파악 및 소득보장제도 효과 분석을 진행하고,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복지 TF 구성·운영('18~'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8	1차	○ 국정과제기획자문단 발표사항 공유 ○ 복지 TF 자체 과제 발굴 및 연구용역 과제 추진 논의	총 11명 ○ (소위 위원) 6명 - 최영준(연세대), 구인회(서울대),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김미곤(보사연), 주은선(경기대), 오건호(내만복) ○ (외부 전문가) 5명 - 김진욱(서강대), 정익중(이화여대), 김은지(여정연), 노대명(보사연), 이현주(보사연)
	2차	○ 복지 TF 정책연구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추진 등 논의	
	3차	○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논의 ○ '이전소득의 소비효과 분석방안' 논의	
	4차	○ '소득주도성장' 정책 현황과 과제 공유	
	5차	○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중간보고 ○ '주거급여제도의 이해' 논의 ○ '캐나다 GIS 검토' 발표 및 논의	
	6차	○ '복지국가의 요건과 사회서비스' 논의 ○ 'GIS 도입 및 시뮬레이션' 논의	
'19	1차	○ '19년 복지 TF 운영방향 및 정책과제 발굴 논의	
	2차	○ '19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추진 계획 보고 및 추가 과제 발굴 논의	
	3차	○ '19년 정책연구 과제 추가 제안 및 구체화 논의	
	4차	○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과 실태조사' 논의 ○ '19년 추진 정책연구 과제 논의 등	
	5차	○ 신규 TF 위원 위촉, 그간 복지분야 연구 추진현황 보고 ○ '19년 TF 자체 추진 정책연구 과제 논의	

나) 정책평가 TF('18~'19)

정책평가 TF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 효과 분석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2018년~2019년에 걸쳐 총 4회 운영되었으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신규 평가지표 개발을 논의하고, 연구 주제를 발굴·제안하였다.

〈정책평가 TF 구성·운영('18~'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8	1차	○ 소득주도성장 특위 및 정책 현황 보고 ○ TF 운영방향 및 정책평가 방안 논의	총 5명 ○ (소위 위원) 1명 - 최성욱(통계청) ○ (외부 전문가) 4명 - 강창희(중앙대), 우석진(명지대), 손호성(중앙대), 박우람(KDI)
	2차	○ OECD 포용적 성장 정책 실행 체계 검토 ○ 정책연구과제(안) 논의	
'19	1차	○ '19년 정책평가 T/F 및 특위 연구용역 운영방향 검토 ○ '19년 T/F 정책연구 과제 논의	
	2차	○ 소득주도성장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화 방안 ○ 경제정책평가 토론회 안건 검토	

다) 조세·재정 TF('18~'19)

조세·재정 TF는 가구 소득 증대방안으로써,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재정 부문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TF는 2018~2019년에 걸쳐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고용 친화적 조세지원 제도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소득세 공제제도·SOC 재정지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조세·재정 TF 구성·운영('18~'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8	1차	○ TF 연구용역 과제 논의 및 간담회·세미나 운영 방안 ○ 연구용역 주제 및 외부 연구진 추천·논의	총 8명 ○ (소위 위원) 3명 - 류덕현(중앙대), 오종현(조세재정연구원), 주병기(서울대) ○ (외부 전문가) 5명 - 성낙선(한신대), 우석진(명지대), 강창희(중앙대), 송헌재(서울시립대), 홍우형(한성대)
	2차	○ TF 연구용역 과제 연구계획서 발표·논의 (노동공급 관련) ○ 연구계약관련 향후일정 논의	
	3차	○ TF 연구용역 과제 연구계획서 발표·논의 (노동수요 관련) ○ 연구계약관련 향후일정 논의	
	4차	○ '19년도 연구과제 발굴 논의 ○ 향후 조세재정 TF 운영방향	
	5차	○ '한국 사회의 불평등'주제로 내부 발제·논의 ○ '조세감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검토	
	6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지원제도 연구' 중간보고 ○ 향후 연구용역 진행방향 논의	
	7차	○ 근로유인 및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중간보고 ○ 향후 연구용역 진행방향 논의	
'19	1차	○ 소위원회 자체발굴과제 논의 ○ 6차 소위원회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발제·논의	
	2차	○ 소위원회 자체발굴과제 논의 ○ 7차 소위원회 'SOC 투자규모의 중장기 정책이슈' 발제·논의	
	3차	○ 소위원회 자체발굴과제 논의 ○ 9차 소위원회 '혁신에 대한 이해와 혁신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발제·논의	

라) 소득분배 TF('19)

소득분배 TF는 사회 불평등 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하였으며, 2019년 총 3차례 운영되었다. 본 TF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 분석과 함께, 자산 및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소득분배 TF 구성·운영('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9	1차	○ '19년 소득분배 TF 운영방향 및 정책 제안 논의	총 4명 ○ (소위 위원) 1명 - 전병유(한신대) ○ (외부 전문가) 3명 - 정해식(보사연), 이우진(고려대), 강창희(중앙대)
	2차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효과 분석 검토 논의	
	3차	○ 소득과 자산 간 관계 및 불평등개선 정책효과 분석 보완 검토 방안 논의	

마) 주거복지 TF('19)

주거복지 TF는 가계 지출부담 요인인 주거비 절감을 통한 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2019년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 및 주거 공급방안 등을 분석하고, 직·간접적인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주거복지 TF 구성·운영('19)〉

차수		안건	구성위원
'19	1차	○ 연구용역 추진 계획 및 T/F 운영방향(안) 보고 ○ '19년 주거복지 T/F 추진방향 논의	총 12명 ○ (소위 위원) 1명 - 강미나(국토연구원) ○ (외부 전문가) 11명 - 박미선(국토연구원), 박환용(가천대), 이용만(한성대), 봉인식(경기연구원), 김진유(경기대), 최은희(LH연구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지규현(한양사이버대), 박학용(서울시주택사업단), 조성철(국토연구원), 이후빈(국토연구원)
	2차	○ '주거비 경감 정책연구'경과보고 ○ '광열비 절감 방안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 확대 방안' 중간보고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임대주택 공급 방안' 중간보고	
	3차	○ 주거급여 보장성 확대 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4차	○ 소득주도성장 특위 주거복지 관련 활동 보고 ○ 국토연구원 '주거비 경감방안' 보고서 발표 ○ 하반기 특위 용역과제 주제 논의	
	5차	○ 임차가구 주거입지 분석을 통한 주거비·교통비 경감 방안 연구 ○ 하반기 특위 자체예산 과제 검토	

바) 행정자료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TF('20)

행정자료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TF는 사회보장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고용/소득/자산 등 행정자료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0년 총 10차례 운영되었으며, 개인 및 가구 단위 소득·자산의 통합 연계방안과 함께 취업자의 소득정보 파악 및 사회보험 적용 등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행정자료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TF 구성·운영('20)〉

차수		안건	구성위원
'20	1차	○ '21년 소위원회 논의 의제 결정 및 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 ○ 통계 시스템 현황 및 자료 통합 관련 한계 등 보고	총 6명 ○ (소위 위원) 2명 - 주 현(산업연구원), 전병유(한신대) ○ (외부 전문가) 4명 - 노대명(보사연), 이현주(보사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이병희(노동연)
	2차	○ 보험료 부과 등 소득·자산 정보의 연계 현황 등 보고 ○ 행정자료 통합연계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및 세부 계획 논의	
	3차	○ 행정데이터 연계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과 운영 현황 등 보고 ○ 행정자료 현황과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논의	
	4차	○ 비임금 취업자의 소득 신고 현황과 쟁점 보고 ○ 비임금 취업자 대상 행정자료 구축 방안 검토 및 논의	
	5차	○ 행정자료 통합연계 관련 연구용역 수정안 검토 및 논의 ○ 사회보장과 행정데이터 연계의 기준	
	6차	○ 사회보장제도 영역의 행정자료 연계·통합 경험 및 향후 계획 발표 ○ 행정자료 연계·통합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간 충돌사항 논의	
	7차	○ 행정자료 연계·통합 관련 정책보고서 작성 방향 및 과제 검토	
	8차	○ 소득 행정자료 연계통합과 정책인프라 구축 방안 보고서 검토	
	9차	○ 소득 행정자료 연계통합과 정책인프라 구축 방안 보고서 최종 검토	
	10차	○ 소득 행정자료 연계통합과 정책인프라 구축 방안 보고서 보완 사항 검토	

사) 사회보장 TF('20)

사회보장 TF는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하였으며, 2020년 총 4회 운영되었다. 본 TF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둘러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내에서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추진 성과 분석 및 기본소득제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사회보장 TF 구성·운영('20)〉

차수		안건	구성위원
'20	1차	○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제도 구조조정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 논의 ○장기적 관점의 효율적 사회보장 정책방안 기틀 마련 필요성 논의	총 7명 ○ (소위 위원) 3명 - 구인회(서울대), 오건호(내만복), 최영준(연세대) ○ (외부 전문가) 4명 - 강남훈(한신대), 김재진(조세연), 김현경(보사연), 유종성(가천대)
	2차	○ 세계 주요국가들의 기본소득 정책 및 현황 발표 및 논의 ○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 지급방안 및 향후 보완점 등 논의	
	3차	○ 기본소득제의 중장기 계획 및 지급 시나리오 관련 검토 및 논의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결과 검토 및 향후 보완 논의	
	4차	○ 기본소득 지급 관련 시나리오 검토 및 수정사항 논의 등	

아) 대안적 복지체제 TF('21)

대안적 복지체제 TF는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대안적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2021년 총 8회 운영되었으며,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 최저소득보장제·NIT·기본소득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기존 운영 제도의 발전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대안적 복지체제 TF 구성·운영('21)〉

차수		안건	구성위원
'21	1차	○ 대안적복지체제 도입방안	총 11명 ○ (소위 위원) 6명 - 노대명(보사연), 양난주(대구대), 최옥금(국민연금연구원), 오건호(내만복), 강미나(국토연구원), 강병구(인하대) ○ (외부 전문가) 5명 - 홍장표(부경대), 구인회(서울대),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황선웅(부경대),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2차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현황	
	3차	○ 노동시장 변화와 소득기반 사회보험	
	4차	○ 기본소득제 도입방안	
	5차	○ 기초연금제 발전방안 ○ 아동수당제 발전방안	
	6차	○ 사회보장제도 현황·개편방안 ○ 필요·소득기반 소득보장방안	
	7차	○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8차	○ 합동 TF*(대안적 복지체제 TF, 재원조달·세제개편 TF) * 대안적 복지체제 TF 및 재원조달·세제개편 TF 논의사항 상호 공유	

자) 재원조달·세제개편 TF('21)

조세·재정 TF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규 세제 도입방안 및 재정 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 총 5회 개최되었으며, 탄소세·사회보장세 등 미래세제의 사회보장 재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입확충·재정개혁 등을 통한 사회보장 재원 조달방안을 모색하였다.

〈재원조달·세제개편 TF 구성·운영('21)〉

차수		안건	구성위원
'21	1차	○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총 10명 ○ (소위 위원) 4명 - 강병구(인하대), 이우진(고려대), 정세은(충남대), 나원준(경북대) ○ (외부 전문가) 6명 - 홍장표(부경대), 류덕현(증앙대), 하준경(한양대),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김승래(한림대), 김유찬(홍익대)
	2차	○ 사회연대세·사회보장세 도입방안 ○ 탄소세 도입방안과 과제 ○ 건강증진세 도입방안	
	3차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적극 재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4차	○ 한국형 재정준칙 논의 ○ 공공부문 지대규제·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경제정책 아젠다 2022 리뷰	
	5차	○ 합동 TF*(대안적 복지체제 TF, 재원조달·세제개편 TF) * 대안적 복지체제 TF 및 재원조달·세제개편 TF 논의사항을 상호 공유	

다. 토론회 개최

1) 2018년

가)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 ('18.10.17.)

2018년 10월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출범 기념 토론회가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과 평가, 향후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정책적 제언 등을 토론하였다.

나)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18.11.13.)

2018년 11월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을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원 하청 임금격차 해법으로 '연대임금 전략'을 제시하였고, 중앙승가대 정승국 교수는,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해법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방안을 제안하고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다)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18.12.4.)

2018년 12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례가 소개되었고, 이어서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의 발제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과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2018년 10월 17일 토론회〉



〈2018년 11월 13일 토론회〉



〈2018년 12월 4일 토론회〉



2) 2019년

가)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19.1.29.)

2019년 1월 29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최저소득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의 현황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소득감소 추세와 원인',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는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체계 평가와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 특성과 실업부조'에 대한 발제·토론을 진행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책 마련과 고용안전망 강화, 소득격차 완화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였다.

나)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19.2.26.)

2019년 1월 29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용에 대한 가계 지원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주거비 부담 현황과 주거지원 정책',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는 '도시 내 저렴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방안',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비적정 주거 지원과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확대방안', 국토연구원 변세일 부동산시장센터장은 '주거안정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발표하여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비 절감을 통한 소득지원강화 방안 등을 새롭게 모색하였다.

〈2019년 1월 29일 토론회〉



〈2019년 2월 26일 토론회〉



다)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19.3.26.)

2019년 3월 26일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과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법제의 개정방향을,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도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라)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19.4.22.)

2019년 4월 22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경제 전망 분석 및 소득 불평등 완화·재분배 기능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 주상영 교수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침체 가능성 진단 :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삶의 질과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한 재정 정책의 운용 방향', 고려대학교 조영철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마)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분야 성과와 과제 ('19.5.9.)

2019년 5월 9일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회고와 나아갈 길'에 대하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평가와 과제'에 대하여,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평가와 과제' 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19.6.17.)

2019년 6월 1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현황을 확인하고, 정부 주요 정책이 소득 격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서강대학교 김진욱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고용·소득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 격차 완화 효과'를 발표하였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가구 소득 개선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 양극화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사)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19.7.4.)

2019년 7월 4일 서울 명동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국민에

게 듣는다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의 현장 의견청취 후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 과제' 및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협력사의 비용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례 검토' 등이 발제되었다.

아)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19.8.27.)

2019년 8월 27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경제가 나아갈 길을 집중 논의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이재우 박사는 '대외 경제환경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대하여, 산업연구원 강두용 박사는 '내수·수출 균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조철 박사와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홍열 한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019년 3월 26일 토론회〉



〈2019년 6월 17일 토론회〉



자)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19.10.23.)

2019년 10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예산안 시정연설 다음날 개최되어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방안',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장의 '2020년 예산안 평가와 과제' 및 류덕현 중앙대 교수의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및 효과성 제고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차)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19.12.3.)

2019년 12월 3일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시각에서 포용성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UN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 정부와 국책연구원들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도전과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2019년 12월 3일 국제 컨퍼런스〉





3) 2020년

가) 가구소득 및 소비 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20.1.22.)

2020년 1월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계소득 증대 및 가계지출 경감,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추진해 온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서강대학교 김진욱 교수는 '소득 중하위 가구의 소득 실태에 대한 최근 변화와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부연구위원은 '필수생활비를 고려한 소비여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현금급여제도의 효과와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가시화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나)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20.5.13.)

2020년 5월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현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현 시장소득개선 소위원장은 '시장소득개선 정책의 성과와 과제', 소득주도성장특위 구인회 소득재분배 소위원장은 '재분배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가계소득 강화 및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보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알리는 한편,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위기 및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20.5.27.)

2020년 5월 27일 국토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의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모델링 확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국토연구원 이후빈 박사외 이치주 박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선제적 투자와 그린리모델링 민간시장의 조성'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의 '건물 에너지 효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라) 사람중심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20.7.8.)

2020년 7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한국형 실업부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섭 선임연구위원은 '직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전 방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홍준 수석전문위원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 자본의 보호 및 투자,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 논의 등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 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20.10.8.)

2020년 10월 8일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그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평가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홍열 한양대교수, 이동진 상명대교수 및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에 대하여 발제하였으며 이어서 고려대 이우진교수의 '소득 분배 현황과 정책과제' 및 김세직 서울대교수의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 하락 원인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4) 2021년

가)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 ('21.3.3.)

2021년 3월 3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배규식 前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와 일자리'에 대하여,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코로나19와 가계소득'에 대하여,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와 재정정책'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평가하며 향후 보완과제를 모색하였다.

나)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21.4.28.)

2021년 4월 28일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노동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의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동향과 과제'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임금·소득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향후 과제 ('21.5.26.)

2021년 5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주소와 그간의 정책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심층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는 '소득보장 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보건의료 정책 대응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방안과 과

제'에 대한 발제·토론을 진행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보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라)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모색 (21.8.19.)

2021년 8월 19일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소득보장체계의 혁신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가천대학교 유종성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법무법인 율촌 김낙회 고문(前 관세청장)은 '부의 소득세(NIT) 도입방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최저소득보장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향후 국민의 적정 소득 보장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마)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정책 ('21.9.7.)

2021년 9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은행회관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임금격차 문제를 진단·평가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임금정책과 임금격차'를 주제로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발제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해외 단체교섭구조와 효력확장제도' 및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주도 정책방안'이 이어졌다

바) 사회보장제도의 대안 모색과 향후 과제 ('21.10.7.)

2021년 10월 7일 '사회보장제도의 대안 모색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국민의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조달 등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현안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의 평가와 과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중심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노인 건강돌봄체계 구축',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발표하였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과제 모색을 통해 향후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 ('21.11.18.)

2021년 11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정책이 시장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하고,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의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와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발제가 진행되었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5) 2022년

가)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22.3.29.)

2022년 3월 29일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경제·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이변훈 중앙대학교 교수의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그리고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의 '조세·재정 정책의 평가와 과제' 발제 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라. 정책연구용역 추진

1) 2018년

가) 서민금융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제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서민 금융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2018년 10월 23일~12월 22일)가 수행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민 및 지역특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 관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 관계 및 개선방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박사(2018년 10월 17일~12월 15일)가 수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

세제 지원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방향 수립 연구 (비스타컨설팅)

'소상공인 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방향 수립 연구'는 비스타컨설팅 신승만 박사(2018년 10월 24일~12월 23일)가 수행하였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및 지원정책의 진단을 토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 개선방안 연구'는 산업연구원 이원빈 박사(2018년 11월 21일~12월 26일)가 수행하였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신기술 산업 육성, 지역 R&D 정책개편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마) 근로유인 및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연구 (서울시립대)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정책의 노동공급효과 및 소득 재분배 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 개편과 함께, 가처분 소득 확대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구간 범위 축소 및 지급액 조정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재정지원제도 연구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현행 조세제도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일자리 친화적인 조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점증보호계약 제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검토하였다.

사)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연구(평택대학교)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 노인빈곤가구의 실태 분석 및 기존 노후소득보장 대책을 평가하고, 향후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제 등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 워크와 주요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회)

소득주도성장 정책 프레임을 재설계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회가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26일까지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이 성장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경로를 노동, 금융, 재정으로 구분하여 각 경로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소득주도성장 기조 하에 장기적으로 혁신성장의 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거시정책, 공정경쟁 기반 강화, 다양한 경로의 구조개혁, 포용적 혁신투자가 중요하다며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혁신정책으로 구조조정기금 설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해외연구 및 정책 사례 검토 (동덕여자대학교)

해외 소득주도성장 혹은 소득불평등 완화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정책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2018년 10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시행한 정책연구이다. 포용적 성장 논의 관련 정책들을 파악하고 권역별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ARRA 노동정책, 캐나다 중산층 살리기 정책, 일본 아베노믹스의 '일억총활약계획, 중국의 소득 2배 확대 정책, 영국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 개혁, 독일 최저임금제도 및 스페인 진보 경제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차) 삶의 질과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재정 정책의 운용 방향 (재정정책연구원)

재정정책연구원이 소득불평등이 생산성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연구하였다. 경제·재정의 포용성이 강화되도록 재정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의 둔화, 실업률 증가, 소득·자산 격차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전에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 재정정책의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카) 소득불평등이 생산성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2018년 10월 부경대학교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소득불평등이 생산성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불평등 해소가 지속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불평등의 영향력이 커져 불평등 해소 정책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슘페터의 혁신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 등을 통해 분석

하고, 정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시스템 전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진단 : 거시적 접근 (한국사회과학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회가 2018년 10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연구하였다. 한국경제에 과소소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기업자금의 자본시장 유출'을 지적하였다. 기업자금의 자본시장 유출 억제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소득흐름이 자금흐름으로 바뀔 때 총생산이 줄어들고 그 결과 총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확인하였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자본시장 유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파)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모색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후생 증진을 위해서 구조적 소비 침체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연구하였다. 민간소비 확대는 투자증대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GDP대비 소비 비중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도록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소비-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함을 밝히고, 수출·투자의 선순환뿐만 아니라 소비·투자의 선순환도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소득, 자산, 부채 등 다양한 측면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2019년

가)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연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박사(2019년 4월 10일~10월 30일)가 수행하였다. 사회서비스업과 돌봄서비스업의 규모 및 근로실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개선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개선방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2019년 4월 23일~11월 30일)가 수행하였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된 법, 지원내용, 지원체계 등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소득분배,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경대학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소득분배,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부경대학교 황선웅 교수(2019년 8월 1일~11월 30일)가 수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소득분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최저임금의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생산성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생산성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2019년 8월 1일~11월 30일)가 수행하였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고용 및 소득효과를 분석하여,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 조직화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 연구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 조직화 개선방안 연구'는 중소기업 연구원 정수정 박사(2019년 6월 5일~9월 4일)가 수행하였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바) 중소제조업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 및 동태적 변화분석 연구 (서울 사회경제연구소)

'중소제조업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 및 동태적 변화분석 연구'는 서울 사회경제연구소 박규호 박사(2019년 8월 1일~11월 30일)가 수행하였다. 중소제조업의 현황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분석하여 최근의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실시하였다.

사)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및 상생협력 정책 현황과 사례분석 및 향후과제 (산업연구원)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및 상생협력 정책 현황과 사례분석 및 향후과제 연구'는 산업연구원 신위뢰 박사(2019년 8월 1일~12월 13일)가 수행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그간의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거래구조(하도급 프랜차이즈)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아) 저소득층 은퇴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설계 연구 (중앙대학교)

'저소득층 은퇴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설계 연구'는 중앙대학교 허석균 교수(2019년 8월 1일~10월 31일)가 수행하였다.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이 노년빈곤층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은퇴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재욱 박사(2019년 9월 16일~12월 13일)가 수행하였다. 직업훈련제도의 사각지대 영역과 규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축소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차)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교육 불평등 완화 및 교육비 부담 절감 방안 (성신여대)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교육불평등 완화 및 교육비 부담 절감 방안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임완철 교수(2019년 8월 1일~11월 31일)가 수행하였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 교육 플랫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카) 2019년 고용동향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심층분석 및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년 고용동향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심층분석 및 연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31일)가 수행하였다. 2019년 고용동향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2019년 고용지표에 있어 특징적인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타)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분석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분석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 이근희 박사(2019년 12월 26일~2020년 4월 20일)가 수행하였다. 노동생산성과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실태를 분석하여 '임금 없는 성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파) 중·하위 소득가구의 구성과 실태 분석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소득 1분위를 비롯한 저소득 가구의 특성 및 소득유형을 분석하고, 이들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양극화 개선 과제로서 공적이전

소득 확대 및 취약계층의 근로소득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등 소득보전 정책의 확대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하)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평가와 과제 (한국재정학회)

본 연구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재정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검토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정책의 방향 설정과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장기 방안으로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거) 주요 정책의 파급 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과제 발굴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추진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도입·근로장려금 확대를 평가하기 위한 DB 구축 및 성과 지표 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너)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본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표본 설계 및 연도별 가구소득의 시계열 변화 등을 파악하고, 분기별 가구소득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주의 연령 및 종사 상 지위 등 가구 특성 분석과 함께, 가계 소득 유형(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 등)별 변화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더) 서비스산업 구조개혁을 통한 고용 및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코리아컨센서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부문간 이동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및 산업서비스의 확충이 성장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사)코리아컨센서스가 2019년 4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5일 까지 약 6개월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 특성을 고려하되 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의 설정을 제언하였다. 첫째, 제조업 및 신산업 위주의 혁신성장에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고도화를 중장기 산업정책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지식서비스를 중심으로한 사업서비스 산업을 경제전반의 '중간재'산업 관점에서 산업정책의 시행하고, 셋째, 사회서비스를 복지 관점의 공공서비스 확대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러)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방안 (상명대학교)

국내 관광산업의 발전은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수 성장, 지역별 불균형 완화, 소득계층별 불균형 완화라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2000년대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 추세의 주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관광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관광은 내국인 해외 관광의 대체재로서 작용하므로 국내 관광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국인 국내·외 관광 수요의 주요 요인이 비용 및 편의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 접근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성수기 과다비용 문제 제어 등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광 수요의 핵심의 하나인 관광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관광 콘텐츠의 고유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의 지원은 관광상품 개발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민간부문의 창의적 도전에 맡기는 방식의 역할 분담을 제언하였다

머)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한국사회과학회)

산업정책에 체계적 접근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산업별·업종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자본수익률의 추이를 한국사회과학회가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분석하였다.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추이를 살펴볼 때, 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산업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 문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 전체의 자본수익률(이윤율)과 자본생산성, 자본소득분배율의 변화추이는 1990년 중반 이후 자본생산성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자본소득분배율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자본수익률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 들어 노동생산성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었으며, 그 이면에는 자본생산성의 둔화라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자원의 배분이 원활하지 않고, 내수가 부족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현 독과점 구조에 경쟁적인 활력을 제공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및 내수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

3) 2020년

가) 제조 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제조 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산업연구원 신의뢰 박사(2020년 6월 23일~2021년 1월 29일)가 수행하였다. 금형 가구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기업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연구'는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2020년 10월 21일~2021년 4월 21일)가 수행하였다. 자영업 분야 고용보험 확대 관련 고용보험제도 및 가입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2020년 12월 16일~2021년 6월 25일)가 수행하였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등에 대한 노후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적완화와 저금리 속에서 퇴직연금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을 활용한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건강증진·관계만족도 등)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정책 대안으로써 농촌 및 소도시의 공익형 일자리 발굴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 주요 소득보장제도 효과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지원 강화 방안으로, 각 제도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대상별(노인/근로연령층/청년층 등) 시뮬레이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바) 증거기반 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데이터 구축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행정 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 통계 간 연계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득 자료와 각종 사회보장 행정 자료 간 연계·구축과 함께, 소득·재산 정보 등의 정확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 소득분배 추이와 코로나19 정책대응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 위기를 분석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 가계소득 보전 정책이 가계 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발한 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소득보장 정책이 가구 총소득 및 소비지출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아) 코로나 사태 이후 정책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대응 (한국사회학회)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에 대한 대응(global lockdown)으로 인하여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왔다. 한국사회학회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고용·대외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경기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한국형 재정부양 준칙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물가안정목표제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거시경제 안정 및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목표를 전환할 것을 제언하였다.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난 구제 차원으로 시행하되 장기적으로 구조고도화 관점에서 취업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통상정책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 산업경쟁력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지속적 투자계획의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자) 주택전월세보증금 규모 추정 및 잠재 위험 분석 (한국경제학회)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정책과 가계부채 적정 관리를 위한 금융 및 경제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경제학회를 통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1990년 이후의 전세 및 준전세(전월세) 보증금의 시계열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거시경제적 잠재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2019년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보증금 누적법으로 계산한 경우 전세 및 준전세 보증금이 783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기에 가계신용을 더한 가계부채는 GDP의 1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될 보증금 데이터 활용 방식 제시하였으며, 지역별 전세·준전세 보증금 규모 지표 제시하여 정책 및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대응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국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굴·추진할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 방향과 대응 과제를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6.9%(2018년)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므로, 에너지 생산·소비에 직접 관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중심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생산·소비 체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정부는 직접적인 사업 이행 관리보다는 법·제도 개선, RD&D 등 장애 요인 해소 중심의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 민간 부문에서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4) 2021년

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연구 (중앙대학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연구'는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2021년 6월 4일~12월 10일)가 수행하였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제안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나) 노동소득분배율 증감요인 분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소득분배율 증감요인 분석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2021년 7월 13일~10월 12일)가 수행하였다. 기업규모별 및 산업별로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측정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의 유형별 증감요인 분석 등을 통해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중소기업 산업안전 수준제고를 위한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 산업안전 수준제고를 위한 과제'는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박사(2021년 8월 13일~2022년 1월 31일)가 수행하였다.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의 태도, 노동자(노조)의 안전보건활동, 기업문화 등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한국재정학회)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한국재정학회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2021년 8월 2일~11월 1일)가 수행하였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 및 일자리 전환을 위한 탄소세 세수 재활용 및 일자리부문 재정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 최저임금제도 관련 정책평가와 과제 (부경대학교)

'최저임금제도 관련 정책평가와 과제'는 부경대학교 황선웅 교수(2021년 9월 13일~2022년 1월 12일)가 수행하였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의 다양한 효과 및 최저임금 인상 보완정책의 경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바) 집단적 노사관계의 포용성과 민주성 신장 방안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집단적 노사관계의 포용성과 민주성 신장 방안 연구'는 한국노동법학회 권오성 교수(2021년 8월 9일~12월 15일)가 수행하였다. 기존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포용성 확장 및 민주성 심화를 제약하는 구체적인 문제적 상황들을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사) 소득기반 사회보험 구축 방안 (서울대)

본 연구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연계하여 임금이 아닌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 운용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별 운영체계 개편방향을 검토하고,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별 조정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아) 대안적 복지체제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나라살림연구소)

본 연구는 미래 복지 증가 수요를 감안해, 증세 및 세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복합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여유재원의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 탈루세원 발굴 등 기존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복지목적세 등 신규 세제 도입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형 요양보호사 고용안정화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직업인으로서의 고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 직종의 고용 안정화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임금 개선·서비스 공급기관 관리 강화 등 고용안정화 모델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차)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통합 행정DB를 구축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사회보험 및 전체 사회보험 체계 내 사각지대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국내외 자산시장 및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고려하여 자산불평등 실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결쳐 연구하였다. 지역·계층·세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주택자산 불평등 현황과 경향,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대 자본주의 불평등에서 주택자산의 역할, 자산 불평등 및 주택자산 불평등의 성격, 지대 자본주의 대두와 심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산 불평등을 억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5) 2022년

가)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공적이전 강화, 인구·가구구조 변동, 노동시장 변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정책환경 변화 양상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비정형근로자 증가 요인 등이 소득분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지표상 포착되지 않는 특정 계층의 소득 분포 양상 등을 검토하는 한편,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소득분배 개선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주요 이슈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매주 또는 격주 간격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각 세미나의 주제와 발제자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 현황〉

일시	세미나 주제	발제자
'18.9.20.	자영업자 간담회	-
'18.10.8.	포용국과 비전과 전략	김연명 전 위원 (현 사회수석)
'18.10.10.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의 관계	이병희 박사 (노동연구원)
'18.10.23.	자영업 대책으로서 가맹사업의 전제조건과 대안	박주영 교수(숭실대)
'18.10.24.	한국 거시경제 전망	권효성 한은 차장
'18.10.31.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분석과 소득주도성장	전병유 위원
	한국경제 현황	권구훈 박사 (현 북방경협위원장)
'18.11.8.	한국경제전망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18.12.13.	소득 1분위계층 현황 및 분석	김태완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18.12.18.	한국경제의 구조적 침체 가능성 진단	주상영 교수(건국대)
'18.12.26.	직업훈련평가 현황 및 개선방향	채창균 박사 (직업능력개발원)
'18.12.27.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의 관계 및 개선방안	김현경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 사례소개	기현주 위원
'19.1.10.	Jobrotation(일자리순환제)와 개선방안	정원호 박사 (직업능력개발원)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김안국 박사 (직업능력개발원)
'19.1.16.	'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고용률과 실질임금 증가율에 미친 영향	황선웅 교수(부경대)
'19.1.2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오상봉 박사 (노동연구원)
'19.2.1.	'18년도에 시행된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가구 소득분포에 미친 영향	강창희 교수(중앙대) 이우진 교수(고려대)
'19.2.11.	사회적현물 이전소득과 소득재분배 효과	김서영 서기관(통계청)
'19.2.13.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육성 방안	모종린 교수(연세대)
'19.2.21.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및 과제	오계택 박사 (노동연구원)
'19.2.27.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과 청년일자리정책 방향	김유빈 박사 (노동연구원)
	혁신형 중소기업과 청년고용	윤윤규 박사 (노동연구원)
'19.3.6.	직업능력개발의 현재와 향후 방향	고혜원 박사 (직업능력개발원)
'19.4.3.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현황 및 과제	정흥준 박사 (노동연구원)
'19.4.11.	최근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19.4.23.	산업고용위기지역 현황	이두희 박사(산업연) 강동우 박사(노동연)
'19.4.30.	한국 경제 전망	이지호 (한은 조사총괄팀장)
	한국/세계경제 평가와 전망	오석태 (SG 수석이코노미스트)
'19.6.10.	반도체 시장전망 및 동향	신창환 (성균관대 교수)
	대한민국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현황 및 성장과제	켄트 전 (한국텍트로닉스 대표)
'19.6.20.	스마트공장 제조혁시	김민호 부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19.7.23.	글로벌 통상현안과 한국의 수출입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 단장
'19.7.31.	ILO 기본협약의 논의 현황과 쟁점	김근주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일시	세미나 주제	발제자
’19.8.5.	일본 수출규제와 한국의 대응과제	김수환 교수(서울대)
’19.8.7.		이혁재 교수(서울대)
’19.8.6.	가계 의료비 지출 현황과 문재인 케어 정책 효과	서남규 실장 (건강보험공단)
’19.8.12.	일본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상준 교수(와세다대)
’19.8.20.	일본의 소득주도성장 : 아베정책의 의미와 한계	우종원 교수 (사이타마대)
’19.8.13.	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	김성진 ICO (미래에셋자산운용)
’19.8.19.	화학물질 안전규제 개혁방안	곽노성 특임교수 (한양대)
’19.9.24.	국·내외 경제전망 및 물가전망	김성태 실장(KDI)
’19.9.25.	상반기 고용동향 평가 및 최근 동향과 전망	성재민 실장 (한국노동연구원)
’19.10.28.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	양정열 과장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19.10.30.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 및 경제상황 점검	이지호 조사총괄팀장 (한국은행 조사국)
’19.11.7.	’19년도 2분기 노동생산성 동향 및 연간 노동생산성 분석	한평호 센터장 (한국생산성 본부)
’19.11.27.	고용행정DB를 활용한 고용동향 모니터링	김준영 팀장 (한국고용정보원)
’19.12.4.	’20년, ’21년 경제전망	이지호 팀장 (한국은행 조사국)
’19.12.16.	지역경제 현황 및 일자리 정책추진 현황	박종일 청장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20.1.7.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장신철 국장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
’20.1.16.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최영섭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개발능력원)

일시	세미나 주제	발제자
’20.1.20.	’20년대 부동산시장 전망	채상욱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
’20.1.30.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해결방안	박천규 센터장 (국토연구원)
’20.2.3.	일자리 사업 효과 분석	김기태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7.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이명주 교수(명지대)
’20.3.5.	주택연금제도와 해외 역모기지 사례 검토	이기태 팀장 (주택금융공사)
’20.3.17.	2019년 지급대상과 금액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소득 및 근로의지 개선에 미친 영향	이병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0.3.19.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이슈와 보완점	이현주 박사, 김기태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3.23.	대내외경제동향 분석과 전망	김성태 실장(KDI)
’20.3.24.	건강보험통계 DB에 관한 특징 및 보완점	서남규 실장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20.3.2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김선기 과장 (산자부 자원안보정책과)
’20.3.25.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이후빈 박사 (국토연구원)
’20.4.2.	에너지 효율혁신 전략	유성우 과장 (산자부 에너지효율과)
’20.4.8.	EERS 및 해외 에너지효율정책사례	이성인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4.22.	보건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점 및 현행 정책들을 점검·평가 및 정책방향 모색	한요셉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20.4.23.	그린뉴딜 정책	이종석 팀장(소득특위)
’20.6.25.	6.17 이후 주택시장 진단과 부동산 정책 분석 전망	채상욱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

일시	세미나 주제	발제자
’20.7.14.	부동산 시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광수 연구위원 (미래에셋대우)
	부동산 공화국의 실상과 해체 방법	전강수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주택시장 전망과 세제 개편 등 개선방안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강수 교수 (대구가톨릭대)
’20.7.16.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박천규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안	김지혜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20.7.30.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이상영 교수 (명지대학교)
	정부 주택정책 부엇이 문제인가?	김헌동 단장(경실련)
’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 쟁점과 대책	임재만 교수 (세종대학교)
	독일 주택시장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허윤경 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8.4.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안명숙 부장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20.8.19.	퇴직연금 현황과 주요 이슈	송홍선 편드연금실장 (자본시장연구원)
’20.9.15.	국내카드가맹점 관련 통계	장명현 연구위원 (여신금융연구소)
’20.10.7.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분석	고경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0.	’21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김열매 연구위원 (유진투자증권)
’20.11.24.	에너지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	한숭재 선임연구원 (DB금융투자)
’20.12.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	이상준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1.1.12.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정수정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21.1.20.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송홍선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21.2.2.	부동산 사회와 복지국가 : 자산기반 복지체제의 한계와 시사점	김도균 교수(제주대학교)
’21.2.16.	’21년 경제전망	정규철 실장 (KDI 경제전망실)
’21.2.23.	’21.1. 고용동향 평가 및 시사점	김정우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21.2.2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분석과 재정투자	주무현 센터장 (한국고용정보원)
’21.2.19.	2.4. 부동산 대책의 공유와 평가	장우철 과장 (국토교통부)
’21.3.9.	임금체불 현황과 대책	여성철 과장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해소 및 근로감독 개선방안	이종수 노무사 (노무법인 화평)
’21.3.16.	가계소득 & 고용동향 다시 살펴보기 - 가구원별 시장소득 및 취업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박영삼 위원 (소득특위)
’21.3.23.	위기대응을 위한 이행노동시장의 구축방안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이병희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21.3.30.	’21.2. 고용동향 평가 및 시사점	김정우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21.4.6.	바이든시대 미·중 관계 전망	지만수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21.4.7.	한국적 ESG를 위한 이슈와 과제	이창민 교수 (한양대학교)

일시	세미나 주제	발제자
’21.4.29.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3월) 분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5.4.	청년층 고용동향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정재현 박사 (고용정보원)
’21.5.11.	선거결과를 통해 본 여론지형의 변화와 경제정책에의 시사점	정한울 위원 (한국리서치)
’21.5.25.	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을 둘러싼 주요 논점과 대안	이철희 교수 (서울대학교
’21.6.1.	’21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시사점 :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강구삼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6.15.	주요 고용지표의 변화 원인과 고용기준치의 설정	장인성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6.29.	자동차 산업 동향, 전망 및 정책과제	김경유 실장 (산업연구원)
’21.6.30.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5월) 분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7.6.	반도체 산업 동향, 전망 및 정책과제	김양팽 전문연구원 (산업연구원)
’21.7.13.	바이오 산업 동향, 전망 및 정책과제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21.7.19.	’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주무현 센터장 (한국고용정보원)
’21.7.20.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및 시사점	박구도 팀장 (한국은행)
’21.8.3.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6월) 분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8.10.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김선진 과장 (한국은행)
’21.8.17.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 방안과 과제	박영석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8.24.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김승래 교수 (한림대학교)
’21.8.30.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전략과 과제	홍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21.8.31.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7월) 분석 및 8월 전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9.14.	최근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과제	박천규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21.9.28.	주택 공급 관련 주요 쟁점과 저렴주택 공급방안	변창흠 교수 (세종대학교)
’21.9.30.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8월) 분석 및 9월 전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10.5.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이창무 교수 (한양대학교)
’21.1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지출구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21.10.19.	’22년 복지예산안 분석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21.10.19.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요인 분석	홍민기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10.25.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9월) 분석 및 10월 전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11.9.	직업능력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과제	채창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11.12.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추진현황	김지훈 국장(국세청)
’21.11.16.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과제	이상호 학장 (한국폴리텍대학)
’21.11.23.	’22년 상반기 경제전망 Ⅰ	정규철 박사 (KDI 경제전망실)
’21.12.1.	’21.11. 고용동향 분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1.12.3.	’22년 상반기 경제전망 Ⅱ	최창호 팀장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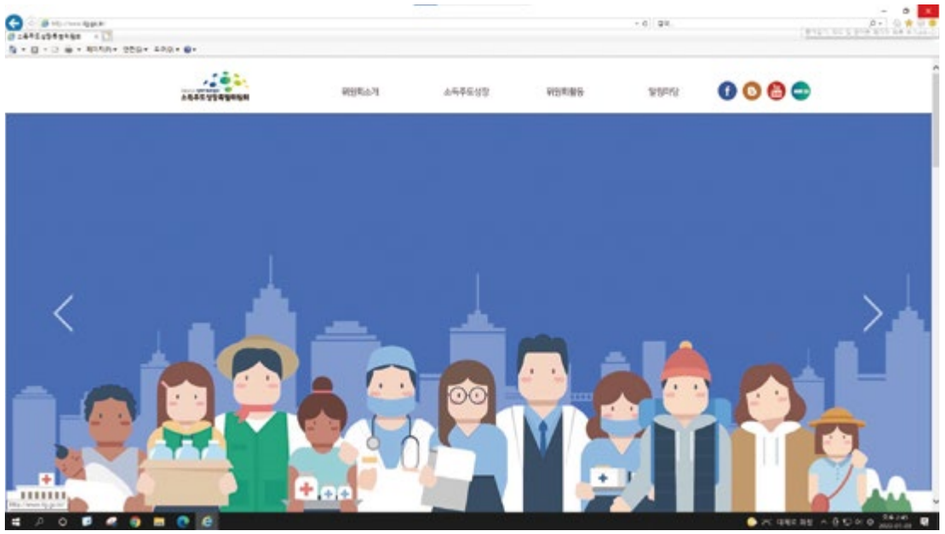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 주제	발제자
’21.12.7.	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내적 쟁점과 세계적 동향	김남근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21.12.14.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1.12.21.	세제개혁의 몇가지 쟁점	김유찬 교수 (홍익대학원)
’22.1.11.	광주형 일자리 경과와 평가	박명준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2.1.18.	노동공제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석호 사무총장 (전태일재단)
’22.1.25.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의 추진 경과와 향후과제	권동훈 사무관 (통계청 복지통계과)
’22.1.26.	’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2.2.8.	탄소중립 시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과제	박태주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22.2.22.	디지털세(Digital Tax) 관련 동향과 과제	김태정 과장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22.2.28.	’22년 1월 고용동향 분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2.3.8.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방안	송원근 교수 (경상국립대)
’22.3.24.	NFT 시장 현황과 향후전망	박성준 PM(빗썸메타), 서병윤 실장(빗썸코리아)
’22.3.28.	’22년 2월 고용동향 분석	김유빈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2.4.5.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개선 관련 세미나	조태형 실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2.4.6.	세계원조, 한국의 원조(K-ODA)	최재영 국장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
’22.4. 중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	조영삼 박사(산업연구원)

바. 국민의견 수렴 및 홍보

1) 홈페이지 개설·운영 (www.ilg.go.kr)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책 및 조직 개요를 공개하였으며, 알림마당을 통하여 토론회, 국제컨퍼런스 등 주요 활동과 관련한 소식 및 자료 등을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소득주도성장추진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2) 인터넷방송·카드뉴스·웹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을 개설하여 다양한 형식의 홍보물을 게시하였다. 페이스북, 블로그 활동을 통하여 UCC 아이디어 공모전(2018년 12월, 2019년 5월), 정책체험사례 공모전(2019년 9월, 2019년 10월), 국민수기 공모작에 대한 웹툰 제작(2018년 12월~2019년 12월) 등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주요 이슈에 대한 카드뉴스를 배포하였다. 유튜브 채널에는 전문가 대담 시리즈, 청년토크 시리즈, 아하TV 웹드라마 시리즈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인터넷 방송·카드뉴스·웹툰 홍보 사례〉



3) 이슈브리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시의성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정확한 사실과 주요 정책성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5회차에 걸쳐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다. 이슈브리프는 국민계정,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주요 통계자료 활용하여 가계소득 증감과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회차별 이슈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이슈브리프 발간 현황〉

차수	일시	제목
1차	’19.6.5.	’18년 국민계정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결과
2차	’19.8.7.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3차	’19.8.22.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추세 지속, 공적이전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개선 뚜렷
4차	’19.8.30.	1인가구 포함 ’19.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1분위 소득 증가로 소득격차 2분기 연속 완화-
5차	’19.9.25.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 예산 1조원 대비 분배개선 효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장 높아
6차	’19.10.7.	인구변화를 감안한 연령대별 고용동향 분석
7차	’19.12.19.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시장소득 개선과 소득격차 완화 가시화 -’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분석-
8차	’20.1.9.	가계동향조사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9차	’20.6.3.	’19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10차	’20.8.26.	한국경제의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11차	’20.12.29.	가계금융복지조사 정책효과와 시사점
12차	’21.3.8.	가계소득 동향 및 소득 재분배 효과 ’20년 4사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13차	’21.4.27.	’20년 가계 소비지출 동향 분석과 최근 4년간 소득분배 및 소득효과

차수	일시	제목
14차	’21.6.7.	’21년 1분기 가계소득 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15차	’21.11.26.	’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16차	’22.3.15.	’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17차	’22.3.15.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본 개인소득 분배상황과 시사점

4) 정책보고서 및 홍보책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개념 및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일반국민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 현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성과를 다양한 지표로 보여주기 위하여 2018년 12월 ‘소득주도성장 바로알기’와 2020년 8월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2020년 9월 ‘소득주도성장 3년 돌아보기’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소득주도성장 대응책 및 효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코로나19, 한국경제와 소득주도성장’와 2022년 1월 ‘소득주도성장, 성과와 과제’를 발간하였다.

전문집필진이 소득주도성장의 추진배경 및 핵심 정책 또는 쟁점 이슈 등을 분석하고 그 성과와 대안 및 항후 과제 등을 제시하는 종합보고서 형식의 단행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2022년 3월 발간하였다.

〈정책보고서 및 홍보책자 발간 내역〉



제4절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1. 신남방정책의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

일국의 외교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역량을 엄밀히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외교적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최적의 수단을 사용하는 복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정책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극대화하며 국제관계에서 정책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 노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 정책은 효과적이며 기민하게 집행되고,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외정책이 이렇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자각과 상황인식 그리고 전망과 비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 질문을 바탕으로 외교적 역량과 같은 내적 요인,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권력의 지형과 변화,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인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 반영된다.

그렇다면 먼저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며,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70여년 전 국토가 분단되었고 20세기를 대표하는 큰 전쟁을 겪은 나라, 여전한 분단 상황이 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나라, 그러나 압축적 경제성장과 그보다 더 압축적인 경로로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 대외개방형 선진국, 자유롭고 역동적인, 그렇지만 갈등사회로 인식되는 형상이 현 단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외교의 새로운 축으로 추진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라고 일컫는 지난 70년간의 우리 외교의 주축은 분단된 현실에서 비롯된 생존 외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냉전형 약소국 현실주의 외교에 머물러 있었다. 냉전형 약소국 현실주의 외교는 한반도 중심적 사고의 틀 안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성권력(hard power)의 증대에 그 방점이 찍혀 있으며, 대외적으로 강대국에 대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외교를 관성적으로 추종하는 선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지금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외교정책의 목표는 결코 그 중요성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롭고 역동적인 선진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관성적인 생존 외교를 벗어나, 외교정책 지평의 확대와 외연의 확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외교를 새롭게 펼쳐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한반도 주변 4강 중심 외교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4강 외교를 넘어서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상대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어디인가.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교의 구성요소로 강조되었던 지정학적, 지경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인접지역으로서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문명을 교류했던 곳이자, 인적 교류의 통로였다. 인도는 역사적으로 불교 전래 등 한반도가 문물을 받아들이고 해상을 통한 통상과 교역의 중계지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지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큰 외교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신남방정책은 4강 외교를 넘어 우리나라 외교를 다변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게다가 2010년대, 더 나아가 트럼프 정부부터 표면화된 미중 갈등의 시대에 신남방으로의 한국 외교의 다변화는, 선진국 외교로의 격상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대외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강에 준하는 외교 관계의 파트너로 격상'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신남방정책을 4강 중심 외교를 탈피해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증거이자 새로운 외교의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추진해 왔다.

신남방정책은 한국 외교 역사상 아세안과 인도를 전면에 내세운 첫 대외정책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미중 갈등과 팬데믹으로 증폭되는 불확실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 운신의 폭을 넓히고 우리 대외경제정책의 다변화를 실현하려 한 선제적인 신외교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4강

중심외교의 한계 극복과 한국 외교의 다변화',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과 호혜적 번영 달성'에 뜻을 두고, 3P(People·Prosperity·Peace) 비전을 통해, 가치외교를 실현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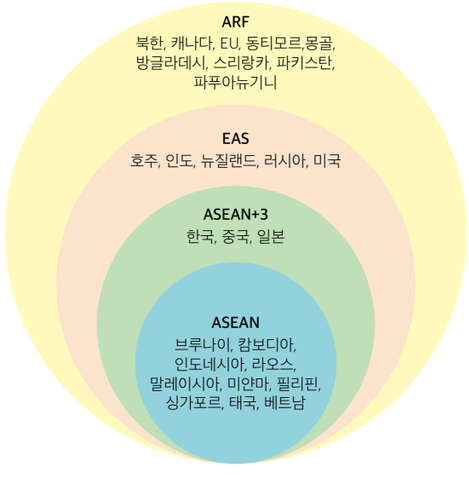
가. 신남방정책의 추진 배경과 의의

1) 외교 다변화를 통한 4강 중심 외교의 한계 극복

미중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새로운 외교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는 매우 불확실한 전략 환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중국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앞세워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에 도전하였으며,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대중 관여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것을 시사했다. 미중 간 상호배타적인 경쟁 구도는 그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었던 다자주의를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불확실한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했다. 아세안과 인도는 이러한 전략 환경 변화에 맞서 한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할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다자질서 협력을 주도해 온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다자질서의 회복을 모색하고, 중견국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강대국 정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했다.

아세안은 동남아 10개국이 모인 지역 연합체로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다자협력체제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들 다자협의체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역내 모든 강대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태가 되는 아세안+3(한·중·일)의 일원으로서,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해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EAS를 태동시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 East Asia Vision Group) 설립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다자주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한국은 EAS, 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을 공고화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아세안 관련 지역 협의체〉



· **아세안+3:** 아세안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EF: EAS 회원국 + 북한, 캐나다, EU, 동티모르,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자료: **외교부 제공**

* 자료 : 외교부 제공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와 그간 쌓아온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아세안은 주변 4강을 넘어 우리 외교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다. 물론 신남방정책 이전에도 한국은 아세안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부분대화관계 수립 이래, 2004년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미·중·일과 비교해 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면서, 양측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아세안에게는 주변 강대국 간 힘의 균형 유지가, 한국에게는 한반도 평화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부재 또한 한-아세안 간 전략적 협력 심화를 지연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동아시아 지역협력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한반도·동북아 중심으로 회귀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에서도 아세안에 대한 뚜렷한 정책 비전이 포함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한국의 지역 구상의 범위를 한반도·동북아로 다시 축소시켰다. 이렇듯 아세안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과 전략의 부재 속에,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세안의 지지 확보와 한국의 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에 반해 신남방정책은 우리 외교에서 아세안이 가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아세안을 주변 4강에 준하는 파트너로 격상할 것을 천명하였다.

한국은 남아시아의 맹주인 인도의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였다. 인도는 경제·군사·외교 등 다방면에 있어 G3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미·중 간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강국 중 하나인 인도와의 협력은 한국의 외교 네트워크와 전략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인도는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중심에 있는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아프리카, 유럽, 중동,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외교의 외연을 확대할 때 교량 국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인도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과 군사력 강화, 우주 기술 첨단화를 도모할 유망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는 우리나라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유망 시장으로 꼽히며, 2017년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군함 및 유도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아울러 인도는 우주 탐사 분야의 선진국 중 하나로, 350개 이상의 우주 기술 분야 민간 기업과 수준급의 자체 미사일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첨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다. 양국은 정상회담 정례화, 한-인도 외교국방 2+2 차관 회의 등을 통해 전략 협력을 확대하려 했으나, 아직 '특별 전략적 관계'에 버금가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한-인도 관계가 독립적인 정책을 통해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반도 중심 외교정책 안에 부차적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한-인도 협력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부재했던 것도 양국 관계 심화를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인도를 택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2)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우리 정부는 기존의 한반도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역내 번영과 평화에 책임을 다하는'자유롭고 역동적인 선진 민주국가'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중견국 위상을 활용해 역내 평화와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주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신남방정책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한국의 중장기적 지역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평화플랫폼을 구축해 한반도 주변 평화를 위한 역내 다자협력을 촉진하고, 북방의 대륙과 남방의 해양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지역 구상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 지역 구상의 외연을 남쪽으로 확대하였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 자료 : '20.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팜플렛, pp. 2~3.

그간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한국은 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지역적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의 역할 제고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내 대표 중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또한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지역협력 지평을 넓히려 했다.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인도 정책은 '저임금 노동력·수출 시장 확보'라는 경제적 이해와 연계해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은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신남방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남방지역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다.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범지역적 차원에서의 상생과 번영에 기여하려 한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은 시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담론의 부상과 함께 추진되었다. 미국, 일본, 호주는 아세안·인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EU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이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고 있다. 아세안도 2019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채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포용적 협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인도 또한 모디 정부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하에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도 높아졌다. 미국은 일찍이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연계 협력을 타진해왔으며, 최근에는 호주와 유럽 국가들이 신남방정책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른 역내 협력 이니셔티브들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듯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며, 한국 지역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

3)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호혜적 번영 달성

정부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한 아세안과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신남방지역과 상호호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했다. 아세안은 인구 약 6억 6천만 명, GDP 약 3조 811억 달러(2020년 기준)의 거대시장, 연평균 약 5%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차세대 성장 지대이다.[4] 또한 아세안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통합 논의를 지속한 결과 2015년 상품·서비스·투자·숙련인력 이동의 자유화로 대표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AEC를 통한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 이외에도 '아세안플러스(예, ASEAN + 1, ASEAN + 3)' 형태의 대외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중·일 등 주요 국가와의 FTA는 물론 RCEP과 같은 대규모 다자간 경제통합 논의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허브로 부상했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제2대 교역 및 투자 지대로 불가분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제2 교역·투자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아세안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최적의 파트너이다. 신남방정책 추진 당시 아세안과의 지속가능한 무역·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확대는 물론, 한국과 아세안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한국이 제조업 르네상스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아세안도 첨단 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고도화를 모색함에 따라, 전통적 제조업 기반의 협력을 넘어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빠른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아세안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어촌·스마트시티 개발, 교통,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도 높아졌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이러한 협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아세안과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아세안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인도 역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13억 8천만 명 이상의 인구와 2020년 기준 GDP 2조 7천 억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력을 보유한 인도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5] 인도는 1991년 본격적인 경제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는데, 1992년부터 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6.5% 수준의 고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최근 2015년부터 2017년 기간에는 중국의 성장률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무대에서 인도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은 대외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은 인도가 향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여 2030년경에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이러한 잠재력은 코로나19 전세계를 강타한 2020년에도 드러났다. 즉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전세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42%까지 대폭 감소한 가운데서도, 인도는 13% 증가세를 기록했다.

핵심 경제대국이자 독보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수요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의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경제관계는 잠재력에 비해 부족한 수준에 머물렀다. 신남방정책은 이처럼 잠재력에 비해 미흡한 양국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인프라, 미래산업 등에 걸쳐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일본 등의 주요국이 인도와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토대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개발협력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협력은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과 인도는 양국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호혜적인 번영의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을 계기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형성한 제조업 생산네트워크의 다변화 필요성, 그리고 아세안을 넘어선 시장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인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크다. 한편 인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젊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인도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

4)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한-아세안 센터, '한-아세안 통계집' p.vi, p. 4. 참조).

5) 세계은행 자료 참고.

6) Entrepreneur, "India will be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my by 2031, Bank of America projects", March 24, 2021.

에 대한 참여수준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서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선에 가장 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높아 한국의 역할에 기대감이 높아져 왔다. 디지털 전환 등 미래산업 영역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나. 신남방정책의 정책 비전과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직후 아세안 주요 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인도에 특사를 파견하며, 대아세안·인도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어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3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ㆍ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였다.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은 '사람 중심의(People), 더불어 잘사는(Prosperity)·평화(Peace)'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으며, 신남방정책 추진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1) 정책 비전 :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하에 사람 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평화 공동체(Peace)의 3대 축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인도 정책이 한국의 수출 증진과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등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었다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의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과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인식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아세안·인도와의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역내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다. 신남방정책의 3P 공동체는 아세안이 추진 중인 3대 공동체(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에 조응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이 제시했던 '평화·번영·진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P 공동체를 기반으로 상생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한-인도 미래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남방지역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왔다.

〈신남방정책의 3P 공동체별 목표 및 전략과제〉

구분	사람 공동체(People)	번영 공동체(Prosperity)	평화 공동체(Peace)
목표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호혜적·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
전략 과제	ㅇ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ㅇ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ㅇ 신남방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 강화 ㅇ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 ㅇ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ㅇ 신남방국가의 삶의 질 개선 ㅇ 사람 분야 한-메콩 협력 강화	ㅇ 신남방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ㅇ 신남방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ㅇ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 활동 지원 ㅇ 신산업 및 스마트협력 ㅇ 신남방 각 국별 맞춤형 협력 ㅇ 한-인도 신산업 협력추진	ㅇ 신남방국가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ㅇ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ㅇ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ㅇ 테러·사이버·해양안보 ㅇ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복구 역량 강화 ㅇ 한-메콩 평화협력 증진

* 주 : 기존 16개 전략과제에 메콩 및 인도 관련 전략과제(전략과제 7, 13, 19) 가 새로 추가됨.

* 자료 : 신남방특위('19)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을 참조해 작성함.

먼저 사람공동체는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민들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과 이미 다층적이고 긴밀한 인적·사회문화 교류를 발전시켜왔다.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은 동남아 내 우리 교민 사회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유학, 일자리, 결혼 이민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남아 지역 국민들도 증가하였다. 동남아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지역이며, 동남아 내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동남아 방문객들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문화 교류는 한류의 동남아 전파에 치우치면서 비대칭적으로 발전해 왔다. 신남방정책은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을 통해 이러한 비대칭적 교류를 완화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 간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 공동체를 추진하고자 했다. 아세안과 비교해 인적·사회문화 교류 기반이 약한 인도의 경우, 상호 교류를 촉진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사람공동체는 인적·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반영해, 신남방지역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 신남방지역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빈곤 퇴치, 보건 역량 강화, 농촌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신남방지역과의 인적 교류 확대에 발맞춰, 상호 체류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자 했다.

번영공동체를 통해서는 기존의 중상주의적 관점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려 했다. 신남방지역에 대한 무역·투자는 민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나, 정부는 RCEP,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인도 CEPA 개정 등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을 통해 신남방지역과의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신·스마트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신남방지역의 혁신 성장 역량 제고에 기여하려 했다. 아울러 신남방 국가들의 산업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상호호혜성을 강화하려 했다.

평화공동체를 통해서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공동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먼저 신남방국가와의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심화를 통해 역내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의 임기 내 신남방 11개국 순방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신남방국가와의 국방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남방지역의 다양한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 했다.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안보 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기후변화,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해양 안전, 테러, 사이버안보, 지뢰 및 불발탄 제거 등 아세안이 직면한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호혜성을 강화하려 했다.

2) 코로나19와 신남방정책 플러스

3P 공동체 하에 19개 전략과제로 추진되던 신남방정책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와 맞물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외협력 위축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팬데믹 위기를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20년 11월 그간의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 점검에 따른 개선 사항과 팬데믹 이후 새로운 협력 수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하였다. 신남방정책플러스는 기존 3P 공동체 하에 추진되던 과제들과 사업들을 지속하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신남방지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7대 이니셔티브로 클러스터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특히 신남방정책플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해 보건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남방정책의 '사람 중심' 요소를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서 신남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신남방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비전통안보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였다.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	ㅇ 감염병 대응 지원 및 K-방역 경험 공유 ㅇ 의료인력 역량 및 의료체계 지원 ㅇ 역내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의료기술 R&D 및 의료산업 상생 협력
한국형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ㅇ 인적 역량 개발 및 K-Education 모델 공유 ㅇ 교류 확대와 연계한 한국어 사용기반 확대 ㅇ 미래 기술인력 역량 개발 기여 ㅇ 공공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	ㅇ 쌍방향 문화 교류 및 문화 플랫폼 구축 ㅇ 한류 확산과 연관사업 동반 성장 ㅇ 관광 및 스포츠 교류 지평 확대 ㅇ 다문화 포용성 강화
상호호혜적인 무역·투자 기반 구축	ㅇ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촉진 ㅇ 연대와 협력을 통한 통상 확대 기반 조성 ㅇ 기업 책임 경영 및 현지 기여활동 확대 ㅇ 에너지·자원 분야 확대 기반 조성
농어촌·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ㅇ 농어촌 개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ㅇ 농어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ㅇ 스마트시티 개발 및 인프라 개선 ㅇ 인프라사업 재원조달 원활화
미래 산업 협력	ㅇ 4차산업혁명 분야 협력 ㅇ R&D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ㅇ 스타트업 파트너십 강화 ㅇ 미래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협력	ㅇ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협력 ㅇ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공조 체계 제고 ㅇ 해양보호 및 환경 협력(해양 쓰레기 등) ㅇ 초국가범죄 및 국제평화 협력

*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kor/main/main.do) (검색일 : '21.12.3.)

가) 포스트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신남방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플러스의 제1 이니셔티브로 보건 협력을 선정하고, 신남방국가들과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한국 정부는 신남방국가 및 기타 개도국 등 모든 국가가 공평한

백신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1,0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K-방역 및 K-Health 노하우 공유,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원, 한국 보건의료 산업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을 통해 신남방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였다.

〈포스트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감염병 대응 지원 및 K-방역 경험 공유	ㅇ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및 혁신기술 제공 ㅇ 긴급지원 외 유무상 ODA 확대 지속
의료인력 역량 및 의료체계 지원	ㅇ 이종욱 펠로우십 보건 석사 과정 개설, 감염병 연수 과정 신설 ㅇ 신남방 교수 초청 장학사업, 우수 의과대학 집중 지원
역내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한-아세안 보건분야 고위급 회의 발족 ㅇ ‘K-Health 국제협력기획단’ 발족을 통한 의료협력 수요 파악, 종합 의료체계 지원 추진
의료기술 R&D 및 의료 산업 상생 협력	ㅇ ICT 기반 환자 사전 상담, 사후관리 체계 구축 추진 ㅇ 의료기관의 해외병원 설립·운영, 위탁운영 등 현지 진출 맞춤형 지원 추진

*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kor/main/main.do) (검색일 : ’21.12.3.) 및 정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나) 한국형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우리 정부는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신남방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했다. 인적자원개발은 사람을 중시하는 신남방정책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신남방국가들도 자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현지 협력 수요가 매우 큰 분야이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확대인 점으로 볼 때,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협력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지 대학 지원 및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한국어 사용기반 확대, 미래 기술인력 역량개발 그리고 공공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려 했다.

〈한국형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인적 역량 개발 및 K-Education 모델 공유	ㅇ 현지 대학 수요 맞춤형 학과 신설·개편, 전문대학 과정 신설 ㅇ 아세안 주요 국립대 단과대(농대, 공대, 의대) 집중 지원 ㅇ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교류 확대와 연계한 한국어 사용기반 확대	ㅇ 정규학교의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 지원 ㅇ 한국어 교원 파견·연수 확대 ㅇ 세종학당 확대
미래 기술인력 역량 개발 기여	ㅇ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사업 고도화 ㅇ 귀국 노동자 대상 현지 한국기업 취업 연계 사업 추진 ㅇ 원격 교육 컨설팅, 교원·정책가 대상 정책 연수 실시
공공행정 선진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ㅇ 법제역량 강화 교육 지속 ㅇ 디지털 정부 제도 교육 지속

*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kor/main/main.do) (검색일 : ’21.12.3.) 및 정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다)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

우리 정부는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도 대폭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국의 강점인 첨단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켜, 국내와 신남방 현지에 디지털 문화 체험관을 설치하고 가상 한국여행 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팬데믹으로 상호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비대면 문화교류 사업 증진을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신남방지역과 관련된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신남방지역과의 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쌍방향 문화교류에 대한 동력을 지속하려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외 다문화 가족 본국 귀환 지원, 다문화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등 다문화 포용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쌍방향 문화 교류 및 문화 플랫폼 구축	ㅇ 국내와 현지에 디지털 문화체험관 설치(VR, AR, 3D 등 활용) ㅇ 통합 문화행사 개최 - 국내 ‘신남방 문화제’, 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 각국과의 수교 계기 기념행사(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 등) ㅇ 문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아세안 영화기구, 시각예술기구, 문화유산 협력기구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한류 확산과 연관사업 동반 성장	ㅇ 한류 콘텐츠(드라마, 팝), 유망 소비재(K-뷰티, K-푸드 등)와 연계한 융복합 행사 개최 ㅇ 한류 홍보 거점 확충
관광 및 스포츠 교류 지평 확대	ㅇ 가상 한국여행(집콕 방한) 콘텐츠 제작, 신매체 활용 홍보 ㅇ 온라인 스포츠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다문화 포용성 강화	ㅇ 국외 다문화가족(본국 귀환) 지원 ㅇ 다문화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kor/main/main.do) (검색일 : '21.12.3.) 및 정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라)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기반 구축

코로나19는 물자·인력 이동의 제한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심화시키며,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을 가져왔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과의 상호호혜적인 무역·투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했다. 정부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 체결을 위한 역내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양자 FTA나 CEPA 추진 시 개발협력과 연계해 신남방지역과의 통상 확대 기반을 강화하려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리 투자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의 연계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는 등 신남방지역과 상생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신남방지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현지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CS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남방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기반 구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촉진	ㅇ 공급망 다변화 지원' 무역보험 제공, 해외기업 M&A 유동성 지원 강화 ㅇ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시장 조사(바이어, 공급처) 지원 ㅇ EDCF 자금을 활용한 인도 인프라 개선 사업 참여
연대와 협력을 통한 통상 확대 기반 조성	ㅇ RCEP 20년 서명 ㅇ 양자 FTA·CEPA 추진 시, 개발 협력(ODA, 인프라 등) 연계 ㅇ 우리 투자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 호혜적 협력 유도
기업 책임 경영 및 현지 기여활동 확대	ㅇ 인도 중소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ㅇ 해외 진출기업 준법 경영 강화, 노무관리 고충 전담반 운영 ㅇ CSR 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확산(CSR Award)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기반 조성	ㅇ 인도네시아 에너지, 농업 자원 분야 협력사업 발굴 ㅇ 한-인니 공동 해양플랜트 해체 및 활용 시범사업(R&D) 추진

*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kor/main/main.do) (검색일 : '21.12.3.) 및 정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마)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우리 정부는 농어촌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도시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신남방지역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 먼저 정부는 농촌지원과 새마을운동 ODA 프로그램들을 현지 여건에 맞게 고도화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농어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신남방국가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아세안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를 고려해, 아세안스마트시티네트워크(ASCN), 아세안 연계성 파이프라인(MPAC) 사업 등 아세안 주도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농어촌 개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ㅇ 한국의 삶의 질 개선 모델을 시범 마을을 통해 구현 ㅇ 인도의 'Clean India'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접목 ㅇ 지속 가능한 농어촌 개발 사업 지원
농어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ㅇ 적정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공유 ㅇ 검역시설 현대화, 병해충 식별 등 농축산물 검역(SPS) 역량 향상
스마트시티 개발 및 인프라 개선	ㅇ ASCN(ASEAN Smart City Network) 참여 등 G2G 협력 지속 ㅇ 인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협력 ㅇ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인프라 사업 참여
인프라사업 재원조달 원활화	ㅇ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EDCF, ODA 연계 강화 ㅇ 민관공동펀드(PIS 1.5조 원) 조성 등 금융 솔루션 제공 ㅇ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추진

*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kor/main/main.do) (검색일 : '21.12.3.) 및 정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바)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 및 인도와 디지

털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번영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신남방국가들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해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스타트업 및 온라인 산업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협력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스타트업 협력 관련해서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스타트업 재정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이를 통해 신남방지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협력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4차산업혁명 분야 협력	○ 한-아세안 5G 대화협의체 설립 추진 ○ 한-인도 5G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싱가포르, 인도와 AI·빅데이터·클라우드 공동 R&D 추진 ○ 인니 스마트공장, 캄보디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추진
R&D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 언택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핵심 기술·서비스 개발 ○ 핀테크 데스크 신설, K-결제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육·포럼 개최 ○ 현지 온라인 플랫폼(쇼피, 큐텐)에 입점 지원, 온라인 전시관 구축 ○ 화상회의 관련 제품 전시회 개최
스타트업 파트너십 강화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 수립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K-스타트업 센터(싱가포르) 설립 ○ 글로벌 벤처 펀드 조성
미래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 ○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kor/main/main.do) (검색일 : '21.12.3.) 및 정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사)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협력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기존의 한국의 안보 협력이 한반도 평화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신남방정책플러스는 신남방지역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인간안보 중심의 초국가적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한국은 환경 및 기후변화, 해양 안전, 물관리, 초국가적 범죄, 메콩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을 통해 사람 중심의 비전통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국가와 기후 관련 위성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한-아세안 환경, 기후변화, 저탄소 협력을 위한 대화 플랫폼을 구축해 신남방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식량지원 사업을 지속해 아세안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위기 관리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조에 발맞추어 해양 안전과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려 했다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협력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협력	○ 위성(천리안B 정지궤도위성) 데이터 공유 추진 ○ 한-아세안 환경·기후 변화 대화 개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공조 체계 제고	○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확대(라오스, 필리핀) ○ 인니 산불재난관리센터 설립 추진 ○ APTERR(아세안+3 쌀 비축제)를 통한 식량지원 지속
해양 보호 및 환경 협력	○ 해양쓰레기 해소를 위한 청항선 지원 추진 ○ 인니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사업 착수(공동조사, 모니터링, 정책개발)
초국가범죄 및 국제평화 협력	○ 치안 협력 MOU 체결 등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사업 확대 ○ 메콩강 유역 환경 협력 확대 -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설립 추진 -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 자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kor/main/main.do) (검색일 : '21.12.3.) 및 정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다. 아세안·인도와의 협력 기반 고도화

1)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설립과 신남방비즈니스 연합회 출범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 선언 이후,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2018년 8월 대통령직속 기구로 '신남방정책추진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가 설립되었다. 신남방특위에는 14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신남방정책 추진단이 구성되어, 각 부처의 신남방정책 관련 업무를 조율하였다. 이로써 과거에는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었던 아세안, 인도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남방특위는 2018년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3P 공동체별 주요 목표 하에 16개 전략과제와 57개의 중점사업을 제시하였다. 이후 신남방특위는 한-인

도 정상회담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해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을 19개 전략과제와 92개 중점 사업을 재편하였다.

〈신남방정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 ㅇ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 ㅇ (위원) 당연직 6명 {4개 부처(기재·외교·행안·산업) 차관 및 대통령 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민간위촉 위원(20명 이내)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남방특위 공식 출범('18.8.28.)

* 자료 : 신남방특위 보도자료('18.8.28.)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출범('19.1.24.)

* 자료 : 신남방특위 보도자료('19.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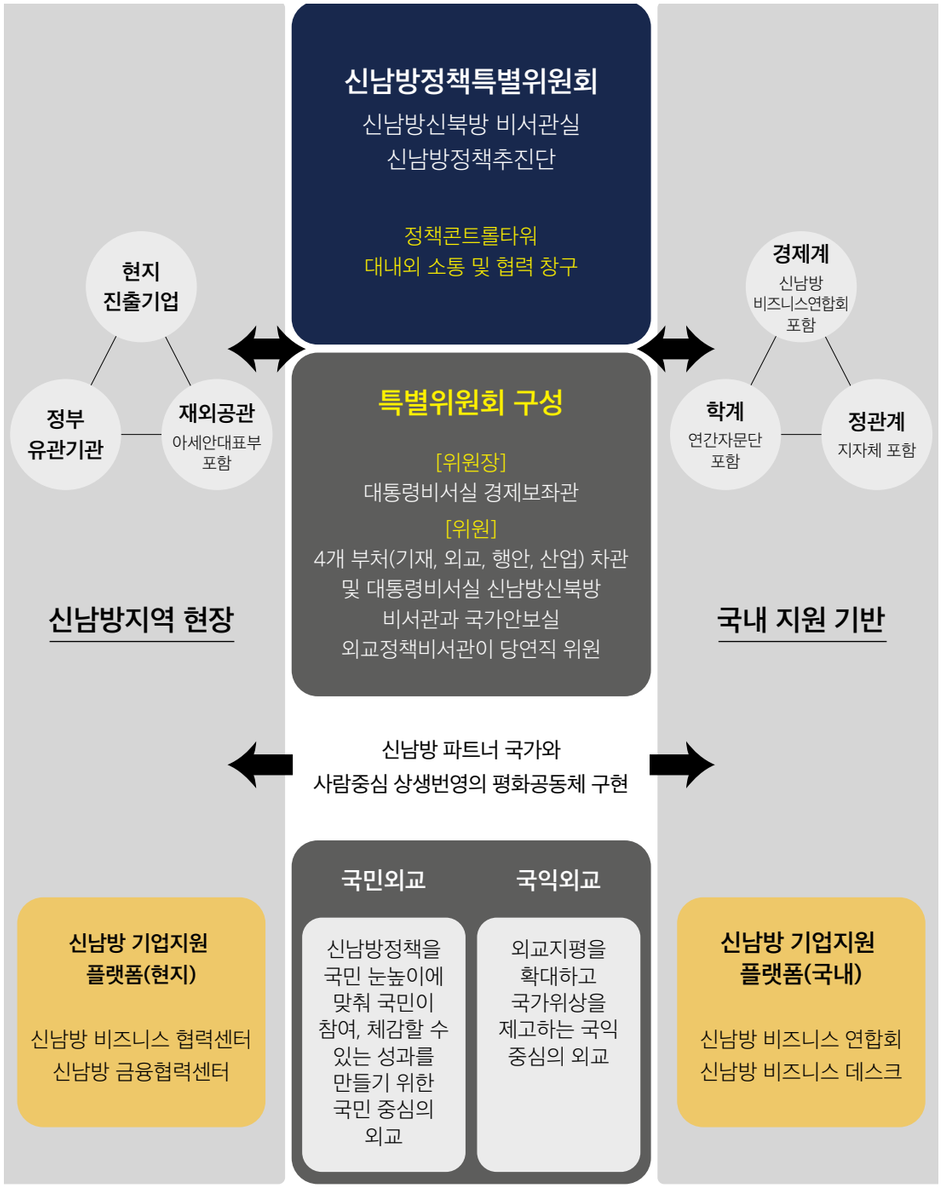


신남방비즈니스위크('21.10.5.)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출범('19.5.2.)

〈신남방정책 종합체계〉



주요 회의체는 전체회의, 비즈니스 연합회, 비즈니스 위크 등이 있으며 전체회의는 신남방정책 관련 주요현안 검토,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회의 총 10회 개최하였다.

〈전체회의 주요 내용〉

회차	세부 내용
제1차 ('18.11.8.)	ㅇ 신남방정책 3P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 32개 추진사업 선정 ㅇ 부처별 추진범위 및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의 체계도 확립
제2차 ('19.4.30.)	ㅇ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개최 대비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점검 ㅇ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및 한류확산 방안 등 관계부처 논의
제3차 ('19.7.16.)	ㅇ 19년 주요 협력과제(신남방지역 비자제도 개선, 한국어교육 활성화, 금융 협력 플랫폼 구축 등) 부처간 협력시스템 강화 논의
제4차 ('19.12.19.)	ㅇ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20년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논의 ㅇ '20년도 주요 협력과제(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 관리, ODA 추진전략, 비즈니스 협력센터 구축, 인니 수도이전 사업 등)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 협의
제5차 ('20.4.9.)	ㅇ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지연,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사업 재조정, 신남방정책플러스 수립계획(안) 등 논의
제6차 ('20.7.23.)	ㅇ 코로나 이후 신남방정책 방향 및 관계부처, 공관과의 협업 강화 논의 ㅇ 중점사업 실적점검
제7차 ('20.10.21.)	ㅇ 부처별 신남방정책 3년 성과 및 향후 계획 △'20.11월 한-아세안정상회의 계기 「신남방정책플러스」 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심의 및 의결
제8차 ('21.3.4.)	ㅇ '신남방정책플러스'의 이니셔티브별 액션플랜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이행 체계 구축 논의
제9차 ('21.9.30.)	ㅇ '21년도 신남방정책플러스 추진실적 점검, 하반기 계획 수립 ㅇ 인태전략, 인프라분야 협력 사업, 산업혁신기구 설립 등 주요사업 성과 및 추진계획 논의
제10차 ('22.2.24.)	ㅇ 신남방정책 성과와 '22년도 업무계획 부처별 업무 계획 논의 ㅇ 신남방정책 백서 발간 추진 계획 논의

2019년 1월에는 신남방특위의 지원 하에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가 출범하였다.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는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핵심 유관 단체 30여개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이다.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는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신남방특위는 '신남방비즈니스 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신남방비즈니스 연합회 주요 내용〉

회차	세부 내용
제1차 ('19.1.24.)	△ 신남방 진출관련 협의체 출범, △ 회장사(무역협회) 추대, △ 신남방진출 기업 지원방안(비즈니스 데스크, 국제포럼 개최 등) 논의
제2차 ('19.7.23.)	△ 기업애로 일제조사 결과, △ 신남방 전자상거래 진출방안, △ 한-베 광남성 비즈니스 서밋 추진계획, △ CSR과 신남방 지역 등 논의
제3차 ('19.10.24.)	△ 특별정상회의 소개 및 기업활용 방안, △ ODA 추진현황 및 방향, △ 신남방 무역 및 서비스 진출방안 논의
제4차 ('19.12.16.)	△ 동남아진출기업 노무관리·인권경영 방안(고용부 발표) 논의
제5차 ('20.4.22.)	△ 기업애로 조치결과 점검(2차회의 후속), △ 한류브랜드 보호방안, △ 비즈니스 위크 개최계획, △ 코로나19 대응 및 기업애로 논의
제6차 ('20.7.16.)	△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계획 및 추진경과(5차 회의 후속), △ 신남방 국가 VIP 순방 후속사업 추진경과 등 논의
제7차 ('20.12.3.)	△ '신남방정책플러스'보고, △ RCEP 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계획, △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진출 지원 논의
제8차 ('21.3.31.)	△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개소 및 향후계획, △ 베트남 '빈증전시장' 운영 수주 및 거점화 전략, △ 신남방지역 진출 민간기업 협력사례, △ 신남방지역 기업 진출 및 성과사례 논의
제9차 ('21.8.25.)	△ 신남방정책-인태전략 간 연계협력 비즈니스 기회, △ 신남방국가 코로나 피해 및 지원현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현황 및 지원, △ 신남방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제도·정책, △ 2021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개최 계획 논의
제10차 ('22.4월말)	(잠정) △ 신남방 진출기업 애로 및 지원현황 △ 신남방 비즈니스연합회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2019년 5월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 '신남방비즈니스 데스크'가 설치되었다.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는 신남방비즈니스 연합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비즈니스 위크는 상생 비즈니스 포럼,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신남방 국가와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종합행사 개최하였으며 민간자문단을 통해 신남방 중장기 정책수립 등 4개 분과[외교안보(14명), 경제(13명), 사회문화(15명), 인도(18명)]별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신남방 중장기 정책수립 등 업무추진에 활용하였다.

나) 외교부 아세안 담당 부서 확대 및 주아세안 대표부 역할 강화

외교부 아세안 담당 부서의 위상과 역할도 크게 강화되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남아·호주·뉴질랜드와 함께 남아시아태평양국에 소속되었던 아세안 정책 담당 부서를 별도의 아세안국(局)으로 독립시켰다. 아세안국에는 아세안협력과, 동남아1과(해양동남아), 동남아2과(대륙동남아)의 3개의 전담과가 신설되어, 아세안 지역기구 차원과 동남아 개별국에 대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아세안국의 독립은 한국 외교정책에서 아세안이 갖는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주아세안대표부의 역할과 규모도 확대되었다. 외교부는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차관급 인사로 격상시키고, 과거에는 주로 아세안과의 협의채널로서 기능했던 주아세안대표부의 역할을 유엔 대표부에 버금가는 다자외교 공관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주아세안대표부 신청사를 개소하고, 공관 인원도 기존 5명에서 14명으로 대폭 증원하였다. 주아세안대표부의 격상은 한국 대아세안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아세안대표부가 신남방정책 추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다) 아세안 관련 기금 및 ODA 확대

정부는 외교부 아세안 관련 부서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아세안 간 협력 확대의 토대가 되어왔던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과 한-메콩 협력기금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아세안 다자 ODA 채널로 활용되어왔다. 한국은 1989년 수교 관계에 해당하는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관계를 수립한 직후인 1990년에 연간 100만 달러 규모의 협력기금을 설립했으며, 단계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해 2021년 기준 연간 공여액은 1,4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동 기금은 한·아세안 간 개발협력, 인적자원 및 역량 개발, 공공행정, 문화 교류 등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420여개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7년 신남방정책 발표와 한-아세안협력기금 예산 증액 발표 이전에는 단년도·소규모 프로젝트가 많았으나, 2017년 우리 정부의 대(對)아세안 정책 및 아세안 미래방향에 부합하는 중점분야를 명시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다년도·대규모 사업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기반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동 프레임워크는 '신남방정책플러스' 및 아세안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2021년에 개정되었으며 2025년까지 5대 중점분야로 △ 공공보건 △ 교육·훈련 △ 문화·관광 △ 경제 회복력 △ 환경, 안전과 평화를 선정하였다.

한·메콩협력기금은 한·아세안협력기금과 더불어 한국의 대아세안 소지역(sub-region) 협력을 위한 다자 협력채널로 활용되어왔다. 2012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기금 채택에 합의한 후 2013년부터 연간 5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시작된 후 2021년 400만 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증액되었다.[7] 한-메콩협력기금의 수원국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4개국이며 태국은 개발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다. 기금의 운영 사무국은 개발파트너인 태국 소재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가 2015년부터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 메콩 국가와 한국을 포함해 국별로 1개 내외의 사업을 제안해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2021년 제5차 사업에는 메콩연구소 제안 사업까지 포함해 도로, 산림, 농촌개발, 수자원, 유통 등 7개 사업이 채택되었다.[8] 7대 우선협력 분야는 △ 문화·관광 △ 인적자원 개발 △ 농업·농촌개발 △ 인프라 △ 정보통신기술(ICT) △ 환경 △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메콩협력기금은 주로 메콩 국가들의 공무원 및 분야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1년에는 해양동남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신설하여 환경·관광·연계성 증진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동 기금은 기존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증액하였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대아세안 ODA도 증액하였다. 신남방정책 이전에도 아세안은 한국의 대(對)세계 ODA 지원 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였다.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라오스·미얀마 6개국이 ODA 중점협력국에 선정되어 집중 지원을 받아왔으며, 2021년에는 인도가 중점협력국으로 추가 선정되었다.[9]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신남방정책 1년차인 2018년 약 4억 5,800만 달러에서 3년차인 2020년에는 5억 3,988만 달러(잠정)로 약 18% 증가하였고, 2020년 신남방 대상 ODA는 우리나라 양자 ODA 총액(19억 3,587만 달러)의 약 31%에 해당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아세안 ODA가 그 규모의 증액뿐만 아니라, 기존 베트남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로의 지원확대로 이어져 보다 균형 잡힌 협력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

7) 2021년 5차 사업 구성 : (캄보디아) 도로정비 역량강화 사업, (라오스) 북부 라오스 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지원 사업, (미얀마) 몬 주(州) 농촌 개발에 대한 이주의 영향 연구 사업, (태국) 메콩 지역 내 소규모 수자원 관리 강화 사업, (베트남) 메콩 리더십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사업, (한국) 농촌 의료 교육시설 대상 빗물 식수화 시설 보급 사업, (메콩연구소) 메콩 국가 내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농산물 공급망 개발 사업 등이다.

8) 최초 한메콩협력기금의 우선협력분야는 인프라, 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였으나, 신남방정책 발표 후 3P와 사람중심의 비전을 반영해 상기 7대 분야로 개편했다.

9) 아세안 10국 중 고소득국(싱가포르, 브루나이), 중고소득국(말레이시아, 태국)을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CPS 중점협력국에 포함된다.

을 의미한다. 한국의 ODA 재원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한-메콩 협력기금과 함께, 아세안과의 협력 사업을 다각도로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2) 정상·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기반 확대

대외적으로는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한국의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신남방지역과의 양자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순방을 약속했으며,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필리핀(2017년 11월), 베트남(2018년 3월), 인도·싱가포르(2018년 7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2019년 3월), 태국·미얀마·라오스(2019년 9월) 방문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모두 방문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문 대통령의 11개국 순방은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에 기여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9년에 부산에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계기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에 장관급에서 이루어지던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하였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가) 아세안

우리 정부는 활발한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매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부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상생번영, 인적·문화교류, 평화·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어 협력 모멘텀이 지속되었다. 2020년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 점검 결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 신남방국가의 신규 협력 수요 등을 반영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하였다. 아세안 정상들

은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안인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아세안의 팬데믹 출구 전략인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가 공통의 협력 수요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정책 간의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데에 합의하였다. 2021년 10월에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보건협력, GVC 안정화 및 미래 분야 협력, 전통 및 비전통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동 정상회의에서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그간의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해당 정상회를 계기로 한-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한-캄보디아 FTA 서명이 이루어졌다.[10] 이로써 우리 정부는 20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0년 11월 서명), 한-인도네시아 CEPA(2020년 12월 서명) 등에 이어서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국과 다자·양자 자유무역 네크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한-캄보디아 FTA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 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성과〉

차수	시기	개최지	주요 성과
19	'17.11.	필리핀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발표 ○ '더불어 잘사는(Prosperity) 사람 중심의(People) 평화(Peace) 공동체' 구현, 아세안 연계성 사업 참여 확대,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 ○ 무역, FTA, 중소기업 지원, 아세안공동체 출범 지원 등 협력 확대
20	'18.11.	싱가포르	○ '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제시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인프라, 인적역량강화, 중소기업 등 분야 협력 강화 합의
3 (특별)	'19.11.	한국	○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채택 ○ 금융, 산업혁신, 표준화, 스타트업, 과학기술 분야 협력 제도화 합의 ○ 상생번영 : △ FTA 네트워크 확대 △ 제조업, 첨단산업, 과학기술 협력 △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협력 △ 금융, 해양수산, 항만, 농업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 인적·문화교류 확대 : △ 비자제도 개선 △ 항공 자유화 △ 다문화 가족 지원 △ 인적자원개발 △ 보건협력 ○ 평화·안보 :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 국방·방산 △ 전통·비전통안보 △ 사이버보안 △ 재난관리 △ 불발탄 및 지뢰 제거 △ 해양 쓰레기 △ 환경 △ 산림 △ 수자원 협력

10) 2019년 4월에 한국과 필리핀 통상장관이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19년 6월에 협상이 개시되었다

차수	시기	개최지	주요 성과
21	’20.11.	화상	○ 신남방정책플러스 발표 : 7대 핵심 이니셔티브로 구성 - 보건의료, 인적자원개발, 문화교류, 무역 및 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 신남방정책플러스에 대한 아세안의 공감대 확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결집 -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의 5대 핵심 분야와 신남방정책플러스 7대 이니셔티브간 연계 ○ ACRF 5대 핵심 분야 : △ 보건 △ 인간안보 △ 역내시장 잠재력 및 경제통합 확대 △ 포용적 디지털 전환 △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로의 진전 - ‘한-아세안 행동계획(’21-’25)’ 채택 환영
22	’21.10.	화상	○ 신남방정책관련 공동성명 채택 ○ 코로나19 극복 협력 : 백신·보건 협력,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기금에 한국이 공여 ○ △ 보건협력(한국 측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 제안,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21년부터 정례화 등) △ 양자·다자 FTA 통한 교역 확대 및 GVC 안정화, 미래 분야 협력 강화(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21년 완성 예정) △ 전통 및 비전통안보(사이버범죄, 초국가범죄, 기후변화 등) 협력

* 자료 : 보도자료 종합

풍부한 생물자원 및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메콩 5개국(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이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으로 개최된 한-메콩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하여 2019년에 11월 한국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한국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청사진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한국의 고속 성장 경험을 메콩 국가와 공유하고, 인프라·농업 및 농촌개발·인적자원개발·비전통안보 등 7대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었다. 2020년 11월 제2차 한-메콩 정상회담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채택된 7대 우선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21년 10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메콩 국가들의 사정으로 개최가 연기되었다.

〈한-메콩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차수	시기	개최지	주요 성과
1	’19.11.	한국	○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 - 7대 우선 협력분야 : △ 문화·관광 △ 인적자원개발 △ 농업·농촌개발 △ 인프라 △ 정보통신기술(ICT) △ 환경 △ 비전통안보협력 - 한-메콩 정상회의 정례화(매년 개최) ○ ‘한·메콩 수자원 공동 연구센터’ 및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설립 추진, 산림 협력 강화 ○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 추진 - 지뢰 및 불발탄 제거 및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포함 ○ ’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
2	’20.11.	화상	○ ‘공동 성명’ 채택 - △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 및 환영 △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 포함

* 자료 : 보도자료 종합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교류〉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9.11.)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20.11.)

* 자료 : 외교부 제공

한국은 신남방국가들과의 정상급뿐 아니라 각 분야 고위급 협의체를 강화하며 협력관계를 보완·심화해왔다. 2020년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강-메콩강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2021-2025 한-메콩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2021년 10월에는 제1차 ‘한-BIMP-EAGA’고위관리회의(SOM)’[11]를 개최하고, 새로 신설된 ‘한-BIMP-EAGA 협력기금(약 1백만불)’을 통해 해양

11)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 : 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 East ASEAN Growth Area는 1994년 창설된 경제협력체로, 해양동남아 4개국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해 역내 고도성장지역과의 개발격차 해소 및 아세안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남아 4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환경, 관광, 연계성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BIMP-EAGA 국가들의 수요를 감안해, 이들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BIMP-EAGA' 협력은 2020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해양동남아 소지역 협력 구상 이행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BIMP-EAGA를 통해 한-해양동남아 간 소지역 협력을 정착·발전시켜, 기존 한-메콩 협력과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보다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12)]

나) 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한-인도 협력 기반을 새롭게 다졌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해 '한-인도 비전성명'을 채택하고,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성을 목표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정례화와 함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였다. 이는 16년만에 이루어진 현직 대통령 부인의 외국 단독 방문으로, 김정숙 여사는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인도 대통령 영부인 주최 오찬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측의 환대는 인도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2월에는 모디 총리가 한국을 답방해 양 정상 간의 돈독한 우의를 보여주었다. 양국은 모디 총리의 방한 계기에 인도가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역내 평화와 상생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모디 총리는 1박 2일의 방한 일정 동안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 친교 만찬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는 '한-인도 스타트업센터 설립' 등 스타트업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조속 타결, 양국 간 무역환경 개선, 인프라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달 탐사 등 우주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역내 안보 문제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12)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1.10.21.

〈한-인도 정상교류〉



'18.7. 한-인도 비전성명 채택



'19.2. 한-인도 정상 회담

* 자료 : 외교부 제공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인도 정상 상호 순방 성과〉

순방국가	시기	구분	주요 성과
인도	'18.7.	국빈 방문	ㅇ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채택 -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을 통한 협력 강화 - 정상급 교류 강화 - '3P 플러스'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ㅇ 사람 - 청소년 교류, 인턴십, 관광·비즈니스 활성화 - 허황후 기념공원 사업 ㅇ 상생번영 - '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 및 조속 타결 노력 - 무역·인프라 등 상생번영 모색 ㅇ 평화 - 국방·방산협력, 테러 대응, 외교·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활성화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및 연구혁신협력센터 설치 등
한국	'19.2.	국빈 방문	ㅇ 사람 - 한-인도 국민 교류 확대 ㅇ 상생번영 -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조속 타결 노력 - 교역환경 개선 : 수입규제조치 완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등 - 인프라 개발 협력 - 한-인도 스타트업 센터 설치 합의(인도 구루그람) - 미래 - 연구혁신협력센터, 미래비전전략그룹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추진 - 공동 달 탐사 등 우주 협력 프로젝트 추진 ㅇ 평화 - 한반도 및 지역 평화 달성을 위한 공조 입장 확인 - 양국간 방위산업협력 로드맵 진전, 한국 기업의 인도방위산업 진출 지원

* 자료 : 한-인도 공동비전성명('18.), 공동기자회견문(경제외교 활용포털, '19.)

2. '사람'분야 정책 및 주요 성과

신남방정책은 '사람 공동체' 형성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의 경제 중심의 관계에서 진일보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관계 구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정책의 '사람' 분야의 사업들은 신남방지역 국민과의 우호와 상호이해에 기초한 공동체 형성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우리나라 대외협력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가. 포스트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1) 감염병 대응 지원과 K-방역 경험 공유

한국은 신남방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 한·중·일 3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약속했고, 2021년에는 500만 달러를 추가로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보건 분야 ODA 예산을 증액하고 2021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등 신남방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토대 하에 K-방역 지식 공유와 긴급 물자 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보건의료 차관 신속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가) K-방역 지식 공유와 긴급 물자 지원

한국 정부는 2020년 4월 아세안+3(한·중·일) 보건 분야 장관급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보건 협력을 논의하였고, 2021년부터는 한-아세안 보건의료 대화채널인 보건장관회의를 신설하며 역내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힘썼다. 또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아세안에 PCR 진단키트를 비롯한 의료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아세안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0만 회분을 공여하였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신남방지역과의 백신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백신 파트너십을 아세안 국가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베트남과의 백신 지원·공동생산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편 신남방지역 국가와의 양자 간 협력도 추진하여, 보건복지부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와의 기체결 MOU를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했고, 베트남의 경우 의료물품과 백신을 보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정책 및 기술 공유 특별 세미나〉





* 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나)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사업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을 받아 수행한 '인도네시아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형 방역 모델을 공유하여 인도네시아 방역 체계 진단과 개선,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강화, 신종 감염병 대응 관련 건강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 ICT 활용 신종 감염병 대비 등에 대한 방안 수립에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서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부터 추진한 '캄보디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역학조사관 60여명을 배출했다. 그밖에도 국가실험실 역량강화, 긴급 상황실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필리핀,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기획재정부는 EDCF 지원액의 38%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지역에 제공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신남방지역에 공여한 EDCF 규모는 16억 8,4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경우 신속하게 긴급대응 프로그램 차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필리핀의 경우 2억 달러의 추가 지원 계획을 2021년 말에 밝힌 바 있다.

2) 보건의료인력 역량 및 의료체계 지원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는 물자지원과 더불어 한국이 신남방지역의 보건 개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부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무상 연수를 제공했으며, 2020년 신남방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보건의료 인력 초청연수 프로그램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MKA : Medical Korea Academy)의 경우 2021년 8월 현재 신남방지역 의료진 197명이 수료했다.

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베트남 라오까이성, 옌바이성, 다낭시를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의료기기 운영 및 관리 체계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바탐방, 뽀삿, 파일린도의 주민 약 1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산사 양성과 통합 모자보건 증진 사업을 진행하였다. 라오스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와 의료기기 관리운영 체계 개선,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 ODA 지원 규모를 2020년 121억에서 2021년 151억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사업예산 활용 코로나19 지원액도 2020년 8억 6,290만 원 대비 2021년 19억 8,5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긴급상황실 운영·실험·역학조사·위험평가 관련 역량강화와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가상센터 시스템 개선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협력은 향후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 활동〉



* 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비대면 의료연수 플랫폼 (MKA e-class) 교재〉



* 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3) 결식문제 완화

신남방지역에는 결식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많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의 푸드뱅크 사업 운영사례를 전수하기 위해 사업모델 전수사업 계획안 마련, 전문가 파견 및 대상국 관계자 초청, 제도 번역본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남방지역과 협력하였다. 2019년에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사회부조국과 푸드뱅크 모델 전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0년에는 한국푸드뱅크 모델 전수를 위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현지 수요조사를 수행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21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몽골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푸드뱅크의 역할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남방지역 결식문제 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한국형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1) 교육 : 한국어, 고등교육

우리 정부는 한국어 교육과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신남방국가와 협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한국어교육 협력사업과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해 신남방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초청장학사업으로 신남방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신남방지역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가) 한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신남방지역의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어 교육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신남방지역 한국어반이 2018년 5개국 185개교에서 2021년 8개국 330개교로 증가했다. 베트남은 2021년에는 제1외국어로 채택하였으며, 2020년 인도정부는 8개 권장 제2외국어 중 하나로 한국어를 추가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남방지역 세종학당을 2017년 7개국 36개소에서 2021년 9개국 56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한국어 교원 파견 확대, 현지 교원 양성과정 운영, 신남방지역 7개 언어 대상 현지어-한국어 통번역과정 기본모형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2020년에는 ‘‘한국어, 세계를 잇다’ 한국어 확산계획(2020년~2022년)’을 발표하여, 체계화된 한국어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인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인도 한국 문화원과 세종학당이 이끌었다. 인도에는 총 8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3개는 주인도 한국 문화원과 연계형으로 운영 중이다. 예컨대 2021년 주인도 한국 문화원은 인도의 네루대학교와 공동으로 ‘인도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시작하였다. 2021년 6월 신규 설립된 ‘첸나이2 세종학당’은 힌두스탄 과학기술대와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운영한다.

〈교육부 해외 한국어교육 보급사업의 주요 내용〉



베트남 현지 언론(HTV)



한국 언론(재외동포신문)

* 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나) 신남방지역 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

우리 정부는 국내 신남방 전문가 및 현지 한국학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통해 연구 활성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남방지역 내 한국학 강의 개설, 한국학센터 및 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한국학(씨앗형) 사업을 통해 현지 한국학 강좌 확대, 한국학 센터 및 연구소 건립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 정부초청장학사업

정부는 정부초청장학사업(GKS : Global Korea Scholarship)을 통해 신남방지역 국가 장학생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신남방지역 국가 학생 선발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였다. GKS 동문들은 졸업 후에도 동문회, 학술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양국간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라)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은 아세안 국적의 석사학위 소지 교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박사학위 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으로 2020년 1월에 아세안의 최종 승인을 받아 착수되었으며, 2020년 이후 총 48명의 장학생에게 수학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는 약 800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활용해 2020년~2025년에 9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마)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신남방지역 6개국의 11개 대학의 학과 개설 및 개편을 지원하였다. 예컨대 우리 정부는 라오스 수파노봉대 재료공학과, 인도네시아 사나타다르마대 화학교육과 신설 등을 지원했으며, 미얀마 식물학과 유용식물 자원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유용식물 보존 활용 기술 교육에 기여했다. 교육부는 특히 2022년부터는 신남방지역의 높은 전문대학 수요에 부응해 전문대학 트랙을 신설할 계획이다.

2) 역량 강화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협력 수요에 기반해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여성 역량 강화, 공무원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법제 및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등 역량 강화 분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특성상 수요가 높은 TVET 사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가) TVET(기술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해 국가별 기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 약 690만 달러를 투입해 '아세안 이동성을 위한 한-아세안 직업기술교육훈련 사업(TVET)'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개의 TVET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모델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자격참조표준(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을 기준으로 각국의 자격을 상호 비교한 참조보고서를 작성하여 아세안 자격참조표준 위원회(AQRF Committee)에 제출하였다.

한편 아세안 국가들이 2017년부터 역내 TVET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직업훈련제도 전수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TVET 정책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년 학위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위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자국 유관 부처의 TVET 담당자로 승진하거나, 한국의 우수 사례를 본국에 적용하는 등 TVET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TVET 분야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직업훈련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기술 및 교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해당 교사들이 본국에 귀국하여 현지 동료 교사와 학생을 재교육하는 교육모델을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대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 아세안 + 3, EAS 직업교육 협력사업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요청으로 한국의 마이스터고 혹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정책 경험과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공유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태국의 6개 직업계 학교의 경우 한국의 직업계고등학교와 연결하여 학생 교류, 교육과정 개편 컨설팅을 통해 3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신규학과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태국 람팡기술대학은 한국의 컨설팅을 통해 우수 학교로 성장하여 태국 국왕으로부터 혁신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에서 직업교육 이미지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직업교육 관련 정책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아세안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방역 및 실습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경험을 공유하였다. 교육부는 협력대상 국가를 2025년까지 아세안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여성정책역량강화 지원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아세안은 2019년 한-아세안 공동 의장성명을 통해 양성 평등 촉진, 성인지 정책 역량 구축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직업능력개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초청연수,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아시아 성평등 트레이너 양성교육(AGenT : Asian Gender Trainers' Network Program), 베트남 젠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캄보디아 여성부 대상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와 협력하여 2020년~2024년에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여성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아시아 성평등 전문가에 의한, 현지 맞춤형 콘텐츠에 기반한 '아시아 성평등 트레이너 양성교육(AGenT)'을 실시하였다. AGenT에는 여성 및 젠더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노동자 복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와도 성평등 관련 협력을 추진하여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서 젠더역량강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캄보디아 여성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정책과정 교육을 통해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하였다.

라) 공무원, 전문가 교류 확대

외교부는 신남방 공무원 펠로십을 통해 2019년부터 아세안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 문화체험, 한국학 관련 강의 수강, 유관기관 방문 등 단기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9년 첫 사업 시행 시 신남방지역의 협력 수요가 높은 유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발전된 기술 및 정책을 체험하고 연수생들이 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 환경에서 온라인수업 제공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마)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2018년 9월 조코위 대통령 방한 당시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 양국간 법령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양국간 법제 교류 및 협력을 본격화하였다. 법제처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2016년~2018년)을 토대로 KOICA를 통해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850만 달러, 2021~26년)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비대면으로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2020년~2021년 실행계획(액션플랜)'을 체결했다. 이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법제처는 2020년 12월에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을 분석한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와 법제처 주요 업무 소개 영상을 제작하여 인도네시아 측과 공유하였다. 이 영상을 주제로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 법제 공무원들과 5회의 온라인 법제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국장급 정례협의체를 개최하여 한-인도네시아 법제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법제처는 향후 다른 신남방지역 국가와도 법제협력을 추진해 신남방국가의 법제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 디지털정부 협력 확대

우리 정부는 한국형 디지털정부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남방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추진하였다. 신남방지역 국가와의 디지털정부 협력은 관련 양해각서 체결, 범정부 합동 사절단 파견, 고위급 초청연수,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디지털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캄보디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립되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신남방지역 디지털정부 협력의 대표 사례로 육성하고 협력 모델을 인근 신남방지역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장차관급과 각 부처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에 파견하여 신남방지역 국가와 공공행정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공공행정 발전경험 공유, 아세안의 공공행정 역량강화,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권역별 행정장관회의, 장차관급 양자회담,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중점 협력사업을 발굴하였다. 실무급 차원에서는 신남방지역 정부와 공공행정협력포럼 개최, 분야별 워크숍 개최 및 정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 행정안전부는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7년 5월에는 사켕 부총리를 포함한 캄보디아 대표단이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자국 수도이전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를 출범시켜 협력을 추진하였다.

다.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

1)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 플랫폼 구축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문화교류의 양과 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양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수교 기념 등 특별한 계기로 개최하는 문화교류 행사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현지 맞춤형 문화행사를 통해 신남방지역 국민과의 문화적 접점을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청소년 간 문화교류를 통해 미래 관계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가) 수교 등 특별 계기의 문화교류 행사 내실화

우리 정부는 태국, 2019년 필리핀, 2020년 말레이시아와의 수교 기념의 해를 계기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대개 10년 주기로 개최되는 수교 계기 문화교류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문화를 집중 홍보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21년 처음 추진된 '코리아 콘텐츠 위크(Korea Contents Week)'는 베트남의 지방도시 꽝남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

사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한-메콩 협력 엠블럼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한국과 메콩 5개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메콩 협력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우정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나) 신남방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과의 문화·교육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특히 신남방지역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부산에 설립된 아세안문화원은 對아세안 문화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위크(ASEAN Week 2019), Staying Connected with AKC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아시아문화주간'을 통해 공연, 체험행사 및 학술토론회 등을 선보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신남방지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한-신남방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국내 교원들에게 아세안 국가의 근현대사 교수 및 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해 초·중등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태국을 시작으로 온라인 역사 교류를 추진하여 2021년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으로 확대하였다.

다) 청소년 교류 확대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해 한국과 신남방지역 청소년 교류도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2020년에 처음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는 정례화되어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에서는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온라인 비대면 교류를 운영하고 청소년교류 온택트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청소년 교류를 지속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와 싱가포르 등과 MOU를 체결했다.

라) 한-인도 문화·외교 교류 강화

인도 내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과 한-인도 우호공원 개장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한 한-인도 교류의 주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허황후를 기리는 기념공원이 2018년 11월 인도 아요디아에서 착공되었으며, 당시 인도를 방문한 김정숙 여

사가 해당 착공식에 참석했다. 2021년 3월에는 한국 국방부장관과 주인도대사, 인도측 군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우호공원 개장식이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공원은 양국이 정치, 경제, 국방, 인적 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 중임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 신남방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지원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문화 정책과 산업의 성장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 문화교류의 양방향성, 그리고 상생의 비전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기 위해 현지 문화 역량 지원사업과 ODA를 추진했다. 무엇보다 한-아세안 문화 분야 협력기구 설립을 통해 한-아세안 문화 협력의 핵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가) 신남방지역 문화 역량 강화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문화정책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의 신진 대중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국내연수 및 현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에는 미얀마 인기 아이돌그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은 한-아세안의 문화예술·콘텐츠 관계자 등이 모여 상호 문화교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으로서,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포럼 주제와 연계하여 한-아세안 문화자원과 기술을 융합하는 공동 협력사업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나) 한-아세안 문화 분야 협력기구 설립 추진

아세안 문화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로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문화 분야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영화 분야는 2019년부터 기구설립을 위한 임시회의를 통해 영화기구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전영화 복원 사업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예술과 문화유산 분야는 구체적인 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등을 아세안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다) 문화 ODA 확충

우리 정부는 정책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문화 ODA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인도네시아 치르본시에는 2018년부터 문화소외지역 학교대상 문화예술교육 모델(예술꽃 씨앗학교)을 현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2021년간 미얀마의 문화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스마트 문화자원 관리시스템 및 문화지도 개발을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베트남 하노이 시립도서관에 '꿈더하기도서관'을 조성하여 독서와 문화향유 공간을 만들고 평생학습과 정보활용,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지원한 바 있다.

3) 한류 확산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신남방지역은 한류의 중심지로서, 신남방지역의 한류를 발전시키고, 이를 한국 기업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한류 홍보의 현지거점 확충,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비즈니스 교류 등이 진행되었다.

가) 한류 홍보거점 확충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과의 문화교류 촉진 및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현지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서 한국문화원을 개원하였으며, 한국 콘텐츠 지원을 위해 2016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 베트남 비즈니스센터 신설하였고, 2021년에는 주태국 한국문화원에 콘텐츠 전문 인력을 신규 파견하였다. 정부는 말레이시아 한국문화원 신설, 인도네시아 코리아센터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신남방지역과의 콘텐츠 교류 활성화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에서의 한류 콘텐츠 홍보와 연관산업 진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K-콘텐츠 엑스포는 수출상담회와 홍보마케팅, 공연 등을 결합한 종합 콘텐츠 박람회로서, 2017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등에서 개최되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가 협업으로 종합 비대면 한류콘텐츠 박람회 온 : 한류축제(ON : Hallyu Festival)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6개 부처가 협업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2021 K-박람회'를 개최하였다.

4) 관광 및 스포츠 교류 지평 확대

가) 한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우리 정부는 수교기념 등을 계기로 한국 문화관광대전 개최 및 주요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한국 관광 홍보를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매력 및 지방관광 등을 알리는 이미지 광고를 확산하고,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20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인 '한국의 흥을 느껴라(Feel the Rhythm of Korea)!'는 해외에서 큰 주

목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힙합과 전통민요, 지역관광지를 결합한 한국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7억 조회 수를 달성하였다.

나) 국내 무슬림 여행 환경 개선

무슬림 관광객은 한국여행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음식관련 내용을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무슬림 친화 식당 분류제를 추진하여 전국에 373개 식당을 분류·지정하였다. 또한 무슬림 친화 식당의 홍보를 위해 할랄레스토랑위크를 매년 개최하여 할인 판촉행사를 제공하고, 국가별 맞춤형 현지 홍보 및 국내 관광지 홍보를 실시하였다.

다)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개발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지역개발 및 관광자원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상생번영이라는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후에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개발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후에성은 2019년에 한국이 제시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6번째 중앙직할시로 승격되었다. 2021년에는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 MOU를 체결하여 디지털 박물관과 복합문화공간 구성, 스마트 관광안내소 설치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라) 한-신남방 스포츠 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의 비전을 계승하여 신남방지역 국가의 선수를 육성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신남방 썰매종목(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신남방지역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자격 획득이 어려워지자 우리 정부는 '2021 코리아컵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 대회'를 개최하여 지원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신남방지역 선수들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선발단계부터 올림픽 참가까지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홍보를 진행했다.

5) 다문화 포용성 강화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문화 포용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가) 대국민 인식 개선

우리 정부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체류 외국인 등에게 생활정보와 지원제도를 13개 국어로 매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 웹툰 공모전, EBS 지식채널e 영상콘텐츠,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및 SNS 송출 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교육(다누리 배움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모범이민자를 발굴하고 미담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및 고충처리 지원

신남방지역 국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국내 취업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귀국 예정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어 자격취득, 취·창업 훈련을 제공하고, 귀국 후에는 현지의 구인·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본국에서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다) 국외 다문화가족 보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여 살다가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자녀가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국외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베트남 북부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귀환한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공교육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에 대한 기초 학습 및 학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의료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귀환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3. '상생번영'분야 정책 및 주요 성과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 '상생번영(prosperity)'비전 하에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지원, 4차산업혁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신남방지역을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 바라보는 국익 중심의 중상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신남방정책은 기존의 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신남방 취약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까지 고려하는 등 정책의 관심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신남방국가 공무원 역량 개발, 기술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신남방지역과의 과학기술 교류는 상호간 기술역량 강화와 경제 성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협력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가. 호혜적 무역·투자 기반 구축

1)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2020년 11월 RCEP 협정에 15개국(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정식으로 서명했으며, 한국은 2022년 2월 1일 RCEP을 공식 발효했다. 한-아세안 FTA에 비해서 상품 부문은 품목별로 1.7~14.7%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었고,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수준이 확대되었다. 투자 부문에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포함하여 회원국 간에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규범 분야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RCEP은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를 체결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한국 총교역의 약 50%가 RCEP 회원국과 이루어지고 있다. RCEP 체결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RCEP 회원국과 교역 다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2020년 12월 최종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RCEP에 비해서 한국은 1.6%p, 인도네시아는 3.3%p 상품부문 관세를 추가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RCEP과 비교해서 추가 관세철폐 혹은 철폐기간을 단축하는 품목이 있다. 또한, 경제협력위원회 수립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하고자 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양자 FTA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계기로 철강산업 원료인 철광석, 석탄, 니켈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자동차, 철강산업 간에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시작된 한-캄보디아 FTA는 2021년 10월 화상으로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 더해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상품 전체 품목 중 한국은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캄보디아 FTA 경제협력 협정문에는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분야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 없는 통관 협정문을 신설하여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에 대해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에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이외 지역인 캄보디아에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한-필리핀 FTA는 5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1년 10월 화상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되었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단기 관세 철폐로 한국은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한-필리핀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7.3%p의 관세를 추가 철폐하여 96.5%의 품목이 관세 철폐되었다.

한편, 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작성함으로써 기업들이 한-필리핀 FTA를 활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 없는 경쟁 챕터를 신설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방어권을 보장을 명문화했다. 한-필리핀 FTA는 협정문에 최초로 백신 원·부자재 공급 및 공동개발을 위한 R&D 협력과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공동 대응을 도입한 FTA이다.

마)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협상 추진

한-인도 CEPA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 경제협력 고도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한-인도 CEPA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양국은 2016년 6월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의 개시를 선언했다. 2018년 7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관심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가공식품 등에 대한 양허 개선, 원산지 기준 일부 완화 등 조기성과 패키지에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2022년 1월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 시장개방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FTA를 목표로 개선협상을 추진함으로써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인도 CEPA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18.7.)〉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한-인도 CEPA 제7차 개선협상('18.12.)〉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2021년 12월 15일 타결되었다. 한-싱가포르 D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0년 6월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체결하였으며, DEP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DEPA 가입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향후 추진될 디지털 통상 협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남방국가들과의 디지털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가) 아세안 진출 기업의 손쉬운 현지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심사협력제도 운영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동일하게 상대국에 신청하여 해당 특허청에서 우선 심사하는 제도이다. 신남방국가 중에는 2013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MOU를 체결했다.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 가능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의 신청으로 외국 특허청에서 심사 없이 등록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캄보디아, 2020년 라오스, 브루나이와 MOU를 체결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특허 획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 한국 농식품 신남방 국가 수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지 대형유통매장과 온라인 구매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식품 생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식품 상설 판매관을 현지 대형 유통업체에 구축하고,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남방지역 주요 물류거점 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여 한국 농식품 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지역 농림축산식품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일본을 제치고 2020년 국가(권역)별 1위로 부상하였다. 2021년 신남방권역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18억 7천만 달러로 일본, 중국, 미국 중심의 농식품 수출의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 할랄 산업 수출 확대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류-할랄에 기반한 소비재 산업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한류 콘텐츠 활용을 통한 현지진출 확대,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에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인증센터로 지정하고, 동 센터 내 국내 최초로 할랄연구실을 구축하며, 국내 기업의 할랄 인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의 할랄인증 및 수입관리제도, 할랄식품 시장동향에 관한 내용을 전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수출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할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으로의 할랄제품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특정 국가 및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농식품 수출 다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

한국 정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항공협정 체결 논의에 합의했으며, 매년 양자 간 교통장관회의, 항공실무회의 등을 통해 한-아세안 항공협정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19년에는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양자 항공자유화 합의에 도달해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 자유로운 직항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아세안 항공협정에 따라 항공사는 해당 정부의 운항횟수 제한, 운수권 배분 등의 규제 없이 자유로운 항공편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항공스케줄을 통한 방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한-아세안 양 권역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한국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진출기업의 자금조달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국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및 아세안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했다.

금융협력은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해 아세안의 협력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한국 금융기관 및 기업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구조 전환 대응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바) 인도 관세관 신규 파견

우리 정부는 2019년 5월 인도에 관세관을 신규 파견하여 한-인도 교역 관련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신규 파견된 인도 관세관은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시 통관 과정에서 한-인도 CEPA 특혜세율이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도 관세관의 활동에 힘입어 우리 정부는 인도 관세당국의 원산지 규정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중소기업 진출 및 교류 지원

1) 국내기업 진출 지원

가)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 사업

한국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이 활발해지자 임금체불 등의 노사분규가 종

종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는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지 공관의 고용노동관을 중심으로 현지 코트라, 코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을 구축해 노사갈등, 신규 노동법·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나) 해외 화장품 진출 지원 사업

화장품은 각국의 안전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기준도 다른 경우가 있다. 수출 시 발생하는 이러한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외 소비자가 직접 한국 화장품 체험할 수 있게 팝업부스 및 홍보·판매장 운영, 박람회 참가, 인·허가 획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 화장품 진출 사업을 통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한국 화장품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다) 유망 분야별 시장진출 지원 사업

한국 정부는 한류에 대한 신남방지역의 관심을 한국 상품 소비로 연계하기 위해 유망 분야별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 태국 정상순방을 계기로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를 한-태국 홈쇼핑 이원 생방송을 통해 최초로 출시했다. 또한 신남방지역 수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관을 개설했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K-POP 공연과 연계한 브랜드K 판촉전을 개최하고 온라인 한국관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온라인 한국관 입점 확대,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산업단지 조성

가) 한-베트남 경제협력(흥옌성) 산업단지 조성 사업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설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인·허가 및 산업단지 입주관련 행정처리, 자금조달, 컨설팅 등을 제공할 한국형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 정부와 한국주택공사는 2017년 베트남 내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7월에 현지에서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본 사업은 2019년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한-베트남 양국 정상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양국이 큰 기대를 거는 사업

으로 자력 진출이 어려운 한국 중소기업에게 안정적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입지도
*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한-인도 CEPA 제7차 개선협상('18.12.)〉



조감도
*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조성 사업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 중이다. 산업단지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시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야웅니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 수급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양곤-네피도-만달레이 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이 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신남방정책의 모토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성공적인 분양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다. 상생형 농촌 개발

1) 농촌 개발 지원

가)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낙후마을 개발사업

2017년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영농기술 전수사업'을 시작해 지역단위 농업기술교육센터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업지도사와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 전달 차원의 하향식 교육이 아닌 실제 시범을 통한 참여형 교육으로 교육생들의 높은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라오스의 국가 농업 연구·지도기관인 원예연구소

시설 개선 및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2022년까지 한국의 채소 재배 전문가 파견 및 현지 기술 인력의 국내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의 선진 채소 생산 기술을 현지에 전수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는'우수농산물 저장유통센터 지원사업(2016년~2022년)'을 시행하고 있다.

상기 농식품부의 신남방지역 개도국에서의 농촌개발 사업들은 농업 인프라 및 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보관·유통 시스템 구축을 연계해 실질적인 농업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 한국형 스마트팜 설계 및 활용 기술 전수 사업

농식품부는 신남방국가들과의 스마트팜 협력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관련 ODA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체결한 스마트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간 스마트팜 협력이 시작되었다. 한국형 스마트팜 ODA 사업은 2020년 필리핀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1년 주변 신남방국가로 확대되었다. 기존 원예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축산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협력은 신남방국가의 농업 생산성 강화와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해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한국 스마트팜 관련 기업 및 인력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상생형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한국은 새마을운동 방식의 수원국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구축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 등에서 주민참여 마을 정비, 축산 기술전수, 보건교육 등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라오스형 농촌개발 협력 사업을 들 수 있다. 2014년부터 추진된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통해 새마을 연수원 건립, 새마을운동 및 운영 전문가 파견, 농업기술 이전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농촌개발 협력 사업은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 형태의 사업으로도 확대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로 기존 농촌 인프라 개선을 넘어 농가 소득 창출, 보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라오스 정부는 관개시설 및 농업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농림부 조직 내에 관개기술교육센터(ITTC)를 설립하고 공무원 및 관개분야 기술자 교육을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라오스의 농업분

야 관개기술자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라오스 관개기술교육센터 조성사업을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 관개기술교육센터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관계자들에게 최신 관개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마) 맞춤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업진흥청은 KOPIA사업의 일환으로 신남방지역에 우량종자의 선발·생산·보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의 땅콩 주산지인 응애안성에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이 56% 향상되었으며, 미얀마에서는 '한국과 미얀마가 함께 만들어낸 진주처럼 귀한 벼'라는 의미의 '코미펄(KoMyPearl)' 벼 품종을 등록하고 농가에 보급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최초로 병에 강한 신품종 옥수수 종자(CHM01)를 개발하여 사료용 옥수수 종자 수입 비용을 1,600만 달러 절감하였다.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개발 보급은 한국 종자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신남방지역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바) 아시아 지역 농업이슈 공동 해결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농업 성장 촉진과 농식품 기술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를 운용 중이다. AFACI는 농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 협력체로 회원국 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추진된 '아시아 채소 품종 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에서 우수 내병성 토마토와 고추를 국가별로 3계통 이상 선발하였다. 또한 재배 매뉴얼, 재배 교육자료 등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아울러,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아시아에서 통일된 토양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농촌 부가가치 고도화 지원

가) 산림복원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모델 구축

산림청은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모델 구축을 목표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산림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숲 복원, 주민생계 개선 등의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협조 하에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술 및 선진 수산업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산

림청은 2021년부터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을 자연휴양림 관리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나) 한-아세안 정원 사업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산림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간 우호증진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한-아세안 정원'설립을 계획하였다. 산림청은 한-아세안 정원 조성을 위해 아세안 측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산림 식물 등에 대한 연구와 AFoCO 회원국 대상으로 '한-아세안 정원' 조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소득을 증대하는 산림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 도시 인프라 개발

1) 인프라 개발 지원

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협력

한국 정부는 2019년 아세안의 19개 우선추진사업 발표 후 연계성 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1년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항나딤 공항사업을 수주했다. 한국 정부는 19개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추가 협력을 위한 현지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21년)를 진행했다. 아세안 역내 공관이 주도하고 공기업·민간기업이 참여하는 Team Korea를 구성하고 인프라 펀드, 공적수출신용기관, ODA 등을 통한 금융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운영 중이다.

나) 해외 인프라 투자·수주 지원체계 구축

한국은 해외 인프라 투자·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주 지원 기관 설립, 펀드 조성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투자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 해외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KIND 설립과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의 신남방지역 인프라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특히 KIND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남방지역에 설치한 해외인프라협력센터는 사업 진출 초기 현지화 역량이 부족한 기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 도시화 지원

가)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K-City Network)

한국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교류·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동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도시개발, 안전, 교통, 물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의 글로벌 협력사업인 'K-City Network'을 제안하였다. 'K-City Network'는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2021년 공모에는 신남방 10개국에서 35건의 사업을 신청하였다.

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협력 추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심각한 도시 문제와 지반 침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세종시 건설 관련 경험, 기술, 노하우 전수를 적극 요청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수도이전 및 개발에서의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하였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기술공유, 전문가 파견, 역량개발사업 등 신도시 개발에 요구되는 기획 및 기술역량 개발 부문에 집중되었다.

2022년 1월 인도네시아는 기존 수도인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약 1,200km 떨어진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26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체결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다) 인도네시아 남부땅그랑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환경부는 인도네시아 남부땅그랑 지역의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환경 보전 및 탈탄소화 정책을 지원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도입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발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한국 민간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자 의견 교류를 하고 있다.

3) 수자원 개발 지원

가) 인도네시아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대규모 취수원인 까리안(Karian) 댐 건설, 경제협력증진자금(EDPF)를 통해 도수관로 건설, 정수장 및 송수관 민관협력사업(PPP)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동 사업은 3개의 사업이 상-하류로 연계되어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2021년~2025년)'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발리섬 덴파사르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개발 및 시스템 협력 사례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 항만개발협력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항만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의 항만 인프라 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한국의 항만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해당국의 항만 인프라를 개발하고 한국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향후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아이템을 다각화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 등 다양한 협력 경로를 활용하고 항만 관계자 초청·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

세부항은 필리핀 전체 화물의 약 11%를 처리하는 필리핀 남부 무역·통상의 중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얕고 부지가 협소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한·중·일의 항만개발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세부 신항만 개발사업의 재원 도입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다.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을 통해 기존 세부항의 국제 컨테이너 물동량이 신항만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을 통해 선박 대기비용 및 재항비용 절감, 해상운송 비용 절감 등 직접 편익은 물론 해당 지역의 고용·소득 증가 및 생산 유발 효과 등 간접 편익도 예상된다.

라) 한-인도네시아 해양 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한국기업들은 해양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체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환경오염 및 사고 유발 리스크로 인해서 플랜트 해체 관련 수요가 높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해양플랜트 해체 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양국은 2021년'해양플랜트 서비스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2025년까지 노후 해양플랜트 3기의 해체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협력사업은 한국 기업의 해양플랜트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우

수한 실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

라오스는 홍수에 따른 범람과 제방 침식으로 인해 인명 피해, 재산 및 토지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비엔티안시의 메콩강변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후속 2차 사업은 홍수위험에 노출된 기존 사업의 하류지역을 보강하여 선·후행 사업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라오스 내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와 양국 간 우호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5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통해 라오스 주요 지역의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라오스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할 계획이다.

마. 미래산업 협력

1)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가) 적정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도국 과학기술지원(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물과 위생 적정기술센터'를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2018년 3월 하노이 국립토목대학교에 설치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처리와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국책연구소인 기술평가응용원(BPPT)에 '한-인도네시아 녹색기술 협력거점센터(GTPI)'를 개소했다. 신남방국가들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포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적 지원이다.

나) 과학기술 기반 산업발전 모델 공유

2012년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가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2022년 상반기중에 완료 예정인 VKIST 설립 지원사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ODA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VKIST를 기반으로 양국 간 공동연구, 연구자 교류,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VKIST가 베트남의 산업화를 선도하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과학기술 교류와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발전함으로써 양국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

2) 4차산업혁명 협력

가) 스타트업 교류·협력 생태계 활성화

① 아세안

한국 정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한-신남방 공동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동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하여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와 공동으로 '1회 중소벤처기업부-ACCMSME 정책대화'를 통해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협력사업인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수립은 스타트업 생태계 정책과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체계적인 스타트업 협력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추진사업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하고, 스타트업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인도

스타트업 교류 및 협력 강화의 성과로 인도와 싱가포르에 K-스타트업 센터를 개소하고 민간 VC간 공동펀드 조성을 촉진한 것을 들 수 있다. 인도에는 2019년 9월 뉴델리 인근 신도시인 구르가온 상업지역, 싱가포르에는 2020년 7월 국제금융허브지구 마리나원 웨스트타워에 K-스타트업 센터를 개소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인도 K-스타트업 센터에는 9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하였으며, 동 센터가 향후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한-신남방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① 아세안

한국 정부는 고도경제 성장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남방국가에 제조업 육성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2019년 기간 중 인도와 아세안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기술교류센터를 설치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술교류센터를 기반으로 현지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했다.

기술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 국가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술교류를 통해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과 같은 상생협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인도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신남방국가 간 중소기업 기술교류와 협력사업의 기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개소를 계기로 인도와의 중소기업 기술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핀테크·전자상거래 등 기술교류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간 협력사업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③ 한국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신남방 진출 지원

한국 정부는 ICT와 보건의료 융합 서비스 모델의 신남방지역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국내 의료업계 및 ICT 업계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대학교병원이 국내 중소 ICT기업들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아왈브로스병원을 대상으로 ICBM 기반 원격협진시스템 구축했다. ICT 기반 보건의료시스템의 신남방지역 진출은 한국 의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신남방지역의 보건의료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④ 신남방지역 ICT 역량 강화와 기업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신남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지 IT 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ICT 교류 협력을 확대해 왔다. 베트남의 주요 도시인 하노이, 호치민에 IT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신남방지역 내 수출국 다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ICT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에 설치된 IT지원센터는 현지 IT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한국어를 교육하는 KITS(Korea IT 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KITS는 ICT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맞춤형 인력수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ICT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IT/SW 분야 공통교육,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취업 중개 등의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⑤ 한-인도 4차산업혁명 대응 협력 강화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비전전략 그룹 설립' MOU를 체결하고 한-인도 4차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의 계기를 마련했다. 해당 MOU를 통해 미래첨단산업 유망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기업 간 기술교류를 통해 발굴한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인도 양국 기업 간 기술교류를 통해 발굴한 협력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로, 양국 기업이 공동 제출한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비 지원이 결정되었다. 한-인도 양국은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협력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공동 연구개발 과제, 기술교류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평화'분야 정책 및 주요 성과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평화공동체'를 통해 아세안·인도와의 국방·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역내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해 왔다. 기존 한국의 평화 협력이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평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신남방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세안 차원에서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등의 다자포럼에 활발히 참여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정례화를 통해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였다. 양자 차원에서는 신남방국가들과의 국방협력 MOU 체결 및 방산협력 확대를 통해 맞춤형 국방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연합훈련 확대 및 퇴역함정 양도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재해·재난, 해양오염, 초국가적 범죄 등 역내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신남방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안보 협력 강화

1)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주도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 이전에도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 다자협의체에 대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역내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 4년간 EAS, ARF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반도, 남중국해 등 주요 역내 현안뿐만 아니라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해양 안전, ICT 안보 등 새롭게 등장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논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지난 4년간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별도 성명 가운데 2018년 '핵과 방사능 물질의 안보 및 안전에 관한 성명', 2019년 '초국가범죄 협력 성명', 2020년 '여성·평화·안보 성명'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EAS가 단합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ARF 내의 건설적 논의와 실질적인 신뢰구축조치 발전을 위한 기여를 지속해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2019년 신뢰구축·예방외교 회기간회의(Inter-Sessional Support Group Meeting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Preventive Diplomacy)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2018년~2021년 간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ISM : Inter-Sessional Meeting) 공동의장국으로서 활동하며, 2018년 4월 서울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1년~2024년 간 ICT 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중이다.

〈한-아세안 장관급 교류〉



'20. 제15차 EAS 정상회의



'18. 제25차 ARF 외교장관회의

* 자료 : 외교부 제공

2) 한-아세안, 한-인도 국방 고위급 교류 활성화

우리 정부는 2017년 서울안보대화(SDD) 계기에 첫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방차관회의를 정례화해 한반도 비핵화,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정세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서울안보대화의 부대행사를 넘어, 국방 분야에서 아세안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중요한 소다자 협의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2021년 9월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2021년 11월에는 당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제2국방장관의 초청에 따라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우리 국방부가 추진 예정인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이하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공유하였다. 아세안 각국 국방장관들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처음 실시된 한-아세안 국방장관·차관 회의는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또는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졌던 협력들을 다자간 협력과제들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국방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인도와의 고위급 인사 교류도 강화하였다. 2019년 9월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에 이어, 2021년 3월에는 서

욱 국방장관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싱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인도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비롯한 각 군 간 정례협의체, 정보교류협의체 등 개최를 통해 교류 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우주 분야,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PKO, 군수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확대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국방 고위급 교류 심화〉



제4차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21)

* 자료 : 국방부 제공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최초 개최('21)

* 자료 : 국방부 제공

3) 신남방국가와의 국방협력 협정·양해각서 체결 확대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국방협력 확대 과제 중 하나로, 아세안 전 국가와의 국방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였다. 2017년 신남방정책 발표 당시,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와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였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4개국은 미체결 상태였다. 국방부는 2018년 9월에 개최된 서울안보대화(SDD) 계기에 캄보디아·브루나이와 국방협력 MOU를 체결하고, 2021년 6월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에는 라오스와 국방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와도 국방협력 MOU 체결을 논의 중이며, 정부는 아세안국가들과의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2019년 9월 인도와 양국 해군 간 물류 지원을 확대하는 상호물류지원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싱가포르와 더불어 인도와 상호군수협정을 체결한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

4) 한-아세안 해양안보협력 강화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의 수출입 물량이 수시로 통과하는 아세안 인근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은 아세안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양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역내 다자간 상호 협력 및 작전능력의 향상과 우리군의 역량 배양을 도모하고 있다.

〈신남방지역 해상 주요 연합훈련('21년 기준)〉

훈련명	훈련주기	주최국(장소)	아세안 참가국	주요훈련내용
환태평양 훈련 (RIMPAC)	짝수년	미국 (하와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해상자유공방전 ○ 전구대잠전 ○ 해상 실사격 등
코브라골드훈련	짝수년 FTX 홀수년 CPX	미국, 태국 (태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연합참모단연습 ○ 야외기동훈련 ○ 인도적 민사활동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PAC-REACH)	3년	싱가포르·일본·한국·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잠수함 승조원 구조 ○ 잠수함 비상상황 대처 ○ 잠수함 안전운용 컨퍼런스 병행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	짝수년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기뢰 탐색 및 제거, 폭발물처리 등
KOMODO 훈련	짝수년	인도네시아	아세안 10개국	○ 수상 인명구조훈련 ○ 의료지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해양안보 FTX	3년	한국·싱가포르 (한·싱 근해)	아세안 10개국	○ 선박 검색 및 장악 ○ 해양차단훈련 ○ 해·육상 대테러 훈련

* 자료 : 국방부 제공

또한 우리 국방부는 아세안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 이전부터 아세안 국가에 퇴역함정을 양도해왔다. 2018년에는 베트남에, 2019년에는 필리핀에 초계함을 추가적으로 양도해 지금까지 아세안 국가들에게 총 27척의 퇴역함정을 양도하였다. 정부는 향후 주요국의 함정 도태 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상 국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도한 국산함정의 효율적 운영 지원, 방산 수출 여건 향상,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기반 해군국제군수정보지원체계(NILISS)를 구축해 2020년부터 운용 중이다.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을 포함한 총 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퇴역함정 양도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산수출 여건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5) 신남방지역과의 방산협력 확대

우리 정부는 신남방지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자, 신남방국가들과의 방산군수 공동위 개최, 방산전시회 등을 통한 고위급 면담과 군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구매국의 환경과 요구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개조·개발하는데 필요한 R&D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13] 아울러 무기 수요는 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신남방국가로의 수출을 모색하는 기업 지원을 위해, 구매 국가에 제공하는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협력 국가에 공동 연구개발·생산을 제안함으로써 해당국의 방산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제3국 공동 수출을 모색하는 등 상호 윈윈(win-win)하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방산협력 분야에서는 인도와의 협력이 특히 두드러졌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를 인도에 수출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2월 인도와 양국 간 '방산협력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방산협력 로드맵은 2018년 한·인도 정상회담 때 모디 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방산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상·해상·항공·연구개발시험·인증 등 양국의 주요 방산협력 발전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더 나아가 2021년 4월 서욱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 시 군사 하드웨어의 공동 제작·개발을 추진하고, 국방·안보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우주 및 사이버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한국형 전투기(KF-21/IF-X)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4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되어 현재 지상 시험이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체계개발, 이후 2028년까지 추가 무장시험을 완료할 예정이다.

6)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신남방국가의 지지 확보

우리 정부는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회원국을 대상으로,[1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세안회원국을 비롯한 신남방국가들은 정상회의 및 고위급 양·다자회의 등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 △ ARF·EAS·아세안+3·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EAS·아세안+3 정상회의 △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등 주요 다자 고위급 회의 결과문서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이 반영되었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2021년 10월)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명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국 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아세안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가 지역·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아세안 차원의 인식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3)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지원 : 22.43억('18) → 200억('19) → 400억('20) → 465.18억('21)

14)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2021년 3월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현재 말-북간 외교관계는 단절 상태이다('22.1. 기준).

나. 신남방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및 환경보전 협력 확대

1) 아세안의 산불 예방 및 산림복원 지원

산림청은 산불이 빈번한 신남방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의 산림재해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과 훼손된 이탄지 복원·보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산림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을 통해 AFoCO 회원국인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산불진화차량 각 5대를 공여했으며, 교육훈련센터(RETC)를 통한 산불관리 연수를 실시하였다. AFoCO는 메콩 4개국을 중심으로 산림 재해의 통합적 관리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한-아세안 기금(AKCF)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전 세계 4번째로 큰 이탄지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이탄지 복원 및 보전사업도 시행 중이다. 2016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탄지 복원, 산불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2019년부터 '잠비주 이탄지 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잠비주 이탄지 사업은 이탄지 화재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이탄지를 훼손하지 않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이탄지 훼손을 막고자 이탄지에서 가능한 농업, 어업, 임업 기술 모델 개발을 통해 이탄지 지역 주민 삶의 여건을 개선하려 했다. 2021년 4월에 잠비주에 이탄지 사무소가 개소되었으며, 론드랑 이탄지 보호림 인접마을 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보호림 내 화재로 황폐화된 지역의 재조림을 통한 산림복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2)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추진

우리 정부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 Peace Forest Initiative)를 통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 간 접경지역에 산림을 조성하거나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함으로써 접경 지역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19

년 9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공동으로 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PFI를 발족시켰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지로 PFI 제안이 '뉴델리 선언'과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산림청은 PFI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UNCCD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운영규정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하는 등 PFI 제도화에 힘써왔다. 2021년 3월에는 PFI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5백만 달러 규모의 PFI 사업계획과 2021년 1백만 달러 규모의 활동계획을 승인하였다. 향후 산림청은 2022년 세계산림총회에서 PFI의 10개년(2021-30년)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선진국, 국제기구, 민간부문 등 파트너십 확대를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신남방지역에서의 PFI 이행을 위해, UNCCD 사무국 및 AFoCO과 연계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젝트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3) 메콩 지역 물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자연재해 피해와 메콩 강을 둘러싼 초국가적 물 분쟁은 메콩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한국은 미국의 메콩우호국(FLM : Friends of the Lower Mekong)[15]의 일원으로서, 2017년 '메콩지역 수자원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유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메콩 지역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자원 관리를 지원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물 관리 기술과 미국항공우주국(NASA), 미국육군공병대(USACE)의 위성 기술을 접목시켜, 메콩 유역 수자원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수재해 모니터링 기술과 수자원(수리/수문) 분석 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현지 실무자들이 해당 기술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리/수문 모델을 현지 언어로 발간하고 있으며, 메콩 국가 물 분쟁 조정 및 수자원 데이터 취득과 처리에 대한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물 관련 재해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으로 '메콩유역 취약 도시지역의 통합수자원 관리 및 기후적응력 증진사업(2021~2024)'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수자원공사,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이 사업은 메콩 강 유역의 기후변화 위험 평가와 취약 지역에 적용 가능한 물관리 기법 및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 메콩우호국은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연합,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으로 구성됨.

4) 메콩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한국과 메콩 국가들은 2019년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설립을 발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생물다양성센터는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에 건설 예정이며, 2022년 착공을 시작해 2024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통해 생물자원 연구 인프라 구축, 생물다양성 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증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메콩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역량 확대, 생물자원 정보체계 구축, 국내 바이오기업과 연계한 생물산업 신소재 개발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부터 라오스·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생물자원 조사 협력 연구를 추진해왔다. 생물다양성센터 설립은 기존의 생물자원 조사 위주의 환경협력을 더욱 포괄적이고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해양쓰레기 처리·저감 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2017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양쓰레기 관련 협력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아세안 해양쓰레기 사업은 2019년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제안한 신남방 해양쓰레기 ODA사업이 2021년 KOICA 공동기획 대상사업에 선정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협력이 의제화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환경공단과 KOICA와 현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우선 지원 대상국에 선정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청항선 건조와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청항선 건조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520만 달러 규모가 투입된다. 이 외에도 2021년부터 3년간 250만 달러를 투입해 실무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청항선 실습과 쓰레기 모니터링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서도 2021년부터 3년간 250만 달러 규모의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 신남방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 증진

1)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

비무장지대에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메콩 국가들과의 지뢰 제거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보 구

축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19년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 국가들과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하였다. 메콩 미래 평화 공동체 프로그램은 지뢰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농촌 인프라를 구축해 농가소득을 증진하는 통합형 농촌개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베트남에서 지뢰·불발탄 탐지 및 제거, 피해지역 주민 대상 위험예방 교육, 피해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왔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 베트남 중부 꽝빈성과 빈딩성에 넓이의 지역에서 지뢰·불발탄이 제거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후속사업이 준비 중에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미래 평화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코이카는 향후 5년간 약 1억 불의 ODA 예산을 활용해 메콩 4개국에 대한 평화 공동체 조성 이행을 통해 수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체계화된 성과관리 모델을 수립해 신남방 ODA 표준 모델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2) 아세안 평화 주류화 사업

외교부는 역내 갈등 해소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한-아세안 협력 기금을 통해 아세안 평화·화해 주류화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아세안 평화·화해 조정기구(AIPR : 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16] 대표부의 제안으로 'AIPR 평화와 관용에 관한 지역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아세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컨퍼런스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역내 평화를 위한 도전과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2019년에는 필리핀 AIPR 대표부와 필리핀 평화프로세스 대통령 보좌관실의 제안으로 '아세안 평화·화해 주류화 연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외교·국방·평화 업무를 담당하는 아세안회원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중재 실무에 대한 법·제도, 갈등 중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갈등 중재와 화해가 사회 변화에 갖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AIPR 사무국,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협업 하에, AIPR 연수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상기 평화 주류화 사업들은 아세안 측의 제안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하며, 신남방정책의 평화 공동체 구축 및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청사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사업

한국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통해 2006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재난관리기법 및 관련 산업·기술교육을 전파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계기에'재난관리 역량강화 사업'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 약 470만 달러를 투입해 아세안 10개국의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출범시켰다. 동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세안 10개국의 320명에게 재난관리 교육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021년 두 차례에 나눠 총 15명의 ASEAN 회원국 재난관리공무원들에게 ① 재난관리 거버넌스(법, 제도, 대응매뉴얼), ② 재난관리 시스템 및 관련 기술(예경보시스템, 재난상황관리), ③ 자연재난관리(홍수, 급경사지·산사태, 지진·쓰나미 대응방안), ④ 대국민 재난경감 인식제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17] ASEAN-ROK 프로젝트는 아세안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아세안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역내 평화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구조역량 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난사고 방지 및 해양 치안을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해양치안기관인 인도네시아 코스트가드(BAKAMLA : Badan Keamanan Laut Republik Indonesia)을 설립해 수색구조 역량 증진을 모색해왔으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다. 2019년 3월 한국 해양경찰청은 BAKAMLA과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9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BAKAMLA의 사령관이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구조훈련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해양경찰청은 북술라웨이시로부터 해양치안교육훈련센터 부지를 제공받아 구조교육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는 KOICA를 통해 BAKAMLA와 경찰청 구조인력 등을 한국에 초청하는 연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상 안전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아세안 주변 국가들의 구조인력 현장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한국 해양경찰청 교수요원의 파견 및 상주 등을 통해 현 사업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5)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사업

아세안 지역은 국경을 초월한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해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 파괴 등의 초국가적 위협요소를 직면하고 있

16) 역내 평화, 갈등관리 및 분쟁 방지 관련 연구를 위해 2012년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공식 창설되었으며, 2017년 10월 자카르타에 사무국을 개설하였다.

1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21). 'ASEAN 재난관리역량강화과정' https://www.ndti.go.kr/

다. 우리 경찰청은 2005년부터 한국의 치안시스템 전수를 요청하는 외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경찰대학을 통해 과학수사, 범죄예방 등 분야별 교육 훈련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이 코이카와 함께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치안역량 강화 초청 연수에 참가한 아세안 10개국의 연수생은 총 939명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와 실시간 강의로 △ 112시스템 △ 사이버수사 △ CCTV수사 △ 현장 감식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2016년부터는 경찰대학 주도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 : 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18]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경찰청은 신남방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남방국가와 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연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실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6일간 아세안 경찰 중간관리자급 약 125명(대면 25명, 비대면 1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경제범죄, 불법수익 추적, 사이버범죄 위협탐지, 국제공조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 시스템, 정책 및 전략을 공유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하였고 참가국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찰청은 신남방국가의 경찰 교육 훈련을 위한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센터'를 아산 경찰 교육 타운에 건립할 예정이다.

6) 아세안 쌀 비축 지원을 통한 식량안보 제고

한국은 2011년 제 1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아세안+3 비상 쌀 비축 제도(APTERR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협정문에 합의하고, 아세안에 대한 다자 차원의 식량안보 협력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APTERR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극복 및 빈곤퇴치를 위해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APTERR 활용한 식량안보 대응방안을 담은 성명 발표를 계기로, 미얀마에 600톤의 쌀을 전달해 미얀마 10개 지역 60,272명의 현지 주민생계를 지원하였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업무협약을 맺어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4개국에 5만 톤의 쌀을 지원을 해왔다. 해당 사업은 2021년에 지원대상국을 확대하고, 신남방국가 중 라오스를 신규 수혜국으로 선정하여 1,320톤의 쌀을 지원했다. 해당 쌀 비축지원 협력 사업은 다자협력 및 ODA 사업으로 식량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상생 번영'이라는 신남방정책의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경찰교육기관의 창립 회원국은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몽골, 호주 등 12개국임.

5. 종합 평가 및 후속 정책 방향

가. 사람 분야

1) 평가

신남방정책은 '사람 공동체' 형성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면서 경제 중심의 일방적 협력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이해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신남방지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즉 우리나라는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을 공여하는 등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KSP 사업과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했다.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데, 교육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국어 교육사업뿐 아니라,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급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향후 한국 내 인력수요에도 대응하였다. 한편 인적자원 개발의 경우 신남방지역의 수요에 부응하여 TVET, 여성 역량 강화, 공무원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법제 및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TVET 프로그램은 현지 수요에 매우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교류의 경우 쌍방향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인에 보다 밀착된 문화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아세안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역사 등 교육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교류의 물꼬를 텄다. 또한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과 한-인도 우호공원 개장을 통해 인도와 문화교류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의 정례적인 개최와 더불어 '한-아세안 문화 분야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신남방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스포츠 교류의 첫발을 뗐다. 한편 정부는 다문화 포용성을 강조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자국으로 귀환하는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다문화 포용성을 강화했다.

2) 정책방향

먼저 포괄적인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간안보는 신남방지

역 국민의 삶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므로, 경제 중심의 일방적 교류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호혜적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인간안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비롯한 방역 물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등 다자 백신 공조에 활발히 참여하며 신남방지역의 백신 공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양자 간 백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신남방지역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 체계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 ODA 사업과 중첩되지 않는 분야이다. 또한 코로나 이외에 포괄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여, 인프라 지원 이외에 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인적 역량, 법·제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협력 차원에서는 '한국형'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국가에도 우수한 교육 분야가 있으므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전수해준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남방지역과의 호혜적 협력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 확대와 더불어 신남방지역 언어의 한국 내 교육 기반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신남방지역 전문가 양성 및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신남방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신남방지역 국가 출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도 신남방지역 국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문화교류 경우 문화적 친밀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대 국가나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신남방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업이 중요하다.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진행된 문화교류 사업 대부분은 여전히 아세안, 그 가운데서도 베트남 등 특정 국가에 크게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므로, 국가·지역별로 사업을 적절히 배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으며,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인도와의 문화교류 사업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남방지역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중문화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 번영 분야

1) 평가

신남방정책의 '상생번영' 비전하에 한국 정부는 신남방지역과의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남방국가들과 체결한 양자·다자 FTA는 무역장벽 완화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와 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는 RCEP에 불참한 인도의 시장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은 한국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및 투자에 도움을 주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의 대신남방지역 수출은 2021년 역대 최대인 1,2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직접투자는 2017년 58억 달러에서 2020년 105억 달러로 급증했다.

신남방정책은 한국 기업의 신남방지역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노동자들과의 상생번영 공동체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 사업의 경우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문화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신남방지역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신남방지역 농촌개발 사업은 농업 인프라 구축과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농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와 농업 부문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남방국가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화 문제 해결과 도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 신남방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동지역과 매년 1, 2위를 번갈아 기록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지역과 미래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고 있다.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은 베트남의 현대화를 선도하는 산업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신남방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ICT 협력은 신남방국가들과 신성장동력을 함께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정책방향

한국의 대신남방지역 수출은 2021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신남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수치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관세 인상과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신남방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

대 협정 당사국과 무역 확대를 통해 상호간 고용 및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신남방국가 중 베트남에 무역이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베트남 이외의 신남방국가와 적극적으로 무역 및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남방국가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국가 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해당국가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국가에 무역 및 투자가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신남방정책이 신남방지역과 호혜적으로 무역과 투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신남방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이 한국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진출을 원하는 신남방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농어촌 개발 협력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ODA사업을 신남방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2년 OECD DAC 동료평가에서 한국은 개발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생에너지, 자원재순환 분야에 녹색투자 사업 기회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함께 국제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의 ODA 사업이 수원국과의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무역의존도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려했을 때, 신남방지역과의 신뢰관계 형성은 지속가능한 번영의 선순환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한다. 2021년 10월 발생한 요소수 사태에서 한국은 신남방국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신남방국가들의 즉각적인 협력은 한국과 신남방지역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었다.

한국은 대인도 ODA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1월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업'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한국과 인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으로 향후 대인도 ODA 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지역과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및 디지털 무역 규범 도입을 통해서 신남방지역과의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생번영'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은 아세안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자원 투입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이미 수립된 한-인도 미래전략그룹과 같은 주요한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도의 수요를 긴밀하게 관찰하고 사업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또한 한-인도 경제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를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과 인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인도의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인도와의 경제관계를 확대·심화시키고 인도의 신뢰를 쌓는 포괄적인 경제협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인도와의 미래산업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이미 마련된 한-인도 미래전략그룹, 스타트업 펀드, 기술교류센터, 한-인도 스타트업 센터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육성, 공동 기술개발, 양국 간 스타트업 투자 및 협력, 디지털 제도 및 기술표준 정립 등의 협력 제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다. 평화 분야

1) 평가

신남방정책의 '평화'부분은 크게 외교 다변화를 통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역내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신남방정책은 기존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세안 대화상대국으로는 자국에서 아세안과 특별정상회의를 세 번이나 개최한 첫 국가가 되었다. 한-메콩 협의체의 정상급 격상과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은 메콩 지역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개최 및 '한-BIMP-EAGA 협력기금'설립을 통해 해양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 토대도 마련하였다. 특히 정부는 아세안 측의 현지 수요를 반영한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0년 채택된 '평화·번영·협력을 위한 공동 비전 이행 계획(2021-2025)'에는 전 분야에 걸쳐 한-아세안 관계를 고도화시킬 다양한 이행계획들이 포함되었다. 인도와는 국방 분야의 교류 확대가 두드러졌다. 2019년 9월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의 방한에 이어 2021년 3월 서욱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양국 간 국방교

류 확대를 논의하였다. 2020년 체결된 '방산협력 로드맵'은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역내 평화 제고 차원에서는 한-아세안 협력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MOU 체결 확대,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정례화 및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수립은 양측 간 국방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산림 보존, 메콩 강 유역의 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오염, 재해·재난 대응, 초국가범죄 등 아세안 지역의 협력수요가 높은 비전통안보 협력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특히 지뢰제거 사업을 중심으로 한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사업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었던 평화협력 사업들은 한-아세안 간 전략적 신뢰 구축 및 협력 확대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아세안에게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에만 치중했던 과거의 접근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부여하거나,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에 걸맞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아세안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집중 또한 미중 전략 경쟁 및 역내 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대응은 한국이 갖는 전략적 무게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한계를 보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2) 정책방향

한-아세안 전략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인간안보·연성이슈에 치중한 비전통안보 협력을 벗어나 신남방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동남아지역의 다양한 국지적 분쟁과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범지역적 평화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역내 안보 논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나친 집중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안보 협력 확대의 가장 큰 약점은 상호 간 핵심 이익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에게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세안에게는 남중국해 지역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한반도와 남중국해 문제 모두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국과 아세안에게 각 이슈가 갖는 우선순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 차원에서 역내 안보 이슈에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인도에 대한 협력 방향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를 한국 외교 정책의 5강 파트너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국제질서를 단극이나 양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로 보고 있으며, 자국을 세계질서를 이끄는 축들 중 하나이자 지역 주도권을 가지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은 일찍이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방·안보, 교역·투자, 개발협력 등을 통해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모색해왔다. 당장은 아세안과 비교해 우리 외교정책에서 인도와의 협력 유인이 낮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적어도 국제사회 주요국들이 인도와 맺고 있는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가 닿는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전략적 유대감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교류 및 2+2 전략대화 등의 외교 채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또한 1.5~2 트랙 차원에서의 전략 대화를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한-인도 전략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신남방정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 고유의 지역 비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인도태평양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국가들과 동인도국가들을 아우르는 지역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일본, 호주, EU의 인태 전략들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은 물론이고 아세안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을 이끌겠다고 천명하였다.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학 속에서 한국도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 질서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3P의 추상적 비전을 넘어 보다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전략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비전은 AOIP가 표방하는 포용성, 개방성, 아세안 중심성에 의거한 다자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의 정리 및 담론화 사업

제1절 | 6대 국정운영 성과 정리 **632**

1.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극복을 견인한 K 방역 632
2. 빠르고 강한 회복, 완전한 경제회복 639
3.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645
4. 국민 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 포용적 복지 전면화 652
5.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다 :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658
6.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 도약 664

제2절 | 국정성과 담론화 사업 **671**

1. 국민과 함께 극복한 3대 위기 672
2. 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 682
3.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입법 698
4. 세계가 주목하는 문재인 정부 국제지표 714

제1절

6대 국정운영 성과 정리

어떤 정부든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정 성과는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국민적 자부심으로 축적돼야 한다. 성과에 대해 오만하거나 공치사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정부와 국민이 이뤄낸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밝을 수 없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국정 성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맞선 'K-방역'과 경제 회복,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포용적 복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선도국가로의 도약 등 6대 성과와 함께 50대 세부 성과로 종합 정리한 것이다.

1.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극복을 견인한 K-방역

>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 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
> (신년사,'21.1.11.)

가. 배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정부는 2020년 1월 3일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에 대책반을 가동하였다. 또한 1월 13일 질병관

리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분석 검사법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일주일 후에 보건복지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1월 30일부터 중국 우한시에 전세기를 4편 투입하여 우리 국민 700명을 국내로 수송하는 등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신속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시행하였고, 코로나19 진단시약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첫 조치로서 신속진단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구 신천지 사태에 따른 1차 대유행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2월 20일 최초 사망자(청도 대남병원 관련)가 발생하였고, 2월 26일 국내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으로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909명으로 정점을 찍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구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력이 약화되었다. 확진 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 국민안심병원 운영 및 전화 처방 허용,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및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1차 추경을 통하여 신속하게 음압병실 확충과 같은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1조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전국 의료진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확진자 격리 및 입원 조치와 관련된 지역 간 연대가 없었다면 정부의 혁신적인 대응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었을 것이다. 전국민과 전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빛을 발하였다.

나. 코로나19 위기 대응 내용(K-방역)

1) 해외유입 차단과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을 통한 선제적 방역 조치

공항과 항만 검역 단계에서 총 31만 명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5,691명의 확진자를 발견(2020년 1월 3일~2021년 8월 20일)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특별입국절차 도입,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강화 등 입국자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021년 2월 24일~) 하고,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 발(發)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를 강화하였으며, 매월 변이유행국가를 선정하여 입국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들의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전에 진단검사법을 조기에 개발(2020년 1월 9일)하고, 검사 속도 및 검사 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일일 검사 역량은 2020년 2월 약 2만 건 대비 2021년 8월 현재 약 50만 건(개별검사 기준)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세계최초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drive thru))를 운영하여 독립공간인 차량 안에서 체온 측정 및 검체 채취 등이 가능하게 되어 감염 위험과 검사 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이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유전자 증폭방식의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 운영절차 및 방법은 2012년 12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되면서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K-방역의 대표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등을 통해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주기적 선제 검사를 도입하여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행 지역 중심으로 주민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였다.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하여 2020년 1월 80명에서 2021년 8월 현재 452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ICT 기반으로 설계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과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활용) 등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감염경로 분석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해 역학조사 분석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자가격리 앱, 자가진단 앱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입원 치료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경증 환자는 관리 가능한 시설에 격리하여 사망자 및 위중증환자 등 피해를 최소화(mitigation)하는 방향으로 의료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확진자의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2020년 3월~),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병상 등 병상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2020년 12월) 및 수도권 특별방역대책(2021년 7월)을 통해 일 평균 2천5백명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까지 병상을 확보하는 등 모든 확진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등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한편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 및 완치자, 청년층·여성·대응인력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 질병관리청 출범을 통한 방역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

2003년 사스(SARS)를 계기로 2004년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한 이후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위기를 겪으면서 2016년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하였으나 인사권 및 예산권이 제한되어 있어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바탕으로 그해 9월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청·차장을 포함하여 5국 3관 41과 규모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을 갖추어 출범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감시와 조사·분석, 위기대응 및 예방까지 감염병 대응을 전담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현재까지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3)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매일 정규 브리핑을 통해 환자 발생과 예방접종 등 유행 및 대응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대본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침과 통계, 연구 자료를 공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 자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 신뢰를 제고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하고,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최고 수위 대응을 위한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재난 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감염병 대응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 대책은 질병관리

본부장이 이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매일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의사 결정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대응 초기 때 중앙-지자체 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보건당국이 신뢰를 잃었던 점과 비교할 때, 지난해 8월 서울·경기지역에서의 2차 유행 시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수도권 긴급 대응반 구성,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 가동 등의 협력 체계 가동 사례는 메르스 경험과 교훈을 통해 우리 방역체계가 협력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층 성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체계적이고 신속한 예방접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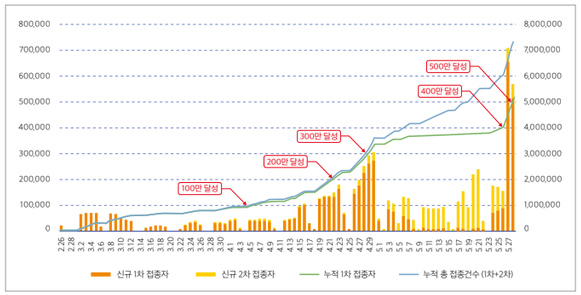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해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2021년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국내 백신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과 치명율이 높으며,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력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을 구성·운영(2021년 1월 8일)해 백신 수급과 유통, 접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갔다.

국내 첫 접종은 2021년 2월 26일 국내 위탁생산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이뤄졌으며, 2~4월에는 요양병원와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졌다. 이러한 우선 접종 대상자 결정으로 실제 2월 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발생비율이 9.7%였으나, 접종 시행 후 발생비율이 대폭 감소(5.6%(3월 27일~4월 4일) → 2%(3월 27일~4월 4일)) 해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부담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정책에 큰 도움이 되었다. 4.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었다. 특수 냉동과 해동, 희석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특성, 대규모 접종을 고려하여 접종센터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에 46개 접종센터를 구축해 접종하였다. 이후 접종센터를 확대해 6.2일 현재 193개를 운영해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었다.

60세 이상 노령층 접종이 본격 시행됨에 5.27일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예방접종이 시행되었다. 기존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민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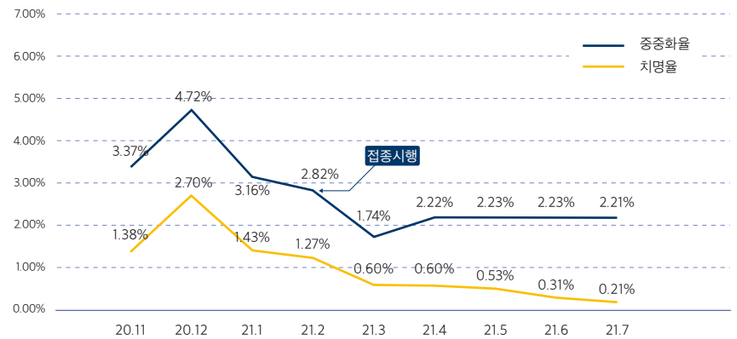
료기관 중 콜드체인 유지 및 환자들의 안전 관련 일정 요건을 갖춘 14,639개소(6.2일 기준)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였다.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는 일일 최대 71만여명을 접종(5.27일, 1차 접종 657,192명, 2차접종 54,002명) 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6월 15일 14시 30분을 기준으로 예방접종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 상반기 접종 목표를 보름이나 앞당겨 달성하였다. 그 결과 예방접종 시행 후 6달 만인 8월 현재 전국민의 50.4% 수준인 2,586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전국민의 22% 수준인 1,111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또한, 위중증 환자 비율 및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예방접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월 26일 개시 → 4월 22일 200만명 → 5월 28일 520만명 → 8월 22일 2,550만명〉



*2.26일 개시→ 4.22일 200만명→ 5.28일 520만명→ 8.22일 2,550만명

〈접종 시행 이후 위중증 환자 비율 및 치명률〉



한편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2020년 2,186억 원 및 2021년 3,607억 원을 지원하여 국내 백신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재 7개 백신 개발 기업이 임상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임상3상에 첫 진입(8월 10일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일부기업들도 임상3상에 순차적으

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2021년 5월 21일)의 성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여 향후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의미(K-방역)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하였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행은 확진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서 적기에 조치를 하기 위한 K-방역의 혁신 전략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효과가 배가되었고,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공-민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 및 방역복 교체 부담 경감에 매우 효과적인 조치로서, 이후 한국형 신속검사 모델로 인정받으며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하였다. 이것은 이후 워킹 스루(1인 부스 적용), 글러브 월(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검체 채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였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관련 데이터의 합리적 분석과 활용이 있었다. 즉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였다. 마스크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약국 판매를 실시하면서 판매량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탈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IT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관리역량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적용하여 통상 80일 소요된 사용 허가가 7일만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K-방역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우리 국민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성숙한 시민의식,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생업까지 포기한 희생정신, 나보다 더 어려운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기부 행렬,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목소리,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열정,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K-방역의 주체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간 3차에 걸친 대유행과 백신 접종 시행 등을 겪으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2. 빠르고 강한 회복, 완전한 경제회복

>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중대본' 처럼 '경제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오늘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 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입니다.…"
>
> (코로나19 관련 제1차 비상경제회의, '20.3.19.)

가. 배경

2020년 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세계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인 대변혁에 직면하였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그간 추진해오던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가 기대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은 예기치 못한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신규확진자 급증과 함께 경제도 대면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감염우려 및 방역강화로 인해 소비주체의 외부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음식, 숙박, 도소매, 교육 등 사람의 이동과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부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이러한 대면서비스 부문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경제구조 하에서, 저소득층의 소득과 고용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제조업 부문도 코로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부품조달 차질 및 교역상대국의 소비여건 악화로 제조업 수출도 크게 감소하였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의 내부요인에 따른 내부충격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충격 형태로 다가왔다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는 외부충격과 내부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였고, 그 충격과 파급효과는 과거의 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 이에 IMF는 2020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그 해 1월에 전망했던 +3.3에서 △3.0%로 6.3%p 하향조정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코로나19 위기 대응(K-경제)

1) 피해부문 긴급 지원으로 1차 고비 해소(위기대응 1단계)

2020년 2월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전 부문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 피해의 정도와 규모는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문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20년 2월 5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동차부품, 관광 외식, 항공 해운, 지역경제, 수출기업 등 8개 부문에 걸친 업종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4조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였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는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신규 공급하고, LCC(저비용항공사) 대상 0.3조 원의 운영자금 융자, 매출채권 인수 0.2조 원 확대, 중소 관광업체 500억 원 무담보 우대금융 등을 추진하였다.

보다 포괄적인 지원은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다. 당장 추경편성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즉시 시행가능한 재정(2.8조 원) 세제(1.7조원) 금융(2.5조 원) 지원과 공공 금융기관(9조 원) 지원을 합해 총 16조 원 규모의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내수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5조 원)과 같은 포괄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졌다.

추경도 어느 해보다 빨리 추진되었다.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1.7조 원)을 통해 음압병실 확충과 같은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사업에 2.1조 원을 지원하고, 저임금 근로자 계속고용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소비쿠폰 지급, 아동수당 대상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9.6조 원의 자금이 공급되었다.

2)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본격적이고 과감한 정책 대응(위기대응 2단계)

부처 단위에서 추진되었던 코로나19 대응조치가 2020년 3월 19일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로 격상되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조치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나갔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소요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135조 원+@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영세 소상공인 긴급자금 전액보증,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과 같은 핵심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일자리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가동되면서 고용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조건으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계 및 소득 보완을 위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14.2조원, 4월 30일 통과)을 추진하였다. 2분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되면서 1분기에 위축되었던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시장소득 여건이 급격히 위축된 악조건 속에서도 소득분배가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민생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한 10.1조 원 규모(286만 명 지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4월 22일), 2020년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3조 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0.6조 원) 등 7.8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이 마련되었는데, 이 역시 비상경제회의를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산물이다.

3) 경제의 대전환과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는 더욱 담대하게 추진(위기대응 3단계)

위기가 닥쳐오면 당면한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위기기간에 이뤄지는 투자는 우리보다 앞선 주자들을 따라잡고, 우리를 쫓아오는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글로벌 경제 산업구조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제의 대전환과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는 국가경제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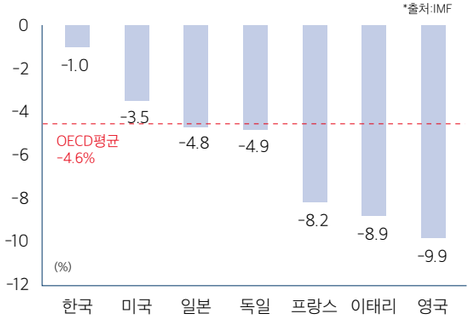
정부는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대전환 전략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투자를 통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한 이후 국민과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는 뉴딜펀드 조성, 뉴딜의 효과를 모든 지역에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균형뉴딜 등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4) 위기 충격을 최소화에서 위기 이전 수준 회복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 및 성공적인 방역 성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위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20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0.9%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피하지는 못하였으나,

역성장의 폭은 G20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또한, 2020년 3/4분기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성장을 이어가며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 경제규모 순위도 2019년 12위에서 2020년 10위로 2단계 상승하며 글로벌 Top10에 진입하였고, 1인당 GDP도 최초로 G7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하게 되었다.

〈주요국 2020년 성장률〉



* 자료 : IMF

〈2019 → 2020년 한국 경제규모 순위〉

*출처:IMF

'19년		'20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태리	※ 20년 기준

9위	브라질	5	9위 캐나다
10위	캐나다		10위 **한국**
11위	러시아		11위 러시아
12위	**한국**		12위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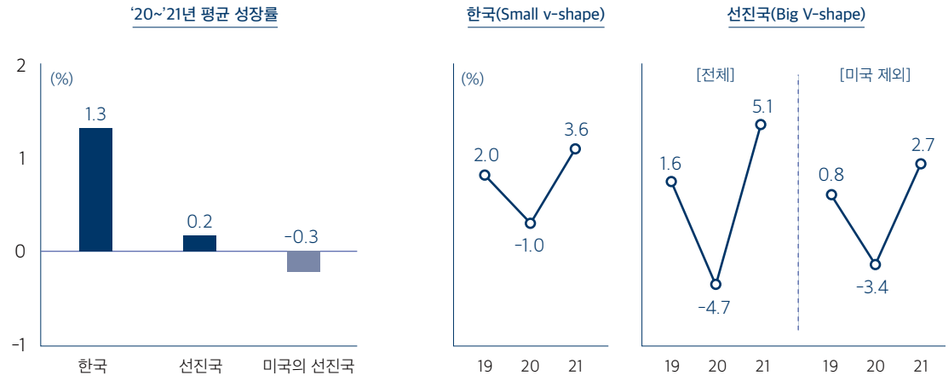
* 자료 : IMF

2021년 들어서는 회복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21년 1/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1.7% 성장하면서, 국제기구 및 글로벌 투자은행의 그간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 지난 2020년 4/4분기 이미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두 분기에 걸쳐 당초 예상 대비 성장경로가 상승하는(base-up) 효과가 나타났다.

성장 회복 흐름이 가팔라지면서, 우리 경제는 국제기구 및 시장의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인 2019년 4월/4분기 GDP 수준을 돌파하며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개선흐름을 반영하여,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들은 금년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3% 중후반대를 넘어, 최근에는 4% 이상까지도 전망 중이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충격’과 ‘회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2020~2021년 평균성장률은 우리가 선진국그룹을 큰 폭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경제는 연간 기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위기를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선도그룹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2021.4월 IMF 전망에 따르면, 금년 중 위기 이전 GDP를 회복하는 국가는 G20 중 8개국이며, 그 중 선진국은 미국·한국·호주 3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및 선진국 그룹 2020~2021년 성장률 추이(%) (IMF, `21.4월 전망)〉



다. 코로나 위기 대응의 의미(K-경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관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률과 고용감소를 경험하였지만, 전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적인 방역과 더불어 경제적 성과를 확보하였다. K-경제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역량과 성과는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방역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빛이 난다. 위기에 강한 경제적 기반과 역량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 선도국가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국민들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 소규모 제조업체,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받은 경제적인 고통은 과거 어느 때도 겪지 못한 것이었다. 국민들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고,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함께 한 것이 경제적 위기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나아가서 높아진 경제적 성과와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의 미래 지향적 정책과 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미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세계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방향의 설정과 추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더불어, 위기를 기회를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여도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코로나19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어떠한 위기 상황하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또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역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방위적 진단과 계획, 그리고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를 종식될지 몰라도, 언제든지 이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욱 강력한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
> ('20.7.1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가. 배경

2020년 9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공동선언문(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2분기 근로시간이 약 14% 감소하였고, 이는 4억 개 전일제 일자리 상실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온라인 교육, 디지털 돌봄 등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통신 등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ECD 회원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을 기치로 내걸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은 미래전략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

우리 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내수 감소와 주요 교역 상대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체인의 붕괴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하락하였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분기에 △1.3%, 2분기에는 △3.2%로 하락하였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이다.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라는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안전망 강화를 통해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을 지향한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2조 원, 그린 뉴딜에 73.4조 원, 안전망 강화

에 28.4조 원 등 총 160조 원을 투자하며, 이를 통해서 총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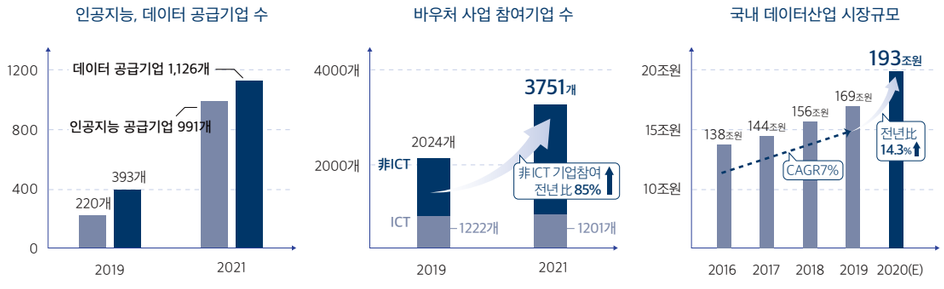
한국판 뉴딜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당-민간이 참여하는 강력한 범국가적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비롯하여, 당정 협의기구인 당정 추진본부, 법제도 개혁을 위한 정부-당-민간 합동의 법제도 개혁 TF, 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합동조직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설치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르고 강한 추동력을 확보하여, 한국판 뉴딜을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었다.

나.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내용

1) 디지털 뉴딜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 촉진

기존 SW·SI 기업들이 데이터 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인공지능 공급기업은 350%(220개 사 → 991개 사), 데이터 공급기업은 186%(393개 사 → 1,126개 사) 증가하였으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非 ICT 기업들의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활용사업 참여 또한 2019년 대비 85%(2,024건 → 3,751건) 증가하였다. 이에 힘입어, 2020년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1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3% 확대되는 등 대규모 데이터 구축과 유통·활용 지원을 통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였다.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스사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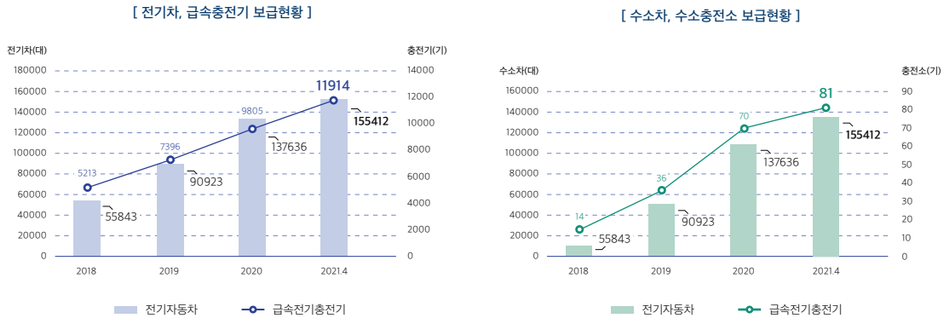


교육·의료·근무 등 우리 생활 속 밀접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 38만 교실에 고성능 Wi-Fi를 구축(~2022년 2월)하고, 2022년까지 전체 학교의 약 10%인 1,200개교에 태블릿PC를 최대 24만 대 보급하는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병원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이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1.0을 개발하여 국내 38개 의료기관 임상검증 과정에서 진단 정확도 개선(74→92%), 진단시간 단축(5년→15분)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위해 중소기업 12.7만 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약 58만 명이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4천 개 상점이 모바일 주문·결제, 키오스크,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상점으로 바뀌었으며, 7.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였다.

2)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에의 적극적,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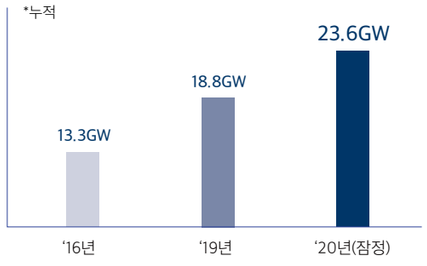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년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그린뉴딜에 포함하고 '1,105억 원을 추경 증액하였으며, '21년에는 전년 대비 23% 이상 증가한 1조 5,597억 원을 배정하였다. 정부의 무공해차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판매량, 국내 보급량에서 전 세계 1위를 달성(2020년 말 기준)하였고, 전기차는 2020년 수출 1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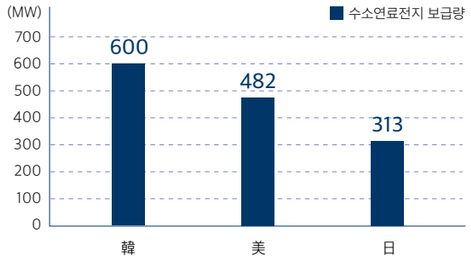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지표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된 2020년에 23.6GW(잠정)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소에너지 부문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량이 세계 보급량의 43%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발전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정부는 2025년 재생에너지 설비목표를 기존 29.9GW에서 42.9GW로 상향하고, 이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 12월)에 반영하여 법정 계획으로 확정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수소연료전지 주요국가 보급량〉



3) 안전망 강화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조성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2020년 12월)하여,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가입자가 5.7만 명을 넘어섰고(2021년 7월 22일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21년 7.1일부터 직종별로 고용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4)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의 미래 성장역량 강화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1년 2월 말까지 17개 시도에서 자체 뉴딜계획이 수립되었고 정부의 지원방안이 발표(2021년 1월)되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지역균형뉴딜 확산을 주도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지역 주력산업을 디지털 그린 중심으로 개편(2020년 11월)하고, '21년에 총 2,942억 원(국비 2,129억 원, 지방비 813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ICT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동시에,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지방 대도시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가 종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갖춘 도심융합특구 3개소(대구, 광주, 대전)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지역균형 뉴딜 뒷받침을 위해 4개 분야(디지털·스마트화, 신산업 기반마련, 지역기업 지원, 그린뉴딜 투자) 12개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며, 지역산업활력 펀드 조성(260억 원/2020년 11월), 지역공공기관 지자체 모태펀드 공동'지역뉴딜 벤처펀드' MOU 체결(부산 2020년 12월, 충청 2021년 3월) 등을 통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자생적 투자환경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다.

5) 탄소중립 :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전략

전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투자 중단 등 탈석탄 노력과 고탄소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준비 등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EU에 이어 우리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우리나라(2020년 12월)를 포함하여 총 25개국이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2021년 5월 기준)하였다. 아울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131개국이 탄소중립에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공동체에서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3월 민-관 합동의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을 출범시켜 수송, 산업, 에너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최초 선언하였고, 2020년 12월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의 구현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였다. 향후 30년에 걸친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나침반 역할을 할 목표와 전환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직속의 민-관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2021년 5월 29일 발족)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 수단이 포함된 복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

6) 한국판 뉴딜 2.0 수립·추진

2021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되었다. 이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추가하고 기존 정책과제를 보강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① 더 편리

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②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③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의미

해외언론, 각국 정상, 국제기구, 해외석학·전문가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 경제 강국인 한국의 명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평가하였고(2020년 7월 14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는 'APEC의 미래 청사진으로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무역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채택'하였다(2020년 1월 20일). OECD는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친환경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2021년 8월), IMF는 팬데믹 이후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진단하였다(2021년 3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국가들 중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하였으며(2020년 9월 17일), 앙헬 구리아 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어젠다를 모두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21년 2월 17일).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뒤이어 미국, EU 등 주요국가에서도 유사한 관련 국가정책을 발표·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옳은 선택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 3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발표하여 초고속 통신망 구축, AI 등 신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EU의 경우에도 2021년 3월 2030 디지털 컴퍼스 전략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술인력 양성,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비즈니스 전환 등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였다.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 2021년 5~6월의

P4G 정상회의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그린뉴딜은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자리잡게 되었다.

4. 국민 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 포용적 복지 전면화

>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전략회의 발언문 중, '18.9.)

가. 배경

지난 60여년 간 우리나라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60년대 초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2020년 말 현재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1.55조 달러에 달함으로써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3.2%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수준은 2019년 기준으로 12.2%로 증가했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그리고 고용보험(1995)이 시행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제도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2000년에는 전근대적 구빈제도였던 시혜성 생활보호제도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발전하였다. 이후에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고, 보편적인 무상보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장애연금과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되어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보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2018년 아동수당이 도입됨으로써 이제는 선진 복지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제도들을 구비하게 되어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져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 소득 불평등 지수인 팔마비율(소득 상위 10% 소득에서 하위 40%의 소득을 나눈 값)은 1.44(2015년-2016년)로 OECD 37개 국가 중 30위이며, 노인 빈곤율(43.4%, 2018년)과 노인자살률(10만 명당 58.6명, 2015년)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이하로 떨어져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상하였다. 포용적 복지 확대를 통해 실업, 질병, 은퇴 등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제공하고, 개인은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을 위해 도전하며, 혁신의 결과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포용적 복지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혁신적 포용국가 주요 내용

1) 아동수당 최초 도입

지난 4년간 정부는 미래 사회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를 지속 강화하여왔다. 그중에서도 주목할만한 성과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이다. 2018년인 도입 첫 해, 정부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소득 하위 90% 아동에 선별 지급되었다. 다음 해인 2019년,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최초 도입 당시 195만 명이었던 수혜아동 규모를 2019년 269만 명까지 약 1년만에 대폭 확대하였다.

2) 돌봄 수요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정부는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아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 확대에 주력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육아 병행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던 방과후 초등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가 함께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이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4)을 발표하며, 2017년 3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인원을 2022년까지 5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학교 초등돌봄 교실 및 마을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왔다. 그 결과, 매년 목표한 인원을 상회하며, 2020년 기준 당초 목표한 40.8만 명을 넘어서는 42.1만 명이 온종일 돌봄을 이용하는 등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믿고 맡길 수 있는 아동 돌봄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80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2,352개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확충하였다. 그 결과 공보육 이용률이 26%

→ 32%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4.8% → 29.8%까지 증가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3) 장애인 등급제 폐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 및 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지원체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3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과정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장애유형별 급여감소 방지 조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충(2018년 7,194억 → 2019년 11,060억 → 2020년 13,056억 → 2021년 15,217억)하는 한편, 급여산출방식 및 종합조사 평가 매뉴얼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민원 및 서비스 신청 증가로 인한 일선현장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종합조사 인력을 확충(2019년 43명, 2021년 29명)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중이다.

4)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국가차원의 전주기적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치매를 더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감당해야할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해 예산반영을 기다리지 않고, 2017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치하는 예산이 7월에 조기에 편성되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추경예산의 집행은 더욱 어려웠다.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신·증축하기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기간이 지체되거나 혹은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 전체 간부가 나서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2017년말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 설치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현재,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긴박한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국민의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전국 256개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치매전담형 요양기

관을 증설하는 등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진단비 및 중증치매환자 의료비의 본인부담비를 경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6만 8천여 명의 중증치매 환자가 총 466억 원의 치매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 받았으며, 약 25만 명의 장기요양 대상자가 7,148억 원의 본인부담을 경감 받는 효과를 보였다.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선택 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상·하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받았으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2018~2020년 간 9조 2천억 원 가까이 절감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올라갔으며, 당초 예측된 비급여 진료비를 4.6조 원 가량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전 국민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왔다. 노인(치매진단, 틀니, 임플란트 등), 아동(입원진료비, 충치치료 등), 여성(난임시술, 보조생식술 등),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확대 등)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경감하였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연간 본인부담액이 40~50만 원 가량 절감되었다. 아울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산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2020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와 금액이 매년 20~30% 증가하였다.

6) 취약계층 보호 강화

우리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 2018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73만 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넓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는 가족 해체, 사적 부양 감소 등 최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었다. 이에 2018년 생계급여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뿐 아니라,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되었던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함께 폐지하였다. 로드맵 계획에는 없었지만 2020년에는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를 추가 폐지하였다. 정부는 매년 부양의

무자 적용 제외 가구를 확대해나갔으며,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이후에는 수급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급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기초연금은 자녀 부양, 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노후 대비가 어려웠던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2014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43.8%, 2018년)은 여전히 OECD평균(14.8%) 대비 높은 수준으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 목표보다 시기를 앞당겨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조기 인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증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50% 인상하였다.

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의미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정책이 모든 시민의 필요를 해결하고 모두의 균등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포용국가'를 정의하였으며, IMF는 '포용적 성장이 오늘날 지구적으로 공명하는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하였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은 인구의 모든 집단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증가하는 번영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급속한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충분한 사회안전망의 제공은 소득 불안정성을 낮추어 혁신적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을 촉진한다. 동시에 격차 완화,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연대를 높여 협업을 통한 혁신 가능성을 높인다. OECD, IMF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로 불평등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EU의 유럽혁신순위 상위권에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 보편적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일수록 경제구조 변화 시기에 기업은 고용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빈곤의 위험 없이 재교육을 통해 성장분야로 이동할 수 있다. 세계은행(2020)이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전세계 8,500만 개의 일자리가 5년내 대체되고, AI, 돌봄경제 등 성장분야에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포용적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한 기민한 대응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혹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는 나라이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5.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다 :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
>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가. 배경

2018년 전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출렁이고 있을 무렵, 일본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제조업을 충격으로 몰아넣을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일 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2018년 10월) 직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인 '불화수소'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이다. 거의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터라, 일본측이 수출을 중단할 경우 국내 반도체 공장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며칠 뒤 수출은 재개되었지만, 일본이 언제 또 다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확산되었다. 청와대 내에서는 혹시 모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규제내용은 첫째,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백색국가)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수출관리상 분류를 재검토하며, 둘째, 3개 특정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하여 포괄수출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제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3개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는 발표 직후인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8월 2일 각의 결정 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로 고조된 경제적 위기감과 반일감정이 동시에 끓어오르는 가운데 '외교적 해결'이 답이라는 것에 중론이 모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며,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는 정면 대응을 택했다.

청와대는 즉각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회의'를 구성해 2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수석 주재로 전 비서관실을 아우르는 BH 비서관 지원팀을 구성해 일본 수출규제 상황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동향 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비롯해, 대일 아웃리치(대외접촉), 수출규제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위험 요소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장관회의'를 구성하여 모든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도 전개되었다. 공식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한편, 전 세계 재외공관에 아웃리치용(대외접촉용) 영문 자료를 배포하고, G7 정상회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WTO 수출통제회의 등 다자회의와 면담 등 주요 계기마다 각국의 외교·언론·학계·정관계·금융계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

1) 기업애로 해소 등 위기 타개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

먼저 정부는 산업분야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 기업지원에도 총력을 다했다.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서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과,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였다. 기업의 수급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9개 정부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대한상의 등 관련 협회·단체 등 민·관이 힘을 합쳐 7월 22일 설립한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방문을 비롯하여,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로봇용 감속기를 국산화한 기업인 SBB테크, 실리콘웨이퍼 생산기업인 MEMC코리아 방문 등 소부장 현장과 적극 소통하였다.

산업부 등 정부와 유관기관 역시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의 빠른 국내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신속 처리했다. 또한 대일의존도가 높은 폴리이미드의 제조를 위한 특허분석을 제공하고 대체처 조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2) 100대 핵심품목의 확실한 공급안정화 노력

먼저,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4,708개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대체 가능성, 국내기술 수준, 특정국 의존도 등을 분석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의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품목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공급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00대 품목 중 수급위험이 높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20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중점 추진하였다. 전 세계에 무역관을 보유한 코트라 등을 통해 대체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개방하여 대체소재의 적합성 테스트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수출규제 이후 불과 한달여 만에 추경예산 2,732억 원을 편성하여,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R&D 사업에도 즉각 돌입했다.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7년간 약 7.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정책지정형, 경쟁형, 복수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체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기술확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 대-중소기업 새로운 협력 방식 도입 :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연계

소부장 산업 내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기업간 협력 부재, 기술개발과 생산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먼저,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부장 기업간 협력모델'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는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인 협력과 수요-수요 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R&D·사업화·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이 공동 개발 혹은 공동 구매한 제품이 빠르게 양산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기업 스스로가 '성공적인 협력의 경험'을 쌓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R&D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특히, 실제 수요에 맞춘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개발 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 실증·양산성능 평가 등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 5개 주요 거점대학으로 구성된 대학소부장자문단 등이 출범하여 기업이 기술개발·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체계적인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시작하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스타트업, 강소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뜸기업)을 각 100개씩 선정하고, 기업의 규모와 성장환경에 맞춰 R&D, 특허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평가 등 지원을 추진하였다.

4)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 완비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가장 먼저, 2019년 10월 소부장 정책의 범부처 협업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단일 콘트롤 타워인 민·관 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어, 2020년부터는 2.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규 설치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상시법화하고, 정책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단기 대책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확실한 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반이 완비된 것이다.

5)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도약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은 크게 소부장 강국 도약 전략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2019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넘어, 전략, 대상, 방식, 내용 등에서 차별화한 것이다.

소부장 2.0 전략에서는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및 Big3 산업 관련 기술 등에 2022년까지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부·과기부·중기부 간의 협업을 통한 소부장 R&D 공동 기획, 세액공제와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러한 차세대 기술이 개발 단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확대, 대학·공공연구소 등의 기업지원 강화를 통해 개발기술이 원활히 시장에서 사업화 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속정책으로써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 전략'(2021년 5월)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을 목표로 하는 만큼, 으뜸기업은 신청 기업의 특허 보유 수준, R&D 인원 및 역량, 관련 전문가의 검토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100개 프로그램을 연계, 맞춤형 집중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해 규제 하이패스 등을 통한 규제 개선 노력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의 해외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해 해외 선진기술 도입·개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외 공동 R&D를 강화하고, 한-독 기술협력센터 설치(2020년 6월) 등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설치도 확대했다.

세계적 첨단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첨단투자지구

도입이 진행 중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부장 산업의 우리나라 자체 공급망 확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자립, 기술과 노하우 축적을 위한 집적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2021년 1월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등 총 5개 지자체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되었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시제품 실증기반 확충,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로 육성해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다양한 첨단기술·제품 등의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투자지구 역시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및 인프라 구축 등에 5년간 1.5조원 지원, 첨단 분야(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해당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다.

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의의 : 강한 소부장, 강한 제조업, 강한 대한민국

소부장 정책 2년차를 맞아,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극복 경험을 통해 기업 등 소부장 생태계 주체 스스로가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와 민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잇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태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 부족이었다. 국내 수요기업이 새로이 개발된 국내 제품보다는 품질이 검증된 수입산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는 수요기업이 대외 의존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수요기업은 국내 공급기업의 협력에 주목하게 되었고, 지난 2년간, 기존에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한 공공연구소와 대학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총 37개 공공연구기관이 모여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하고, 각각의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2.6만 대의 장비와 1.1만명의 인력을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였다. 용접, 열처리 등 주요 제조기술을 보유한 12개 대학 역시 소부장 기업지원을 위해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이 자문단은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 130건 중 99건을 지원하는 등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2021년 1/4분기에 2019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인 12.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 역시,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21년 1~5월 기간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 산업 대비 2.69배 수준으로 전년인 2020년 2.01배에 비해 증가하며 경제 회복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소부장 기업의 성장은 우수 소부장 기업의 가치 향상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과 2021년 비교 시 상장기업 전체의 시가총액 증가율은 63.1%에 불과한 반면, 소부장 으뜸기업은 101.8%, 소부장 강소기업은 12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2년 전 13개에 불과했던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수도 약 2.4배인 3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6.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 도약

>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
> (2021년 신년사, 21.1.11)

가. 배경

코로나19는 전세계를 빠른 속도로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세계의 이동은 멈추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하여 급속도로 경제는 침체되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골목상권, 자영업 등이 받은 경제적 타격은 매우 컸다. 철저한 방역과 치료를 통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이후에는 침체된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극복 및 세계 선도국가로의 효과적 진입을 위한 핵심적인 국가운영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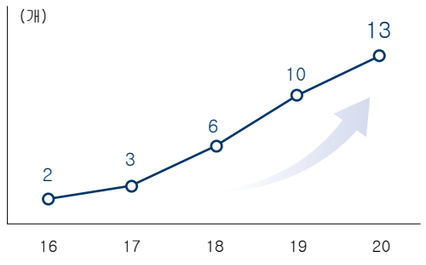
또한 국가간 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산업에서 다른 국가들과 무한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오랫동안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던 산업으로는 더이상 미래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미래의 경제와 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존의 반도체와 조선산업을 더욱 고도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수소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바이오 등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이와 같은 미래 지향적 혁신산업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조달과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나. 선도국가 도약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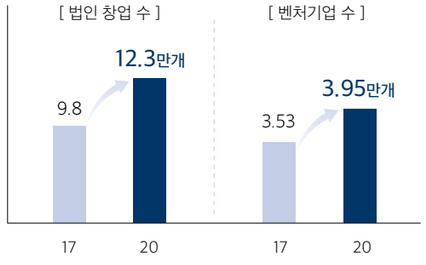
1)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

산업생태계의 혁신과 활력제고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벤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스케일업 전용펀드 등 성장기업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충했다. M&A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일몰을 2021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법인사업자 2.8만 명의 연대보증 채무 5.4조 원에 대한 채무조정·상환유예를 통해 재도전도 뒷받침했다. 코로나 대응에 여념이 없던 2020년에도 신성장동력 육성의 일환으로 벤처지원에 역점을 두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년 2월)하고, 비대면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1조원 규모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2020년 7월)하였으며, 일반지주에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2020년 13개(세계 6위)로 늘고, 벤처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권 내 벤처기업은 2001년 6개에 불과했으나 2010년 10개, 2020년 13개사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0년까지 없었던 코스피 시총 20위권 내 벤처기업이 2020년 4개로 늘어났다. 2000년대 초반 '제1벤처붐'에 이어 20여년 만에 우리 경제에 '제2벤처붐'이 도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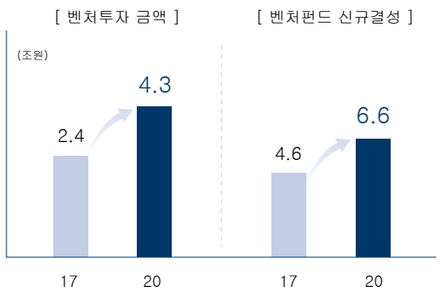
〈유니콘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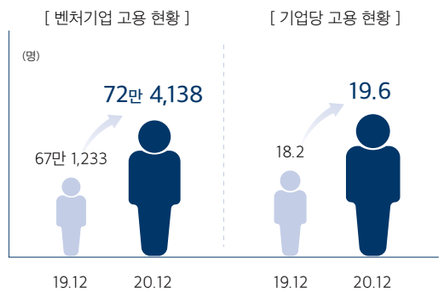
〈법인 창업 수 및 벤처기업 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신규결성액〉



〈벤처기업 고용 현황〉



2)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빅3 + DNA + 4대 제조강국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산업 파급효과 및 체감도가 큰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3개 분야(BIG3)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하여 적극 육성하는 한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전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혁신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갔다. 세제·금융·R&D·인재양성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신산업 확산을 적극 뒷받침했고,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혁신·법령정비 등에도 지속 매진해왔다. 그 결과, D.N.A 혁신 인프라가 우리 산업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글로벌 평가도 높아졌다. 2020년 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가 20조 원에 근접하고, 데이터 직무인력이 10만 명을 돌파하며 모두 2017년 대비 30% 넘게 성장하는 등 데이터 산업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였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횟수가 2018년 대비 2020년 54.2배 확대되며 AI 활용도도 대폭 증가하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2017년 19위 → 2018년 14위 → 2019년 10위 → 2020년 8위를 기록하는 등 순위가 지속 상승하였다.

또한, BIG3 산업도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전기차 보급대수는 2017년 대비 2020년 5.4배, 수소차 보급대수는 2017년 대비 2020년 64배 급등했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극자외선(EUV)기반 7나노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2019년 4월)하고, 전력효율을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개발에 성공(2020년 4월)하는 등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다. 바이오헬스 산업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K-방역 성과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2017년 126 → 2020년 217억 불)하였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뉴딜과 연계하여 D.N.A + BIG3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케어 등 시장 수요가 큰 유망 신산업도 전문가·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이 기술 혁신과 미래 시장을 선도하며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3) 우리경제의 버팀목, 제조업

우리나라 제조업 국제경쟁력은 세계 3위(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로 우리나라의 튼튼한 제조업 기반은 우리의 강점이자 자산으로서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6월, ① 산업구조 혁신, ② 3대 핵심 신산업 육성, ③ 산업생태계 확충 등의 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조선(2018년 11월, 2019년 4월), 자동차부품(2018년 12월, 2020년 2월), 섬유·패션(2019년 6월) 등 업종별 대책, 스마트그린산단(2020년 9월), 디지털 혁신(2020년 8월), 산업 연대·협력(2020년 9월), 기업활력법 연장(2019년 8월) 등 기능별 대책도 연이어 마련하며 기술·금융·세제·인프라 등 산업구조 혁신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했다. 8회의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310조 원 규모 범정부 재정·금융 지원이 진행되었다. 개소세 인하·공공수요 창출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 기업인·물류 이동 원활화 등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정책을 마련·추진하며 우리 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했다.

4) 조선·해운 강국 도약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신조(2018년 9월 발주, 3.1조 원)를 비롯하여 해운선사들의 자산과 경영안정 확보를 위해 약 6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가동하였다. 우수 선화주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인증제 시행 등으로 선화주 협력도 강화해나갔다. 그 결과 국적 원양선사의 선복량과 매출이 증가하여 올해는 해운 매출액 40조 원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신조발주 포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지표가 한진 사태 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특히, 대표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THE 얼라이언스' 가입(2020년 4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2020년 4월~), 거점항만 터미널 확보 등으로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2021년 1분기 영업이익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며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하였다. 중소·중견 선사들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등 금융지원을 토대로 경영여건이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해운시황이 불투명한 당시 상황 속에서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신규건조를 과감히 추진하여 조선업 수주절벽 극복의 마중물이 되었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해운사 발주량의 약

93.3%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되어 조선-해운간 상생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조선 수주회복세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만 작년 실적을 넘는 1,088만 CGT(Compansated Gross Tonage)를 수주하며 세계 2위를 달성하였다. 특히 그간 정부가 집중 지원한 LNG 등 친환경연료추진에 대한 기술개발의 성과로 상반기 전세계 친환경연료추진선 발주량은 480만 CGT로 전세계 발주량의 70.1%를 수주하는 등 압도적인 기술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선박 시장에서도 전체발주량 1189만 CGT 중 7230만 CGT를 수주하여 전체 발주량의 61%를 차지하여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과 함께 미래시장을 대표하는 저탄소·무탄소선박의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재원(2,540억 원)을 확보하여 미래 친환경선박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미 추진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1,603억 원)과 함께 진행될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선박시장을 보는 날이 머지 않아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5) 수소경제

2019년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이 실현과 수소경제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으로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생산하고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를 15GW로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소 활용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유통·저장 분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수소법 제정을 통하여 수소경제 추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2021년 2월, 수소경제 선도국 비전에 걸맞게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이하 수소법).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소경제의 콘트롤 타워로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즉 정부는 2020년 7월 1일, 수소법 시행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시켰다. 수소경제위원회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외신이 주목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다양한 국가의 여러 매체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한류가 한때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출발해 점차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큰 흐름이라고 분석하며, 그 성공 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창의성에 기반한 민간의 역량 강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을 언급하고 있다. K-팝,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세계 곳곳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음악,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 및 한복,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식, 패션, 화장품 등 연관 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강화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한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짧은 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도 큰 성과이지만, 경제발전이 문화적 역량의 성장, 소프트파워의 강화로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한국의 사례는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수원국과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교류와 공공외교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 세계 선도국가 도약의 의미

코로나 위기를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 극복함으로써 안정적인 G8국가 입지를 확보하고 한국경제에서 가보지 않은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시대를 달성하였다. 한국경제의 정량적 선진국의 위치는 치밀한 정책 전략과 탄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일치성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벤처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을 통한 제 2의 벤처붐으로 단기간에 유니콘 기업 15개를 육성(2021년 7월)하여 세계 6위권에 진입하였고, 대표적 유니콘 기업인 쿠팡의 2021년 3월 나스닥 상장으로 이 기업이 한때 시가총액 100조에 달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업분위

기 조성과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의 무역도발에 대한 진취적이고 능동적 대응과 선택과 집중 전략인 Big3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임을 전 세계에 입증하였다. 우리 제조업의 지속적 노력과 강점은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배터리 공장의 적극적 미국 투자 유인으로 국내 산업정책의 전략적 올바름과 함께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레버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제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류 아젠다에 대한 한국 리더십의 국제적 위상도 선도국 수준으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세기에 극히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발전과 성장모형으로, 중진국 함정의 울타리를 모범적으로 뛰어넘은 사회경제적 발전모형의 위상을 구축하였다. 코로나19의 민주적 방역과 선도적 경제정책 이행은 전세계에서 보기 드문 리더십으로 인정되고 있다.

제2절

국정성과 담론화 사업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 성과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더 널리 공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국정 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 9월 '국정성과 시리즈 4부작'을 발간했다.

'위기 대응'과 '미래 도약'이라는 두 축을 세워 문재인 정부의 특징과 성과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담론화한 것이다.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난급' 위기를 겪었다. 북핵,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라는 3대 위기에 대응해 국민과 함께 극복해 온 여정을 담았다.

또 위기에 강하며 미래를 여는 정부, 복지를 확장하고 권력을 개혁하며 평화시대를 여는 정부로 '5대 강국론'을 제시했다. 위기 국면에서 '강한 국민'이 만든 '강한 정부'의 국정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100대 입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화된 주요 법령의 제정과 개정 사례를 모았다. 정책을 시행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대표적 국정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정책과제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공정과 개혁, 혁신성장, 사람중심 경제, 포용적 복지, 국민 안전과 환경,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취합했다.

국제 기구나 해외 언론들이 바라보는 눈은 대한민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지표들을 모았다. 객관적 데이터 위주로 정리했으며 주관적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간략한 설명을 추가했다. 시점은 '국정성과 시리즈 4부작'이 발간된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 콘텐츠 관리와 정책 네트워크 관리, 정책 소통 관리에 활동의 중점을 두었다. '국정성과 시리즈 4부작'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책의 환경과 대상을 살피고 문제를 찾아내는 '진단적 소통', 국정 성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심과 정부 정책의 간극이나 긴장을 줄이고 조율하는 '설득적 소통',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체감적 소통'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또 '국정성과 시리즈 4부작'을 온라인용으로 재구성해 '국민 소통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게재하기도 했다.



1. 국민과 함께 극복한 3대 위기

가. 서문

문재인 정부 4년은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듭되는 위기의 시간이었다.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겪은 북핵위기, 한일통상위기, 코로나19 위기라는 3대 위기는 국난급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북핵위기는 평창올림픽과 다자외교,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위기극복의 성과를 만들었다. 2019년의 한일통상위기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소부장산업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소부장산업 특별법 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마침내 우리는 일본과 경쟁할만하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핵심 산업에서 우리 경제가 일본을 추월하게 되었지만 우리 국민이 갖게 된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국민적 성과이다.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위기는 지구적 생명권의 위기이자 인류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문명사적 위기이다. 우리는 개방, 투명, 민주방역, 과학적이고 창의적 방역으로 전면적 봉쇄 없이 팬데믹을 억제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K-방역의 성공은 K-경제의 성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K-경제의 주요지표들은 우리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 방역으로 우리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겪었던 3대 거대위기는 인류의 문명사에 대한 제라드 다이아몬드식 설명에 비유하면 '총·균·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총·균·쇠의 역사는 제국주의로 극대화된 정복과 침략의 문명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총·균·쇠에 대응한 방식은 평화와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인류의 신문명을 선도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열어가는 총·균·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나. 제1의 위기 : 북핵 위기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6일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였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핵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 모든 사안들을 논의하자고 하였다. '신 베를린 구상'은 방향성으로서 5대 원칙과 실천방안으로서 4대 제안을 담고 있다.

5대 원칙은 ① 한반도 평화추구(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 통일 불추구), ② 한반도 비핵화 추구(완전한 북핵 폐기,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 우려의 해소, 북미 관계 개선), ③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남북 합의 법제화를 통한 평화의 제도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 ④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북핵문제 진전 및 여건 조성 시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 형성), ⑤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이산가족 문제 해결, 재해 공동대응, 민간지역 간 교류 지원, 북한인권 개선 노력, 인도적 협력 확대)이다. 5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4대 제안은 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② 이산가족 상봉, ③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적대행위 중단, ④ 남북대화 재개 촉구이다.

1) 남북한 긴장완화 위한 남·북 정상회담

평창 올림픽 기간 중인 2월 10일 김여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문 대통령을 초청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하여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합동 예술공연, 직통전화 개설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제1차 '2018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

하였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군사적 긴장완화·한반도 비핵화 등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였으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9월 20일 남북 정상은 백두산 천지에 함께 올랐다.

2)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방강국 건설

평화를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방력 강화가 충분한 국방비 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 하에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 정부 출범 시 40.3조 원이던 국방예산이 3년만인 2020년에 50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4년간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지난 정부 9년간 연평균 증가율 4.7%보다 약 1.5배 상승했다.

정부는 충분한 국방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략표적타격능력, 한국형미사일방어능력,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전략표적타격능력을 위해 백두체계능력보강(신호정보 수집체계),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F-35A 스텔스전투기,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였고, 한국형미사일방어능력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II 성능개량 등을 추진하였다. 압도적 대응능력을 위해 첨단 미사일체계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특수전 부대에 특수작전용무인기 무전기 등을 전력화하였다. 2021년 4월에는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였다. 2026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열세번째로 전투기 자체개발(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는 여덟번째)에 성공한 국가가 된다. 2021년 8월에는 우리 기술로 독자설계 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인도 인수 및 취역식을 개최했다. 도산 안창호함의 성공적인 인도와 취역은 우리나라가 조선 및 방산강국으로 당당하게 올라서는 역사적 순간이며,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여덟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지침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마침내 2021년 5월 21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 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시켰다. 이는 지난 1979년 미사일 자율규제 선언 이후 40여 년간 우리의 미사일 역량에 족쇄가 되어 온 자율 제한을 일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이다. 지침 종료는 미사일 비확산 모범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임과 동시에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양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앞으로 고위력 첨단 미사일 강국 도약 및 우주 전장 대비는 물론 우주발사용 고체연료 로켓을 민·군 공동개발로 착수, 우주산업 선진국들과 협업을 통해 한국 우주산업 기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22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워싱턴 D.C., 애틀랜타)을 방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로 초청한 정상으로서, 한미정상회담 이외에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면담하고, 보훈·경제·보건 행사 및 미국 진출 우리 기업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동맹 발전 방향 및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 정상 차원의 긴밀한 공조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외교·대화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직접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 대화·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측에 보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관여·협력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남·북 및 북·미 관계 선순환 복원을 위한 토대도 마련되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과거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백신·공급망 협력 등 호혜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확대되면서 양국이 전방위·미래지향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다. 제2의 위기 : 한일 통상위기

2018년 전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출렁이고 있을 무렵, 일본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제조업을 충격으로 몰아넣을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일 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2018년 10월)이후,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규제내용은 첫째,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백색국가)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수출관리상 분류를 재검토하며, 둘째, 3개 특정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하여 포괄수출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제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 3개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는 발표 직후인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8월 2일 각의 결정 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는 즉각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회의'를 구성해 2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수석 주재로 전 비서관실을 아우르는 BH 비서관 지원팀을 구성해 일본 수출규제 상황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동향 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비롯해, 대일 아웃리치(대외접촉), 수출규제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위험 요소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장관회의'를 구성하여 모든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도 전개되었다. 공식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한편, 전 세계 재외공관에 아웃리치용(대외접촉용) 영문자료를 배포하고, G7 정상회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WTO 수출통제회의 등 다자회의와 면담 등 주요 계기마다 각국의 외교·언론·학계·정관계·금융계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국민여론은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들끓었다. 일본제품 불매 사이트를 자발적으로 개설하고, 여행, 생필품부터 맥주 등 기호식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제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거셌다. 이는 일본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하락 등으로 연계되었으며,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1)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소부장 산업의 체질 개선

기업의 수급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9개 정부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대한상의 등 관련 협회·단체 등 민·관이 힘을 합쳐 7월 22일 설립한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방문을 비롯하여,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로봇용 감속기를 국산화한 기업인 SBB테크, 실리콘 웨이퍼 생산기업인 MEMC코리아 방문 등 소부장 현장과 적극 소통하였다. 산업부 등 정부와 유관기관 역시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의 빠른 국내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신속 처리했다. 또한 대일의존도가 높은 폴리이미드의 제조를 위한 특허분석을 제공하고 대체처 조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4,708개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대체 가능성, 국내기술 수준, 특정국 의존도 등을 분석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의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품목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공급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00대 품목 중 수급위험이 높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20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중점 추진하였다.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7년간 약 7.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정책지정형, 경쟁형, 복수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체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기술확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부장 기업간 협력모델'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공동개발 혹은 공동 구매한 제품이 빠르게 양산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기업 스스로가 '성공적인 협력의 경험'을 쌓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R&D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인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스타트업, 강소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뜸기업)을 각 100개씩 선정하고, 기업의 규모와 성장환경에 맞춰 R&D, 특허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평가 등 지원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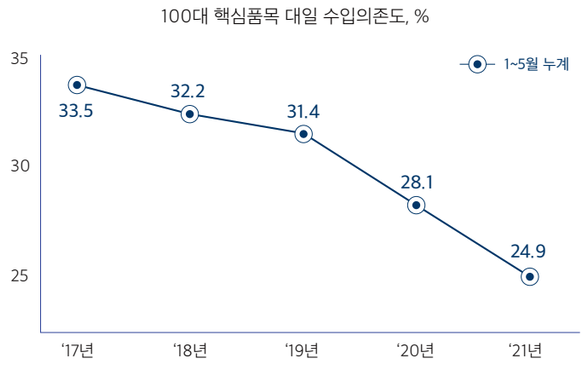
2)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일본 수출규제와 뒤이은 코로나19 등 공급망 충격은 우리 소부장 대책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기에 크게 소부장 강국 도약 전략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였다.

소부장 2.0 전략에서는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및 Big3 산업 관련 기술 등에 20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산업부·과기부·중기부 간의 협업을 통한 소부장 R&D 공동 기획, 세액공제와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100개 프로그램을 연계, 맞춤형 집중지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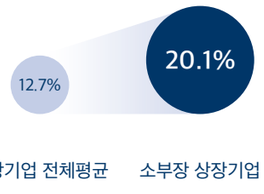
3)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낸 산업 성장의 주역이 된 소부장 기업

일본의 직접적인 수출규제 대상인 3대 품목은 국내 생산 확대, 미국·중국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 해외투자 유치 등 다각적 방법을 총 동원한 결과, 한 건의 수급 차질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수출규제 이후 핵심품목의 수급 문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소부장 자립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대일 의존도 감소추세가 약 3배 가속화되어, 2019년 1~5월 31.4%에서 2021년 1~5월 24.9%로 약 6.5%p가 감소하였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2021년 1/4분기에 2019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인 12.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 역시,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21년 1~5월 기간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 산업 대비 2.69배 수준으로 전년인 2020년 2.01배에 비해 증가하며 경제 회복을 주도하였다.

매출액 증가율('19.1분기→'21.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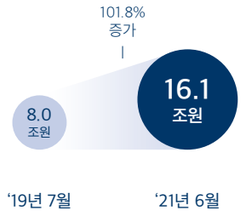


무역수지 비교('21년 5월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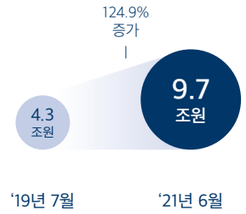


이러한 소부장 기업의 성장은 우수 소부장 기업의 가치 향상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과 2021년 비교 시 상장기업 전체의 시가총액 증가율은 63.1%에 불과한 반면, 소부장 으뜸기업은 101.8%, 소부장 강소기업은 12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2년 전 13개에 불과했던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수도 약 2.4배인 3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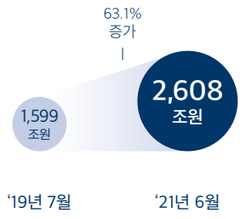
소부장 으뜸기업(22개)



소부장 강소기업(100개)



상장기업 전체



소부장(중소·중견)1조원 클럽



라. 제3의 위기 : 코로나19

1) 코로나19 위기 대응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으로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909명으로 정점을 찍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구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력이 약화되었다. 확진 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 국민안심병원 운영 및 전화처방 허용,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및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1차 추경을 통하여 신속하게 음압병실 확충과 같은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1조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였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4월 3일 전 세계 확진자가 1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에서도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4월 30일에는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고, 마스크 5부제와 공적 마스크도 폐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2020년 8월의 2차 대유행, 12월의 3차 대유행을 거쳤으며 올해 1월 4일부터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다. 급기야 8월에는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2)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한 신뢰 형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매일 정규 브리핑을 통해 환자 발생과 예방접종 등 유행 및 대응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대본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침과 통계, 연구 자료를 공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 자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 신뢰를 제고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하고,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최고 수위 대응을 위한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매일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의사 결정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3) 체계적이고 신속한 예방접종 시행

국내 백신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과 치명율이 높으며,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력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성·운영(2021년 1월 8일)해 백신 수급과 유통, 접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갔다. 예방접종 시행 후 6달 만인 8월 현재 전 국민의 50.4% 수준인 2,586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전 국민의 22% 수준인 1,111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또한, 위중증 환자 비율 및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예방접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2020년 2,186억 원 및 2021년 3,607억 원을 지원하여 국내 백신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재 7개 백신 개발 기업이 임상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임상3상에 첫 진입(8월 10일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일부기업들도 임상3상에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2021년 5월 21일)의 성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여 향후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4)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지지, 노력

많은 국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행 및 출입제한, 경제활동 봉쇄 등 비상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통제 중심의 정부 대응은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 추적, 치료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부 대처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우수한 방역 성과를 창출하는 등,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민주방역, 시민참여 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유엔이 권고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험이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체계는 세계의 모범적인 표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

가. 서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의 총괄비전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다. 여기에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담았다. 정의로운 질서는 사회적 기회의 윤리인 '공정', 사회적 결과의 윤리인 '책임', 사회적 통합의 윤리인 '협력'이라는 실천윤리가 어울려 완성된다. 문재인 정부 4년은 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를 향한 일관된 여정이었다. 여기에 문명사적 전환과 문명사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지구적 대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응전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과 미래대응의 성과가 나타났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성과가 위기국면에서 협력의 DNA를 여지없이 발휘하는 '강한 국민'이 만든 '강한 정부'의 국정성과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갖춘 강한 국가의 5대 요소를 '국정성과로 보는 5대 강국론'으로 정리하였다.

나. 위기에 강한 정부

1) 혁신적·창의적 대응 노력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으로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909명으로 정점을 찍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구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응력이 약화되었다. 확진 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 국민안심병원 운영 및 전화 처방 허용,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및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1차 추경을 통하여 신속하게 음압병실 확충과 같은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1조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전국 의료진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확진자 격리 및 입원 조치와 관련된 지역 간 연대가 없었다면 정부의 혁신적인 대응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었을 것이다. 전국민과 전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빛을 발하였다.

2) IT 기술, 의료기기 기술을 활용

마스크 앱, 자가격리 관리 앱, 접촉자 동선 관리시스템 등 우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IT 기술을 접목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방역업무에 대응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 대부분이 병(바이알) 당 1회분이 아닌 다회분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상온에서 일정 시간 내에 접종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약자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진 시 건강상의 문제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접종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백신을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백신 잔량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 SNS 업체와 협업을 통해, 실시간 예약이 이뤄질 수 있는 '잔여백신 당일예약 앱 기능'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폐기되는 잔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3) 전 세계 K-방역의 성과를 K-바이오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코로나19 발생과 백신개발은 우리 바이오 의약품 제조·생산 능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개발·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4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미국의 노바백스를, 한국 코로스社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모더나를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능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社는 노바백스 백신의 단순 위탁생산이 아닌 기술이전 방식의 생산을 통해 국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바이러스벡터·합성항원 방식뿐 아니라 mRNA 방식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다. 미래를 여는 정부

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각국의 강력한 봉쇄조치(lock-down)는 공급망 교란, 소비 위축, 일자리

감소 등 경제 모든 영역에 큰 충격을 미쳤다. 일자리 안정성도 위협받고 우리 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내수 감소와 주요 교역 상대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하락하였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분기에 △1.3%, 2분기에는 △3.2%로 하락하였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이다.

2) 선도형·저탄소경제, 포용사회로 도약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라는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안전망 강화를 통해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을 지향한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2조 원, 그린 뉴딜에 73.4조 원, 안전망 강화에 28.4조 원 등 총 160조 원을 투자하며, 이를 통해서 총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는 전략이다. 데이터 댐, 데이터 고속도로(5G) 등 기초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전 산업의 5G·인공지능(AI) 융합·확산, 국토와 정부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그린 뉴딜은 인프라·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의 혁신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 인프라를 본격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및 녹색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품어주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 전환적인 경제구조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유망분야인 디지털·그린분야 인재양성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차원의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지역발전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하여 지역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3) 탄소중립,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전략

전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 투자 중단 등 탈석탄 노력과 고탄소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준비 등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EU에 이어 우리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우리나라(2020년 12월)를 포함하여 총 25개국이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2021년 5월 기준)하였다. 아울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131개국이 탄소중립에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공동체에서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3월 민-관 합동의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을 출범시켜 수송, 산업, 에너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을 최초 선언하였고, 2020년 12월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직속의 민-관 거버넌스 의사결정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2021년 5월 29일 발족)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 수단이 포함된 복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

4) 한국판 뉴딜 2.0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추가하고 기존 정책과제를 보강할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되었다. 2020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2021년부터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다 진화시킨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 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하였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망 강화는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된다. 인재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 추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는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라. 복지를 확장한 정부

1)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 포용적 복지확대를 통한 혁신 성장 지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우리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상하고 차근차근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성장과 복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포용적 복지 확대가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포용적 복지 확대를 통해 실업, 질병, 은퇴 등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제공하고, 개인은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을 위해 도전하며, 혁신의 결과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포용적 복지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혹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는 나라이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 혁신적 포용국가 주요 내용

가) 아동수당 최초 도입

아동은 미래 우리 사회의 인적 자본으로서 그 혜택은 사회 전체에 환원되지만, 아동 양육 부담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원되고는 있으나 이는 아동수당과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써 상호보완적으로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 정책이 사후처방적 대응 위주였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동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이었기에 제도 도입의 타당성은 더욱 높다.

35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미국, 터키,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규모는 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보육서비스 지출에 집중되어 있고 현금급여 비중은 매우 적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이 부실한 상황이라는 점 등이 아동수당을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18년에 최초로 소득 하위 90% 아동에 선별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으며, 2019년에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2018년 최초 도입 당시 195만 명이었던 대상 아동 규모를 2019년 269만 명까지 약 1년 만에 대폭 확대했다.

나)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자녀 부양, 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노후 대비가 어려웠던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43.8%, 2018년)은 여전히 OECD평균(14.8%) 대비 높은 수준으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방지하고자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였다.

기초연금을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0년 566만 명으로 늘어나 30.1% 증가하였으며, 월 지급금액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 빈곤갭이 축소되고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가 개선되었으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91%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등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만족도 조사).

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는데,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기존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지원을 지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과정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장애유형별 급여감소 방지 조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확충(2019년 11,060억 → 2021년 15,217억)하는 한편, 급여산출방식 및 종합조사 평가 매뉴얼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민원 및 서비스 신청 증가로 인한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종합조사 인력을 확충(2019년 43명, 2021년 29명)하였음.

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가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감당함에 따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고,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도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며, 2030년 24.5%, 2050년 3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노인의 10.5%인 136만명이 치매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계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하여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국가차원의 전 주기적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치매를 더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2021년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56개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을 증설하는 등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진단비 및 중증치매환자 의료비의 본인부담비를 경감하는 정

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6만 8천여명의 중증치매 환자가 총 466억원의 치매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받았으며, 약 25만명의 장기요양 대상자가 7,148억원의 본인부담을 경감받았다.

마)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OECD 37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2019년 4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하여 2019년 2학기에 고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 2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85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 약 16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다.

바) 건강보장성 강화

1989년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라는 생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왔으나,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선택 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상·하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점진적으로 비급여를 축소해 나가는 방식이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 둘째,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 셋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의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이다.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였음. ①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 ② 2·3인 상급병실을 2019년 7월부터 전면 급여화, ③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상 규모도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받았으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2018~2020년 간 9조 2천억 원 가까이 절감하였고.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올라갔으며 당초 예측된 비급

여 진료비를 4.6조 원 가량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 취약계층 보호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주요 과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73만명에 달하였는데, 이처럼 넓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는 가족 해체, 사적 부양 감소 등 최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이에 2018년 생계급여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되었던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함께 폐지하였고, 로드맵 계획에는 없었지만 2020년에는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를 추가 폐지하였고,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였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 6천명, 의료급여 7만 4천명, 주거급여 73만 5천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고, 특히 2021년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가구 중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 2,618가구에 이른다. 2021년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극복 등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고용보험의 기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용보험으로 포섭하고, 저소득층·청년 등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사람들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호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특고·예술인과 같은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고, 소득자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특고 및 예술인 등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2020년 6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이나 출산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으나 2020년 12월 9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기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들도 더 많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7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제한 기한을 폐지하여 2020년 전년대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61.7% 늘어난 1만 6,251명으로 증가하였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을 점차 늘려나가 2020년에는 총 274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은 넓혀나가고 있으나, 청년·저소득층 실업자 등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구직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2020년 5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1년 1월 1일에 첫발을 디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4월 중순에 2021년 지원규모 64만 명의 40%가 넘는 26.5만명이 신청하였고, 특히 청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한국형 상병 수당의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되면서, 정규직 중심으로 제도화된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는 정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이다. 상병수당의 부재는 코로나19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활 유지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안전망의 한계르 드러냈다.

이에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마. 권력을 개혁한 정부

1) 민주화의 진전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국민의 지속적인 요청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권력기관이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결코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국민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함을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 정신 위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력기관에 대한 체계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제하에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13번 국정과제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전면에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 특히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기구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법제화는 검찰 권력이 최고조에 오른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서, 검찰의 강력한 반발 속에 추진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저항과 견제 등 각종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 하에 권력기관들이 오직 국민만을 위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

2) 국가정보원 개혁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보다는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오랫동안 시대적인 요청사항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내담당 정보관(I/O) 폐지를 필두로 2017년 6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22개 의혹사건을 조사·의법처리하고 업무수행·조직체계 혁신에 착수하였다. 국내정보 수집·분석부서 해편(解編), 준법지원관 제도 도입,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다각적 개혁방안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受監)하여 외부의 시각에서 국정원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불가역적 개혁 완성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여 ① 업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전면 삭제, ② 대공수사권 이관(2024년 1월 1일 시행), ③ 정치개입 우려조직 설치 금지, ④ 불법 감청·위치추적 금지, ⑤ 국회 정보위의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개혁 조치가 명문화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기본지침」이 마련되었고, 「보안업무규정」·「방첩업무규정」 등 대통령령 및 내부 규정·지침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후속 개혁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되었다. 또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외부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에 위촉하였고,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한층 제고하였다.

3) 수사권 개혁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면서 이를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권의 행사가 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시급한 시대적 개혁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 6월 21일, 국무총리·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 2019년 4월 29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합의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가동되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치열한 논의와 진통 끝에 드디어 두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수사권 개혁 입법은 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 ② 검·경 간 권한분산 및 상호 견제와 균형, ③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축소, ④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경찰에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 권한을 통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적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백을 압박하는 인권침해적 수사가 근절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경찰 개혁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되었다. 동법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로 나누

고 각각을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함으로써 경찰권을 분산하였다. 새로운 지휘·감독체계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시·도경찰청을 3부체제(국가·수사·자치)로 재편하였다.

2021년 1월 1일 '국가수사본부'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국 3만 2천여 수사경찰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성청소년수사와 교통수사 등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 소속으로 통합하였고, 수사사무에 대한 행정지원과 심사·정책을 담당하는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수사연구인력'을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판례 연구, 중요 수사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2024년 1월 1일 시행)를 앞두고 종래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여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업무범위를 대공수사, 산업기술 유출 등 신안보사범까지 확대하였다.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동시에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도 가져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분산한 권력기관 개혁기구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1호이며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참여연대가 1996년 11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부패방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한 지 24년만인 2020년 1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결실을 맺었다. 공수처법은 국회에서 매우 치열한 논의를 거쳐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2019년 4월 29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어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법안 처리 과정은 2.검·경 수사권개혁 참고). 이에 따라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추천하였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추천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21일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김진욱)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바. 평화시대를 연 정부

1)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 긴장 완화 및 북핵 위기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제1차 '2018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였다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철저한 이행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에 합의하여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 국방강국 건설

물론 한반도의 평화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한 국방력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과 첨단무기의 개발, 그리고 관련 법제의 정비 등의 노력이 병행되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 지침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마침내 2021년 5월 21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 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시켰다. 이는 지난 1979년 미사일 자율규제 선언 이후 40여 년간 우리의 미사일 역량에 족쇄가 되어 온 자율 제한을 일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이다. 지침 종료는 미사일 비확산 모범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임과 동시에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양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앞으로 고위력 첨단 미사일 강국 도약 및 우주 전장 대비는 물론 우주발사용 고체연료 로켓을 민·군 공동개발로 착수, 우주산업 선진국들과 협업을 통해 한국 우주산업 기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도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하여 무기체계 개발에 협약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보다 유연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면 실패해도 제재하지 않는 도전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하였고, 민간의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소 연료·드론 분야 등 첨단 분야의 민간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여 첨단 국방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정찰 및 폭발물 제거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 국방 로봇 분야에 대한 집중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다변화하고 있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병력 감소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강군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외교·대화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직접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 대화·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측에 보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관여·협력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남·북 및 북·미 관계 선순환 복원을 위한 토대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양 정상은 코로나 재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해소를 위해 한미가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전격 합의하였다. 미국이 보유한 백신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능력, 한국이 보유한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백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팬데믹 극복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기후변화·보건 분야도 과거 선언적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협력 범위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였다.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흡수원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제사회가 모든 형태의 탄소 집약적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른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조성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확대하고,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기여 확대도 공약하는 등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렸다.

4) 한국의 소프트파워

현재 다양한 국가의 여러 매체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한류가 한때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출발해 점차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큰 흐름이라고 분석하며, 그 성공 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창의성에 기반한 민간의 역량 강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을 언급하고 있다. K-팝,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세계 곳곳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음악,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 및 한복,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식, 패션, 화장품 등 연관 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강화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한 경험이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짧은 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도 큰 성과이지만, 경제발전이 문화적 역량의 성장, 소프트파워의 강화로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한국의 사례는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수원국과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교류와 공공외교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5) 외교를 통한 국제 위상 제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신남방 10개국 순방, 5차례의 한·러정상회담 및 중앙아 3개국 순방 등 정상외교를 추진하였으며, 경제, 문화, 교육, 보건, 안보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신남방·신북방과의 관계를 포괄적 협력관계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신남방 정책 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신북방 정책의 8대 이니셔티브로 협력 과제를 체계화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대비 2020년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은 19%, 신북방지역과는 교역은 45% 증가하였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된 ODA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남방신북방 대상 ODA는 2017년 7,175억 원에서 2020년 9,823억 원으로 37% 증가하였고, 신남방 5대 중점 프로그램, 코로나19 보건의료 긴급차관 지원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3.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입법

가. 서문

국정운영의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관련 분야의 정책을 시행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법령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화된 주요 법령 중 대표적인 입법 성과를 공정과 개혁, 혁신성장, 사람중심경제, 포용적 복지, 국민 안전과 환경,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취합하였다.

첫째, 공정과 개혁분야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공직윤리 확보, 과거사문제 해결, 국민중심 혁신행정, 기업경영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과 관련된 입법성과를 모았다. 둘째, 혁신성장분야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과 미래먹거리창출 등과 관련된 입법성과를 취합했으며, 셋째로 사람중심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련된 입법을 모았다. 넷째, 포용적 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국민건강권 확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 청소년 안전망 강화, 청년지원, 노동기본권의 국제적 수준향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등과 관련된 입법을 취합했다. 다섯째, 국민안전과 환경분야는 사회적 약자보호기반 강화, 국민생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등과 관련된 입법을 모았다. 여섯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는 실질적 자치분권구현, 참여확대와 재정분권, 지역균형발전, 농어업 소득보전 강화 등 관련 입법을 모았고, 일곱째, 한반도 평화와 번영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 국방력 강화, 국제사회의 ODA선도 등의 주제와 관련된 입법을 취합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입법성과는 이 같은 분야와 세부주제에 해당하는 법안별로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요약하였다.

나. 공정과 개혁

1) 고위공직자의 비리 상시 감시와 권력형 비리 예방을 위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제정('19.12.)

가) 제정이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도록 한다. 조사처에는 처장, 차장, 특수검사, 수사관을 둔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처장 및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처장, 차장 및 특수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조사처는 국회의원,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 등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특수검사는 검사의 직무 및 검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1.4.)

가)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족 채용 제한

-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등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 혁신성장

1) 규제샌드박스 4법(「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가) 제·개정이유

▷ 혁신적 융합 산업·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18.9.)

- 오늘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기에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8.9.)

- 4차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 저해 및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18.12.)

-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 융합(Fin-tech) 등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선도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1.3.)

- 최근 인공지능·VR·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산업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주요내용

▷ 「산업융합촉진법」

-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

-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한다.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평가를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규제특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혁신금융사업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관계부처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특구의 목적과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처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법 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토록 경우에는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2)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가)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와 신산업 경쟁력 육성·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0년 1월)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유사·중복조상 정비 및 거버넌스 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2020년 1월)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등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2020년 1월)

-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금융업권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

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나)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라. 사람중심 경제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1.)

가) 제정이유

그 동안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한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어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포용적 복지사회

1) 아동수당 지급을 통한 아동 양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18.2.)

가) 제정이유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기에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2)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정('20.5.)

가)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

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또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일정한 기간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한다.

3) (김용균법)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8.12.)

가)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한다.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다.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국민안전과 환경

1) 유치원 3법

가) 개정이유(「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2020년 1월)

-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나 국·공립유치원은 투명한 수입·지출의 확인을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에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사립유치원 예산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2020년 1월)

-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수 적발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과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유치원 설립·경영자(개인) 등이 유용한 경우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지원금의 유치원 회계 여입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뿐 형사처벌이 불가능함. 그 결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수입의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사립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2020년 1월)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급식품질 및 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최근 부실급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 주요내용

▷ 「유아교육법」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 「사립학교법」

-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되,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존에 유치원에 배치된 영양사에 대한 고용유지 등을 위해 부칙을 신설하고자 한다.

2)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21.1.)

가)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3)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8.)

가) 제정이유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EU, 미국, 영국, 일

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부진·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20.12.)

가)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

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 제출

-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2)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18.2.)

가) 개정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한다.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하고,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계획 등 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한다.

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

1)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20.3.)

가) 제정이유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들이 등장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현재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하다. 현재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소요(所要)에 기반 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왔기에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국방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 참여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방연구 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4. 세계가 주목하는 문재인 정부 국제지표

가. 서문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아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발하였다. 지난 4년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부족했던 부분도 존재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위기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양한 성과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제지표를 5대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위기에 강한 정부' 분야는 K-방역, K-경제,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국제지표, 둘째, '미래를 여는 정부' 분야는 세계선도국가, 혁신성장, 소프트파워와 관련된 국제지표, 셋째, '복지를 확장한 정부' 분야는 포용적 복지확대 항목과 관련된 국제지표, 넷째, '권력을 개혁한 정부' 분야는 투명한 정부, 열린 정부, 혁신 정부와 관련된 국제지표, 다섯째, '평화시대를 연 정부' 분야는 포용적 국제협력, 경제 외교 다변화와 관련된 국제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국민들과 함께 일궈낸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나 해외언론을 통해 이루어진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평가이다. 국제기구, 국제단체, 해외언론들은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 속에서 노력한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만든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나. 위기에 강한 정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통해 대응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유입 차단,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의료자원 적기 동원 등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봉쇄 없이 효과적으로 유행 확산을 억제하였다. 특히 진단검사 부분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세계 최초로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여 독립공간인 차량 안에서 체온 측정 및 검체 채취가 가능하게 되어 감염 위험과 검사 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이러한 방식은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였다. 그리고 유전자 증폭 방식의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 운영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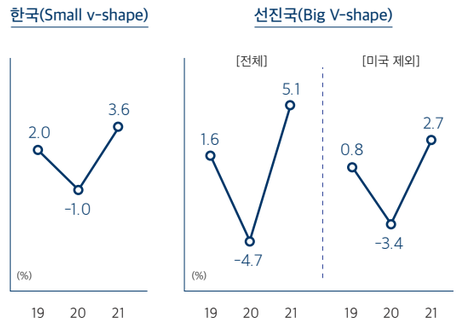
차 및 방법이 2020년 12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되면서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며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 국민들과 함께 만든 방역 성과를 통해 피해 폭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국제 평가에서 나타났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국가신용등급도는 최고치를 유지하였다(2021년 4월 기준). S&P(AA), 무디스AA), 피치(AA-) 모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였고, IMF가 올해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를 돌파하는 국가는 G20 국가 중 8개 국가이며, 이 중 선진국은 미국, 한국, 호주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하였다(2021년 4월 기준). 코로나19로 선진국들의 신용등급 평가와 경제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S&P	무디스	피치
AA(Aa2)			
AA-(Aa3)			
A+(A1)			
A(A2)			



다. 미래를 여는 정부

저성장·양극화 심화, 코로나19 위기, 기후·생태위기 등 국가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선도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휴먼 공동체로의 사회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정의로운 대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 트렌드에 발맞추어 미래차 분야 산업이 성장하였다. 수소차 보급은 2020년 말 기준 누적 약 1.1만 대로 세계 1위(한국 10,831, 미국 8,801, 일본 3,982 독일 374)이다.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지표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된 2020년에 23.6GW(잠정)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소에너지 부문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량이 세계 보급량의 43%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발전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용영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전 세계에서 단 11개 국가만 1등급을 받았고, 미국·영국은 2등급, 일본·중국은 3등급 평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보건, 안전, 정책신뢰성, 투명성, 예산관리 등 종합적인 ESG 평가 요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국내·외 수소차 보급 실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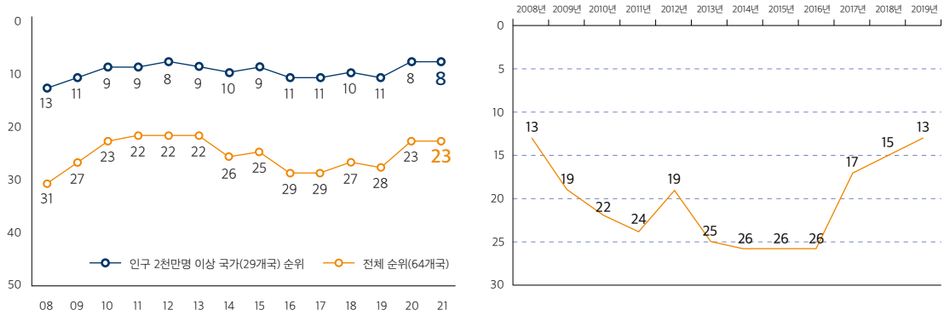
구분	’17년		’20년	
1	미국	2,331	한국	5,827
2	일본	1,142	미국	937
3	한국	61	일본	717
4	독일	61	독일	212

〈친환경차 누적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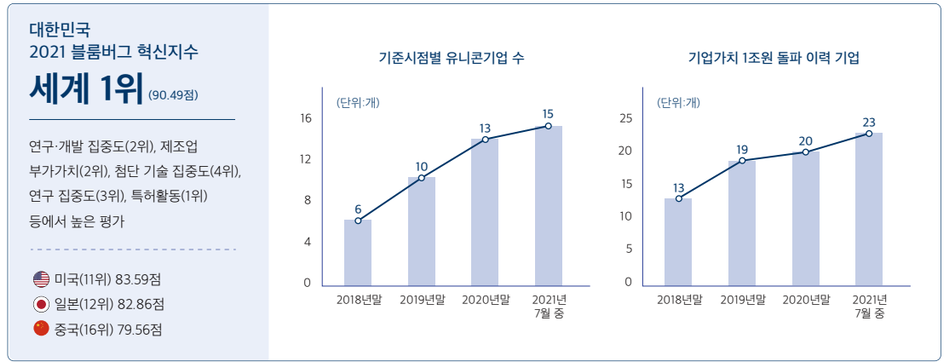
구분	’16년	’20년	’21년 (3월)
친환경차	25만대	84만대	91만대
전기차	1.2만대	14만대	15만대
수소차	94대	1.1만대	1.2만대
하이브리드	24만대	69만대	75만대

2021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 중 23위(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7위)로 역대 최고 수준 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40여 국가 중 13위(ICT 보급 및 거시경제 안정성 1위, 혁신역량 6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선도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한국국가경쟁력 순위〉



연구개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는 60여 국가 중 1위를 달성하였고, 유니콘 기업(글로벌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은 2021년 7월 기준 15개(매체별 유니콘 기업 현황을 상이하며, 조사 시점에 따라 유니콘 기업 현황은 변동 가능)로 전 세계 6위를 기록하였다.



라. 복지를 확장한 정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국민 단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였고,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하는 사회발전지수(SPI : Social Progress Imperative)는 2020년 163개 국가 중 17위로 전년도 23위 대비 5단계 상승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OECD 더 나

은 삶 지수는 2020년 4.69점으로 35개 국가들 중 28위로 2018년 30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OECD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35개 국가들 중 28위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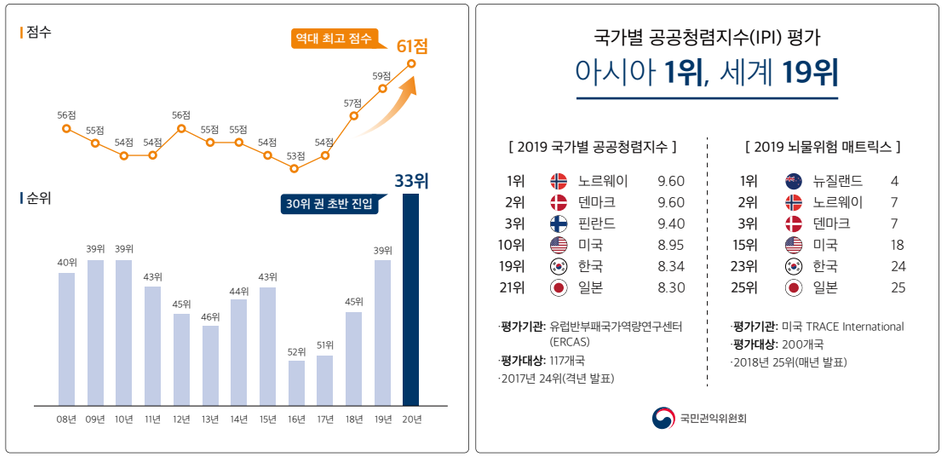
Tier 1			Tier 2		
Rank	Country	Score	Rank	Country	Score
1	Norway	92.73	14	Luxembourg	89.56
2	Denmark	92.11	15	Austria	89.50
3	Finland	91.89	16	Belgium	89.46
4	New Zealand	91.64	17	Korea, Republic of	89.06
5	Sweden	91.62	18	France	88.78
6	Switzerland	91.42	19	Spain	88.71
7	Canada	91.40	20	United Kingdom	88.54
8	Australia	91.29	21	Portugal	87.79
9	Iceland	91.09	22	Slovenia	87.71
10	Netherlands	91.06	23	Italy	87.36
11	Germany	90.56	24	Estonia	87.26
12	Ireland	90.35	25	Czechia	86.69
13	Japan	90.14			

그리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수당 도입,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공공의료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 한국형 상병 수당 도입 등 많은 국정 성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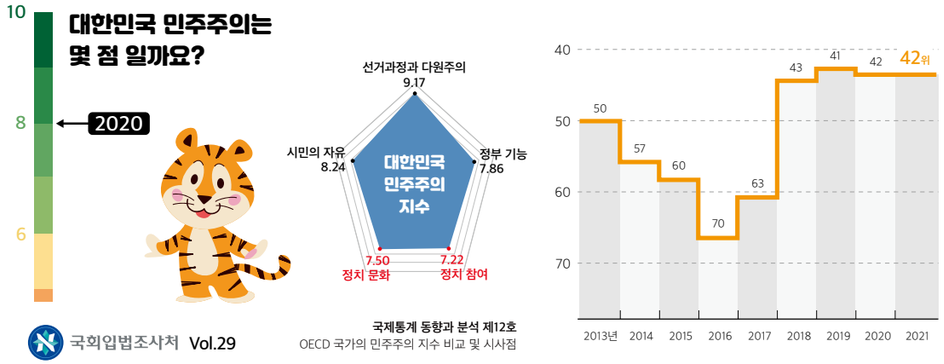
마. 권력을 개혁한 정부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 위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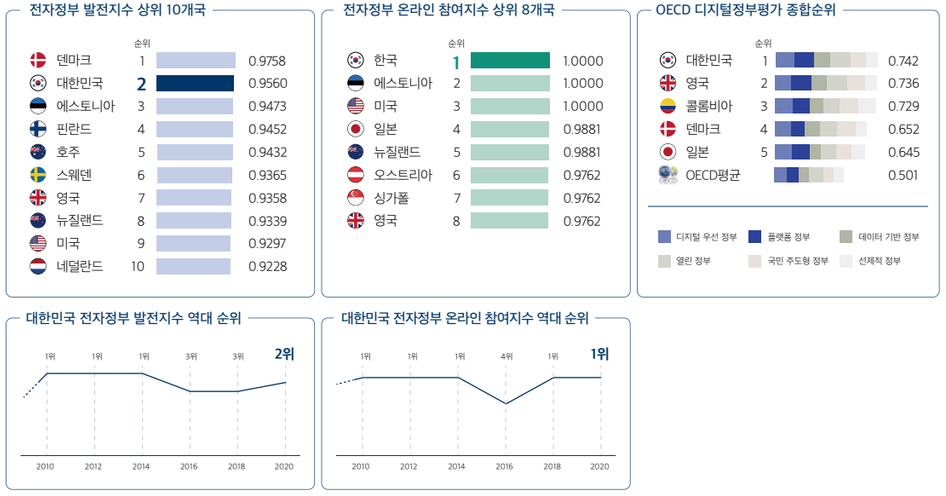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2020년 180개국 중 33위(61점)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다.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여 총 19순위 상승하였고,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하였다. 그리고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 Index of Public Integrity)도 2019년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달성하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0년 평균 8.1점으로 '과거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다. 이와 더불어 국경없는기자회(RSF)에서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2021년 전체 42위, 아시아 1위를 달성하였고, 국경없는기자회는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자유의 모델이라 평가하였다.



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전자정부발전지수 종합 지수는 193개 국가들 중 2위, 온라인참여지수는 1위를 기록하였고, 2021년 OECD 디지털 정부평가에서는 총 33개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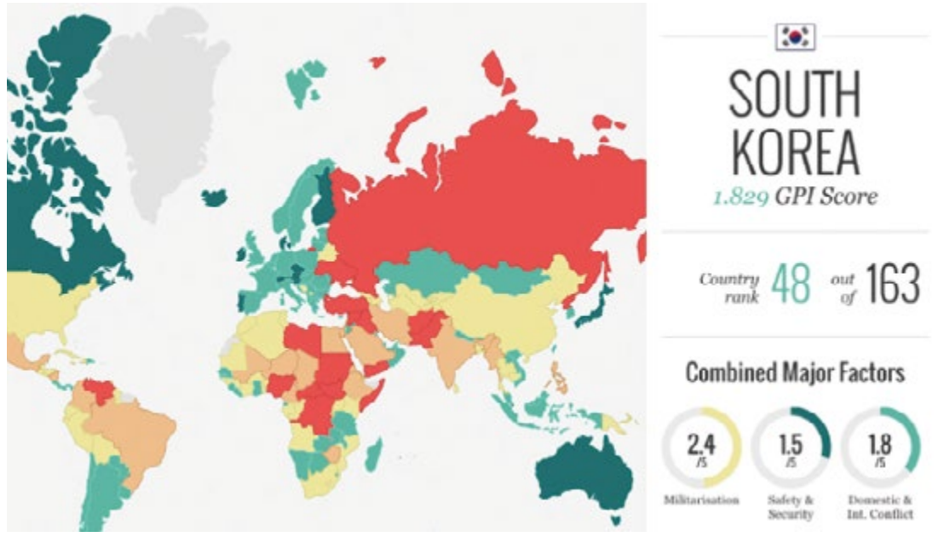


바. 평화시대를 연 정부

문재인 정부는 협력적 균형외교와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과 경제적 성과를 통해 제고된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선진국은 물론이고 저개발국들과 공유하고 협력적 발

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들은 여러 국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세계평화 지수(IEP :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는 2020년 163개 국가 중 48위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G7 정상회의는 2년 연속(2020년, 2021년) 초청받았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첫 환경 분야 다자회의(P4G)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하였고, 디지털 혁신 APEC 기금 창설 논의를 주도하였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참여하였고, 한·인도네시아 CEPA를 타결하였다.







6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회 활동

제1절 | 언론보도 **724**

1. 주요 언론보도 내용 724
2. 한국판 뉴딜 TV토론회 개최 현황 740

제2절 | 뉴미디어 채널 **742**

1. 뉴미디어 운영 현황 742
2. 연도별 운영 현황 743

제1절 언론보도

1. 언론보도

정책기획위원회는 2017년 출범부터 현재까지 한 해 평균 5,000여 건의 정책관련 언론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전반기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관련 아젠다가 언론의 관심이 높았고 산하특위의 출범과 함께 계기성 보도가 많았고, 후반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청공감 한국판 뉴딜 대토론회와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중심으로 지역지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 경청공감 한국판 뉴딜 대토론회는 현장토론회와 별도로 전남 광주, 충청 대전, 부산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대구 경북, 강원 지역 방송사를 통해 총 9차례 방송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구분	언론보도	기고문	총합
’18.	4,855건	123건	4,978건
’19.	7,448건	237건	7,685건
’20.	7,360건	253건	7,613건
’21.	2,833건	146건	2,979건
’22.	1,717건	41건	1,758건



“민생·개혁 속도전”… 2019 건국 100주년 청사진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연휴 후 업무복귀 첫 일성으로 ‘민생·개혁 용왕매진(勇往邁進)’을 다짐했다. 아울러 ‘2019 건국 100주년’ 기념 및 향후 백년대계 준비를 지시했다.

[세계일보] 민생·개혁 속도전 … 2019 건국 100주년 청사진 당부도('17.10.11.)



"개헌, 국회가 안움직이니...정부案 지금부터 준비나설것"

[매일경제] 개헌, 국회가 안움직이니… 정부案 지금부터 준비나설것('18.2.5.)



"최저임금 16.4% 인상에 우리도 놀라...조선업 구조조정 시간줘야"

매일경제] 최저임금 16.4% 인상에 우리도 놀라…조선업 구조조정 시간줘야('18.2.5.)



회의실→떡국오찬→회의실...자리옮기며 200분 끝장토론

△7일 서울 청성동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집단토론을 하던 매경 데스크들과 정책기획위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회담하고 있다. 맨 앞줄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과 서양원 매경 편집국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양측 대부분은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이동해 1시간 동안 추가 토론을 했다. [김호영 기자]

[매일경제] 회의실→떡국오찬→회의실 자리옮기며 200분 끝장토론('18.2.5.)



[단독]정해구 "文정부의 개헌안, 4년 연임제 가닥"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장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문화일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사 diverkim@

[문화일보] 文정부의 개헌안 4년 연임제 가닥('18.3.6.)



매일경제

mk.co.kr
2018년 2월 5일 월요일

靑정책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유연하게"

美 채권값·주가 폭락

[매일경제] 靑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유연하게" ('18.2.5.)



16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방향

"혁신성장 출발은 공정 기회… '혁신의 주체' 키워 국민성장 주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성장분과 위원들에게 듣다

[디지털타임스] "혁신성장 출발은 공정 기회…'혁신의 주체' 키워 국민성장 주도"('18.3.6.)



정해구 "기본권에 주거권 신설… 청년세대, 공공주택 요구 가능해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헌법 개정 자문안에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기본권 조항 중엔 생명권, 환경권, 주거권 등이 신설됐다. 생명권의 경우 사형제도 폐지와 연결될 수 있어 관심이다. 정 위원장은 "1987년 이후 새롭게 부상된 기본권이 상당히 많다"며 "시대 변화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헌법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빼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표현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야권 반발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일보] "기본권에 주거권 신설… 청년 세대, 공공주택 요구 가능해져"('18.3.19.)



대통령 개헌안 초안서 '檢 영장청구 독점' 조항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은 초안을 단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헌법 개정 자문안에서 뺐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도 폐지와 연결될 수 있는 생명권 관련 기본권 조항은 신설됐다. 개헌이 성사될 경우 사법제도에 일대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영장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에 기록돼 있어 그걸 법률적으로 바꿀 수

[한국일보] "대통령 개헌안 초안서 '檢 영장청구 독점' 조항 삭제"('18.3.19.)



대통령 개헌 화두에 주판알 튕기는 소리

3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대통령이 개헌 정국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 개헌 적기다" "이 시기에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아주 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준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했고, 무엇보다 국회 의석 분포가 불리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101석)을 넘긴 116석을 보유한 이상,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 1회 연임제를 내걸면 개헌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선명한 권력구조 구상을 천명했으니, 개헌 정국은 이렇게 면, 2022년 지방선거를 6월에서 3월로 당겨 대선과 함께 치를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체제의 규칙성이 높아진다. 대선·지방선거와 총선이 2년 주기로 교차하게 된다. 대통령은 4년 임기 반환점을 돌 때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1회 연임까지 고려하면, 정부는 8년 임기 중 2년마다 총선·대선·총선을 치르면서 평가를 받는 셈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식 제도에 가까워진다. 이 2년 단위 권국선거 모델에서는, 총선이 대선 직후에 열려 입법부를 손쉽게 장악하는 '이명박식 행운'은 사라진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한나라당은 4개월 만에 총선이 열린 탁에 153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5년 단임 임기 중에 두 번의 중간평가(총선·지방선거)가 불규칙하게 돌아오는 헌행 모델이 파도하고 헙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러려면 개헌 시점이 중요해진다. 지방정부 임기 단축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개헌을 확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 지방선거·개헌 동시

[시사인] 대통령 개헌 화두에 주판알 튕기는 소리('18.3.22.)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한국일보] 정해구 "국민 다수 배제하지 않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18.3.19.)



시사IN 제549호-국민헌법('18.3.19.)



'네고시에이터' 문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 승부수

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조정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네고시에이터' 문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 승부수('18.3.26.)

"서구 민주주의 위기...가부장적 정치 방식인 정당 넘어설 제도 필요"



14 기획 경향신문

"서구 민주주의 위기… 가부장적 정치 방식인 정당 넘어설 제도 필요"

촛불과 새로운 민주주의

[경향신문] 서구 민주주의 위기… 가부장적 정치 방식인 정당 넘어설 제도 필요('18.5.25.)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정부 성과 모르겠다는 게 국민 평가… 하반기엔 가시적 성과 내야"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64)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랐은 올바지만 성과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평가"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를 해는 방식이 아닌, 북·미 관계 진전과 더불어 한국도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해나가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정부 성과 모르겠다는 게 국민 평가… 하반기엔 가시적 성과 내야('19.12.12.)

"국민의 요구 받든 게 경제과제 성공의 원동력"



〈위클리 공감〉은 문재인정부 2년 반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가 사회를 맡고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좌담회를 '경제'와 '사회' 주제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공감] "국민의 요구 받든 게 경제과제 성공의 원동력"('19.12.16.)

포용과 혁신이 선순환해 따뜻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청사진



이태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왼쪽부터), 이창근 한거레경제사회연구원장, 김현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좌담하고 있다 박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겨레] 포용과 혁신이 선순환해 따뜻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청사진('19.12.23.)

문 대통령,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위촉장 수여…"어느때보다 중요한 역할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제민 부의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위촉됐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과 서형수 간사위원은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전자신문] 문 대통령,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위촉장 수여…('20.1.30.)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위클리 공감〉은 문재인정부 2년 반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가 사회를 맡고 정해구 당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좌담회를 '경제'와 '사회' 주제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공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19.12.23.)

문 대통령,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악수



[연합뉴스] 문 대통령,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악수('20.2.11.)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노사 힘 합쳐야"



[파이낸셜뉴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노사 힘 합쳐야"('20.3.26.)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뉴스1]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20.5.7.)

[文정부 3년] ⑤ 조대엽 "노사정 절실함 부족...경사위 포괄 넓은 대화틀 필요"



[연합뉴스] [文정부 3년] ⑤ 조대엽 "노사정 절실함 부족...경사위 포괄 넓은 대화틀 필요"('20.5.7.)

정책기획위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새 시대 열 것"



개회사 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이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정책기획위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새 시대 열 것"('20.7.23.)

박병석 국회의장-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사회적갈등 통합과제' 환담



박 의장은 “한국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함께 성공한 나라인데, 아직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현재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눔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사회적갈등 통합과제' 환담('20.11.13.)

“코로나 시대 경제, 사람 키우는게 답”



중앙일보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공동 개최한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콘퍼런스'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콘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둘째)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오른쪽).

[중앙일보] "코로나 시대 경제, 사람 키우는게 답"('20.11.23.)

정세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 위한 국가발전 전략"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인류가 쌓아온 문명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며 “정부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3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대응과 미래’를 주제로 중앙일보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가 공동 개최한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콘퍼런스’에서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축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이라며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정세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 위한 국가발전 전략"('20.11.21.)

포스트 코로나 시대…“K-방역과 인공지능, 그린 뉴딜로 새로운 산업동력 찾아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중앙일보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컨퍼런스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정와대 정책실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 11개월이 흘렀다.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60만여 명 쏟아질 정도로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코로나 백신이 마지막 임상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K-방역과 인공지능, 그린뉴딜로 새로운 산업동력 찾아야"('20.11.22.)

“빚보다 민생이 먼저…5차 지원금·기본소득 논의해야”



[모네타뉴스] "빚보다 민생이 먼저…5차 지원금·기본소득 논의해야"('21.3.26.)

文정부 4년간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실현 토대 마련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

[기호일보] 文정부 4년간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실현 토대 마련('21.5.14.)

[아시아초대석]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민이 정책효과 느끼게 할 것"

내달 3일 집현포럼서 '모병제' 공론화…조 위원장 "성차별 이슈 넘어 '청년·여성 일자리 해법' 차원"



[아시아경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민이 정책효과 느끼게 할 것"('21.5.17.)

[아시아초대석]文 대통령과 두 번의 대선 함께한 '싱크탱크 멤버'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아시아경제] 文 대통령과 두 번의 대선 함께한 '싱크탱크 멤버'('21.5.17.)

정부싱크탱크·민간학회 총망라된 '국가비전회의' 개최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오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



[정책브리핑] 정부싱크탱크·민간학회 총망라된 '국가비전회의' 개최('21.12.1.)

2. 한국판 뉴딜 TV토론회 개최 현황

한국판 뉴딜 정책과 지역기반 뉴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언론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홍보를 통해 권역별 공감과 소통을 위한 TV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결과 및 진행 현황〉



MBC 광주 / 저녁 7시30분 / 라이브('20.11.10.)
김진우, 윤순진, 김준하, 이민원



KBS 대전 / 저녁 7시40분('20.11.27.)
김준하, 고명구, 양흥모, 진종헌



KBS 창원 / 저녁 7시40분, 라이브('20.12.11.)
최상한, 김준하, 김진우, 진종헌



KBC 광주 / 본방 8시30분(토), 재방 18시55분(월)('20.12.12.)
김준하, 오재학



MBC 경남 / 18시15분, 경남부산 방송('20.12.22.)
남종석, 진종헌, 김준하, 최상한



KNN 부산경남 / 본방 7시40분(일), 재방 12시50(월)('21.1.3.)
윤순진, 진종헌, 조민호, 배수현



KBS 전북 / 22시, 라이브('21.2.23.)
김준하, 소준노, 추장민, 임성진



KBS 대구 / 19시40분('21.7.9.)
홍의락, 박태균, 임운택, 이재경



G1강원방송 / 18시 50분 라이브('21.7.15.)
김원동, 이기원



제2절

뉴미디어 채널

1. 뉴미디어 운영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자 정책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는 자문기구로 민간 위원 100여명이 참여해 활동하였다. 위원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이 곧 콘텐츠”라는 마인드로 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였다.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메인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쉽고 간편하게 제작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위원회 활동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 개설 이후 순차적으로 뉴미디어 채널을 오픈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뉴스레터 등을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유튜브 채널은 정책기획위원회TV와 국정과제협의회 채널인 아하TV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TV는 전반기에는 홍보영상 및 정책분야 토크 프로그램인 정말통(정책을 말했더니 통했다)에 위원들이 출연하여 10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토크를 진행하였다. 후반기에는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토론회와 대한민국 집현포럼 행사를 현장에서 라이브로 중계하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하TV는 주관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참여하여 분야별 국정과제와 시기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정책 소통과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2. 연도별 운영 현황

〈2018년 뉴미디어 운영 실적〉

구분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총합
건수	391건	387건	66건	844건

〈네이버 블로그 (391건)〉



정책기획위원회, 첫걸음을 내딛다
출범식 및 출범기념 토론회



[카드뉴스]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2.7.)



[카드뉴스]
문재인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와의 오찬 간담회(2.22.)



[카드뉴스]
국민헌법 자문안 기자간담회(3.13.)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정책기획위원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책기획위원회가 걸어온 길



[카드뉴스]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현장 이야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정말통(정책을 말했더니 통했다) 영상 공유 이벤트



[카드뉴스]
비혼 출산 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영상]
정말통(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의료복지편) 14편

<페이스북 (387건)>



정책기획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개설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 토론회 예고



[이벤트] 여러분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정책 아이디어 ucc 공모전



정말통 영상공유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정말통 영상 공유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정책기획위원회 페이스북 친구맺기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카드뉴스 3탄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기획위원회와의 오찬 간담회



정말통 영상공유 이벤트 당첨자 발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정책 토론회 안내

<유튜브 (6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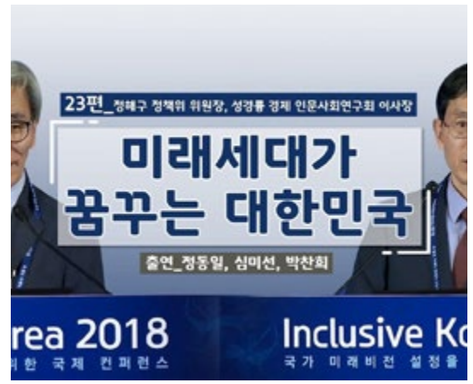
정말통 예고편



생활SOC가 가져올 변화
친절한 정책 설명서 Ep.3



질문에서 답을 찾다
정책기획위원회 홍보영상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
정말통 Ep.23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2018 Inclusive Korea



신남방정책 한 방에 정리해드림
친절한 정책 설명서 Ep.1

〈2019년 뉴미디어 운영 실적〉

구분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총합
건수	563건	516건	20건	1,099건

〈네이버 블로그 (563건)〉



[영상] 친절한정책설명서 특별편.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100년 전 역사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영상] 친절한정책설명서 제5편.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



[오늘의 한 컷]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개회사 전문



[오늘의 한 컷]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환영사 전문



[기고] '강성귀족노조' 알리바이



[기고] 학문 연구자의 보호가 절박하다



[기고] 노회찬 없는 진보정치의 미래



[기고] 신남북통상



인터뷰로 보는 문재인 정부 2년의 기록!



추석 유튜브 영상후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페이스북 (516건)〉



호국 보훈의 달 6월 퀴즈 이벤트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기념 퀴즈 이벤트



동북아 정세와 한일관계 정책 세미나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2년의 기록



제헌절 기념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2년의 변화와 성과



정책기획위원회 추석 이벤트 유튜브 영상 후기 이벤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축하이벤트 당첨자 발표



인터뷰로 보는 문재인 정부 2년의 기록



광복절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



문재인 정부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Invlusive Korea 2019 행사 소개

<유튜브 (20건)>



광주형일자리 한 방에 정리해드림
친절한 정책 설명서 Ep.4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기념영상



도시의 허파를 지키는 방법
친절한 정책 설명서 Ep.6



정책기획위원회 2년, 희망을 만들어가다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2주년



[Live]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_개회식



[Live]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
Session 2.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 가다_국민성장분과 위원편
동방경제포럼 인터뷰 Ep.1



환경, 안전, 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에너지전환 정책 |
친절한 정책 설명서 Ep.8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님의 실시간 스트리밍



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
청년정책 새로운 좌표 설정 토론회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Inclusive Korea 2019 국제컨퍼런스



영농정착지원 A to Z
친절한 정책 설명서 Ep.10

〈2020년 뉴미디어 운영 실적〉

구분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총합
건수	343	351	24	718

〈네이버 블로그 (343건)〉



[기고] 코로나에 맞설 4가지 긴급 처방



[기고] 급한 불 끄면 한중일 거리 좁히기 시작해야



[기고] AI와 인간의 공존



[기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리고 한국



[기고] 디지털 유료 구독 늘어난 르몽드의 '독자 퍼스트'



[기고] 초연결생존 사회,
사회안전망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정토론회] 문재인 정부 3주년 국가정책토론회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약속



[아하TV] 21세기 대한민국 총.균.쇠



[분과인터뷰] 인터뷰로 보는 문재인 정부 3주년



[카드뉴스] 분과인터뷰로 보는 문재인 정부 3주년

〈페이스북 (351건)〉



[기고] 시민이 이기는 선거



[기고] 공공병원 확충, 범정부적 노력 필요하다



아하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이벤트



정책기획위운회 소문내기 이벤트



[기고] 바이든과 미국 민주주의가 맞이할 혹독한 겨울



[기고] 여론의 법정



인터뷰로 보는 문재인 정부 3년_김공회 위원



인터뷰로 보는 문재인 정부 3년_황재호 위원



[기고] 이해충돌과 그 해법



[기고] 비정상적인 휴전상태를 끝내야 하는 이유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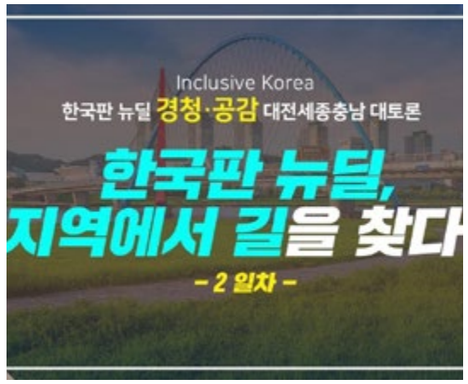


아하TV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유튜브 (24건)>



[LIVE]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1일차
광주·전남 편



[LIVE]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2일차
광주·전남 편



[LIV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2일차)



[LIVE]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1일차)



[스케치]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한국과 G2



[LIVE]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
(위기를 기회로, 위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LIVE]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
(위기를 기회로, 위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LIVE]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



[스케치]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



친절한 정책설명서 "힘내라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기획인터뷰] 김인숙 위원을 만나다



[기획인터뷰] 여석주 위원을 만나다

〈2021년 뉴미디어 운영 실적〉

구분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총합
건수	156건	223건	29건	408건

〈네이버 블로그 (156건)〉



[기고] 한국판 뉴딜과 새로운 대한민국



[기고]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새해 한국경제의 희망



[기고] 메가시티기반 '유연한 3+2+3' 초광역전략



[기고] 함량 미달의 미·중 알레스카 회담



[기고] 한국 부패사의 핵심은 제대로 된 처벌의 부재



[기고] 우리는 정말 자본주의에서 사는 걸까



[카드뉴스]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대구·경북편 개최식의 생생한 현장



[카드뉴스]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대구·경북편 1일차의 생생한 현장은?



[카드뉴스]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3, 4, 5세션 및 특별 세션



Inclusive Korea 2021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컨퍼런스

〈페이스북 (223건)〉



[기고] 20년 전쟁, 미국의 패배가 주는 교훈



[기고] 자치는 그것 자체로 정상



[기고] 대륙, 해양세력은 낡은 개념?



[기고] 아프간 사태와 한반도 평화



[기고] 사회적 행동과 도시



[기고] 제주인과 제주해병



제4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말하다



인터뷰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정책기획위원회 웹툰 구독 이벤트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지역균형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국민 소통 시리즈 후기 이벤트 2탄

<유튜브 (29건)>



[LIVE] 한국판 뉴딜,지역에서 길을 찾다 1일차 대구경북 편



[LIVE] 한국판 뉴딜,지역에서 길을 찾다 2일차 대구경북 편



[LIVE]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KOR] 1일차



[LIVE]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KOR] 2일차



[LIVE]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LIVE]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LIVE] 2021 한국유엔체제학회 하계학술대회(1세션)



[LIVE] 2021 한국유엔체제학회 하계학술대회(2세션)



[LIVE] Inclusive Korea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ENG]



[LIVE] 한국판 뉴딜 제4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스케치]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스케치 영상



[LIVE] 제2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수소경제,
한국판 뉴딜을 이끌다

부록

1. 정책기획위원회 주요 행사 타임라인 768

2.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72

3.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776

4. 정책기획위원 현황 784

5. 특별위원·자문위원 현황 795

6. 위원회 사무처 직원 현황 803

7. 국민소통 시리즈 810

8. 언론 및 뉴미디어 보도 현황 812

정책기획위원회 주요 행사

타임라인



2017

10.10.
정해구 위원장 위촉장 수여

10.10.
정책기획위원회 준비
워크숍 개최

10.10.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2018

2.7.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개헌준비 관련 기자간담회

2.1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개최

2.20.
정책세미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

2.23.
정책기획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

3.2.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3.5.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춘추관 상주기자단 간담회

3.7.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3.12.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3.1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자문안 기자간담회

3.30.
제1차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4.5.
정책세미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4.6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MOU)

4.9.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 출범식

4.13.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

5.24.
Inclusive Korea 2018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표용국가

6.26.
제2차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7.23.
정책세미나
자치분권 시대 사회혁신과
중앙-지방 협력방안 모색

8.28.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현판식

9.6.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9.6.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전체회의

9.14.
정책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9.14.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

10.17.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

10.30.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 정책세미나 개최

11.6.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위,
중소 중견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

11.21.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

12.18.
정책기획위원회-민주연구원,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심포지엄

12.20.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2019

1.17.
2019년 상반기
정책기획위원회 워크숍

1.18.
정책기획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2.22.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4.10.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상하의 기념행사

4.11.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7.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5.21.
중국 국무원 참사실 대표단 방문

8.13.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관계 모색을
이한 정책세미나

8.14.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8.30.
정책기획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9.4.
2019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11.4.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휴과제'
토론회

11.18.
청년정책의 새로운 좌표 설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11.20.
"Inclusive Korea 2019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국제컨퍼런스

12.12.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

12.20.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취임

12.27.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 위원장 초청 만찬



정책기획위원회 주요 행사

타임라인

2020

1.30.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1.31.
문재인 대통령,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위촉장 수여

5.1.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한국과 G2

5.7.
문재인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

7.9.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7.23.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효과 정책세미나

7.29.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

10.14.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역·경제 위기 극복 대토론회-"K-방역, K-경제의 길을 찾다"

11.13.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광주전남)

11.26.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대전, 세종, 충남)

11.27.
정책기획위원회·중앙일보 공동 개최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컨퍼런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의
역할 변화" 정책세미나

12.4.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 개최





2021

1.5.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위촉

1.26.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장단 임명장 수여

2.1.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안전망
분과장단 임명장 수여

2.1.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그린뉴딜
분과장단 임명장 수여

2.4.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지역전략
분과장단 임명장 수여

2.26.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전북도지사 방문

3.3.
한국판 뉴딜
「제1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한국판 뉴딜, 새마을을 만나다"

3.5.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경북도지사 방문

3.5.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안동시장 방문

4.6.
'디지털 뉴딜' 인력 양성 현장 폴리텍
인천캠퍼스 방문

4.13.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대구·경북)

4.13.
한국판 뉴딜의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

4.22.
한국판 뉴딜
「제2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수소경제, 한국판 뉴딜을 이끌다"

5.6.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략

5.12.
AI기술인재 양성 공동선언 및 업무협약

5.20.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전북)

5.20.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전북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5.20
한국판 뉴딜 전북지역
국정자문단 간담회

5.2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전북
공공기관장 간담회

5.2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전북
대학총장 간담회

5.21.
새만금 현장 방문

6.3.
한국판 뉴딜
「제3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모병제 : 지속가능한 병역과
한국판 뉴딜"

6.21.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6.21.
강원도 대학 총장 간담회

6.22.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강원)

6.22.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6.22.
한국판 뉴딜 강원지역
국정자문단 간담회

6.23.
강원지역 공공기관장 간담회

6.30.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개최

7.6.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9.15.
한국판 뉴딜
「제4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미래가치를 말하다 : 청년과 정의"

10.1.
「대통령 8개 위원회 공동토론회」,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0.26.
한국판 뉴딜
「제5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지역균형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11.10.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부산, 울산, 경남)

11.17.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12.1.
한국판 뉴딜
「제6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12.2.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12.15.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민주주의의 진화







2022

1.18.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1.28.
제34회 국정과제협의회 개최

3.17.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과제' 정책간담회

4.7.
대통령 기록 전시관 방문

4.1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최

4.14.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현장 방문

4.14.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21권
발간 출판기념회

2.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75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정과제의 조정 등 국정과제 추진 및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4.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5.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하 “국정과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통령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국정과제 관련 보고회)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 보고 및 관리·점검 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를 지원한다.

제10조(국정과제협의회) ①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

④ 협의회는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국정과제위원회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미래정책연구단장 등) 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둔다. 이 경우 단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년 2월 20일>

제13조(자문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국정과제의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 자문위원, 특별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사무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년 2월 20일>

부칙 <제28269호, 2017년 9월 5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5호, 2018년 2월 20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17년 12월 19일
개정 2018년 1월 10일
개정 2018년 2월 22일
개정 2018년 4월 20일
개정 2018년 9월 14일
개정 2019년 1월 18일
개정 2019년 8월 30일
개정 2020년 2월 27일
개정 2020년 12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의 의제 결정
3. 위원회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4. 회의록의 승인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은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11조에 따른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 영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영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특별위원, 제13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 제14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토의사항과 그 내용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3장 국정과제협의회

제5조(구성) 영 제10조에 따른 국정과제협의회는 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그 밖의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① 국정과제협의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국정과제협의회는 의제의 사전조율 등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에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정과제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7조(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주권 분과위원회
2. 국민성장 분과위원회
3. 포용사회 분과위원회
4. 지속가능 분과위원회
5. 분권발전 분과위원회
6. 평화번영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분과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미리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함에 있어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기구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행한다.

제9조(소관업무) ① 국민주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5.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국민성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6.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포용사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지속가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노동존중, 성평등을 실현하는 차별없는 공정 사회
2.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안전, 환경 등)
3.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4.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 분권발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4.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⑥ 평화번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⑦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⑧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업무에 대해 세부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분과 및 분과 운영소위) ① 분과위원회는 특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에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소분과의 장(이하 “소분과장”이라 한다)은 소관 분과위원장이 소관 분과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이하 “분과 운영소위”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운영소위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이 겸임하되, 각 분과

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과 소관 분과위원회의 소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소분과 및 분과 운영소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운영) ① 영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 간 협의·조정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기구의 장, 미래정책연구단장, 국정과제지원단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함에 있어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기구의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행한다.

제12조(운영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특별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영 제12조에 따라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각각 30명 이내의 위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촉위원이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기타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 ① 영 제14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필요시 소관사무 중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해당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하부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소관업무) 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신남방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남방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부처별 추진범위 조율에 관한 사항
3. 신남방정책 관련 부처별 협력사업 발굴·추진실적 및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소득주도성장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방안 및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

제16조(구성·운영) ① 영 제13조에 따라 두는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에게는 전문적인 연구·조사업무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타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사무기구

제17조(구성·운영) ① 영 제14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이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의 요청 및 작성
2. 각 위원에 대한 회의 자료의 배포
3. 위원장에 대한 주요 안건의 상정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는 기획운영국, 국정과제국, 국정연구국, 전략홍보실, 신남방정책추진단, 소득주도성장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사무처에는 처장 밑에 단장, 국장, 실장을 두며, 단장과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실장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는 처장, 단장, 국장, 실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⑤ 사무처의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사무처의 기획운영국장은 위원회 운영 총괄 및 대외협력, 국정과제국장은 국정과제 조정 및 점검·관리 소통 지원, 국정연구국장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현안 연구 및 연구기관간 협력, 전략홍보실장은 위원장 정책 보좌 및 홍보기획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남방정책추진단장과 소득주도성장추진단장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⑦ 기타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보칙

제18조(경비집행) ① 영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회의 위원, 미래정책연구단장 및 국정과제지원단장, 자문위원, 특별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②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위원회 파견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사 및 복무 등) ①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영 제20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를 포함한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무처의 직원에 대하여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4. 정책기획위원 현황

〈제1기〉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분과)
1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7.9.12.~'19.9.11.	위원장
2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원	'18.11.12.~'19.12.14.	평화번영
3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7.12.15.~'19.12.14.	평화번영
4	고석규	목포대 총장	'17.12.15.~'19.12.14.	포용사회
5	곽병창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17.12.15.~'19.12.14.	지속가능
6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17.12.15.~'19.12.14.	분권발전
7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17.12.15.~'19.12.14.	분권발전
8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9	김경미	성균관대 의과대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10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11	김국진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17.12.15.~'19.12.14.	지속가능
12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17.12.15.~'19.12.14.	국민주권
13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8.11.12.~'19.12.14.	평화번영
14	김명환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15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7.12.15.~'19.12.14.	평화번영
16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장	'17.12.15.~'19.12.14.	분권발전
17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11.12.~'19.12.14.	포용사회
18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17.12.15.~'18.11.21.	포용사회
19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17.12.15.~'18.3.7.	국민성장
20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21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7.12.15.~'19.12.14.	평화번영
22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17.12.15.~'18.5.14.	국민성장
23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24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25	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8.12.15.~'19.12.14.	국민성장
26	김인회	인하대 법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27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28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18.1.10.~'20.1.9.	국민주권
29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17.12.15.~'19.12.14.	지속가능
30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17.12.15.~'19.8.24.	평화번영
31	김지미	김지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17.12.15.~'19.12.14.	국민주권
32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12.15.~'19.12.14.	평화번영
33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7.12.15.~'19.11.12.	지속가능
34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17.12.15.~'19.12.14.	지속가능
35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7.12.15.~'19.12.14.	평화번영
36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3.~'21.1.2.	포용사회
37	류건우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38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12.19.~'20.12.18.	지속가능
39	문성종	제주한라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17.12.15.~'19.12.14.	분권발전
40	문장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17.12.15.~'19.12.14.	평화번영
41	박경환	전남대 지리교육과 교수	'17.12.15.~'19.12.14.	분권발전
42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8.1.10.~'20.1.9.	국민성장
43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7.12.15.~'19.6.19.	포용사회
44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17.12.15.~'19.5.21.	분권발전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분과)
45	박진희	우석대 간호학과 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46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17.12.15.~’19.12.14.	지속가능
47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48	배기찬	국립외교원 겸임교수	’17.12.15.~’19.12.14.	평화번영
49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18.1.10.~’20.1.9.	국민주권
50	서유경	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51	서형원	청암대 총장	’17.12.15.~’19.12.14.	평화번영
52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53	성정현	특허법인 충정 대표변리사	’17.12.15.~’19.12.14.	국민성장
54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17.12.15.~’19.12.14.	분권발전
55	소준노	우석대 제약공학과 교수	’18.1.10.~’20.1.9.	국민성장
56	손은일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17.12.15.~’19.12.14.	분권발전
57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7.12.15.~’19.12.14.	지속가능
58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17.12.15.~’18.6.4.	분권발전
59	안종주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	’17.12.15.~’19.12.14.	지속가능
60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17.12.15.~’19.12.14.	평화번영
61	어미정	경기도시공사 법무팀장	’18.1.10.~’20.1.9.	포용사회
62	오유석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18.1.10.~’20.1.9.	포용사회
63	오태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17.12.15.~’18.4.13.	평화번영
64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17.12.15.~’19.12.14.	분권발전
65	원희연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66	유남영	유남영 법률사무소 대표	’17.12.15.~’19.12.14.	국민주권
67	윤동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18.12.19.~’20.12.18.	지속가능
68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7.12.15.~’19.12.14.	지속가능
69	윤　황	선문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	’17.12.15.~’18.10.12.	평화번영
70	이건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71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72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7.12.15.~’19.12.14.	포용사회
73	이석범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18.1.10.~’20.1.9.	국민주권
74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75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18.11.12.~’19.12.14.	국민주권
76	이윤석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77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1.10.~’20.1.9.	국민성장
78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79	이　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양학부 교수	’17.12.15.~’19.12.14.	분권발전
80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19.1.3.~’21.1.2.	포용사회
81	이한주	가천대 특임부총장	’17.12.15.~’18.10.12.	국민성장
82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1.10.~’20.1.9.	국민주권
83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84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17.12.15.~’18.6.18.	국민성장
85	장영수	부경대 수산학 교수	’18.11.12.~’19.12.14.	분권발전
86	장준호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87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대표	’17.12.15.~’19.5.21.	분권발전
88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17.12.15.~’19.12.14.	국민성장
89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17.12.15.~’19.9.1.	국민성장
90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분과)
91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18.11.12.~’19.12.14.	평화번영
92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93	정희정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17.12.15.~’19.12.14.	지속가능
94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17.12.15.~’19.12.14.	국민성장
95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18.1.10.~’20.1.9.	국민성장
96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17.12.15.~’19.12.14.	국민성장
97	조의연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98	조재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17.12.15.~’19.12.14.	포용사회
99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1.10.~’20.1.9.	평화번영
100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12.15.~’18.3.30.	포용사회
101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17.12.15.~’19.12.14.	평화번영
102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8.1.10.~’18.5.4.	포용사회
10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18.1.10.~’20.1.9.	국민주권
104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7.12.15.~’19.12.14.	포용사회
105	최현선	명지대 교수	’17.12.15.~’19.12.14.	국민주권
106	한귀영	한계레신문 사회정책센터장	’18.11.12.~’19.12.14.	포용사회
107	허문경	전주대 문화관광연구소 연구교수	’17.12.15.~’19.12.14.	지속가능
108	홍기원	숙명여대 교수	’18.11.12.~’19.12.14.	지속가능
109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1.10.~’20.1.9.	포용사회

〈제2기〉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분과)
1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19.12.20.~’21.12.19. ’21.12.20.~’23.12.19.	위원장
2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21.4.30.~’23.4.29.	지속가능
3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9.12.31.~’20.5.15.	평화번영
4	곽주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20.11.27.~’22.11.26.	국민성장
5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분권발전
6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4.3.~’22.4.2.	평화번영
7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9.12.31.~’20.6.5.	평화번영
8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지속가능
9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20.4.3~’22.4.2	국민성장
10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20.4.3.~’22.4.2.	포용사회
11	김명희	(사)시만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12	김민희	대구대 사범대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13	김선남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20.4.3.~’22.4.2.	국민주권
14	김선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4.3.~’22.4.2.	포용사회
15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20.4.3.~’22.4.2.	국민주권
16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9.12.31.~’21.12.30.	평화번영
17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분권발전
18	김수이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20.11.27.~’22.11.26.	국민성장
19	김수정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분과)
20	김양현	전남대 철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주권
21	김 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22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20.4.3.~’22.4.2.	포용사회
23	김 윤	서울대 의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24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성장
25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19.12.31.~’20.3.20.	국민성장
26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	’20.4.3.~’22.4.2.	포용사회
27	김인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8.12.19.~’20.12.18.	국민성장
28	김인회	인하대 법학과 교수	’19.12.31.~’20.4.28.	국민주권
29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20.1.10.~’22.1.9. ’22.1.10.~’24.1.9.	국민주권
30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21.11.2.~’23.11.1.	지속가능
31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주권
32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성장
33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2.28.~’22.12.27.	포용사회
34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35	김진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성장
36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37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1.27.~’22.11.26.	국민성장
38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20.4.3.~’21.3.9.	분권발전
39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2.3.15.~’24.3.14.	분권발전
40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41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3.~’21.1.2. ’21.1.3.~’23.1.2.	포용사회
42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11.27.~’22.11.26.	평화번영
43	류양지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4.3.~’22.4.2.	포용사회
44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19.~’22.12.18.	지속가능
45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46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4.3.~’22.4.2.	포용사회
47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48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11.27.~’22.11.26.	국민성장
49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10.~’20.3.20.	국민성장
50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9.12.31.~’21.12.30. ’21.12.31.~’23.12.30.	지속가능
51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지속가능
52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20.4.3.~’22.4.2.	국민주권
53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19.12.31.~’21.11.8.	분권발전
54	서유경	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주권
55	소준노	우석대 제약공학과 교수	’20.1.10.~’22.1.9. ’22.1.10.~’24.1.9.	국민성장
56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1.27.~’22.11.26.	국민성장
57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분과)
58	안은희	(주)화이트스캔 대표	’20.12.28.~’22.12.27.	국민성장
59	양기호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19.12.31.~’21.11.2.	평화번영
60	양종곤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20.4.3.~’22.4.2.	국민성장
61	어미정	전 경기도시공사 법무팀장	’20.1.10.~’20.6.26.	포용사회
62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63	오현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19.12.31.~’21.12.30. ’21.12.31.~’23.12.30.	분권발전
64	원준호	한경대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주권
65	원희연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성장
66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11.27.~’22.11.26.	국민성장
67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22.3.15.~’24.3.14.	지속가능
68	윤동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18.12.19.~’20.12.18.	지속가능
69	윤순진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19.12.31.~’21.6.4.	지속가능
70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20.9.29.~’22.9.28.	분권발전
71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72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주권
73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20.4.3.~’22.4.2.	평화번영
74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지속가능
75	이석범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20.1.10.~’21.7.16.	국민주권
76	이숙정	전북대 생리활성소재학과 교수	’20.4.3.~’22.4.2.	포용사회
77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78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성장
79	이　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분권발전
80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1.1.3.~’21.5.28.	포용사회
81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82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0.4.3.~’22.4.2.	국민성장
83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4.3.~’22.4.2.	지속가능
84	장영수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분권발전
85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성장
86	전인석	한국문화재연구원 연구원	’21.11.2.~’23.11.1.	분권발전
87	정백근	경상대 의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포용사회
88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주권
89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20.4.3.~’20.4.28.	국민성장
90	정재엽	예원예술대 교양학부 교수	’21.11.2.~’23.11.1.	지속가능
91	정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92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20.11.27.~’22.11.26.	포용사회
93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실장	’20.4.3.~’22.4.2.	평화번영
94	조경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20.4.3.~’22.4.2.	평화번영
95	조민호	고려대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성장
96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20.1.10.~’20.1.31.	국민성장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비고(분과)
97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	19.12.31.~'21.12.30. '21.12.31.~'23.12.30.	지속가능
98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20.4.3.~'22.4.2.	국민주권
99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20.4.3.~'22.4.2.	분권발전
100	차창훈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101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이사	'21.5.28.~'23.5.27.	지속가능
102	최민식	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20.4.3.~'22.4.2.	국민성장
10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20.1.10.~'22.1.9. '22.1.10.~'24.1.9.	국민주권
104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20.4.3.~'22.4.2.	지속가능
105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국민성장
106	최인이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20.4.3.~'22.4.2.	지속가능
107	최정묵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공공의창 간사	'20.4.3.~'22.4.2.	국민주권
108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20.12.28.~'22.12.27.	국민성장
109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2.28.~'22.12.27.	국민주권
110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12.31.~'21.12.30. '21.12.31.~'23.12.30.	지속가능
111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4.3.~'22.4.2.	국민주권
112	한귀영	한계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19.12.31.~'21.12.30. '21.12.31.~'23.12.30.	지속가능
113	허진아	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0.12.28.~'22.12.27.	분권발전
114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115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9.12.31.~'21.12.30. '21.12.31.~'23.12.30.	평화번영

5. 특별위원·자문위원 현황

〈특별위원〉

이름	소속 및 직위	임기
김세용	전 SH공사 사장	'20.3.14.~'22.3.13.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20.3.14.~'22.3.13.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3.14.~'22.3.13.
허승철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20.3.14.~'22.3.13.
유재일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20.3.14.~'22.3.13.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20.3.14.~'22.3.13.
백준기	통일교육원 원장	'20.3.14.~'22.3.13.
조흥식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9.3.14.~'22.3.13.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19.3.14.~'22.3.13.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19.3.14.~'22.3.13.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19.3.14.~'22.3.13.
윤 황	충남연구원장	'19.3.14.~'22.3.13.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9.3.14.~'22.3.13.
이정동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19.3.14.~'22.3.13.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5.9.~'22.5.8.

〈자문위원〉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1	강 성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수석부사장	’20.11.24.~’22.11.23.
2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20.11.24.~’22.11.23.
3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19.6.26.~’22.6.25.
4	강일국	목포대 교육학과 교수	’19.6.26.~’22.6.25.
5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장	’20.11.24.~’22.11.23.
6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	’20.6.26.~’22.6.25.
7	권소진	CHRD 대표이사	’20.6.26.~’22.6.25.
8	권유홍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	’20.5.28.~’22.5.27.
9	권혁동	서울과기대 글로벌융합산업학과장	’20.6.26.~’22.6.25.
10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6.26.~’22.6.25.
11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19.5.28.~’22.5.27.
12	김길수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	’20.5.28.~’22.5.27.
13	김동택	서강대 국제한국학과 교수	’19.6.26.~’22.6.25.
14	김두철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20.11.24.~’22.11.23.
15	김무겸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19.6.26.~’22.6.25.
16	김무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기술원	’20.11.24.~’22.11.23.
17	김서용	PA파트너스 대표	’20.11.24.~’22.11.23.
18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9.21.~’22.9.20.
19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20.11.24.~’22.11.23.
20	김열홍	고려대 의료사업단장	’20.11.24.~’22.11.23.
21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20.11.24.~’22.11.23.
22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부원장	’19.6.26.~’22.6.25.
23	김유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5.28.~’22.5.27.
24	김장일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 부위원장	’20.9.21.~’22.9.20.
25	김재경	커뮤니티와 경제 소장	’20.11.24.~’22.11.23.
26	김재국	전남대 연구처장	’20.9.21.~’22.9.20.
27	김재진	오스테오시스 연구소장	’20.11.24.~’21.11.23.
28	김재형	조선대 부총장	’20.9.21.~’22.9.20.
29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센터장	’19.6.26.~’22.6.25.
30	김정수	대구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19.6.26.~’22.6.25.
31	김정회	건강보험공단	’20.11.24.~’21.11.23.
32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20.11.24.~’22.11.23.
33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19.6.26.~’22.6.25.
34	김지미	법무법인 청종 대표 변호사	’20.11.24.~’22.11.23.
35	김진우	좋은교사운동대표 대표	’19.6.26.~’22.6.25.
36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9.6.26.~’22.6.25.
37	김철기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본부장	’20.11.24.~’22.11.23.
38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20.5.28.~’22.5.27.
39	김학균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20.9.21.~’22.9.20.
40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20.11.24.~’22.11.23.
41	김희철	대구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19.6.26.~’22.6.25.
42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20.9.21.~’22.9.20.
43	남수중	공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9.6.26.~’22.6.25.
44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20.9.21.~’22.9.20.
45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9.6.26.~’22.6.25.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46	류후규	포용적금융 발전포럼 대표	’19.6.26.~’22.6.25.
47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6.26.~’22.6.25.
48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26.~’22.6.25.
49	문성우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20.11.24.~’21.11.23.
50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1.24.~’21.11.23.
51	박문구	삼정KPMG 전무	’19.6.26.~’22.6.25.
52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6.26.~’22.6.25.
53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9.21.~’22.9.20.
54	박성국	전 매일노동뉴스 대표	’20.11.24.~’22.11.23.
55	박용수	언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20.5.28.~’22.5.27.
56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9.21.~’22.9.20.
57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9.6.26.~’22.6.25.
58	박인혜	전 여성의 전화 대표	’19.6.26.~’22.6.25.
59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19.6.26.~’22.6.25.
60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	’20.11.24.~’22.11.23.
61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19.6.26.~’22.6.25.
62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교수	’20.11.24.~’21.11.23.
63	서봉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20.9.21.~’22.9.20.
64	성경훈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획정책부장	’20.5.28.~’22.5.27.
65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20.5.28.~’22.5.27.
66	송대섭	네이버 정책연구실 이사	’20.11.24.~’22.11.23.
67	송일준	광주대 언론학 석좌교수	’19.6.26.~’22.6.25.
68	신상도	서울대 의대 교수	’20.11.24.~’22.11.23.
69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9.21.~’22.9.20.
70	신종화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20.9.21.~’22.9.20.
71	안태홍	전남과학대 게임제작과 교수	’20.9.21.~’22.9.20.
72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20.11.24.~’22.11.23.
73	양병찬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20.9.21.~’22.9.20.
74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20.11.24.~’22.11.23.
75	여상태	청년재단 사무총장	’20.11.24.~’22.11.23.
76	염민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20.11.24.~’22.11.23.
77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5.28.~’22.5.27.
78	오윤해	KDI 사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9.21.~’22.9.20.
79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	’20.9.6.~’22.9.5.
80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19.6.26.~’22.6.25.
81	원선희	강원대병원 상임감사	’21.6.26.~’22.6.25.
82	위정순	광주약사회 이사	’20.9.21.~’22.9.20.
83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	’19.6.26.~’22.6.25.
84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19.6.26.~’22.6.25.
85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19.6.26.~’22.6.25.
86	윤기석	충남대 교수	’19.6.26.~’22.6.25.
87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20.11.24.~’22.11.23.
88	운문수	연세대 의과대학 열대의학연구소 교수	’20.11.24.~’22.11.23.
89	윤지현	서울대 생활과학대 교수	’20.9.21.~’22.9.20.
90	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20.11.24.~’22.11.23.
91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19.6.26.~’22.6.25.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92	이대성	브라운 컨설팅그룹 대표이사	’20.9.21.~’22.9.20.
93	이명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19.6.26.~’22.6.25.
94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20.11.24.~’22.11.23.
95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20.5.28.~’22.5.27.
96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26.~’22.6.25.
97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	’20.9.21.~’22.9.20.
98	이선주	한국통신 전무	’20.11.24.~’22.11.23.
99	이　승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20.11.24.~’22.11.23.
100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9.21.~’22.9.20.
101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20.9.6.~’22.9.5.
102	이재영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	’20.9.21.~’22.9.20.
103	이재완	호서대 행정학과 교수	’19.6.26.~’22.6.25.
104	이재원	부경대 교수	’20.11.24.~’22.11.23.
105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0.5.28.~’22.5.27.
106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20.9.21.~’22.9.20.
107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20.11.24.~’22.11.23.
108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20.11.24.~’21.11.23.
109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5.28.~’22.5.27.
110	이지혜	을지대 의대 교수	’20.11.24.~’22.11.23.
111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20.11.24.~’22.11.23.
112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24.~’22.11.23.
113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20.9.21.~’22.9.20.
114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20.11.24.~’22.11.23.
115	인　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20.11.24.~’21.11.23.
116	임기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모빌리티플랫폼 연구센터장	’20.11.24.~’22.11.23.
117	임용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팀장	’20.11.24.~’22.11.23.
118	임　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19.6.26.~’22.6.25.
119	임찬규	그랜드코리아레져 상임감사	’20.9.21.~’22.9.20.
120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장	’20.11.24.~’22.11.23.
12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20.5.28.~’22.5.27.
122	장정선	엔씨소프트 상무	’20.11.24.~’22.11.23.
123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	’19.6.26.~’22.6.25.
124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9.21.~’22.9.20.
125	정수호	인재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19.6.26.~’22.6.25.
126	정영훈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19.6.26.~’22.6.25.
127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20.5.28.~’22.5.27.
128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20.11.24.~’22.11.23.
129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20.5.28.~’22.5.27.
130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9.21.~’22.9.20.
131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	’20.11.24.~’22.11.23.
132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19.6.26.~’22.6.25.
133	정　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9.21.~’22.9.20.
134	정현천	(주)SK 부사장	’20.11.24.~’21.11.23.
135	정혜민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교수	’20.11.24.~’22.11.23.
136	조숙경	국립 광주과학관 연구원	’20.9.21.~’22.9.20.
137	조한규	중소기업신문 회장	’19.6.26.~’22.6.25.

연번	이름	소속 및 직급	임기
138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	’20.11.24.~’22.11.23.
139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19.6.26.~’22.6.25.
140	차용진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19.6.26.~’22.6.25.
141	최성두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	’19.6.26.~’22.6.25.
142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9.6.26.~’22.6.25.
143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9.21.~’22.9.20.
144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20.11.24.~’22.11.23.
145	최인숙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20.5.28.~’22.5.27.
146	최지연	중앙대병원 감염관리팀장	’20.11.24.~’22.11.23.
147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9.6.26.~’22.6.25.
148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20.11.24.~’22.11.23.
149	최현선	명지대 교수	’20.11.24.~’21.11.23.
150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9.21.~’22.9.20.
151	허승준	광주교대 기획처장	’20.9.21.~’22.9.20.
152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5.28.~’22.5.27.
153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9.6.26.~’22.6.25.
154	황선자	한국노총 부원장	’20.11.24.~’22.11.23.
155	황성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	’19.6.26.~’22.6.25.
156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20.5.28.~’22.5.27.

6. 위원회 사무처 직원 현황(’22.3.말 기준)

〈위원장실〉

이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비고
장유은	비서실장	비서실 업무 총괄	고용노동부
박정민	정책보좌관	위원장 정책 보좌	전문임기제
남선정	행정실무원	비서	
방영길	운전원	관용차량 운행	

〈기획운영국〉

이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비고
박종현	국장(고위공무원)	국 총괄	행정안전부
신종필	선임과장(서기관)	부서 운영 총괄	행정안전부
최영실	과장(서기관)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	과학기술부
박현근	과장(서기관)	열린정책(계간지) 제작, 연구용역 총괄 등	국토교통부
정현준	5급	인사, 조직, 총무	인사혁신처
한미숙	5급	예산, 결산	인천광역시
박세훈	6급	계약, 예산집행, 인사지원	행정안전부
조아영	6급	지출, 위원회 서무	경기도

〈국정과제국〉

이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비고
김성현	국장(고위공무원)	국 총괄	국무조정실
홍진동	선임과장(3급)	부서 운영 총괄	국무조정실
박광수	과장(4급)	국민주권분과 담당	법무부

이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비고
최경신	과장(4급)	지속가능분과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이선식	과장(4급)	포용사회분과 담당	보건복지부
길 동	과장(4급)	국민성장분과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정수현	과장(외무8등급)	평화번영분과 담당	외교부
조홍련	전문위원	분권발전분과 담당	전문임기제
이정하	5급	지출회계 등	경상남도

〈국정연구국〉

이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비고
백운광	국장	국 총괄	전문임기제
이대균	선임과장(3급)	부서 운영 총괄	기획재정부
유지웅	전문위원	정책방향 연구	전문임기제
권민경	과장(4급)	연구용역,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부
박상일	5급	연구용역, 중장기 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
신유철	5급	국 서무	울산광역시
김영덕	전문위원	정책방향 연구	전문임기제
김창선	수석연구원	한국판 뉴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홍보실〉

이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비고
박철응	실장	실 총괄	전문임기제
김성욱	선임과장(4급)	부서 업무 총괄	방송통신위원회
김태진	전문위원	한국판뉴딜 지원단 총괄	전문임기제
고미경	5급	실 서무	제주특별자치도

이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비고
권오영	전문위원	언론·홍보·뉴미디어 총괄·아하TV 총괄	전문임기제
임재경	선임연구위원	한국판 뉴딜	한국교통연구원
김용수	부연구위원	한국판 뉴딜 및 단행본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동영	전문연구원	정책방향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역대 위원회 사무처 직원 명단('17.~'21.)〉

소속	이름	직위(직급)	비고
기획운영국	강성조	국장(고위공무원)	행안부
기획운영국	김장회	국장(고위공무원)	행안부
기획운영국	최만림	국장(고위공무원)	행안부
기획운영국	김주이	국장(고위공무원)	행안부
기획운영국	박성민	선임과장(서기관)	행안부
기획운영국	장은영	선임과장(서기관)	행안부
기획운영국	박종옥	선임과장(서기관)	행안부
기획운영국	정유근	선임과장(서기관)	행안부
기획운영국	김정훈	과장(서기관)	과기부
기획운영국	정동준	과장(서기관)	과기부
기획운영국	허진우	과장(서기관)	과기부
기획운영국	공경화	과장(서기관)	국조실
기획운영국	성은하	과장(서기관)	국토부
기획운영국	전성배	과장(서기관)	국토부
기획운영국	이상호	전문위원(가급)	
기획운영국	송정태	사무관	광주광역시
기획운영국	강경호	사무관	인사처
기획운영국	박진철	사무관	인사처
기획운영국	윤병열	사무관	인사처
기획운영국	김상정	사무관	인천시
기획운영국	한승혜	행정주사	경기도
기획운영국	윤명희	행정주사	충북도
기획운영국	이선경	행정주사	행안부
기획운영국	이현우	행정주사	행안부
기획운영국	조요한	행정주사	행안부
기획운영국	최홍석	행정주사	행안부
기획운영국	곽지우	행정주사보	창원시
기획운영국	구병일	행정실무원	
기획운영국	장태은	행정실무원	
국정과제국	한상익	국장(전문위원)	
국정과제국	정현용	국장(고위공무원)	국조실
국정과제국	권용식	선임과장(부이사관)	국조실
국정과제국	김희순	선임과장(부이사관)	국조실
국정과제국	이용석	선임과장(부이사관)	국조실
국정과제국	이진원	선임과장(부이사관)	국조실
국정과제국	강갑진	과장(서기관)	법무부
국정과제국	변영욱	과장(서기관)	법무부
국정과제국	이창영	과장(서기관)	법무부
국정과제국	정연철	과장(서기관)	법무부
국정과제국	송영진	과장(서기관)	복지부
국정과제국	신재형	과장(서기관)	복지부
국정과제국	구진경	과장(서기관)	산업부
국정과제국	김양지	과장(서기관)	산업부
국정과제국	안홍상	과장(서기관)	산업부
국정과제국	이경민	과장(서기관)	산업부
국정과제국	이선주	과장(서기관)	산업부

소속	이름	직위(직급)	비고
국정과제국	라규욱	과장(외교8등급)	외교부
국정과제국	임경훈	과장(서기관)	외교부
국정과제국	최희덕	과장(외교8등급)	외교부
국정과제국	박은주	과장(서기관)	중기부
국정과제국	배석희	과장(서기관)	중기부
국정과제국	안남우	과장(서기관)	중기청
국정과제국	김수정	사무관	경남도
국정과제국	김창환	사무관	경남도
국정과제국	허은이	사무관	경남도
국정과제국	김 진	행정실무원	
국정연구국	홍원구	국장(고위공무원)	국조실
국정연구국	한경필	국장(고위공무원)	국조실
국정연구국	김병철	선임과장(부이사관)	기재부
국정연구국	나주범	선임과장(부이사관)	기재부
국정연구국	민경설	선임과장(부이사관)	기재부
국정연구국	이상길	선임과장(부이사관)	기재부
국정연구국	김준호	과장(서기관)	고용부
국정연구국	정홍석	과장(서기관)	고용부
국정연구국	최 경	과장(서기관)	교육부
국정연구국	최현석	과장(서기관)	교육부
국정연구국	이 헌	과장(서기관)	방통위
국정연구국	장대호	과장(서기관)	방통위
국정연구국	박필애	사무관	울산광역시
국정연구국	정현희	사무관	경북도
국정연구국	권종원	사무관	경북도
국정연구국	박은영	사무관	대구시
국정연구국	허영일	전문위원(가급)	
국정연구국	김덕수	전문위원(가급)	
국정연구국	김정현	전문위원(나급)	
국정연구국	최현수	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국정연구국	김민영	행정실무원	
전략홍보실	최용길	실장(전문위원)	
전략홍보실	김찬규	실장(전문위원)	
전략홍보실	하정철	전문위원(가급)	
전략홍보실	김동균	사무관	세종시
전략홍보실	노승만	연구위원	강원연구원
전략홍보실	손동희	연구위원	고동노동연수원
전략홍보실	강근영	책임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홍보실	권영인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홍보실	박규범	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정개혁특위	은희훈	과장(서기관)	기재부
재정개혁특위	임재규	사무관	기재부
전략연구실	김영창	사무관	광주광역시
합동연구실	변상정	상임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연구실	문용필	부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과제지원단	한신실	주임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국정과제지원단	조정완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소통 시리즈

국민 소통 시리즈 I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국민 소통 시리즈 2

일하는 정부, 일하는 대통령







국민 소통 시리즈 3

문재인 정부 국제지표



국민 소통 시리즈 4

바뀐 법, 달라진 삶







2018 언론보도 현황

4,978 건

언론보도	기고문
4,855 건	123 건

2019 언론보도 현황

1,035 건

언론보도	기고문
798 건	237 건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

"사람에 대한 투자 늘려야…교육·복지·문화정책 강화필요

"정책기획위, 출범 첫 세미나…'사회적 가치 위한 정부혁신'

"정부혁신은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

힘 있는 정부 통해 가능"

성폭력 가능하게 해준 방관자들, 언론은 자유로운가

정해구 위원장, "양적 성장 넘어 삶의 질 보장하는 정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 준비해 달라"

"문 대통령, 개헌안 한꺼번에 다 담으려 하지 말라고 당부"

김인회 "수사권 조정이 거래로 변질, 형식적 검찰 개혁되면 곤란"

고유환 교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일괄타결 '길잡이'"

"비핵화 수위에 따라 안전보장 수순 같이 밟아야"

정해구 "개헌, 다음 기회는 2020년 총선 전후"

고유환, "처음부터 완벽한 비핵화 표명, 쉽지 않을 듯"

오늘 남북정상회담…'역사적 만남'-배기찬 고문

"군축 협상하겠단 말" "군더더기 없는 비핵화선언"

" 정부 검찰개혁 속도 내야"…김인회 교수가 본 검찰개혁 1년

"검찰, 영장청구권·특수수사 기능 유지 … 너무 많은 권한 남겼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세 가지 의미"

남북 경제협력 대비 본격 준비 착수…"준비 시간 많지 않아"

"2020년 총선 전후 개헌 얘기 다시 나올 수 있다"

로버트 라이시 미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의 행운"

대통령, 저출산 문제에 "모든 형태 출산 동등한 대우 받아야"

문 대통령 "일자리 등 '국민의 삶' 바꾸는데 국가재정 적극 역할해야"

남북·북미 성공적 고위급회담…북미정상회담 '청신호'

"'87년 체제'를 넘어 '17년 체제'로"…6·10항쟁 학술토론회

준형 교수 "김정은,통크게 한방에 끝내고 오후 출국 가능"

형 "큰 틀 이미 합의…'대결단'은 김 위원장에 달린 듯"



지난해 소득과 소비, 줄었나 늘었나 따져보니…

"노사 대타협 없인 정부 지원해도 백약이 무효"

세종시민 의견 듣는다…'혁신적 포용 국가 비전·전략 토론회'

"트럼프, 베트남 지도부 회담…김정은에 보내는 메시지"

하노이 선언에서 구체 비핵화 시간표 나오나

트럼프 "북한 경제 돕겠다"… 김정은 "불신·오해 다 깼다"

문 대통령 "브루나이는 신남방정책의 중요 협력 파트너"

정책기획위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개최

자화자찬과 쇼잉만 가득… '정부 2년 정책 컨퍼런스' 맹탕

"개혁 미흡"·"회전문 인사"…'자성' 잇따른 정부 2년 토론회

정부 2년…정해구 "사회보장·한반도평화 성과, 일자리·미세먼지 미흡"

총리 "정부 2주년, 반성·제안 겸허히 수용"

문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통화…"적극적 구조 지원 요청"

"노사 갈등 최소화…사회적 합의 도출에 최선"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믿는다"

남·북·미·중 '비핵화' 치열한 수싸움…숨가쁜 '동북아 외교전' 시작

최저임금 동결?…자영업자 61%·노동자 37% '찬성'

개성공단 재가동, "과 직접 협상" vs "국제사회 설득 우선"

'구미형 일자리' 시동… LG, 4000억 투자

'2차전지' 경북 미래 먹거리로 뜬다

대통령 "정치권이 힘 모아달라"

세종엔 자율차, 부산엔 블록체인…

청년정책의 새로운 좌표 설정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이 고용 정책과 대학생 정책 뿐인가"

정책 , 18일 청년정책 모색 세미나

대통령 "아세안과 미래 연다"…

이번주 특별정상회의 성공에 총력

2020 언론보도 현황

7,613 건

언론보도 **7,360** 건

기고문 **253** 건

“K-방역이 가져온 자부심, ‘한국은 이미 선진국’”

저마다 장벽 높이는 시대, 거미집 같은 경제 회복력이 열쇠

“공공의 힘 강화, 큰 정부보다는 좋은 정부가 필요”

코로나 현장 달려온 3819명의 땀, 체계적 보상시스템 아쉽다

질병청 승격은 부분적 대안, 차기 정부선 보건부 독립을

“코로나 경증환자가 병실 차지한 탓, 중증 52%만 인공호흡기 치료”

저무는 ‘악수 정치’…온라인 전당대회 시대 열린다

정책 토론회 개회사하는 조대엽 위원장

"한국판 뉴딜, 지역·사회적 합의 기반 전략 추진 필요"

“‘충북형뉴딜’로 경제위기 극복하고 발전모델 만든다”

지역주도의 충북형 뉴딜정책이 가야할 길은

'뉴딜' 띄우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충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이 주도하는 뉴딜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균형 뉴딜, 충북과학기술정책 연결해야"

“충북형 뉴딜, 한국형과 발맞춰야”

"한국판 뉴딜, 지역·사회적 합의 기반 전략 추진 필요"

"뉴딜 사업 경제성 무게 두면 경쟁력 확보 어려워"

“마스크앱·진단키트 모두 벤처…육성할 산업 1순위”

“코로나 시대 경제, 사람 키우는게 답”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내일 한국판뉴딜 국정자문단 출범식

국민의례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인사말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2021 언론보도 현황

2,979 건

언론보도 **2,833** 건

기고문 **146** 건

경북형 뉴딜로 한국판 뉴딜 선도한다! 외

경북도,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 개최

'12조4천억' 경북형 뉴딜, 한국판 뉴딜 대표 모델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구·경북 토론회 개최

“경북형 뉴딜을 ‘한국판 대표 모델’로 만들자”…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토론회

[경북도청]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4.8~9일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 토론회 개최

발언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2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발언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2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개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

정책기획위, '수소경제' 세미나…"피할 수 없는 과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

“균형발전은 하향식·나눠주기식 아닌 국가 차원 큰 그림 통해 모색해야”

정책기획위 "레임덕 같은 말 사치…정부 성과 외면해선 안돼"

조대엽 위원장,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조대엽 청와대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인사말하는 조대엽 위원장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포토] 조대엽-유은혜 ‘문재인정부 4주년’ 컨퍼런스 참석

컨퍼런스 향하는 유은혜 부총리 - 조대엽 위원장 - 정해구 이사장

조대엽 " 정부 4년, 총균쇠 위기속 신문명 선도"

개회사하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정부 4주년' 컨퍼런스 참석한 조대엽·유은혜

[ESF 2021]윤순진 "ESG가 규제? 그간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아시아초대석]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 정부 마지막 1년, 국민이 정책효과

[게시판] 한국판 뉴딜 경청, 공감 전북 대토론회 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전라북도 공동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한국판 뉴딜 경청 공감 전북 대토론 도지사 환영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전북도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2022 언론보도 현황

1,928 건

언론보도	기고문
1,893 건	**35** 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방역 모범국'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4050위 경기 공동위원장 맡아

경기도 지역 내 경제기여도 꼴찌 '남양주시'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4050위 경기공동위원장 맡아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사회적가치법으로 양극화 극복해야"..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NMC 신임원장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변화 이끌까?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주영수 씨

주영수 신임 국립중앙의료원장 임명

복지부, NMC '주영수' 신임 원장 임명

"초중고에 쏠린 교육교부금...대학·평생교육에 배분 필요"

2022 평창평화포럼 개최

조직본부 청년일자리위원회, 2030 맞춤형 일자리정책 제안

조직본부 청년일자리위원회, 2030 맞춤형 일자리정책 제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판 뉴딜 정책과정 운영

"새 정부 임기초부터 단계적 연금개혁 나서야...증세도 불가피"

이제는 '한·미 핵 공유'를 말할 때다

배시열 전 국회의원 보좌관, 칠곡군수 예비후보 등록

사회적 가치 성과·과제 콘퍼런스..."기본법 제정해야"

정부, "사회적 기본법으로 양극화 극복" 콘퍼런스 개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1권의 정책기획시리즈' 발간

정부 5년 국정과제·정책 담론 담아 출판기념회...분량만 총 7400쪽에 달해



2018
뉴미디어 보도 현황

SNS 업로드 실적

844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391 건	**387** 건	**66** 건



2019
뉴미디어 보도 현황

SNS 업로드 실적

1,099 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563 건	**516** 건	**20** 건



2020
뉴미디어 보도 현황



SNS 업로드 실적

718 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343 건	**351** 건	**24** 건

2021
뉴미디어 보도 현황

SNS 업로드 실적

420 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182 건	**206** 건	**32** 건



2022
뉴미디어 보도 현황

SNS 업로드 실적

192 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26 건	**166** 건	**0** 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5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백서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White Paper

2017~2022

발행인 조대엽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층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표전화 : 02-2100-1499 | FAX : 02-2100-1459

www.pcpp.go.kr

디자인 DN

d-n@daum.net / www,d-n.kr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5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백서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White Paper

2017~202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